2024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발간사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유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 추세로는 달성가능한 세부목표가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성 심화, 기후변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 등 SDG 목표지점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어려움은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한국은 사회보장지출을 꾸준히 늘려 필수서비스를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지만, 교육 분야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더 증가하고, 평생학습참여율은 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감소와 학습손실로 인해 2030년이 되면 3억 명의 학생이 기본적인 수리능력과 문해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이미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1도에 도달했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2035년 안에 기후위기 임계점인 1.5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지구적 협력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 간 불평등 해소도 주요 과제입니다. 성별, 연령, 소득수준, 이주상태 및 지역별로 드러나는 격차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사회 각 영역에서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SDG는 2030년을 결승점으로 하는 전 인류의 2인3각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처져 있는 집단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이 코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사회·경제·환경 전 분야에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규모도 2019년 대비 SDG 종료 시점인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SDG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SDG를 넘어 글로벌 SDG 달성의 기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통계청장 이형일

서문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유엔 SDG 데이터 국가책임기관으로 매년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로 네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코로나 19와 한국의 SDG'를 주제로 다룬 바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상흔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에서도 재확인됩니다.

코로나19 시기 줄어들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다시 증가하였고,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평가하는 적색목록지수는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은 여전히 낮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작년 말에는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국가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집단 간 격차 현상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통해 상대적 빈곤율 감소, 필수 서비스 강화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은퇴연령층의 소득불평등 증가, 보건인력의 지역별 차이, 경제 영역에서 성별 및 정규 · 비정규직 간 격차 등은 도전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多)위기 시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는 어둠 속에서도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한 SDG 목표를 지향점으로, 우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의 근거를 제안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의 산물로써 독자들이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옆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발간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총괄하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목표별 분석과정에서 집필역량을 발휘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통계개발원 박영실 사무관, 정지은 주무관, 안진숙 주무관, 김희정 연구보조원의 노고 덕분에 이번 보고서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박상영

박 상 영

차례

발간사 003

서문 005

주요 결과 008

인포그래픽 012

SDG 목표별 분석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빈곤율은 감소세 속 2022년은 전년대비 0.1%p 증가 (관련 지표 1.2.1) 017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성별 차이는 축소 (관련 지표 1.3.1) 019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소유율도 증가 (관련 지표 1.4.2) 020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세출이 50%를 넘어서 (관련 지표 1.a.2) 021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 (관련 지표 2.1.1) 023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 필요 (관련 지표 2.1.2) 025

최근 여성 빈혈 유병률 증가에 관심 필요 (관련 지표 2.2.3) 026

농가인구 고령화와 투자 한계로 최근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지표 2.3.1) 026

식량안보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높은 정부의 농업지출 (관련 지표 2.a.1) 028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OECD 국가 대비 적은 보건의료인력, 대도시로의 편중 심화 (관련 지표 3.c.1) 031

모성사망비는 감소하였으나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속된 노력 필요 (관련 지표 3.1.1) 032

2030년까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 강화 필요 (관련 지표 3.3.3) 033

알코올 소비량 10년 전에 비해 1.2리터 감소, OECD 평균 대비 0.9리터 적게 소비 (관련 지표 3.5.2) 034

OECD 국가에 비해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이 낮은 편 (관련 지표 3.9.3) 035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학력 저하 우려 지속 (관련 지표 4.1.1) 037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평생교육 참여율 지속 하락, 취약 집단의 참여율 여전히 낮아 (관련 지표 4.3.1) 038

청소년 및 성인의 ICT 능력 지속 상승 경향, 연령에 따른 ICT 능력 편차 커 (관련 지표 4.4.1) 039

개도국을 위한 한국의 교육 ODA 금액 10년간 2배 이상 상승 (관련 지표 4.b.1) 041

교사 직업에 대한 가치 2018년 기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인식 (관련 지표 4.c.1) 041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에 집중 (관련 지표 5.2.1) 045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이 낮은 수준 (관련 지표 5.5.1) 047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관련 지표 5.5.2) 048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편 (관련 지표 5.5.2) 050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식수와 위생서비스 보급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관련 지표 6.1.1 / 6.2.1) 053

공공 하수도 보급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관련 지표 6.3.1) 054

물 이용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부문별 물 이용 효율화 정책 필요 (관련 지표 6.4.1) 056

물 관련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관련 지표 6.6.1) 057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추세이나,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1/4 수준 (관련 지표 7.2.1) 059

에너지 원단위의 지속적 개선 추세 (관련 지표 7.3.1) 061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여성 고용 증가와 서비스업 활성화로 실업률 하락 (관련 지표 8.5.2) 065

산업재해자와 산재사망자 증가 추세 (관련 지표 8.8.1) 066

평균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를 넘어 상승 추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개선 필요 (관련 지표 8.5.1) 068

2022년부터 1% 이내로 분기별 성장률 둔화 (관련 지표 8.1.1) 069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감소 추세 (관련 지표 9.2.2) 071
국가 혁신을 위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자본과 인력 투입 (관련 지표 9.5.1 / 9.5.2) 072
승객 및 화물 모두 도로 운송에 대한 높은 의존 (관련 지표 9.1.2) 074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처분가능소득기준 지니계수 감소 속 은퇴 연령층 소득불평등은 악화 (관련 지표 10.4.2) 077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 (관련 지표 10.4.1) 078
이주 근로자의 구직 비용 측정을 위한 통계 개선 예정 (관련 지표 10.7.1) 079
2022년 난민신청자는 1만 1539명, 이 중 인정자는 175명으로 나타나 (관련 지표 10.7.4) 080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주거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 (관련 지표 11.1.1) 083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공공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관련 지표 11.4.1) 085
초미세먼지($PM_{2.5}$) 오염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아직 기준 미달 (관련 지표 11.6.2) 086
주거지와 그 인근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예방 노력 필요 (관련 지표 11.7.2) 087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이 다소 줄어든 한편 식품 생산 단계까지 관리 확대 필요 (관련 지표 12.3.1) 089
유해폐기물 발생 증가와 함께 재활용률도 증가 (관련 지표 12.4.2) 090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높은 편이며, 지역별 재활용 수준에 격차 발생 (관련 지표 12.5.1) 092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크게 늘고 있어 (관련 지표 12.6.1) 093
한국의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과 이행 정도는 중-상으로 평가 (관련 지표 12.7.1) 094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2022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자연재난의 절반을 차지 (관련 지표 13.1.1) 097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다시 증가 (관련 지표 13.2.2) 098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세는 미약 (관련 지표 14.5.1) 103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 지속 증가세 (관련 지표 14.1.1) 104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및 이행 국가 (관련 지표 14.c.1) 106
원양어업의 국제 기준 준수 (관련 지표 14.6.1) 106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 (관련 지표 14.4.1) 106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육상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 추세 정체 (관련 지표 15.1.2) 109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 증가 추세 미약 (관련 지표 15.2.1) 111
국가 적색목록지수 악화 추세 지속 (관련 지표 15.5.1) 112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살인 발생은 지난 10년간 감소추세 (관련 지표 16.1.1) 115
교사의 체벌 · 폭언은 큰폭으로 감소한 한편, 또래폭력은 여전한 위협 (관련 지표 16.2.1) 116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비율 34%대에서 정체 (관련 지표 16.3.2) 11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 가장 많아 (관련 지표 16.b.1) 118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2022년 GNI 대비 ODA 비율 0.17%로 전년대비 증가 (관련 지표 17.2.1) 121
양자 ODA주우 최저개발국 지원비중 가장 높아 (관련 지표 17.2.1) 124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비중 감소 추세 (관련 지표 17.3.1 / 17.5.1) 126
한국 통계역량은 상위권으로, 통계 ODA 확대 계획 (관련 지표 17.18.1 / 17.18.2 / 17.18.3) 127

부록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개요 130
SDG 통계 데이터 현황 132
SDG 지표 총괄표 133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45
용어 약어 148

주요 결과

글로벌 수준의 SDG 이행현황 평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종료시점인 2030년을 앞두고 유엔이 진행한 중간 평가에서 목표 달성 가능성에 경고음(alarm)이 울렸다. 현재까지의 이행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30년 목표달성 가능성을 살펴 본 결과, 세부목표 중 15% 정도만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48%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서 약간 혹은 심각한 상태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7%는 정체 혹은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UN 2023).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국가 빈곤 수준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학습손실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3억 명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은 기본적인 수리능력과 문해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의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디어, 관리자 비율에서 남녀 격차가 사라지기까지는 140년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6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전기없이 지낼 것이다. 삼림벌채를 멈추는 데에는 25년이 걸리며, 지난 30년간 적색목록추이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율이 점차 가속화되어 수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개발도상국과 취약한 집단에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소 암울해 보이는 이와 같은 진단결과에 따라 유엔은 긴박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5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 및 정부의 수장은 SDG 달성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 속도감 있고 지속적이며 변혁적인 행동을 취할 것, 둘째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자연과의 전쟁 종식을 위해 구체적이고 통합적이며 목표가 분명한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 특히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증진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 중점을 둘 것, 셋째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 할 것, 넷째, 취약집단 및 개발도상국의 SDG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투자를 동원할 것, 다섯째,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 강화를 촉진하고 다자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SDG 격차와 약점을 해결할 것이 그것이다(UN, 2023). 2023년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SDG 정상회의를 개최, SDG 우선성 시급성·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남은 7년간 SDG 달성을 가속하기 위해서 글로벌 연대와 행동을 재촉구하였다. 향후 각 국의 행보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주요 결과

한국은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 등 SDG 이행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글로벌 SDG 지표에 기반한 SDG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SDG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는 총 71개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시계열 데이터 기반한 추세분석, 세분화 데이터를 활용한 취약집단 현황 분석, 그리고 국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4년 한국의 SDG 이행현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는 SDG의 5가지 지향점인 5P, 즉 사람(People)과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람(People):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점차 증가세로, 2023년 50%를 넘어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 예산은 확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은퇴연령층에서 소득불평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 및 식품접근성 등에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편차 역시 도전과제로 분석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생의 학력저하와 평생교육의 위축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이슈, 관리자급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은 현실은 큰 개선이 없었다.

지구(Planet):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했던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였다. 202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는데 산업공정, 에너지, 농업 분야 순으로 배출량 증가폭이 컸고,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분야에서의 흡수량은 감소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연재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도 증가하고 있고, 육상 및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 시, 재생에너지 비율이나 핵심생물다양성보호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비율은 매우 낮으며, 적색목록지수도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추세이다.

번영(Prosperity): 국가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023년 2.7%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여성 실업률의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높았는데,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와 연관된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상승추세이나,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정도이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기준 전년대비 5.6%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이다.

평화와 협력(Peace and Partnership): 코로나19 시기 급감했던 또래폭력은 다시 증가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에 여전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사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인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해제 및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증대되면서 난민 신청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정자수는 매우 낮은 현실이다. 인류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ODA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통계분야에서도 그 규모를 증대하여, 최저개발국 등의 통계역량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분석결과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쟁, 기후위기 등 세계사적 위기가 한국 사회에도 직간접적,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 및 연령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미비한 수준임을 드러낸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주요 결과

1 빈곤퇴치

2023년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세출이 50%를 넘어 한국의 사회보장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 빈곤율 감소세는 둔화,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음

2 기아종식

정부의 농업지출은 높은 편이나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 노동생산성이 수년간 저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및 여성 빈혈 유병률 증가 추세 관찰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노력 필요

3 건강과 웰빙 증진

알코올소비량 감소, 낮은 수준의 비의도적 중독 사망 등 건강행태와 환경에서 눈에 띄는 개선 효과가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편차 확대는 도전과제

4 양질의 교육 보장

코로나19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와 평생교육의 위축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은 높아지고 있으나 연령 등에 따른 편차 극복 필요

5 성평등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는 여성에 집중되고, 정부·공공기관·공기업 및 민간기업, 그리고 교육행정 분야 관리자급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낮은 현실이 지속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식수와 위생서비스 보급 수준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지만 공공 하수도 등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물이용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부문별 세부 전략을 통한 효율화 증대 요구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편이나 장기적으로는 개선 추세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실업률은 2000년 이래 최저 수준, 성별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2022년 산재 사망자는 전년대비 증가추세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은 현황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수준은 높은 편이며, 제조업 고용 비율은 최근 감소 추세로 성장전략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

10 불평등 감소

은퇴연령층의 2022년 소득불평등은 전년대비 나빠졌으며, 최근 5년간 지속되던 자산 불균형의 악화 추세는 2023년 둔화세,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는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인정자 수는 낮은 수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주요 결과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편,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지자체 수준의 공공지출은 2019~2020년 급감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은 다소 줄었으나 식품의 생산 단계까지 고려하는 식품폐기물의 관리 확대가 필요하며, ESG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크게 증가

13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이후 산업계의 생산 활동 회복으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폭염의 비중이 높아 대응 필요

14 해양생태계 보존

해양보호지역 확장 속도는 느리고,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증가 추세인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및 원양어업 등 국제적 기준 준수 및 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 등 해양 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지속

15 육상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지역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의 증가세는 미약하고, 적색목록지수도 장기적으로 악화추세

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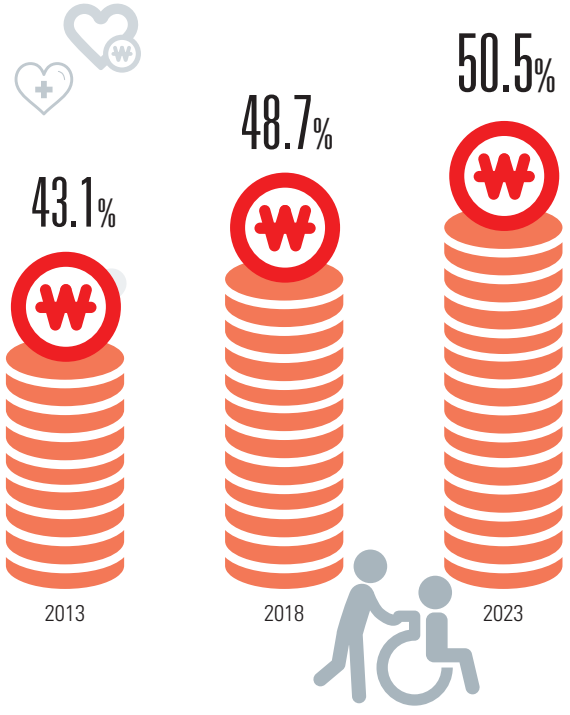
아동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체벌과 폭언은 줄었으나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던 또래폭력은 다시 증가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에 위협으로 작용,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경험 존재

17 글로벌 파트너십

한국의 ODA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비중은 35.8%로 높은 편이며 교역규모도 증가, 한국의 통계역량은 상위권으로 최저개발국 등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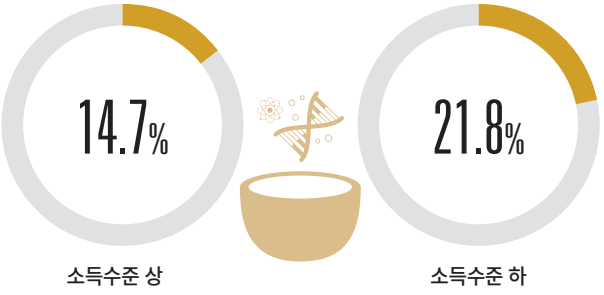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정부 총지출 중 사회보장 지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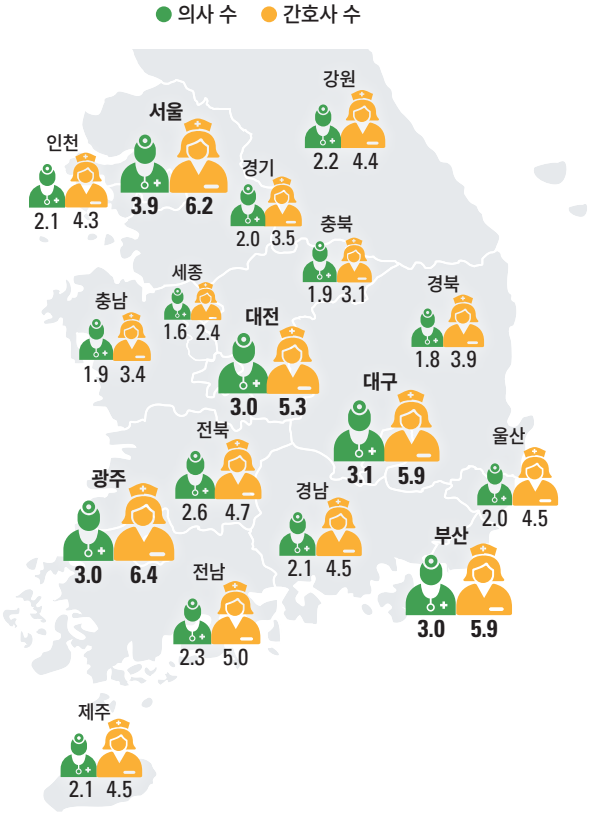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노력 필요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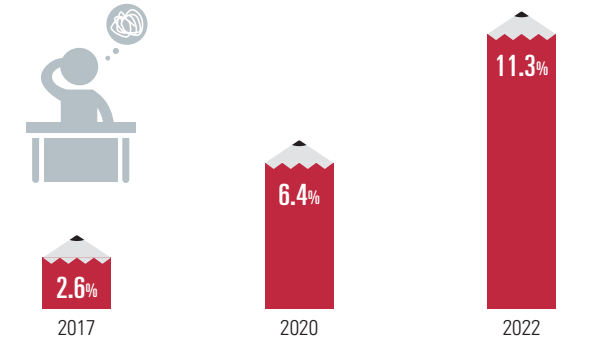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 2021

인구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지역별 편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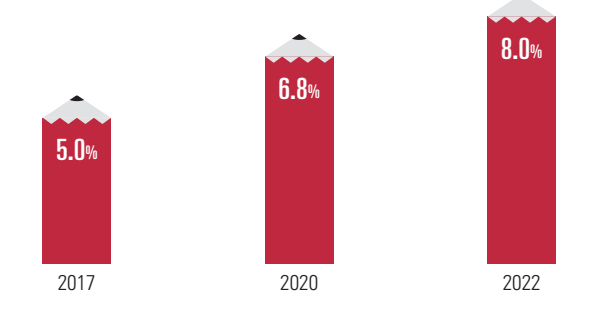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미달비율 계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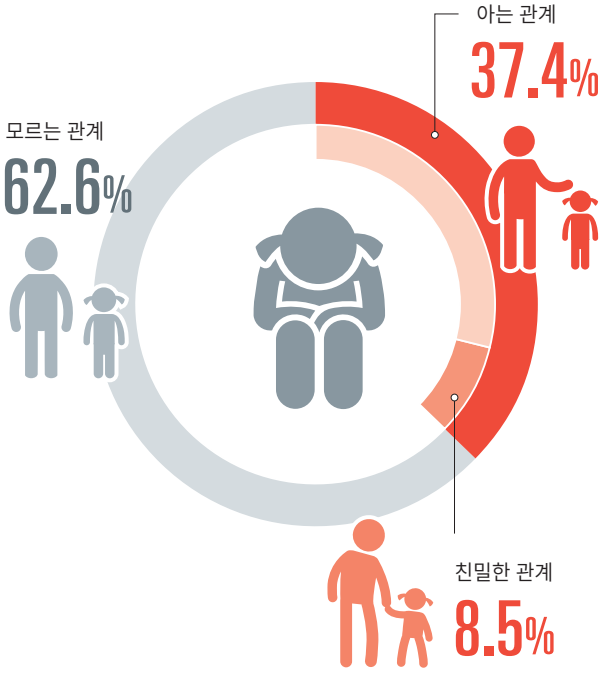
중학교 3학년 국어 기초학력미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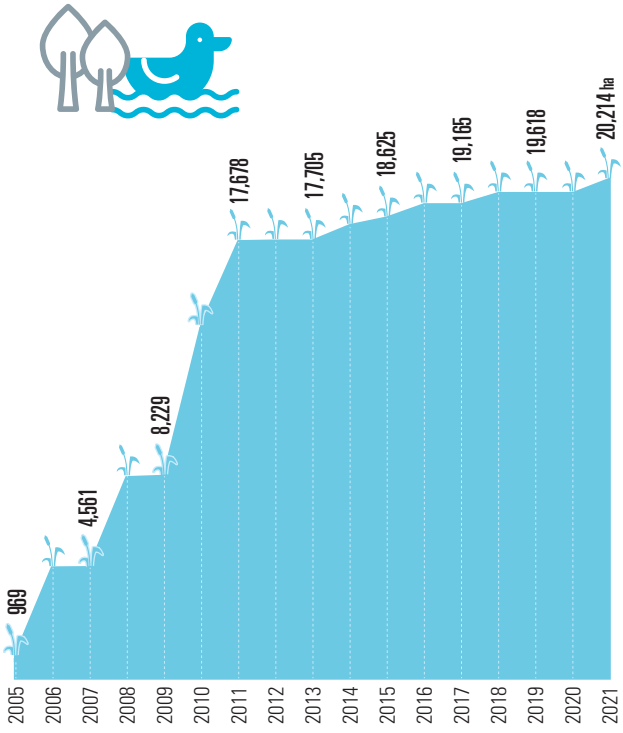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기초학력미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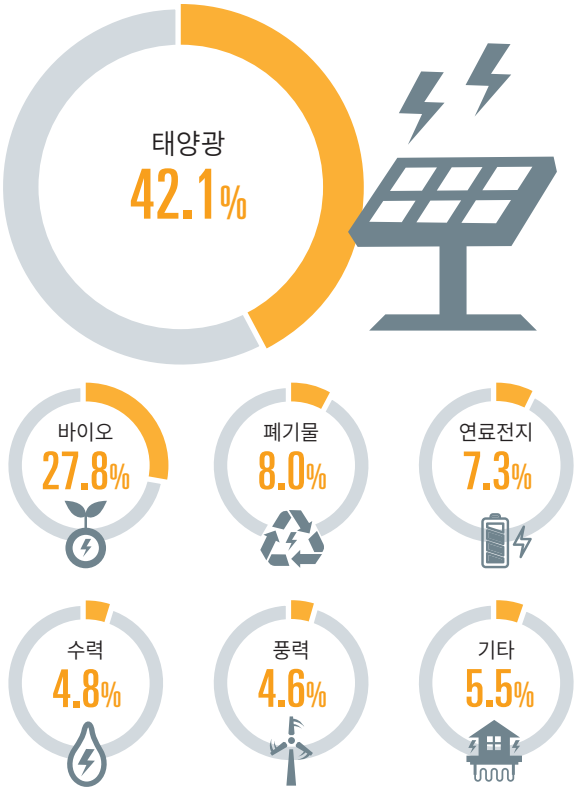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 - 피해자 관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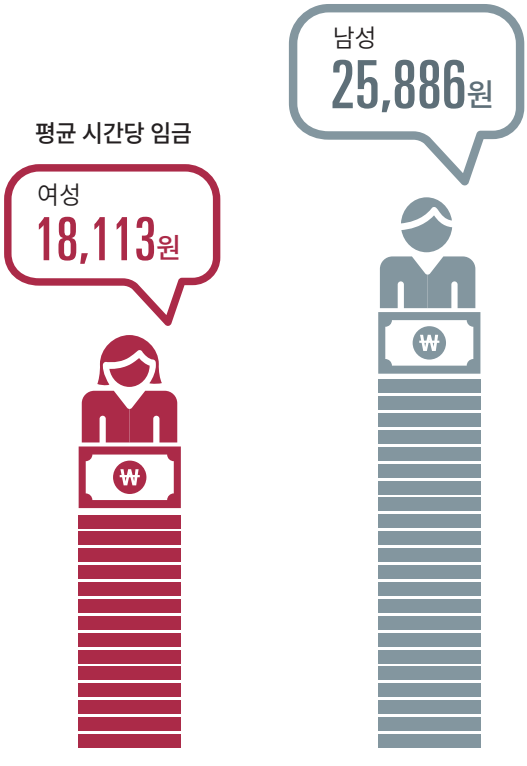
람사르 습지 면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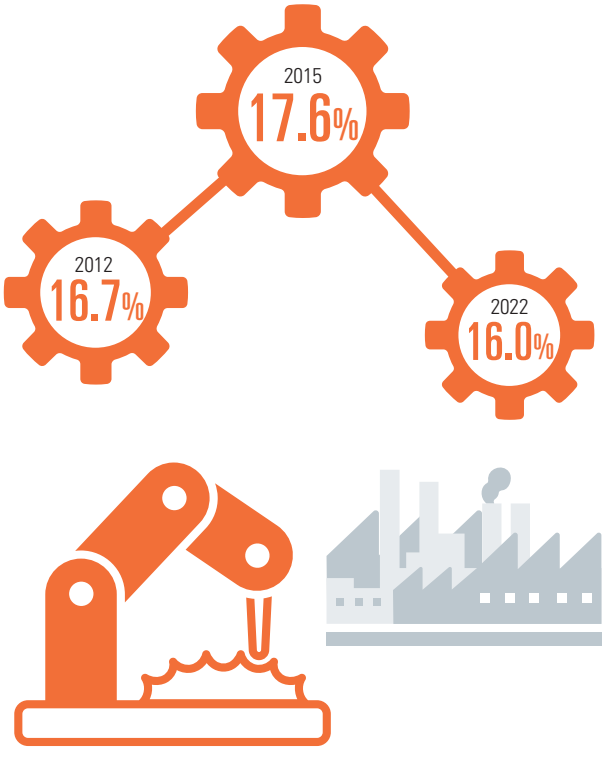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생산량 비중, 2022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 2022



제조업 고용 비율은 최근 감소 추세



난민 신청건수 및 인정자 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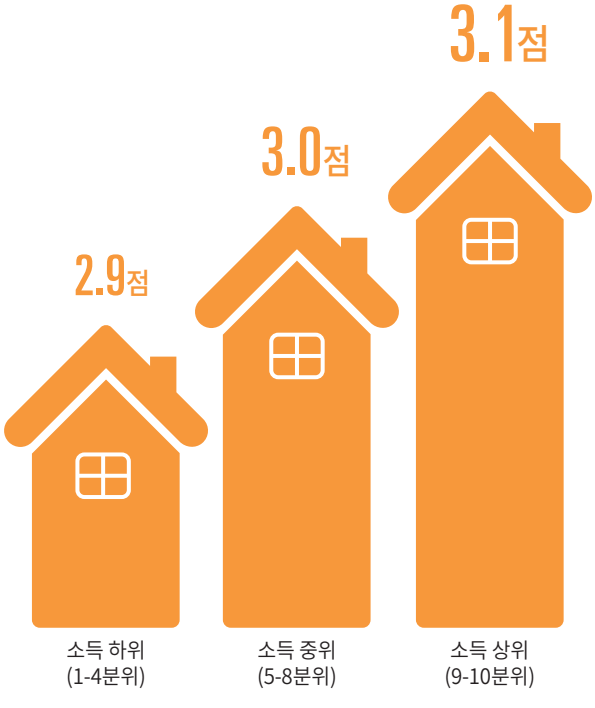
난민 신청건수

11,53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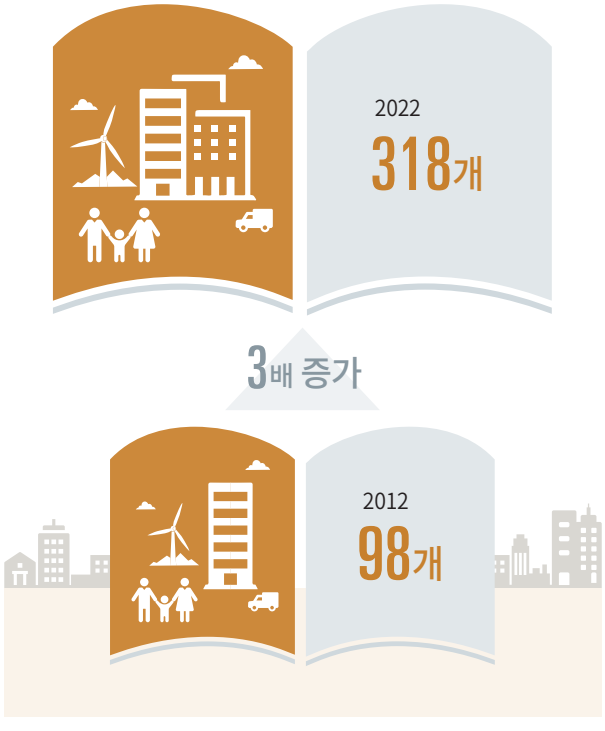
난민 인정자 수

175명

소득수준별 주거환경만족도 차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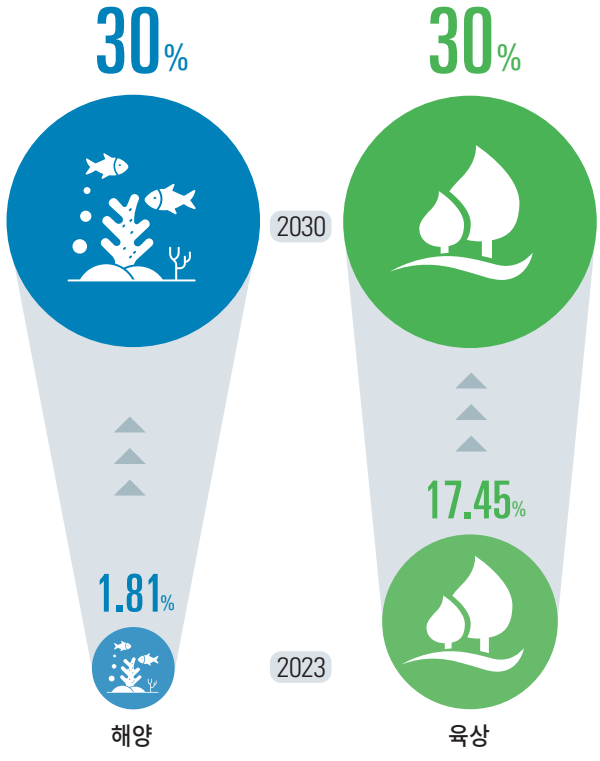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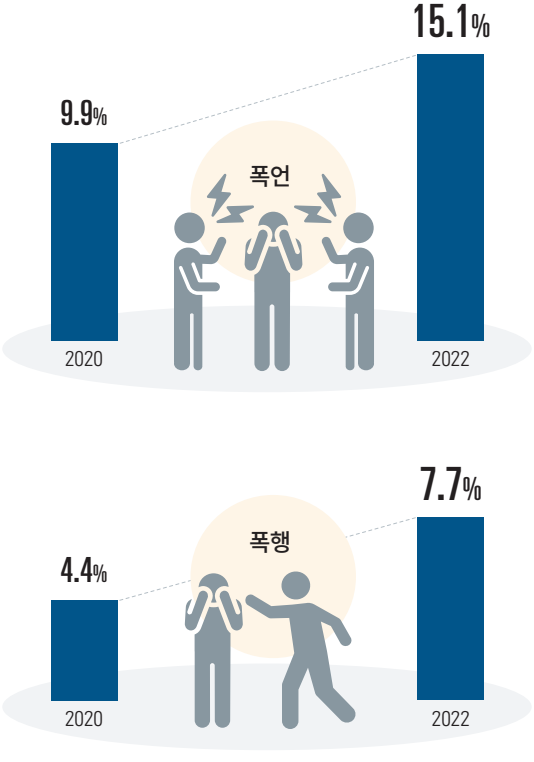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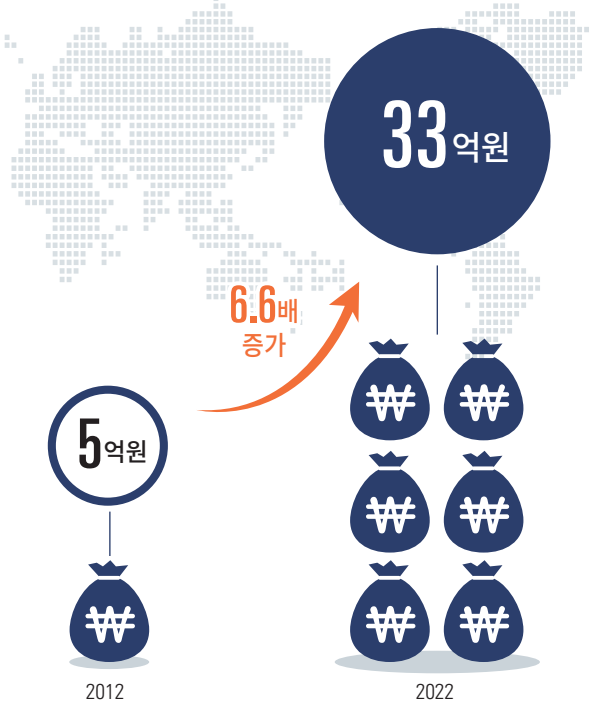
생태계 보호지역 비율 2030년까지 30% 목표



코로나19시기 감소했던 또래폭력 다시 증가



통계청 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SDG 1번 목표에서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빈곤을 모니터링하고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재난 상황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목표에서는 빈곤 그 자체에 주목하면서도, 빈곤의 원인이 되는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투입에 주목한다.

각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아동과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한국의 필수서비스 지출은 2011년 127.6조 원에서 2023년 322.3조 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1.3%에서 50.5%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0~17세 인구와 66~75세 인구의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후기 노령인구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분배 정책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 보호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수준이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업에 대응하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2011년 64.7%에서 2023년 77.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23년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이르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54.2%에 그친다.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특히 시간제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공적인 사회적 보호 체계의 한계를 부동산 소유로 극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주택소유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빈곤율은 감소세 속 2022년은 전년대비 0.1%p 증가

(관련 지표 1.2.1)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22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이 3454만 원이므로 빈곤선은 1727만 원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사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지출을 가감한 것이 시장소득이며,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과 공적연금 기여금과 사회보험료를 제한 것이 처분가능소득이다. 가계에서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소득분배 정책의 효과를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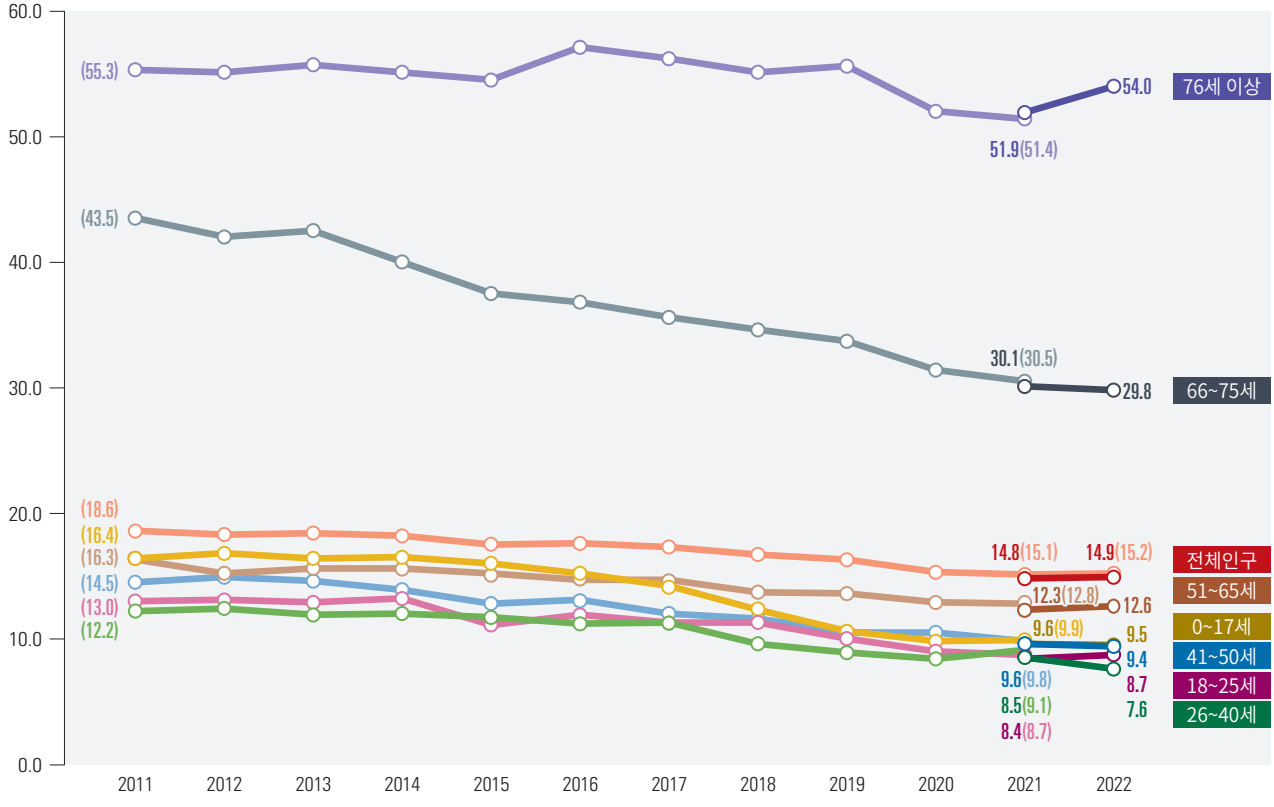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까지 감소한 후 2022년에는 15.2%로 증가하였다. 2017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빈곤율이 2021년에 전년 대비 0.2%p 감소하는 데 그쳤고 2022년에는 오히려 0.1%p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새롭게 파악한 소득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빈곤율은 2020년 15.1%에서 2021년 14.8%로 감소한 후 2022년 14.9%로 다시 증가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0~17세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16.4%에서 2021년 9.9%로 6.5%p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66~75세 인구의 빈곤율도 43.5%에서 30.5%로 13.0%p 감소하였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양호한 수준에 이르렀고 초기 노령인구의 경제적 상태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51~65세 인구의 빈곤율은 16.3%에서 12.8%로 3.5%p,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도 55.3%에서 51.4%로 3.9%p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간 노동시장 은퇴 전후의 연령대에서 소득 개선이 크지 않았고 후기 노령인구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소득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을 비교하면 소득분배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소득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시장소득 빈곤율로 나눈 값을 빈곤 감소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1.3%,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15.3%이므로 빈곤 감소 효과는 28.2%로 계산된다. 한국은 시장소득 빈곤율이 낮고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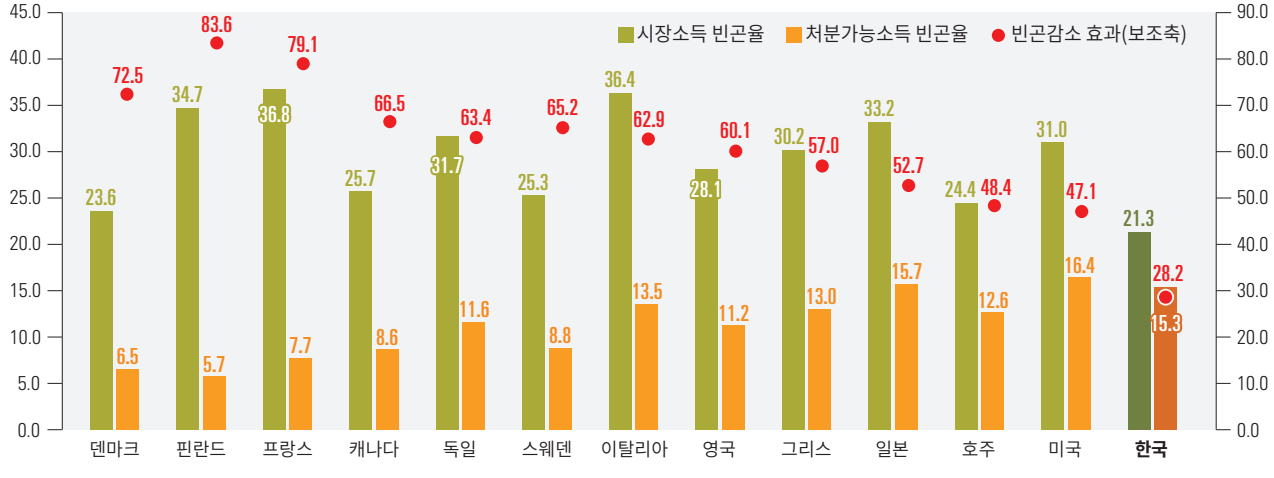
한국과 유사한 국가로는 호주, 미국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소득분배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각각 48.4%, 47.1%로 나타난다.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공적사회지출 규모는 GDP 대비 14.4% 수준이고, 이 가운데 현금급여는 GDP 대비 6.7%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낮은 편이다. 즉 공적이전을 통한 재분배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1~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3.12.07 인출)
주1 :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이며,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임
주2 :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주3 :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으며 2021년 이전 소득분배 지표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행정자료 보완전 수치는 ( )안에 표시

주요국별 빈곤 감소 효과, 2020 (단위: %)



출처: OECD.Stat,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stats.oecd.org, 2023.12.22. 인출)
주1 : 빈곤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시장소득 빈곤율로 나누어 계산함
주2 : 덴마크는 2019년, 일본은 2018년 기준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성별 차이는 축소 (관련 지표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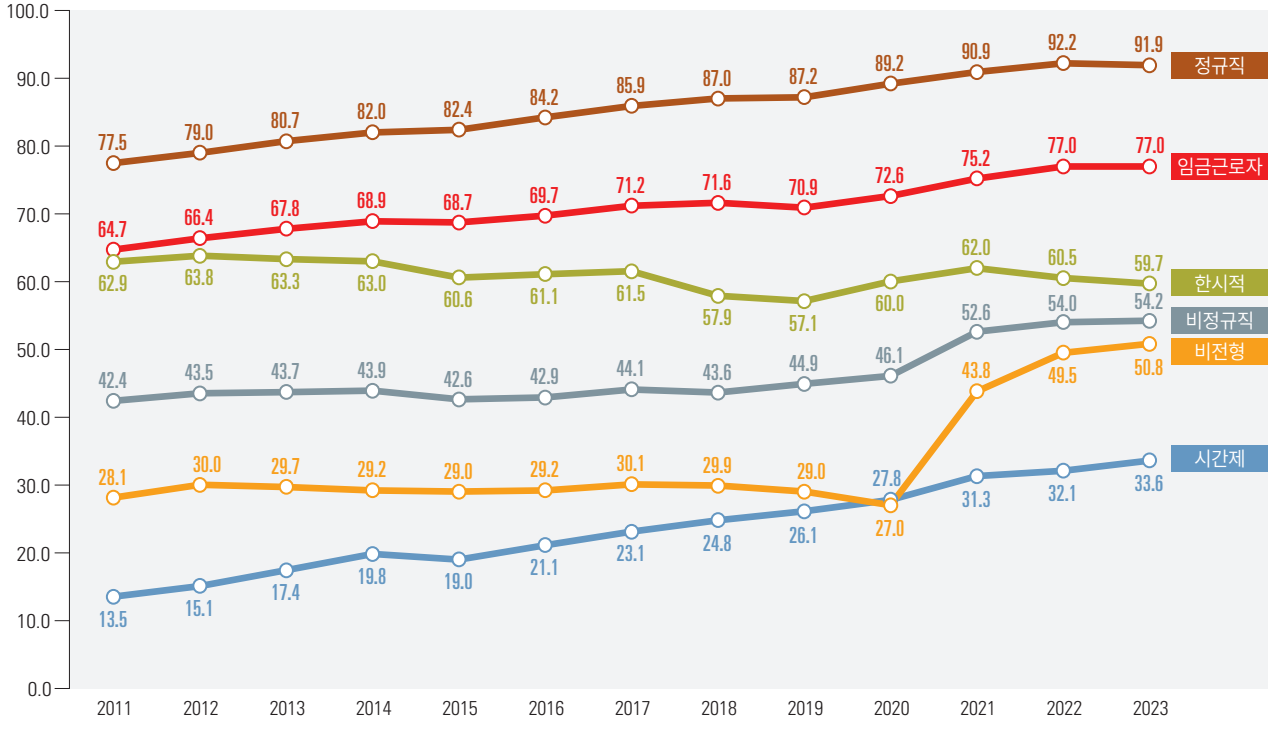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을 두 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이고,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업급여 사업이다.

이 중 실업급여는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은 청년, 비정규직, 이민자에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통해 소득보장제도의 실질적 보장 범위를 진단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이런 이유로 단기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게 나타난다. 정부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조건을 꾸준히 완화하여 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 64.7%에서 2023년 77.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23년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이르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54.2%에 그친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임금근로자가 59.7%로 비교적 높고, 비전형 임금근로자가 50.8%,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33.6%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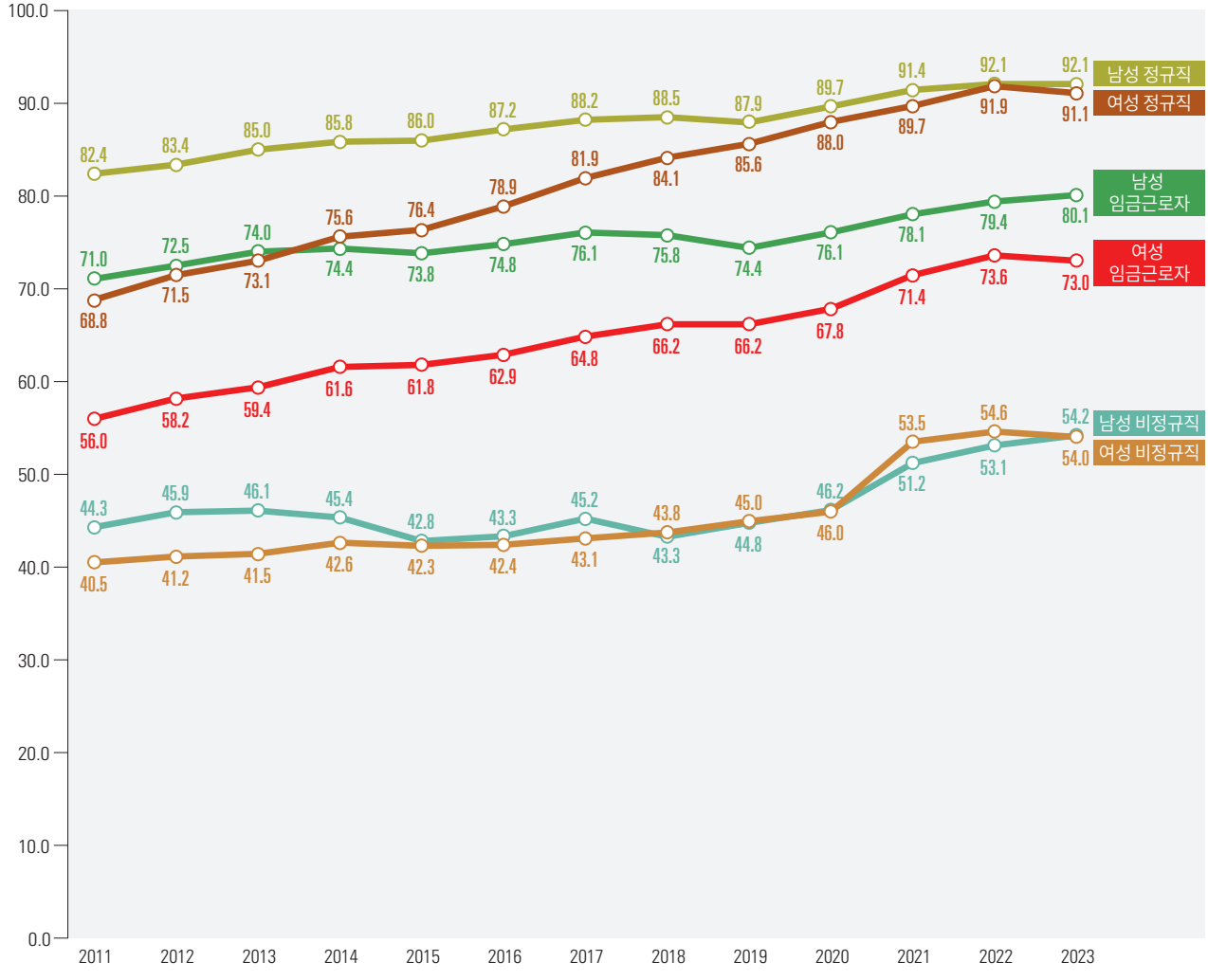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률의 성별 차이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까지만 해도 남성 82.4%, 여성 68.8%로 남녀 간 차이가 13.6%p에 달하였지만 2023년에는 남성 92.1%, 여성 91.1%로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에서도 남녀 각각 44.3%와 40.5%에서 54.2%와 54.0%로 가입률 차이가 3.8%p에서 0.2%p로 줄어들었다.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1~2023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https://kosis.kr, 2023.10.31. 인출)
주1 : 20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의 비교는 2018년 이전까지와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주2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성별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2011~2023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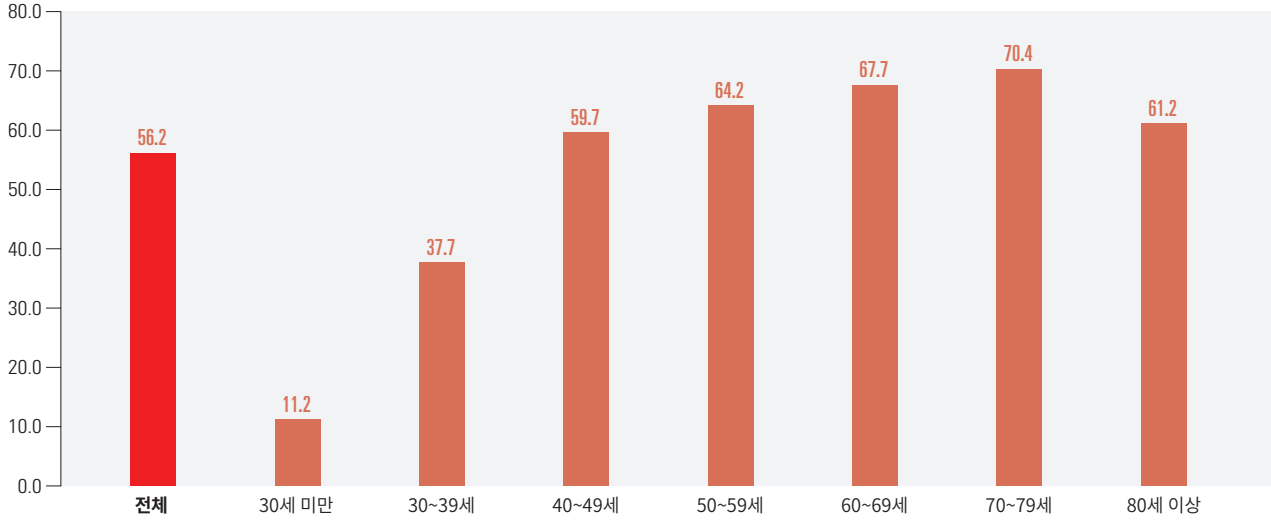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소유율도 증가

(관련 지표 1.4.2)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토지권 보유 비율을 빈곤 해소를 위한 주요 근거 지표로 활용한다. 토지 보유는 토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토지를 경제활동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취약집단이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SDG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의 비율로 토지권 보유 비율을 측정한다. 한국에서 취약계층의 가계 상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주거 비용이다. 주거 조건,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기타 인프라 등 사람이 사는 장소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15: 68). 이런 이유로 주거 영역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때는 기본 위생시설의 보유 여부, 주택의 방 수, 주택 비용을 지표로 이용한다. 이 중 주택 비용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 주택소유율이다.

통계청이 주택의 법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주택소유통계」는 개인과 가구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2022년 기준 1530.9만명이며, 가구수로는 1223.2만 가구이다. 일반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 수는 1644.8만호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가구의 주택소유율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11.2%, 30~39세 37.7%, 40~49세 59.7%, 50~59세 64.2%, 60~69세 67.7%, 70~79세 70.4%, 80세 이상 61.2%로 나타난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주택소유율이 낮은 젊은 세대의 가구에서는 주택 임대비용이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소유율, 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 통계(https://kosis.kr, 2023.12.30.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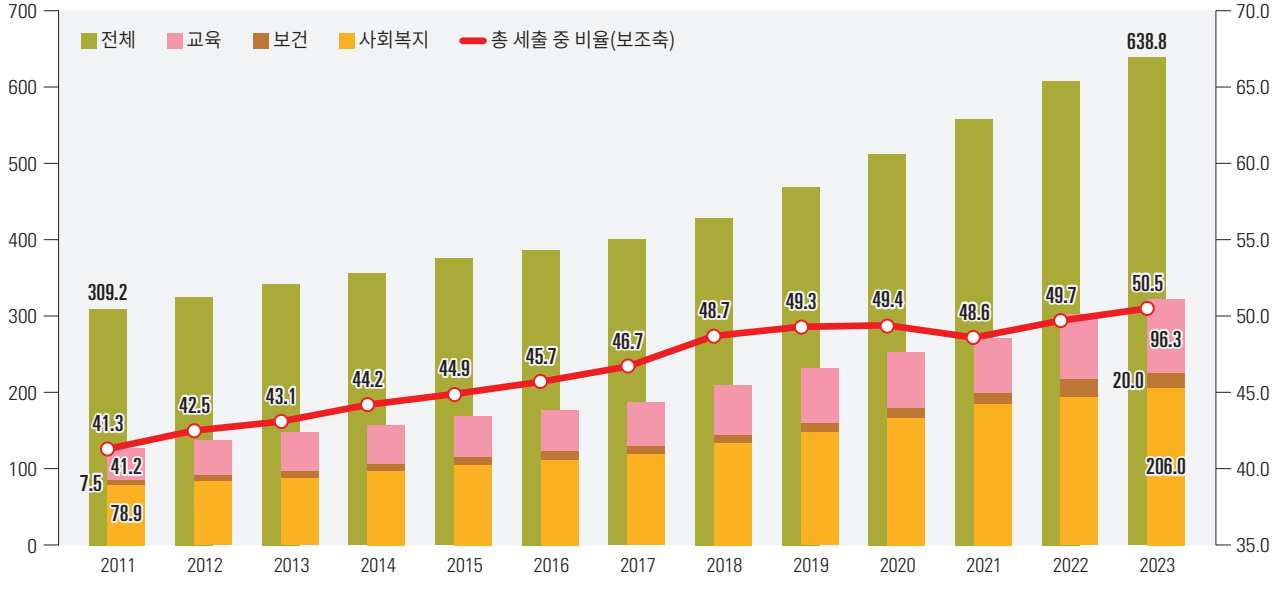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세출이 50%를 넘어서

(관련 지표 1.a.2)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빈곤친화적 사회복지 지출(SDG 1.b.1)과 필수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출(SDG 1.a.2) 지표는 정부의 빈곤 감소 노력을 나타낸다. 한국의 16대 분야별 세출 중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11년 127.6조 원에서 2023년 322.3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교육 분야 지출은 2011년 41.2조 원에서 2023년 96.3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지출은 2011년 7.5조 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였던 2022년 22.7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 20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1년 78.9조 원에서 2023년 206조 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별 세출, 2011~2023 (단위: 조 원, %)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분야별 세출 예산(https://www.openfiscaldata.go.kr, 2023.08.30. 인출)

2 ZERO HUNGER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DG 2번 목표는 기아종식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의 식량 공급과 소비를 넘어 양질의 영양 공급이 가능한 식량생산 체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 기아와 영양부족 근절은 현세대의 가장 큰 지구적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2022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SOFI)」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 명으로 전년보다 46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억 50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기아와 식량불안 및 영양불량을 종식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실제 기아 인구는 더 늘어났다.

최근 신냉전, 탈세계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food accessibility)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영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영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섭취의 양적 충족과 함께 질적 수준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영양섭취는 나이와 가구 형태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와 가구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양섭취 정도,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여성의 빈혈 유병률 등을 분석하여 국민의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식량 공급 측면에서 한국은 쌀 이외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이다. 식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지면적과 농업인력 등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보전이 특히 중요하다. 농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핵심 생산수단으로써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토양 등 질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시장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농업에 대한 정부 투자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국가별 농업 여건에 대비한 정부의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농업지향지수(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AOI)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농업 투자의 적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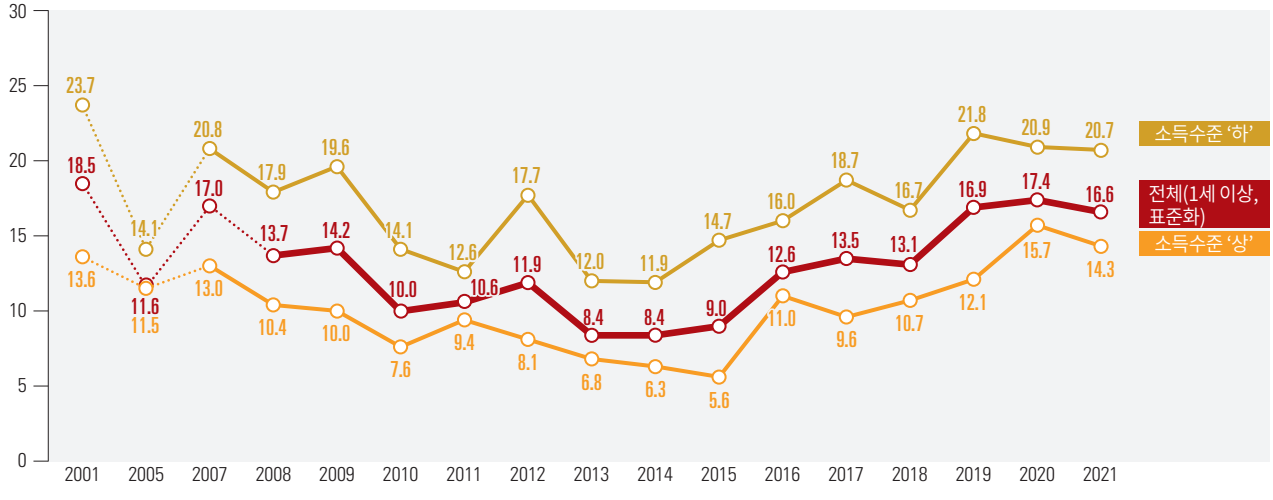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

(관련 지표 2.1.1)

영양부족에 시달렸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식품산업의 발전, 식품교역의 확대 등으로 영양과잉 사회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소득수준, 식생활 방식 등에 따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는 여전히 있다. 영양섭취부족자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과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2001년 18.5%에서 2014년 8.4%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4%로 높아졌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16.6%로 증가 추세가 멈추었다.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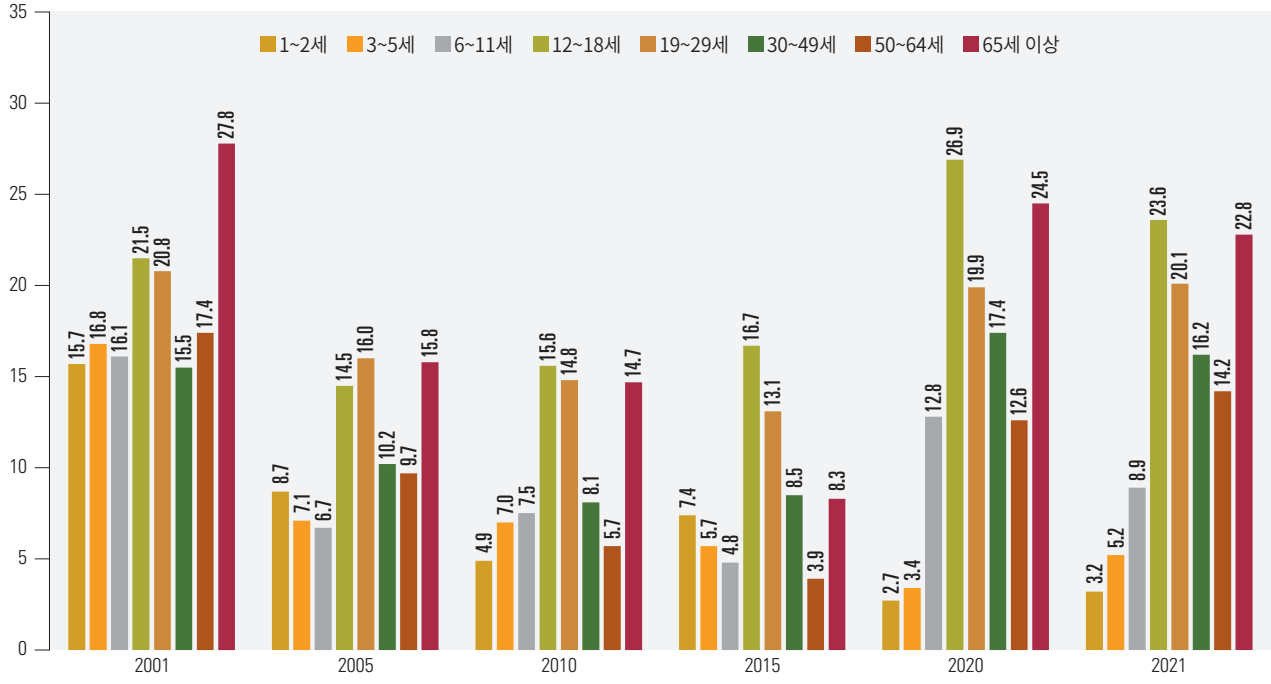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3.12.10. 인출)
주1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주2 : 소득수준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sqrt{가구원수}$)을 성별 · 연령별(5세단위) 오분위(상/중상/중/중하/하)로 분류

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2021년 기준 14.3%로 같은 해 저소득층의 20.7%보다 6.4%p 낮다. 소득수준에 따라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최근 수년간 두 소득계층 모두에서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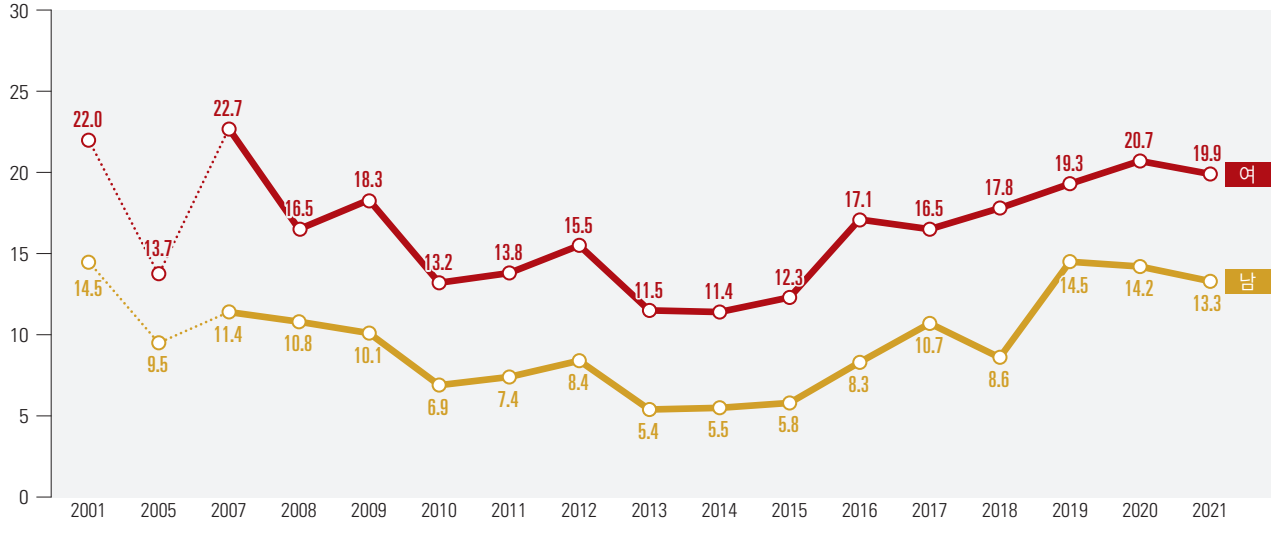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늘어났다. 2015년 대비 2021년에 6세 미만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6세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그룹에서 증가하여 전반적인 영양섭취 수준이 떨어졌다. 6세 이상 중에서도 6~11세 그룹의 경우에는 4.1%p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4.5%p나 늘어났다.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집단에서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연령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1~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3.12.10. 인출)

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1~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3.12.10 인출)
주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남녀 간에도 식생활이나 식습관의 차이로 인해 영양섭취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매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2021년 기준 남성과 여성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각각 13.3%와 19.9%로 여성이 6.6%p 더 높다.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의 남녀 간 차이는 2005년에 4.2%p로 가장 적었고 2007년에 11.3%p로 가장 컸다. 최근으로 보면 2019년 4.8%p에서 2021년 6.6%p로 격차가 다소 커졌다.

최근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생활 양식의 변화 등 다양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고령자들이 신체 활동이 줄고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장애를 겪고 있어, 영양섭취 불균형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이유로 결식이 잦아지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또한 일부 젊은 층에서는 다이어트를 이유로 단식 혹은 원푸드 식사를 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다양하다. 사람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은 영양섭취 측면에서 중요하다. 영양섭취가 부족한 원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 특성이나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세심한 분석에 기반하여 맞춤형 식생활 개선 및 영양 증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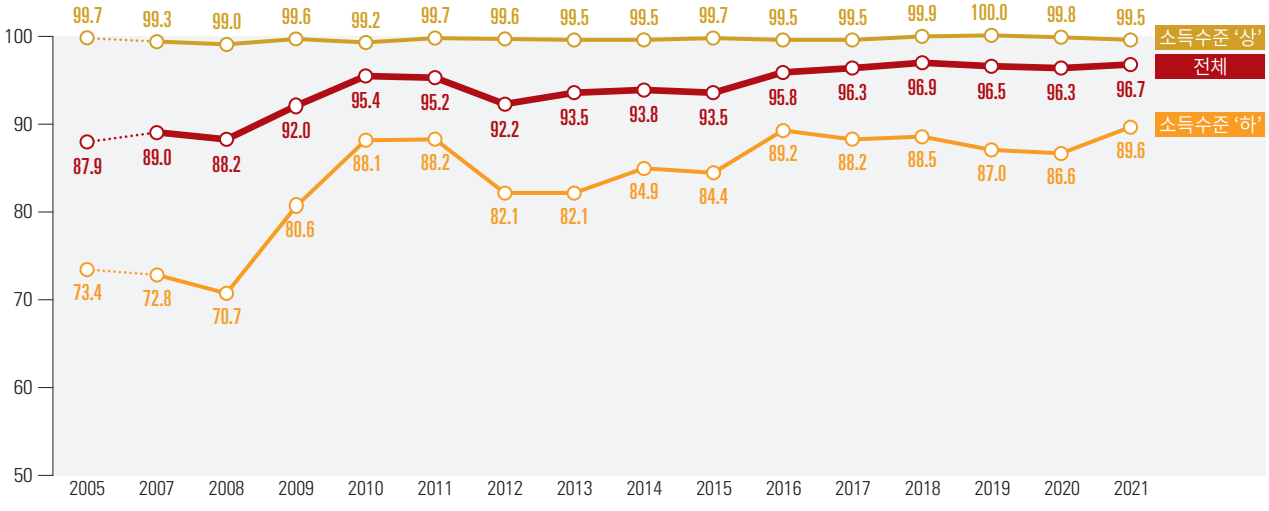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 필요

(관련 지표 2.1.2)

음식의 안정적 섭취는 음식을 얼마나 충분하고 다양하게 먹는지로 알아볼 수 있다. 식량불안 경험척도 중 하나인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은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이란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에 대해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로 집계한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은 2005년 87.9%에서 점차 늘어나 2021년에는 96.7%에 이른다. 이는 식량불안을 경험하는 가구가 같은 기간 12.1%에서 3.3%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가구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2005~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3.12.10. 인출)
주 :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 (식품안정성 확보가구÷전체 가구)×100

고소득층에서는 2005년 이래 꾸준히 99% 이상의 높은 식품안정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2005년 73.4%에서 2021년 89.6%로 높아져 식생활 형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여전히 9.9%p의 격차가 존재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나 고령자 가구의 식생활 형편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것이다. 이들 가구가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절대 기아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취약계층에서 양질의 먹거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과 영양 섭취 접근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여성 빈혈 유병률 증가에 관심 필요

(관련 지표 2.2.3)

부실한 영양섭취는 빈혈로 이어질 수 있다. 빈혈의 원인은 철 결핍, 영양부족, 만성염증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철 결핍성 빈혈인데, 혈액손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식이섭취 부족으로 인해 음식에서 철분을 흡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빈혈이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관련이 큰 이유이다. 빈혈 유병률은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기준으로 10~11세는 11.5g/dL 미만, 12~14세는 12g/dL 미만, 15세 이상 비임신 여성은 12g/dL 미만, 15세 이상 임신 여성은 11g/dL 미만인 경우로 정의된다.

빈혈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성장으로 인해 철 요구량이 늘어나 상대적인 철 부족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은 월경으로 인한 철 손실이 커서 남성보다 빈혈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세 이상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2021년 14.4%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보다 0.9%p 줄어든 것이지만 가장 낮았던 2014년의 9.8%보다는 4.6%p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최근에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빈혈 예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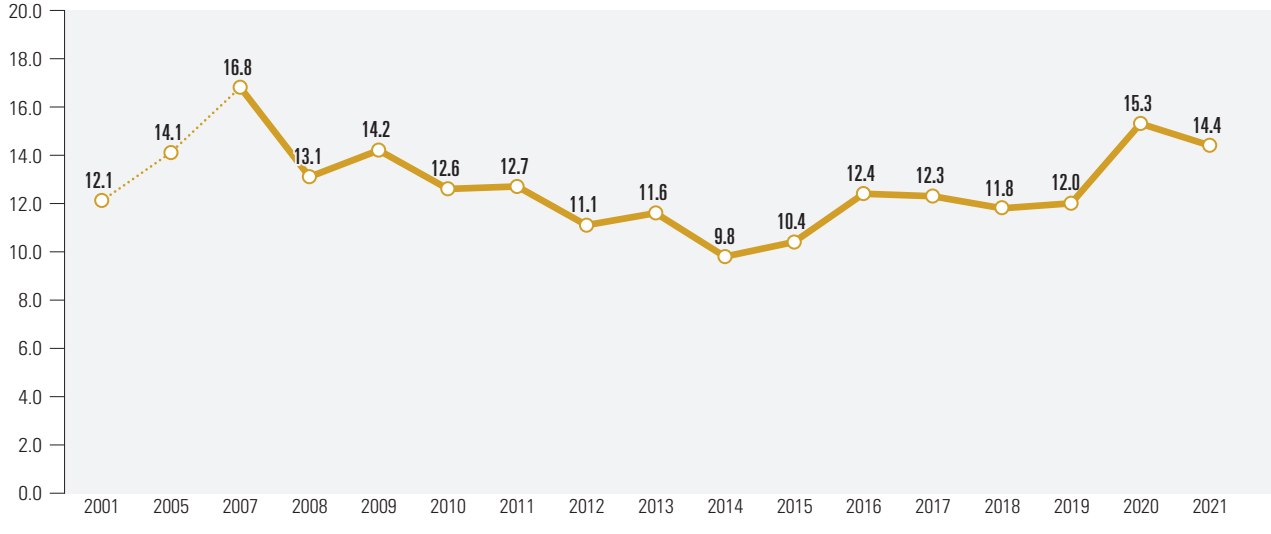
농가인구 고령화와 투자 한계로 최근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지표 2.3.1)

농업 노동생산성은 농업에 투입된 노동력 대비 그 결과로 얻은 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부가가치를 자영농업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나타낸다. 노동생산성은 자본생산성과 함께 농업과 타 산업 또는 농가 간 경제적 능률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요인으로는 첫째, 노동자 1인당 실물자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투자지출을 통해 실물자본의 양을 늘림으로써 투자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동자 1인당 인적자본의 증가이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교육에 의한 노동의 질적 향상

10세 이상 여성 빈혈 유병률, 200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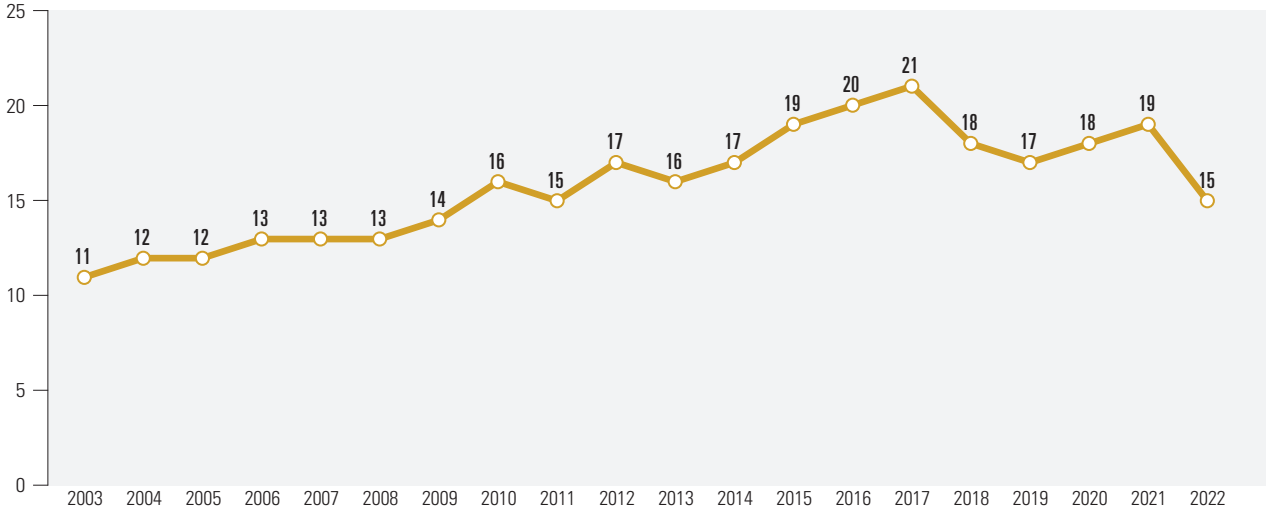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3.12.10 인출)

과 노동력에 체화된 지식이다. 셋째, 기술 진보이다. 기술(technology)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한 방법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하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실물자본, 인적자본, 개선된 기술을 갖출 때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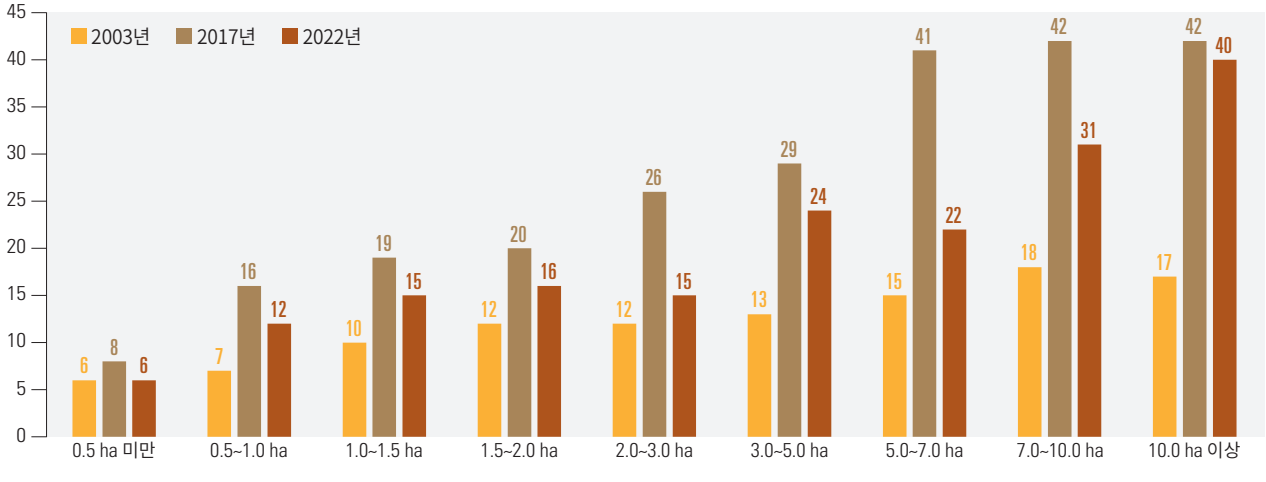
농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2022년 1만 5000원이다. 이는 2003년 1만 1000원에서 연평균 1.6%씩 증가한 셈이다. 농업 관련 실물자산의 양과 인적자본이 증가하고 기술 발전도 수반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노동생산성은 2017년 2만 1000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되고, 1인 경영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인적 및 물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노동생산성이 정체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 노동생산성, 2003~2022 (단위: 시간당 천 원)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https://kosis.kr, 2023.12.10 인출)

경지규모별 농업 노동생산성, 2003~2022 (단위: 천 원)



연평균 증감률 (%)	전체	0.5 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2003~2022	1.6	0.0	2.9	2.2	1.5	1.2	3.3	2.0	2.9	4.6
2017~2022	-6.5	-5.6	-5.6	-4.6	-4.4	-10.4	-3.7	-11.7	-5.9	-1.0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https://kosis.kr, 2023.12.10 인출)

지난 2003과 2022년 사이 경지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를 비교해 보면, 0.5ha 이상 농가에서는 경지규모에 따라 연평균 1.2~4.6%의 증가율을 나타내지만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는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 특히 10ha 이상 농가에서 노동생산성 개선 정도가 가장 크다. 대규모 영농에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2017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는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5%씩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은 경지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그로 인한 자본투자의 제약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농업노동력 확보와 새로운 투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식량안보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높은 정부의 농업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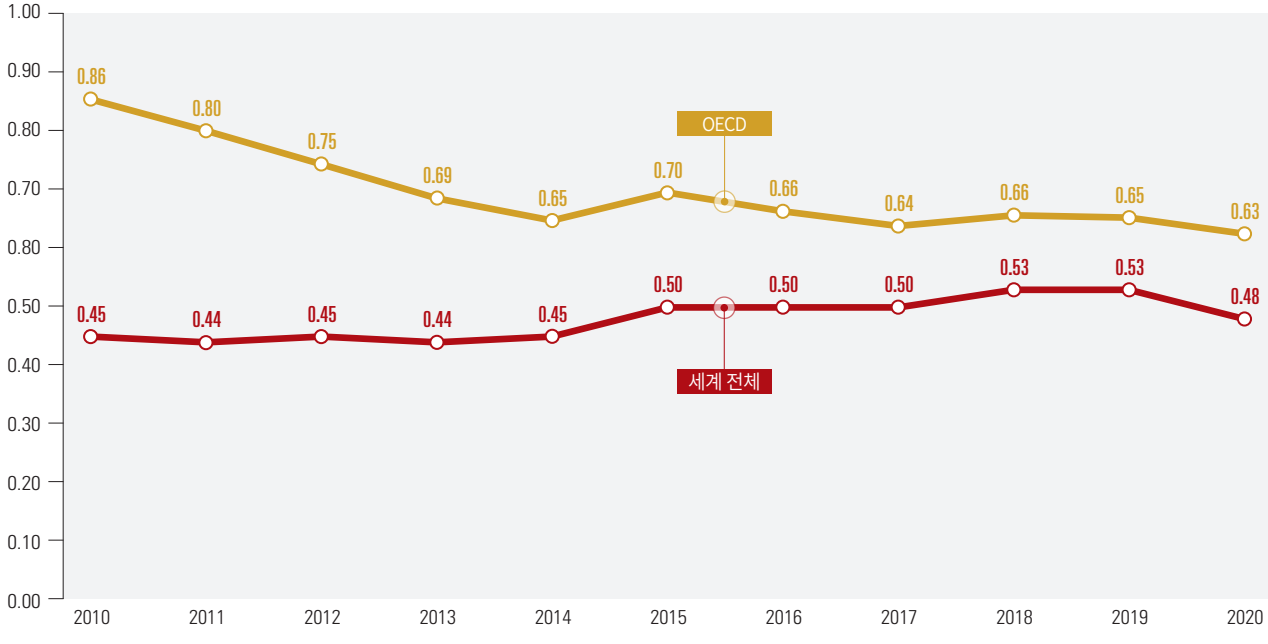
(➲ 관련 지표 2.a.1)

농업지향지수(AOI)는 GDP 대비 농업부가가치와 정부 총지출 대비 농업지출 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농업지향지수가 1보다 크면 정부지출 중 농업지출의 비중이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1보다 작으면 정부의 농업지출이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AO에서 발표한 2010~2020년 농업지향지수의 세계 평균은 0.48이고 OECD 38개국 평균은 0.70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의 농업지출 경향이 비회원국보다 높지만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에 비해서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출 경향은 감소 추세이다. 202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농업지향지수는 0.63이다. 농업지향지수가 1을 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3.21), 스위스(2.71), 일본(1.98), 한국(1.80), 체코(1.37), 아일랜드(1.03)의 6개국인데, 이들 중 체코를 제외한 5개국은 곡물 자급률이 50% 이하로 국내 생산을 통한 곡물 자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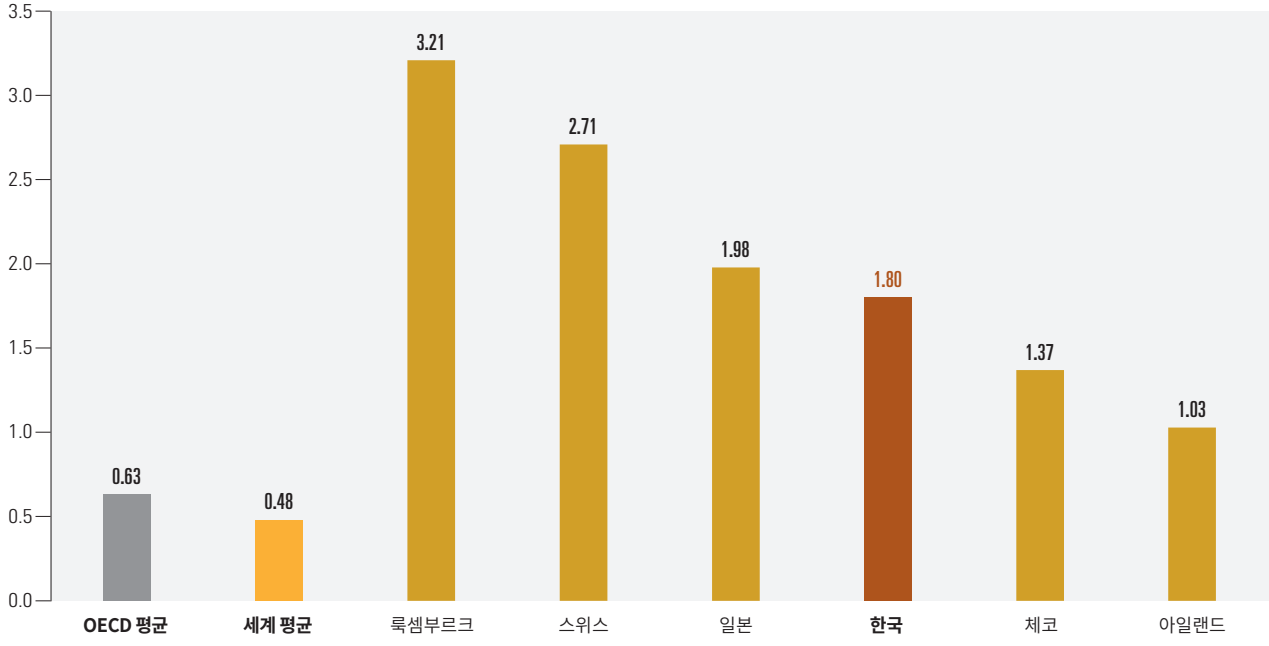
농업지향지수가 높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농업지향지수는 농업생산액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비하여 국가 재정의 투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별 식량 생산 여건, 재정 수준, 국민의 합의 등에 따라 바람직한 농업지향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지향지수가 1 이상인 국가들은 대부분 쌀, 밀, 옥수수 등 필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 인구 대비 경지면적이 작은 나라에서는 국민에게 식량과 영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의 경제 기여도 이상으로 농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 및 OECD 평균 농업지향지수, 2010~2020



출처: FAO, AOI for government expenditures dataset(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data-portal, 2023.12.13. 인출)

OECD 평균 및 주요국 농업지향지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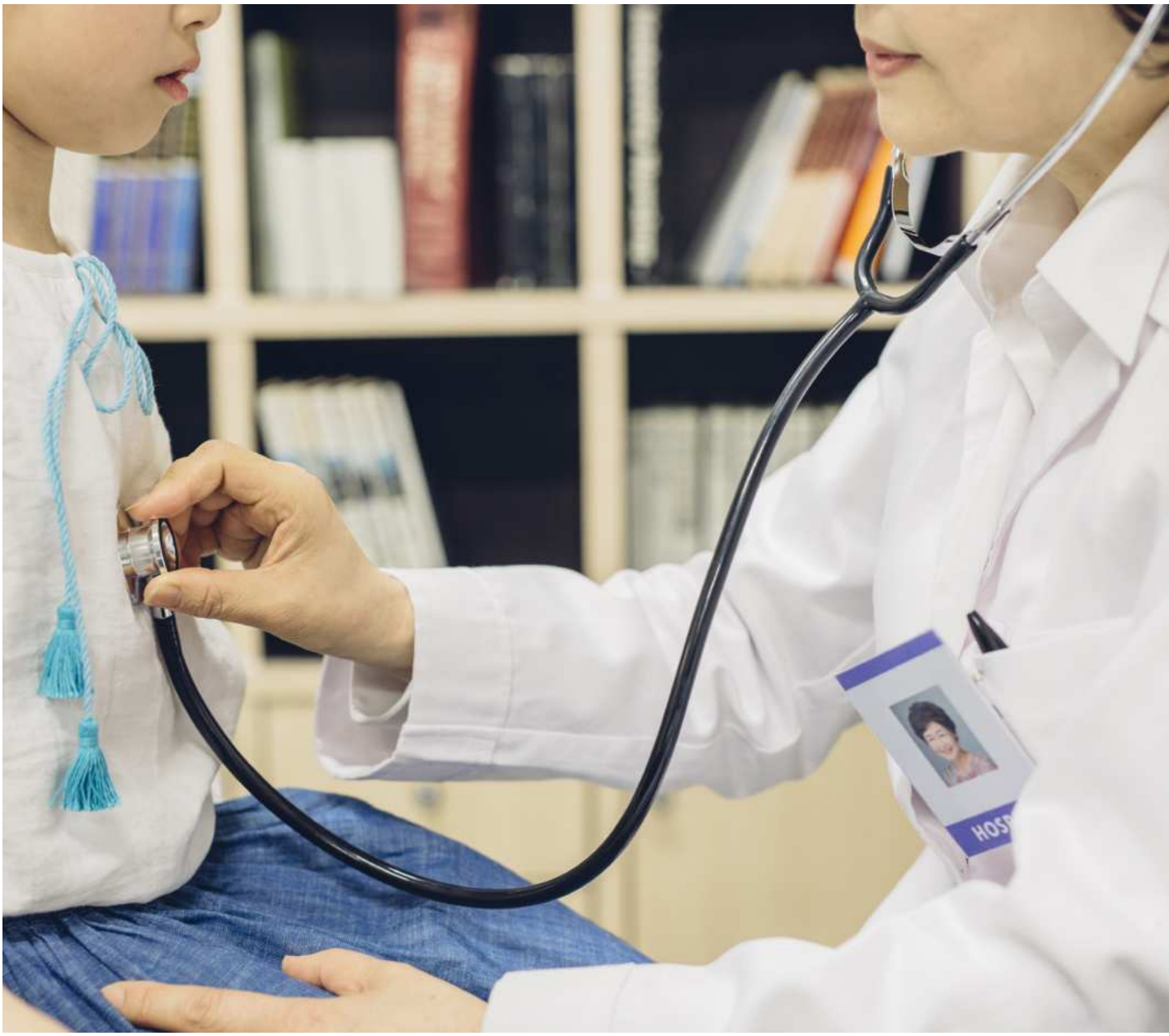


출처: FAO, AOI for government expenditures dataset(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data-portal, 2023.12.13. 인출)
주 : OECD 회원국 중 농업지향지수가 1보다 큰 6개국임

용어 해설

- **농업지향지수(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AOI)** : 농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국가 재정이 농업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농업지향지수가 1보다 크면 정부의 농업지출 비중이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함.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SDG 3번 목표에서는 전 세계인의 건강권 보장을 지향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오랜 기간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 왔다. 더불어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향상 시키고,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힘써 왔다. 이처럼 강건한 보건의료체계를 바탕으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건강 사회를 이룰 것을 꿈꿔 왔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감염병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팬데믹 위기는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와 국제 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WHO(2023)는 감염병 확산이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이어지는 등 보건 위기가 초래함을 주시하면서 건강과 관련한 SDG의 성취는 이러한 보건 위기의 대응, 사전 예방 활동, 회복력과 대응력 구축 등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보건의료제도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건강 수준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 건강 행태와 환경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알코올 섭취량(2021년 기준 성인 1인당 7.7리터)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하였고, 유해 환경에 대한 노출(2019년 기준 10만 명당 비의도적 중독 사망 0.2명) 수준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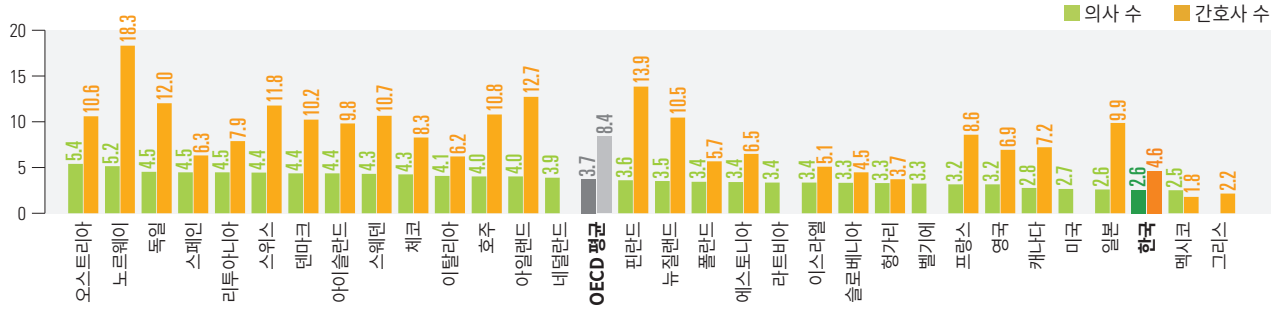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모성사망비(2020년 기준 출생아 10만 명당 8.1명) 감소나 말라리아(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0.08명) 퇴치와 같은 것이다. 이는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과제이다. 한국은 보건의료인력(2021년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이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편이다. 전체적인 수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지역 간 격차(의사와 간호사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화 경향) 해소이다.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든 국민의 접근권을 향상하고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건강 분야 SDG 지표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공중보건의 객관적 수준을 가늠하고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OECD 국가 대비 적은 보건의료인력, 대도시로의 편중 심화 (관련 지표 3.c.1)

국민의 의료적 필요(needs)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은 건강위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OECD(2020)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건의료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충분한 인력의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2.6명과 4.6명이다.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의사 3.7명, 간호사 8.4명으로 의사와 간호사 모두 한국보다 많다. 의사와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로 인구 천 명당 각각 2.5명과 1.8명에 그친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독일(의사 4.5명, 간호사 12.0명)과 일본(의사 2.6명, 간호사 9.9명)은 한국보다 보건의료인력이 많다.

OECD 국가별 의사 및 간호사 수, 2021 (단위: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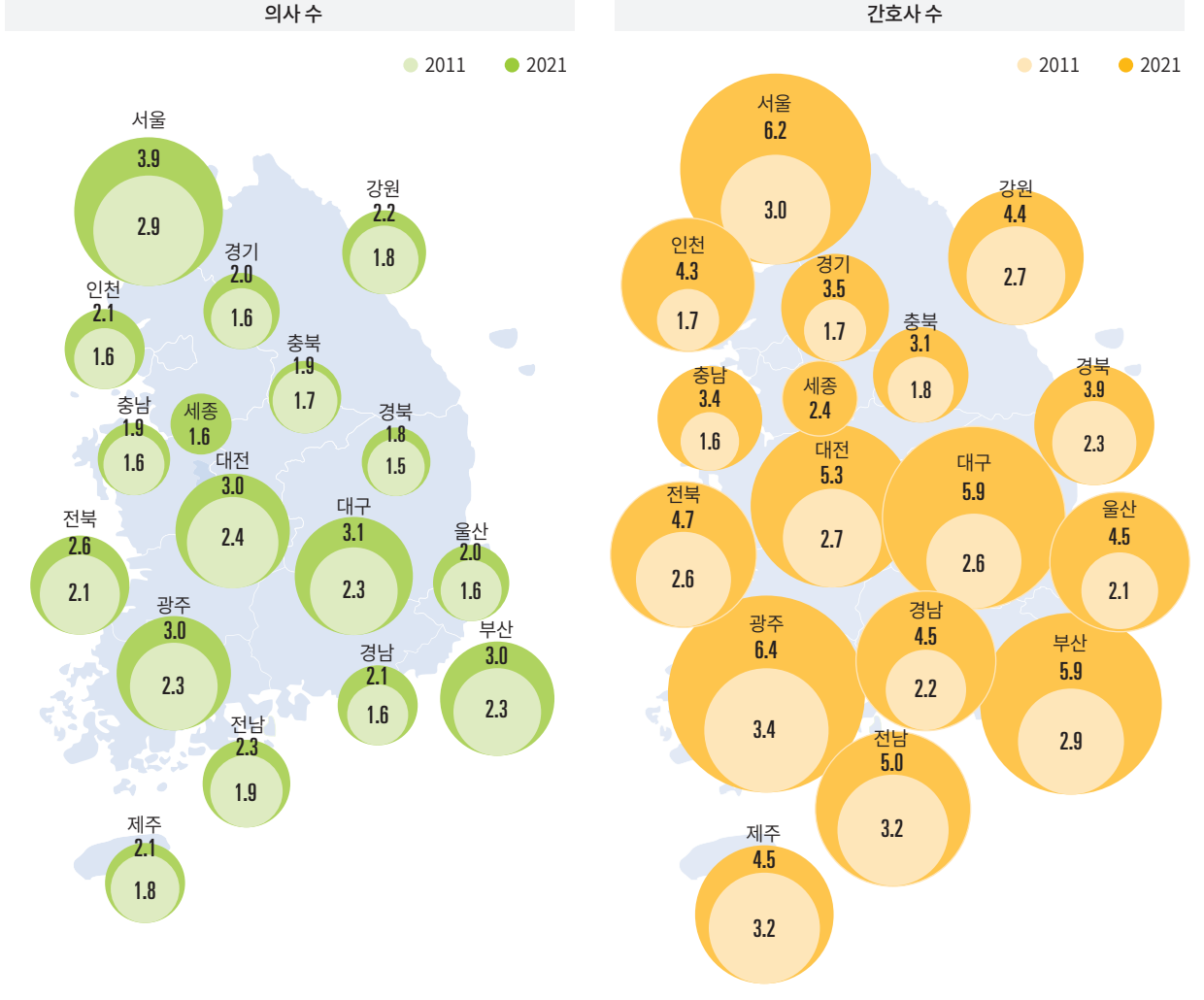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practising physicians' & 'professional nurses, practising' (https://stats.oecd.org, 2023.10.03. 인출)
주1 : 국제 비교의 정확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사만 비교함
주2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일본의 경우 2021년 자료가 없어 2020년 자료를 사용함
주3 : 해당 기간(2021년 또는 2020년) 의사 수 또는 간호사 수를 보고한 31개국을 나타냄. 그리스는 의사 수, 벨기에, 라트비아, 네덜란드, 미국은 간호사 수 데이터 없음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모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 집중화가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1년과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천 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간호사가 1.8명에서 3.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건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권역 내 쏠림 현상도 심화되었다. 부산과 경남의 의사 수 차이는 2011년에 0.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0.9명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0.8명에서 1.3명으로, 광주와 전남의 경우에는 0.4명에서 0.7명으로, 대전과 충남의 경우에는 0.8명에서 1.1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구 · 경북권에서 인력 쏠림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모성사망비는 감소하였으나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속된 노력 필요 (관련 지표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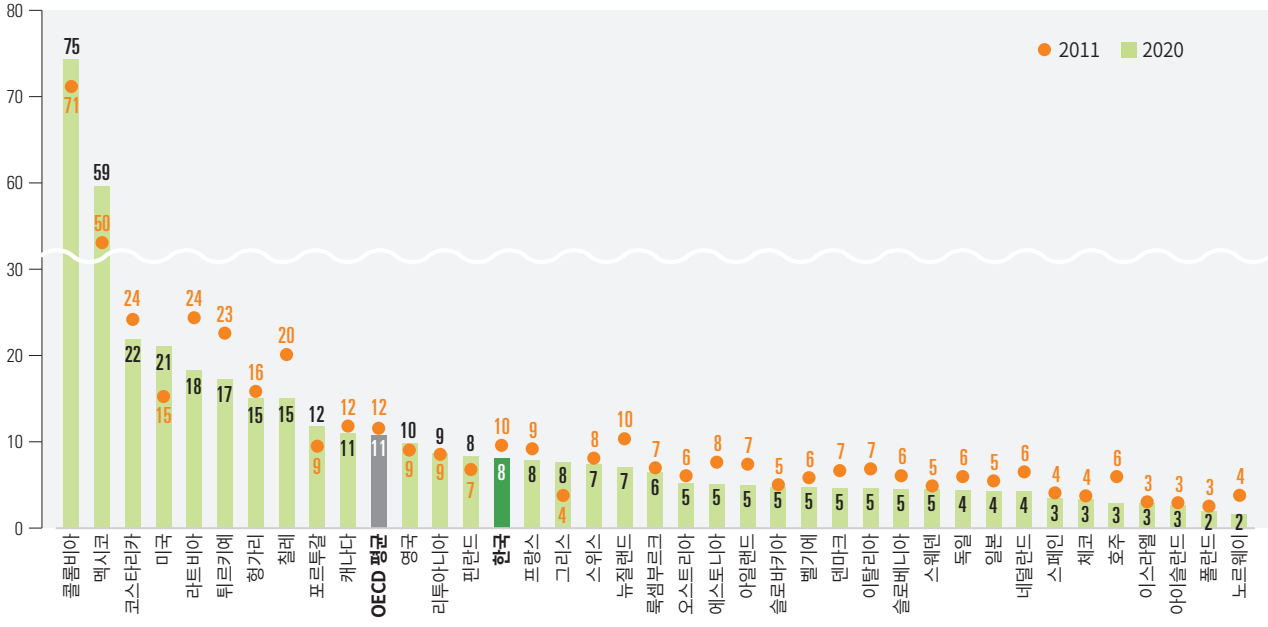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을 나타낸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후 겪는 합병증이나 심한 출혈 및 감염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임신 중에 발생하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철저한 예방 관리로 사망을 막을 수 있다. 발전된 보건의료체계와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2011, 2021 (단위: 천 명당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3&conn_path=I3, 2023.10.08. 인출)
주1 : 의사는 한의사 포함,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미포함
주2 : 천 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는 시도별 추계인구(2020년)로 산정함
주3 : 세종은 2011년 자료 없음

OECD 국가별 모성사망비, 2011,2020 (단위: 출생아 10만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10.07. 인출)

WHO(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산모 사망의 95%가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2020년에 출생아 10만 명당 8.1명의 산모가 사망하였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1.5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2011년 11.5명에서 2020년 10.8명으로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한국의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보다 낮다. 하지만 OECD 국가에는 콜롬비아, 멕시코와 같이 사망률이 매우 높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산모 건강이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좋다고 할 수만은 없다. OECD 평균 전후에 있는 국가군을 살펴보면 남미 국가와 동부 및 남부 유럽 국가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표방하는 일본과 독일은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자가 4.3~4.4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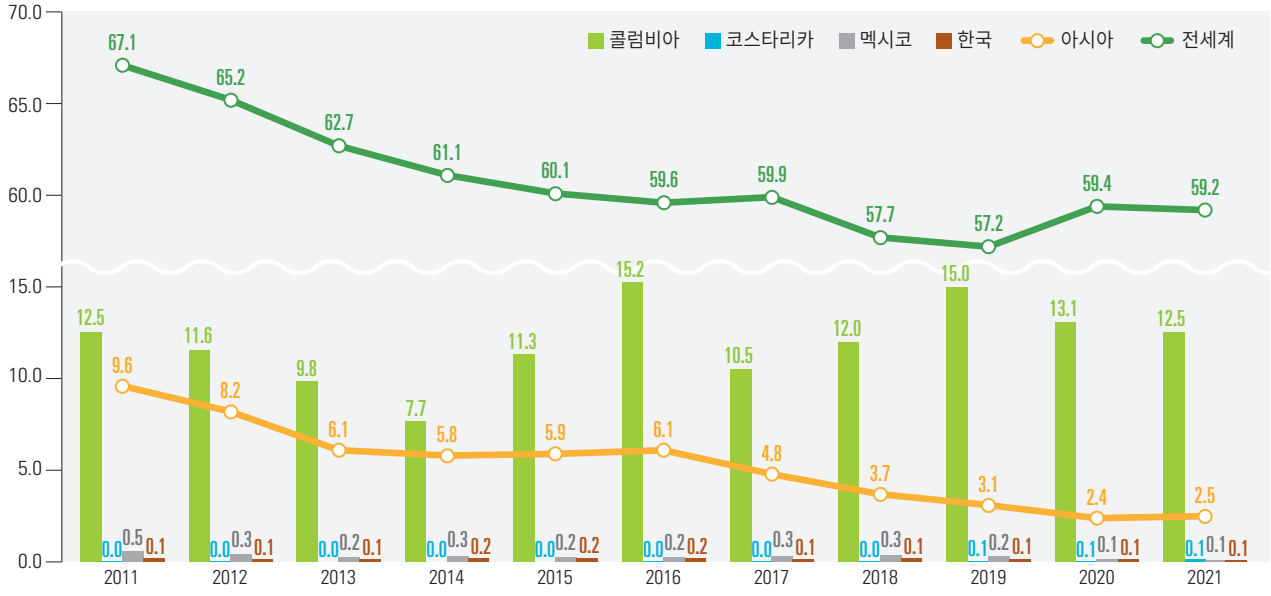
2030년까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 강화 필요 (관련 지표 3.3.3)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매개체 감염병이며 세계적으로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에서는 1990년대 후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기금 조성을 촉구한 이래, 말라리아 퇴치를 새천년개발목표(MDG)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최근에는 말라리아 예방을 강화하고자 신규 백신을 승인하였다. WHO에서는 2030년까지 35개국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WHO(2023)의 분석에 의하면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의 약 2억 4700만 명(인구 1000명당 59.2명)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도 2021년에 294명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질병관리청(2022)에 따르면 2021년 말라리아 환자의 92.8%가 국내(민간인 71.7%, 군인 21.2%)에서 발생하였고 7.2%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뿐이다.

한국의 말라리아 발생률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0.08명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전 세계 환자의 95%가 위생 환경이 좋지 못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2010년 이후 말라리아 통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011년 인구 1000명당 9.6명이었던 아시아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계속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5명까지 떨어졌다.

OECD 국가별 말라리아 발생건수, 2011~2021 (단위: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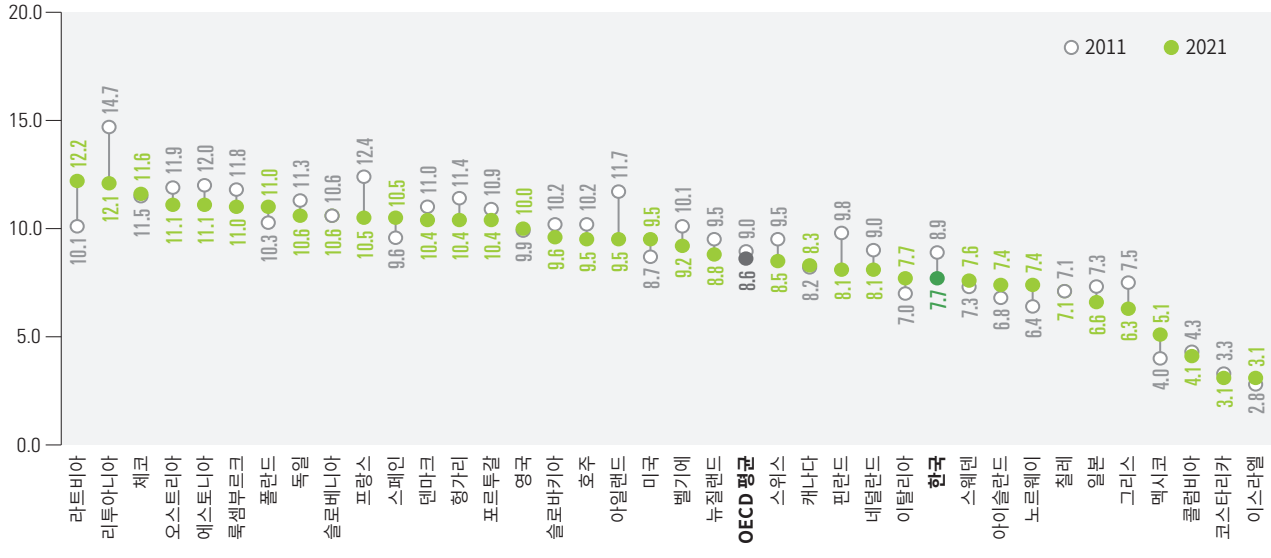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10.07. 인출)
주 : OECD 회원국 중 말라리아 발생이 보고된 국가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한국을 나타냄

알코올 소비량 10년 전에 비해 1.2리터 감소, OECD 평균 대비 0.9리터 적게 소비 (관련 지표 3.5.2)

알코올 소비량은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된다. WHO에서는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전체 사망자의 약 4.7%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질병과 부상으로 유발된 부담의 4.6%가 알코올 섭취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한국의 15세 이상 국민이 소비한 알코올은 1인당 연간 7.7리터로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1.2리터 감소하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알코올 소비량은 2011년 1인당 9.0리터에서 2021년 8.6리터로 10년 만에 0.4리터 감소하였다. 하지만 라트비아(+2.1리터), 멕시코(+1.1리터), 노르웨이(+1.0리터), 스페인(+0.9리터) 등 13개 국가에서는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OECD 국가별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 2011, 2021 (단위: 리터)



출처: OECD.Stat, Alcohol consumption(https://stats.oecd.org, 2023.10.03. 인출)
주 : 2021년 자료가 없는 아이슬란드(2020), 룩셈부르크·독일·포르투갈·벨기에·이탈리아·칠레·그리스·콜롬비아·이스라엘(이상 2019), 호주(2017)는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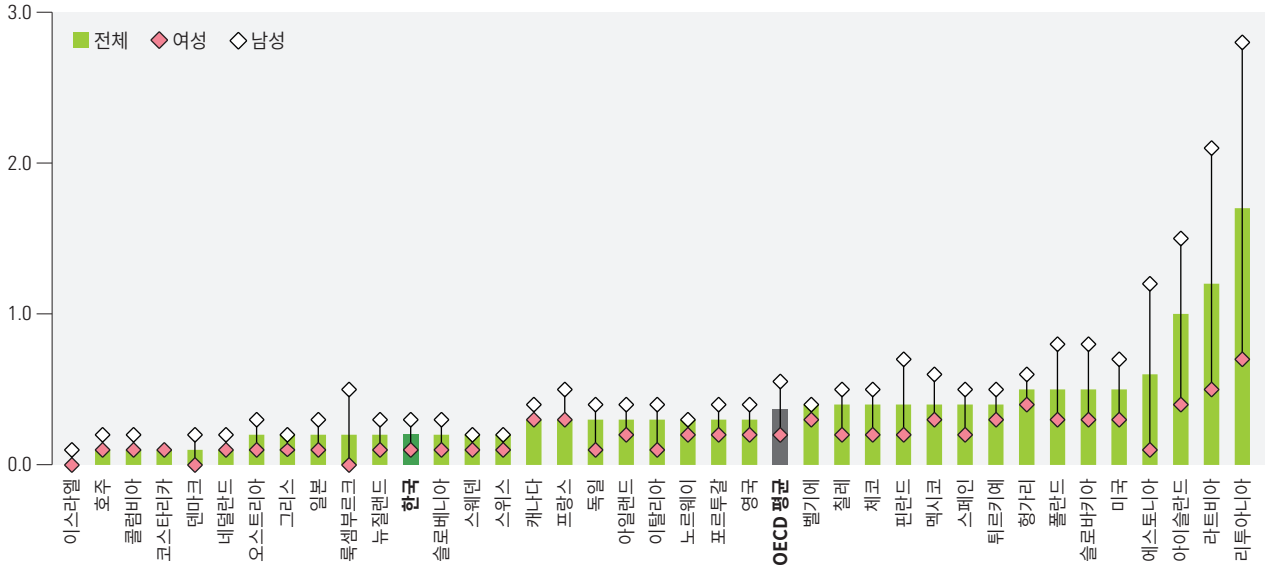
OECD 국가에 비해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이 낮은 편

(관련 지표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은 의도치 않게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WHO에서는 이 지표를 환경오염 사망률 지표(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하나로 관리한다. OECD 국가의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은 2019년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보고된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적은 0.2명에 그친다.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는 예외적으로 1명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OECD 국가의 남성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0.6명이고 여성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0.2명이다.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간 사망률의 차이는 전체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이 높은 국가(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등)에서 더 큰 경향이 있다. 한국의 성별 사망률 차이는 0.2명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OECD 국가별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2019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10.07. 인출)

용어해설

- **질병부담 (burden of disease)**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환율, 사망률, 장애, 재정적 비용 등으로 측정한 건강 관련 문제의 총체적 영향을 의미함.

4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UN에서는 SDG 4번 목표에 대해 현재의 이행 수준과 속도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 다소 저조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UN, 2023).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교육 활동이 중단되고 학습 손실이 발생하면서 교육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 사회는 학업성취의 개선, 교육기회의 확대, 교사 질의 확보 등 중요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한국은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여국에 가까운 나라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해결과제들은 국제사회와 공통적으로 한국에도 적용되거나, 또는 한국적 맥락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기초학력미달 수준의 중·고등학생 비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한 평생교육 참여율 역시 2022년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SDG 4번 목표에서 강조되고 있는 ICT 역량은 한국 청소년과 성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성, 연령, 지역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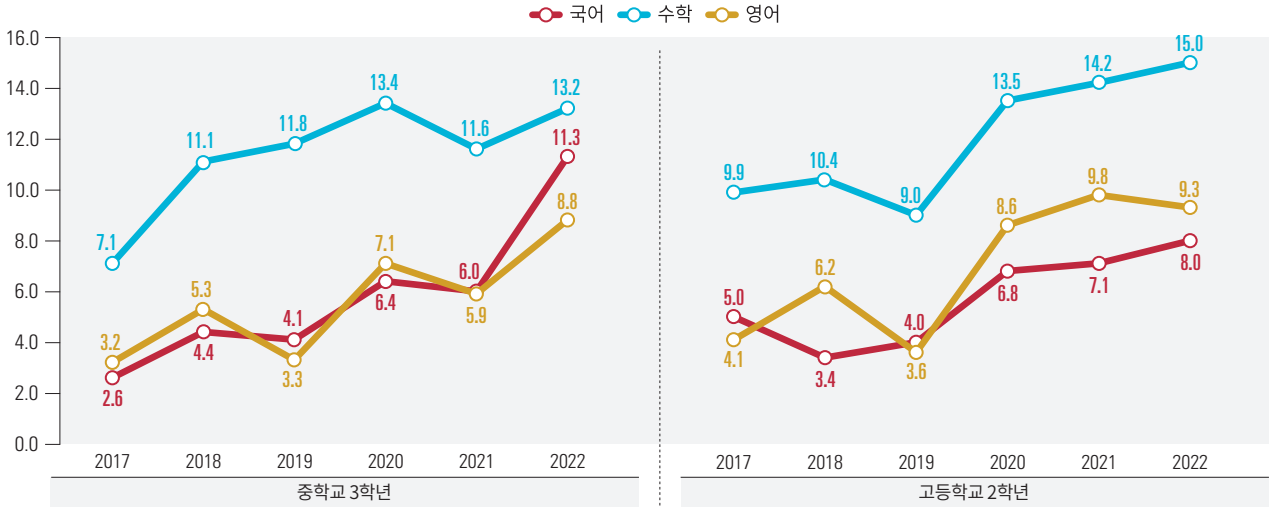
한국은 교원 자격검정 제도를 통해 교사 자원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한국 교육계에 불거진 교권 붕괴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특수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수 및 학습 환경에 관한 국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 교사는 교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급 운영의 어려움이나 직무 스트레스 등은 한국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사에게도 높게 나타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 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학력 저하 우려 지속

(관련 지표 4.1.1)

SDG 지표 4.1.1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소숙달수준(minimum proficiency level) 이상의 성취를 보인 아동·청소년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 지표는 국가 교육의 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통계개발원, 2022). 지표 4.1.1을 모니터링할 때 자주 검토되는 국내 데이터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취를 측정한다. 202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학력미달(1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중3은 과목별로 11.3%(국어), 13.2%(수학), 8.8%(영어), 고2는 8.0%(국어), 15.0%(수학), 9.3%(영어)로 나타난다. 2021년과 비교하여 고2 영어의 경우만 제외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더욱이 그 이전부터 세 과목 모두에서

국어 · 수학 · 영어 기초학력미달 비율, 2017~2022 (단위: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각 연도
주1 : 기초학력미달이란 4단계의 성취수준(1수준은 기초학력미달, 2수준은 기초, 3수준은 보통, 4수준은 우수) 중 1수준에 해당함
주2 : 2022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에 컴퓨터 기반 평가가 도입되어 의사소통(예: 표 그리기, 데이터 분석 등 수학적 지식 표현 등) 역량이 신규로 포함되는 등 문제해결, 정보처리, 의사소통 등에 대한 역량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전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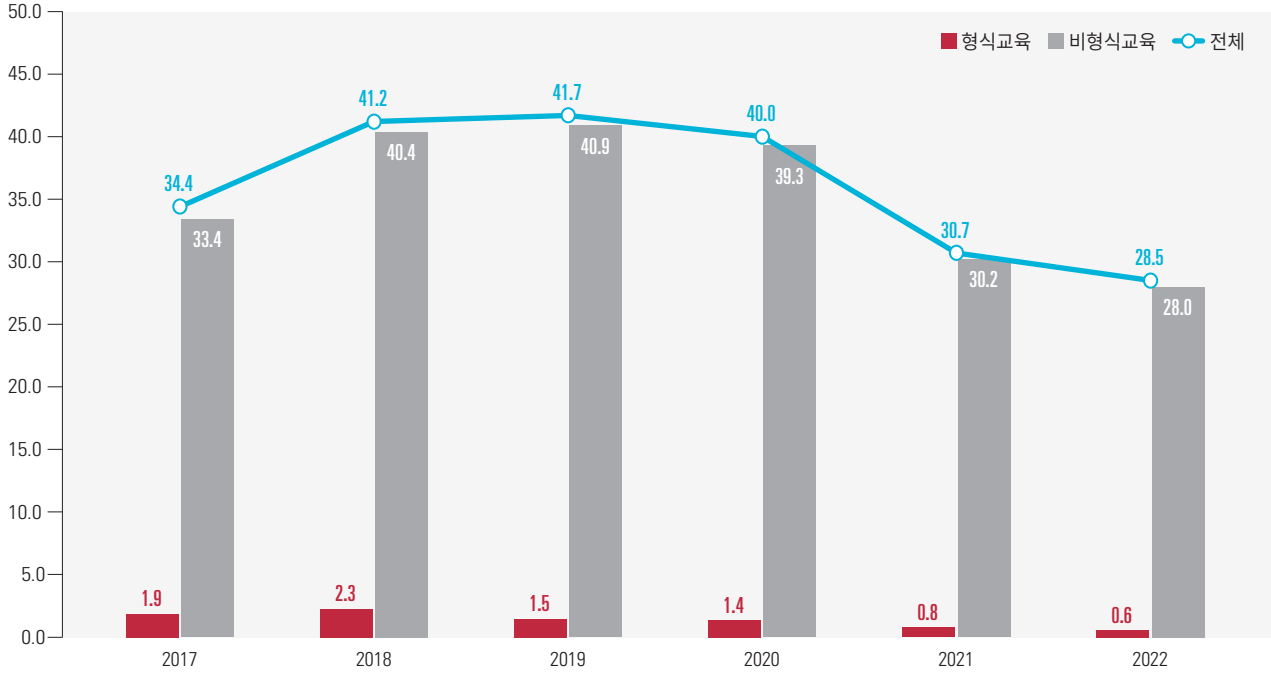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교육부, 2023) 등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평생교육 참여율 지속 하락, 취약 집단의 참여율 여전히 낮아 (관련 지표 4.3.1)

SDG 지표 4.3.1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각국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교육(형식 및 비형식교육) 참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내에서는 25~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8.5%(형식교육 0.6%, 비형식교육 28.0%)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평생학습 참여의 감소 추세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전년 대비 1.7%p, 9.3%p, 2.2%p 하락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개인의 일상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설 · 운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도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22). 이러한 경향은 2022년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참여율 회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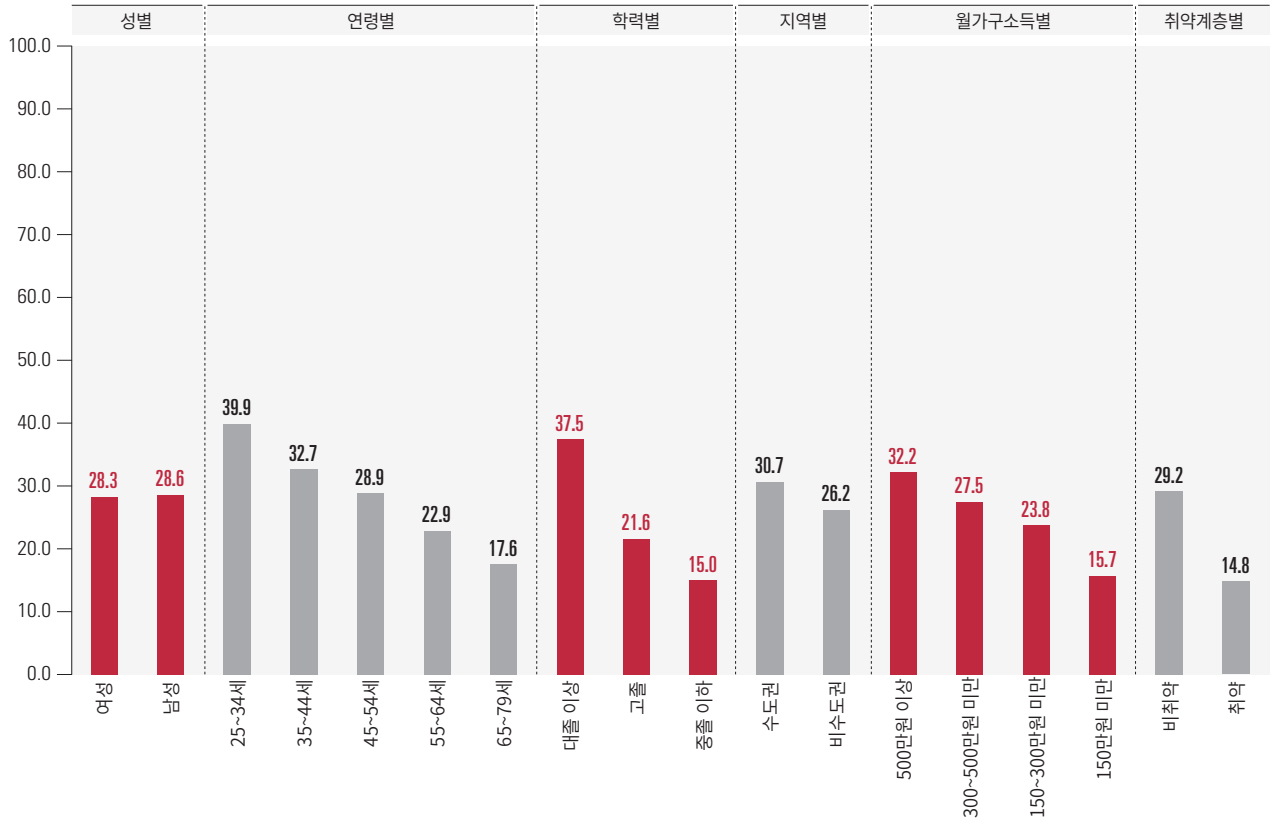
평생교육 참여율을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즉 일반적으로 취약집단으로 인식되는 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소 낮다. 65~79세의 고령인구(17.6%)가 25~34세의 청년인구(39.9%)에 비해, 중졸 이하 학력층(15.0%)이 대졸 이상 학력층(37.5%)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26.2%)가 수도권 거주자(30.7%)에 비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14.8%)이 비취약계층(29.2%)에 비해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성인이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약집단의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에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2017~2022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주1 : 만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주2 : 2020년까지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1년을 조사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조사함
주3 :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원)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성인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2022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22
주1 : 만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모두 포함함
주2 :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함

청소년 및 성인의 ICT 능력 지속 상승 경향, 연령에 따른 ICT 능력 편차 커 (관련 지표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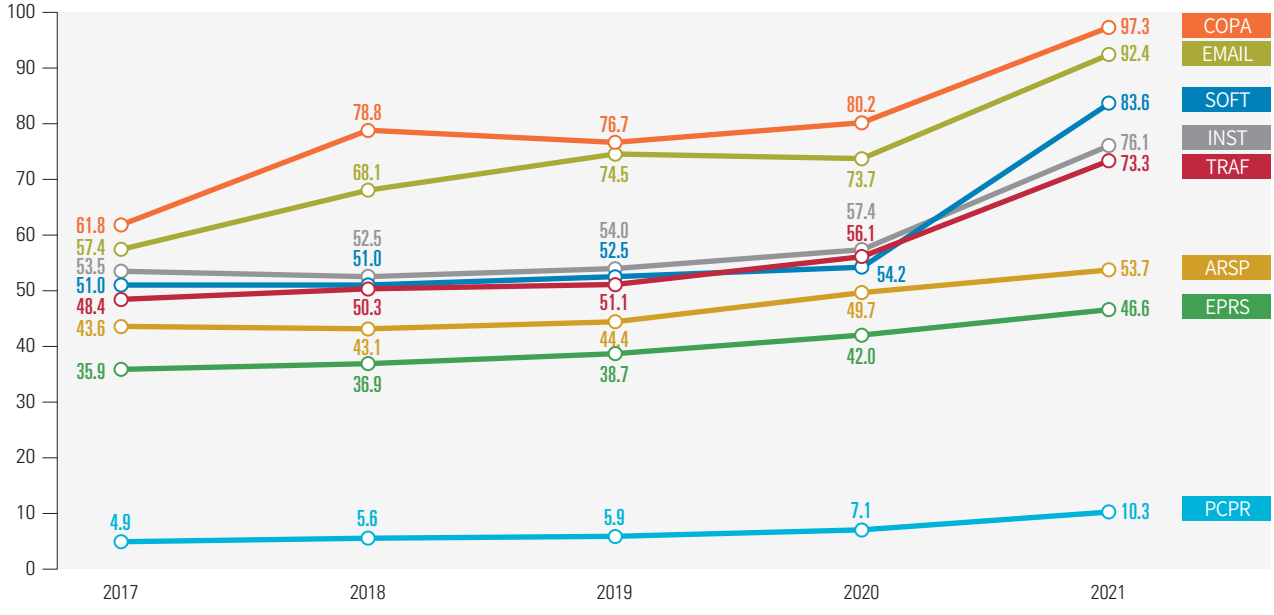
SDG 지표 4.4.1은 컴퓨터 파일 관리, 이메일 활용, 프로그래밍 역량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을 나타낸다. 디지털 문해(digital literacy)가 기본 소양이 된 현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UN SDG에서는 ICT 역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발표한다.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문서 내 정보 복사 및 이동(COPA)'(97.3%), '파일 첨부하여 이메일 보내기(EMAIL)'(92.4%), '소프트웨어 탐색하여 찾고 내려받아 설치하기(SOFT)'(83.6%), '모뎀, 카메라, 프린터 등 기기를 연결하고 설치하기(INST)'(76.1%), '컴퓨터와 다른 기기 사이에 파일을 전환하고 옮기기(TRAF)'(73.3%),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산술 계산하기(ARSP)'(53.7%),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EPRS)'(46.6%),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PCPR)'(10.3%)의 순서로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컴퓨터 파일 관리나 이메일 작성 등 일상화된 ICT 역량을 보유한 비율이 매우 높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활용과 같은 업무 관련 ICT 역량을 보유한 비율도 절반 수준에 이르지만 프로그래밍과 같은 전문적 활동 역량을 보유한 비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CT 역량 보유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모든 역량에서 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일부 역량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사이 보유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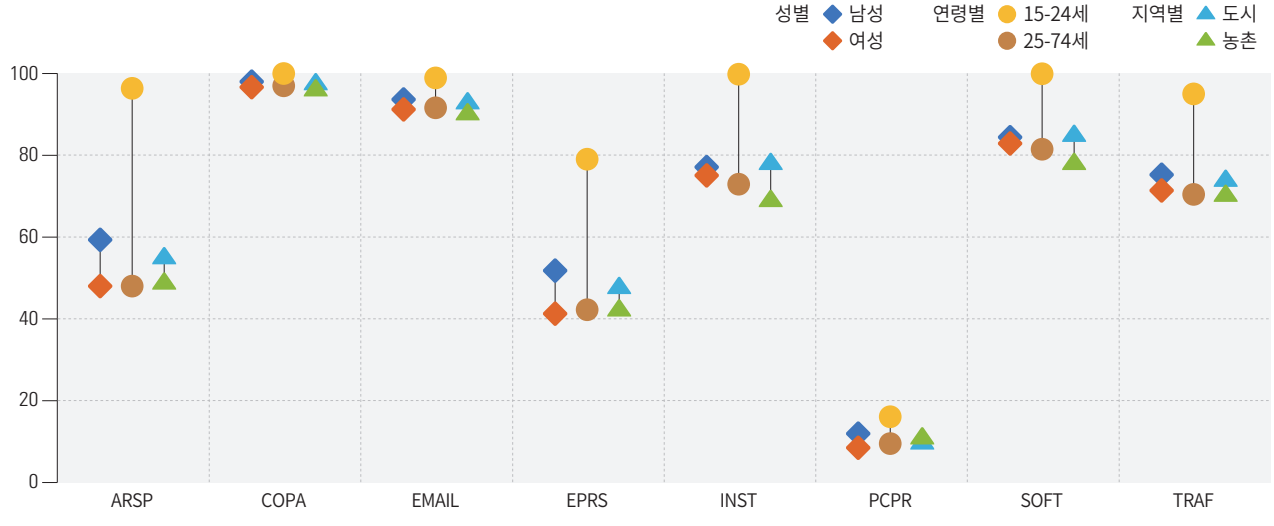
ICT 역량 보유는 성, 연령,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15~24세 인구가 25~74세 인구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ICT 역량 보유 비율이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ICT 역량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보유 비율이 높은데, ARSP에서 가장 큰 차이를(11.3%p) 나타내고 COPA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1.4%p) 나타낸다. 연령별로도 모든 ICT 역

량에서 15~24세 인구가 25-74세 인구보다 보유 비율이 높다. 마찬가지로 ARSP에서 가장 큰 차이를(48.3%p), COPA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3.0%p) 보인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의 ICT 역량 보유 비율이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전반적으로 높지만 PCPR 활동에서는 예외적으로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1.3%p 높게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이제 문해(literacy)라고 여겨질 정도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보유 비율, 2017~2021 (단위: %)



성 · 연령 · 지역별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보유 비율, 2021 (단위: %)



출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2017-2021, ITU DataHub(http://datahub.itu.int/data/?i=100082&e=KOR)
주1 : 지난 3개월 동안 컴퓨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주2 : ARSP -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산술 계산하기
COPA - 문서 내 정보 복사 및 이동
EMAIL - 파일 첨부하여 이메일 보내기
EPRS -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
INST - 모뎀, 카메라, 프린터 등 기기를 연결하고 설치하기
PCPR -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SOFT - 소프트웨어를 탐색하여 찾고 내려받아 설치하기
TRAF - 컴퓨터와 다른 기기 사이에 파일을 전환하고 옮기기를 의미함
주3 : 한국의 경우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ITU에 제공함

개도국을 위한 한국의 교육 ODA 금액 10여년간 2배 이상 상승 (관련 지표 4.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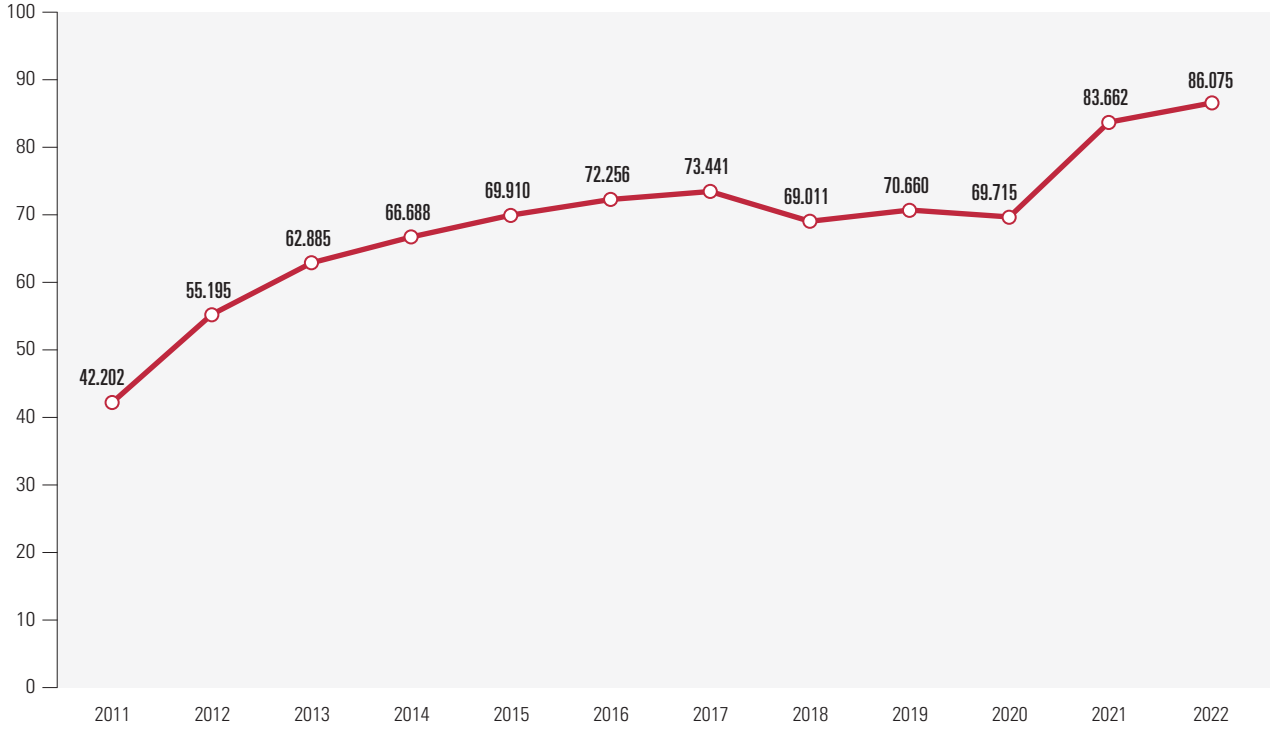
글로벌 관점에서 SDG 지표 4.b.1은 선진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장학금 목적으로 최저개발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을 나타낸다. 이 지표는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흐름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 4와 그 궤를 같이한다. 한국의 경우 UN SDG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중 개도국 유학생과 연수생을 위해 지원되는 ODA 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 4.b.1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개도국 유학생과 연수생을 위해 지원된 ODA 금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은 2011년 4220.2만 달러에서 2022년 8607.5만 달러로 1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사 직업에 대한 가치 2018년 기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인식 (관련 지표 4.c.1)

한 국가의 교사 중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의 비율을 의미하는 SDG 4.c.1 지표는 국가 교사 자원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4.c.1 지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즉 범적용적인 지표의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이 발달한 일부 북유럽 국가의 경우 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가 교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규 페다고지(pedagogy) 훈련을 받지 않은 교사도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로 볼 수 있을지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로 인해 지표 4.c.1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채 여러 국가에서 지표를 작성하고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사의 훈련과정과 자격요건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사에게 자격증(license)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따라 UN에서는 초등, 중등 등 모든 교육단계에서 100%의 교사가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하고 교사 자원의 질은 교육 정책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향후 교사 자원의 질을 측정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을 위한 국내 ODA 규모, 2011~2022 (단위: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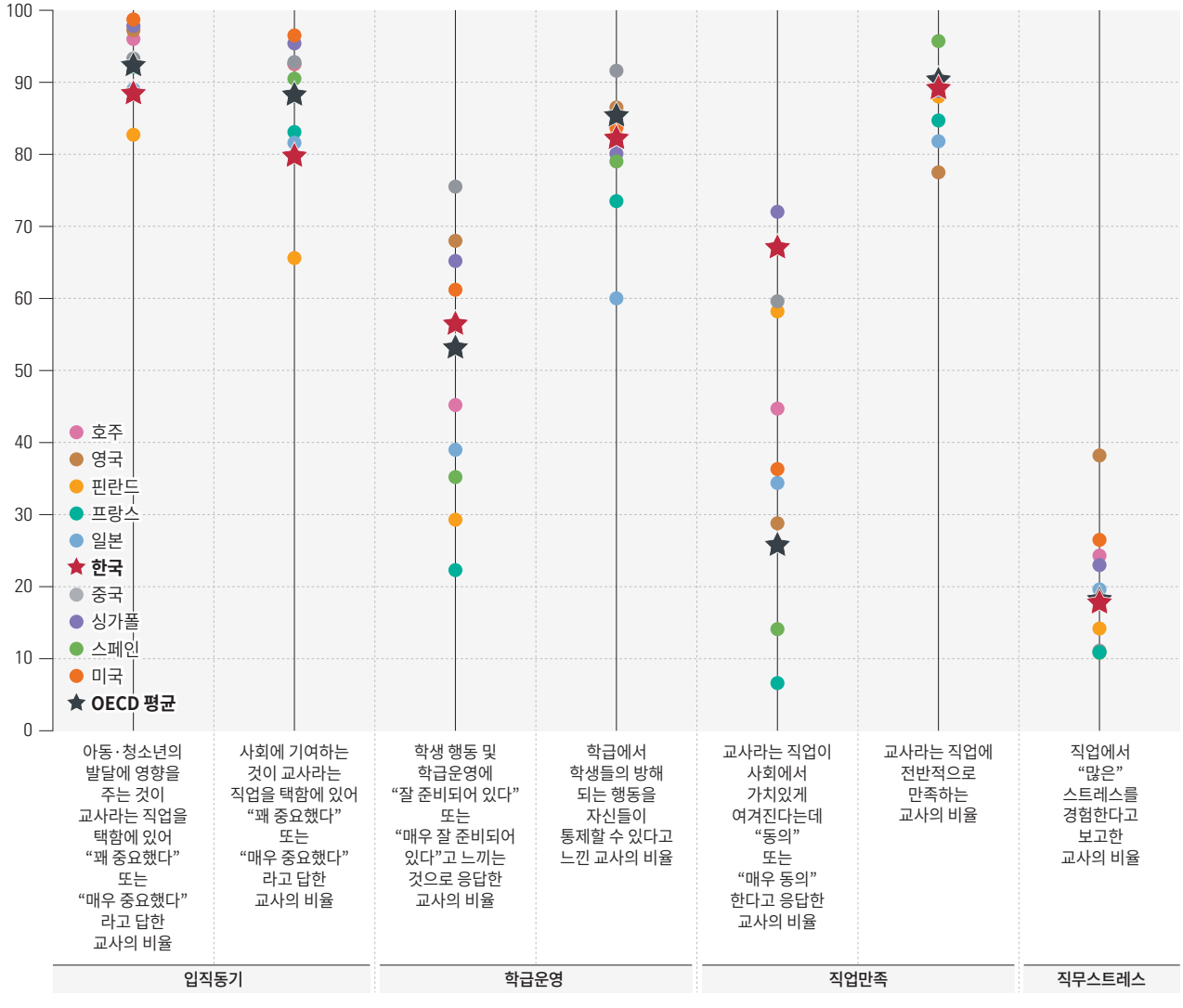
출처: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2011~2021

하는 지표를 좀 더 세밀하게 개발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교육계에서 교권 붕괴와 관련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는 국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적절하고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와 몰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의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 교사의 학생 지도 현황과 직업 만족, 직무 스트레스 등을 다른 나라 교사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사의 입직 동기와 관련하여 TALIS에서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조사한다. 이 두 문항에 대해 '꽤 중요했다' 또는 '매우 중요했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교사의 경우 각각 88.4%와 79.7%로 OECD 평균인 92.3%와 88.2%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문항은 교직 입직의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깊은데, 교육을 본질로 하는 교사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듯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내재적 입직 동기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교사의 내재적 입직 동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선망을 받아 온 교직의 외재적 특성(사회적 평판, 안정성, 보

주요국별 교사의 입직 동기 · 학급 운영 · 직업 만족 · 직무 스트레스, 2018 (단위: %)



출처: OECD.Stat, TALIS Indicators(https://stats.oecd.org)

수 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급 운영(classroom management)과 관련해서는 '학생 행동과 학급 운영에 잘(또는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과 '학급에서 학생의 방해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한국 교사의 경우 학급 운영 준비에서는 56.4%로 OECD 평균 53.1%보다 다소 높고 학생 통제에서는 82.2%로 OECD 평균 85.3%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 만족과 관련하여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데 동의하는 한국 교사의 비율은 67.0%로 OECD 평균 25.8%에 비해 훨씬 높고 '교사라는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한국 교사의 비율은 89.1%로 OECD 평균 90.3%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교직이 여전히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교사 스스로도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직업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고 응답한 한국 교사의 비율은 17.9%로 OECD 평균 18.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TALIS의 결과가 현재 한국 교사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교사들의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반해 있고 일부 관련 문항만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석에 2018년 자료가 사용되어, 향후 발표될 TALIS 2024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 **최소숙달수준** : 특정 과목(예: 수학, 읽기)에서의 기초지식(basic knowledge) 벤치마크 수준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측정됨
- **페다고지** : 교육을 근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하여 정리한 학문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SDG 5번 목표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 안전, 일상생활 등에 존재하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그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인 직장 내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와 관리자급 중 여성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사와 육아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일-가정 양립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1995년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30여 년간 성평등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해야 하고, 국가 주요 기관 및 직장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에서는 SDG 5번 목표에 대해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정부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현황을 관련 지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올해는 이전 분석에 활용된 지표를 일부 포함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국가 주요 기능인 교육 분야에서의 여성 리더십을 살펴보고 여성 관리직 비중을 OECD 국가 간에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2022년 기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서 여성 피해자 비율은 각각 81.0%, 87.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7명의 교육감이 선출되었으나, 이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하였다. 정부, 입법부, 민간기업에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OECD 평균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4.6%에 해당하여, 전반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에 집중

(관련 지표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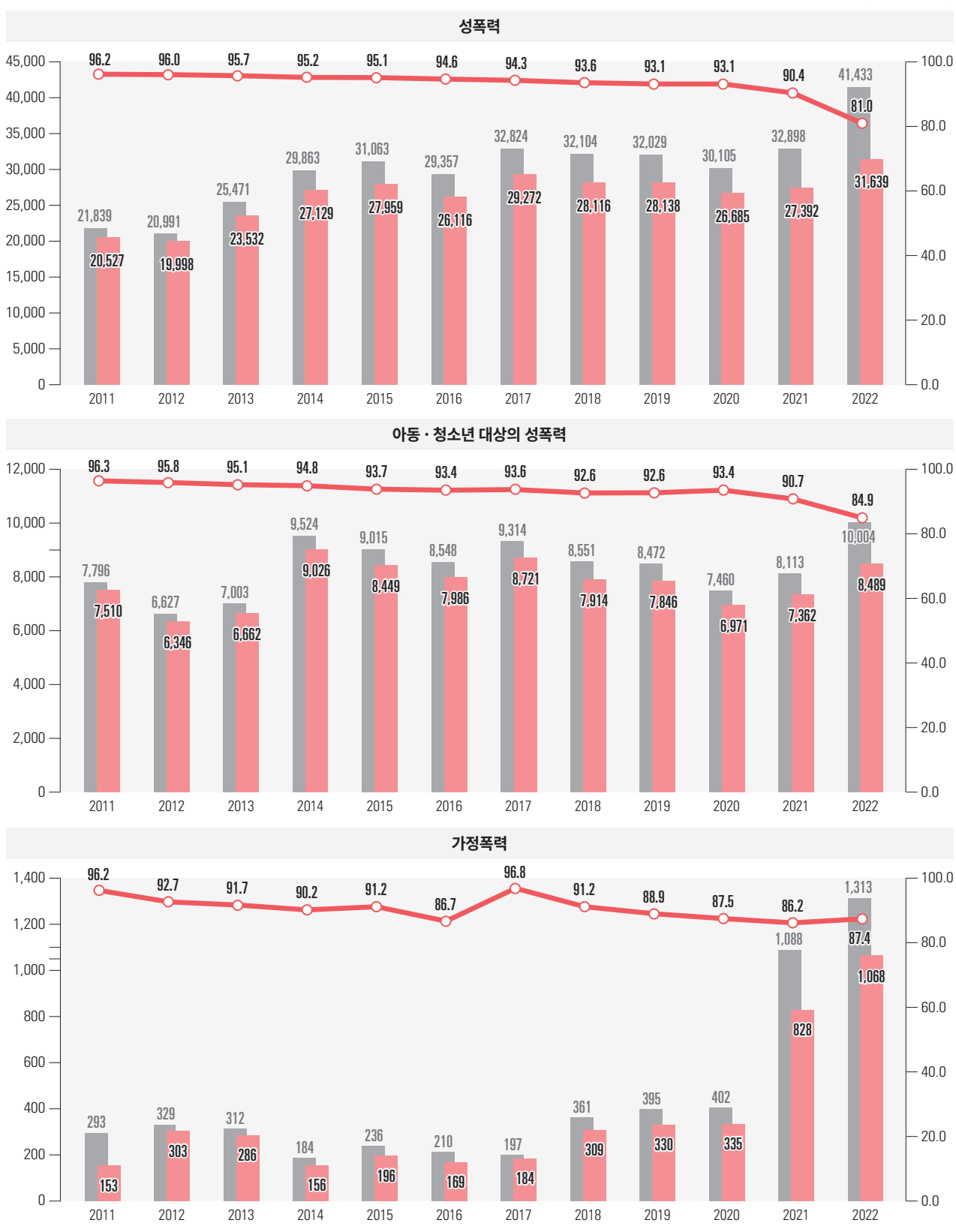
대검찰청「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약 41,43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이다. 2022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가 81.0%에 이른다. 2022년 집계된 성폭력 범죄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여 건이 20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났으며, 이 중에서도 84.9%가 여성에게 일어났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그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2022년 기준 87.4%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2011년 96.2%에서 11년 만에 15.2%p 감소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약 2만 2000건(2011년)에서 4만 1433건(2022년)으로 약 50% 증가하였고,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도 2만 527건에서 3만 1639건으로 54.1% 증가하였다. 범죄 통계의 이러한 변동에는 그간 형사법률의 개정으로 범죄의 정의와 유형이 달라진 데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3년 6월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었고, 성인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아는 관계'와 '타인'으로 구분하고, '아는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애인, 친족)', '친구와 직장동료', '이웃과 지인', '기타' 등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았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아는 관계'에 의한 피해가 37.4%, 그중에서도 '친밀한 관계(애인, 친족)'에 의한 피해가 8.5%를 차지하였다. '타인'에 의한 피해는 58.5%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특히 가족이나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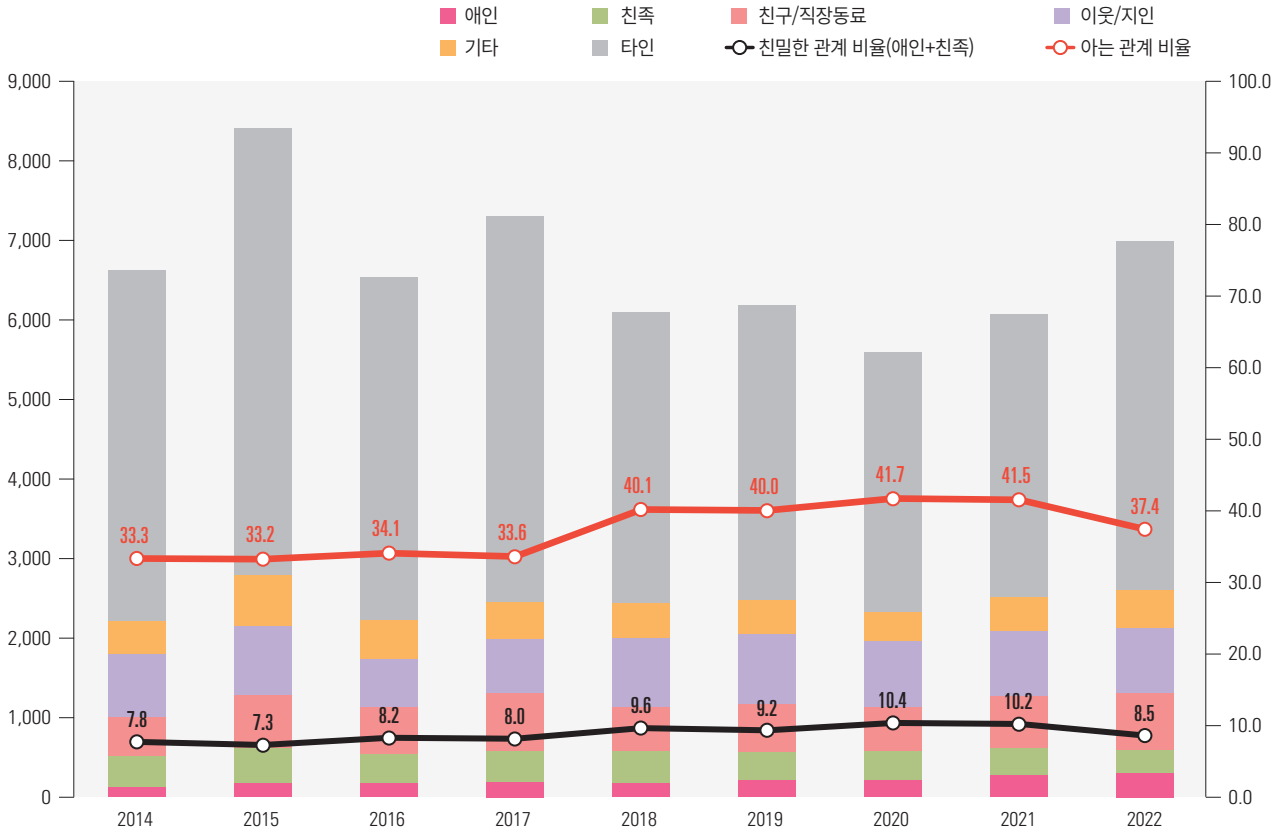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발생 건수 및 여성 피해자 비율, 2011~2022

(단위: 건수,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https://spo.go.kr/site/highseoul/crimeAnalysis.do#n, 2023.12.30 인출)
주1 : 각급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된 건수를 말함
주2 : 여성 피해자 비율 산정 시 성별 미상 사건은 제외함
주3 : 성폭력 범죄는 2013년까지 강간으로 분류됨
주4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20세 이하 인구집단(아동 13세 미만, 청소년 13~20세)인 경우임
주5 :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범죄를 의미함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14~2022 (단위: 건,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https://spo.go.kr/site/highseoul/crimeAnalysis.do#n, 2023.12.30 인출)
주 : 아동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친구/직장동료, 애인, 친족, 이웃/지인, 타인,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되며, 여기서는 애인과 친족을 '친밀한 관계', 타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는 관계'로 재분류함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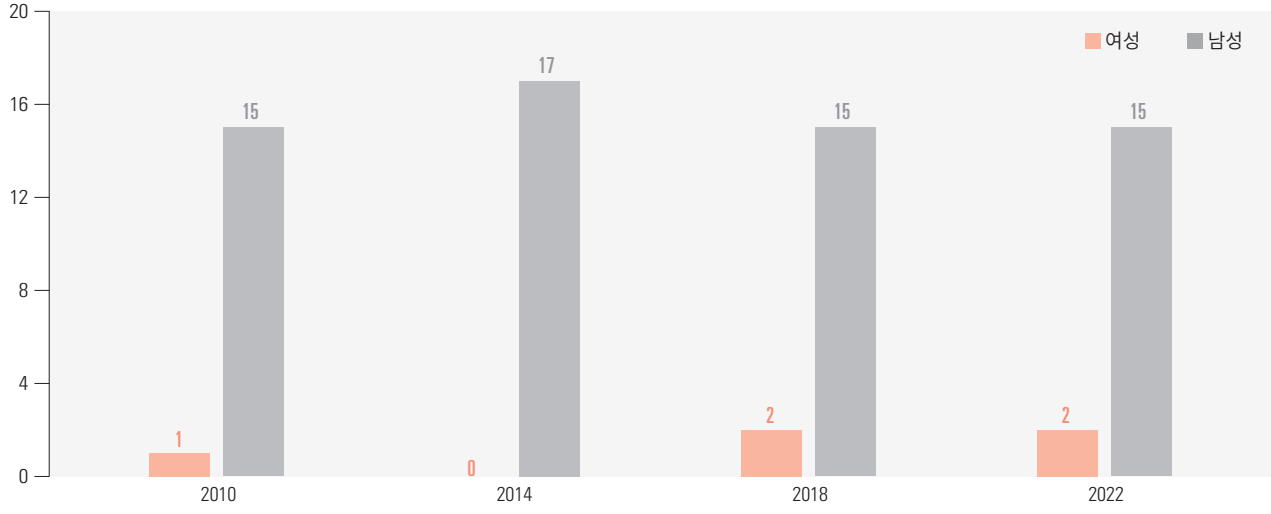
(관련 지표 5.5.1)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한국의 교육감은 관할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 행정을 총괄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육예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현재 4년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전국 17개 선거구에서 17명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7명의 교육감이 선출되었지만 이 중 여성 교육감은 단 5명(7.5%)에 불과하다.

여성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반영하듯 초 · 중 · 고 학교에서 여성 교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에서 교사는 과거부터 여성에게 선호되는 직업으로 여겨져 왔고 여성의 교직 진출이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초등학교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75%를 상회하였다. 여성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등학교에서도 2015년을 기점으로 50%를 넘어섰다. 2022년 기준 초·중·고 전체의 여성 교사 비율은 69.7%로 남성 교사 비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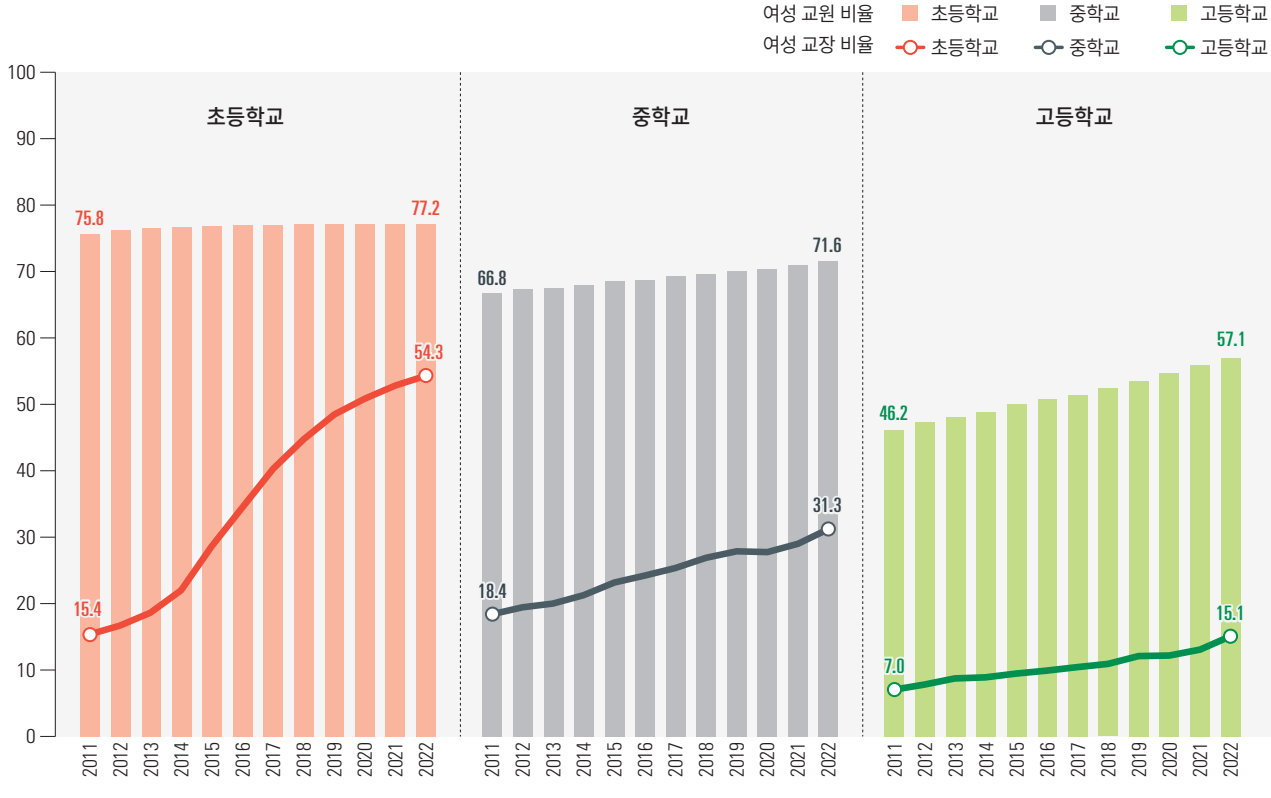
하지만 여성 교사에 비해 최고 관리자급인 여성 교장의 비율은 크게 낮다.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장 중 여성 교장 비율은 2022년 기준 각각 54.3%, 31.3%, 15.1%에 그친다. 물론 여성 교장 비율도 지난 10여년간 초 · 중 · 고 학교 모두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2011년과 2022년 사이 초등학교에서 38.9%p, 중학교에서 12.9%p, 고등학교에서 8.1%p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 교사 비율이 75%를 상회하는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장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장의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여성 교장 비율의 증가 폭이 작을 뿐만 아니라 여성 교사 비율과 여성 교장 비율의 격차도 큰 편이다.

성별 교육감 현황, 2010~2022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023.08.27 인출)
주 : 주민직선제로 실시된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제시함

학교급별 여성 교원 및 교장 비율, 2011~2022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주 : 교원에는 교장, 교사, 평교사, 보직교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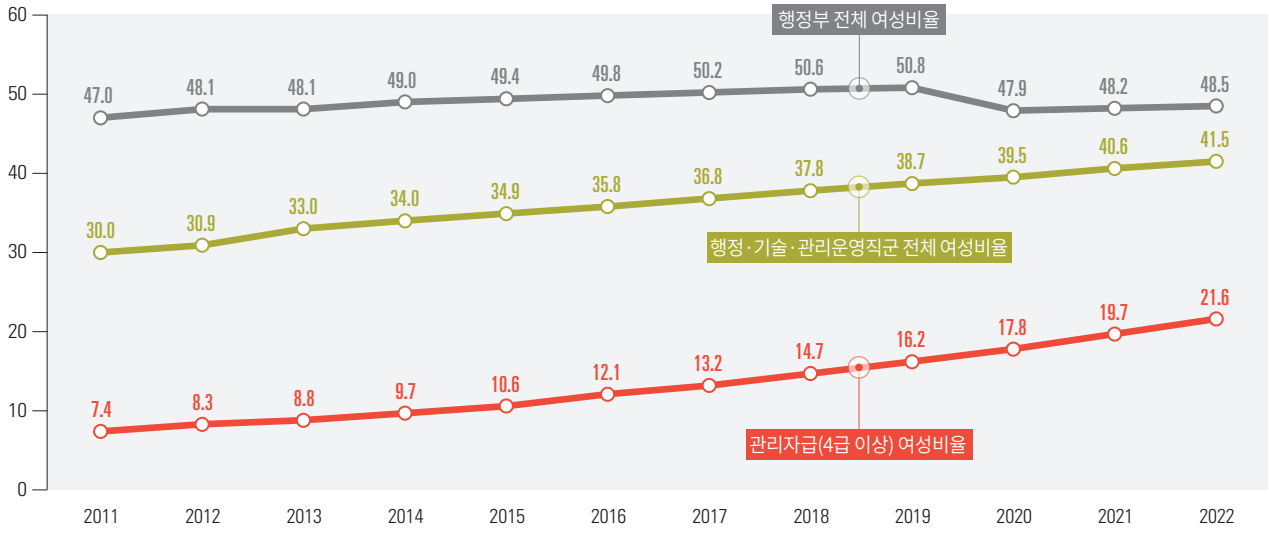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관련 지표 5.5.2)

국가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의 공직 참여 수준을 나타낸다. 중앙정부의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2년 21.6%로 전년에 비해 1.9%p 늘어났다. 2016년 이래 매년 1%p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1년 7.4%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전체 여성 공무

원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행정·기술·관리운영 직군 국가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5%에 달하지만 관리자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1.6%로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 둘의 격차는 19.9%p로 2011년의 22.6%p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2.7%p 줄어드는 데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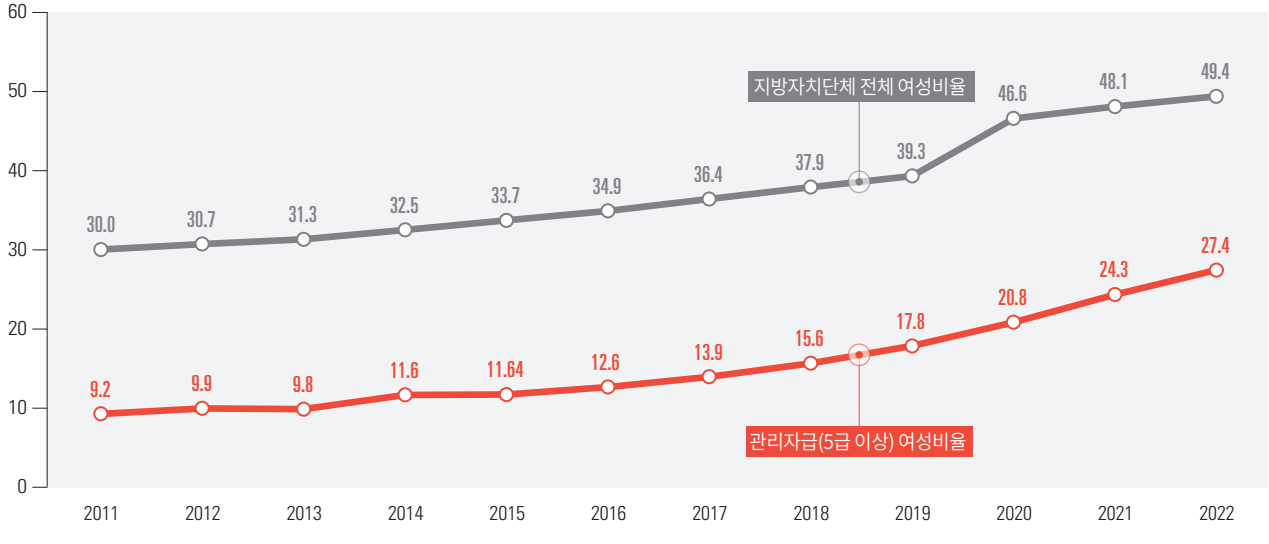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관리자급 지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2년 27.4%로 전년 대비 3.1%p 증가하였다. 2011년(9.2%)과 비교하면 거의 3배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는 매년 3%p대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지방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9.4%, 관리자급 여성

국가공무원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 2011~2022 (단위: %)



출처: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 2023.9.26. 인출)
주1 : 행정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됨
주2 : 행정 · 기술·관리운영 직군은 행정부 공무원 중 특정직(외무 · 경찰·소방 · 검사 · 교육), 정무직, 별정직이 제외되며,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 · 연구 · 지도 · 우정직과 전문경력관, 시간선택제, 일반 · 전문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됨
주3 :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직급별 여성 비율 수치가 가용한 행정 · 기술 · 관리운영직군 기준임

지방공무원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 비율, 2011~2022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22.12.31. 기준)
주1 : 지방공무원 중 교육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준임
주2 :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은 고위공무원, 일반직(일반 임기제 포함) 1~5급, 일반 임기제 5급, 연구 · 지도관, 별정직 1급 상당~5급 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 이상을 포함함

공무원 비율은 27.4%로 이 둘의 차이는 22.0%p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지방공무원 중 여성이 이제 49.4%로 거의 절반에 이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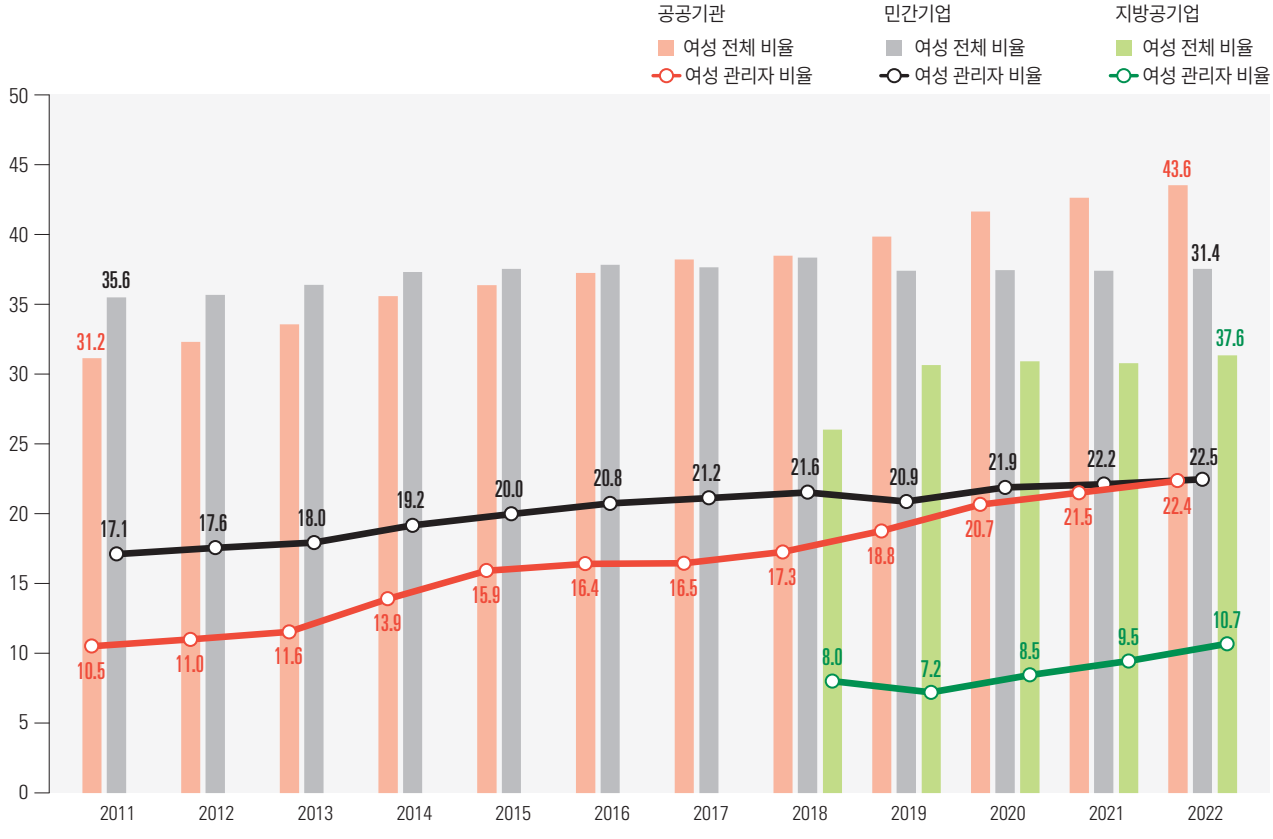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편 (관련 지표 5.5.2)

고용상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가 2006년에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여성 고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2년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43.6%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다. 2011년 31.2%와 비교하면 12.4%p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고용의 증가와 함께 여성 관리자 비율도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여성 근로자 비율과 대비해서 보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여성 근로자 비율은 공공기관 43.6%,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1.4%, 민간기업 37.6%이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각 22.4%, 10.7%, 22.5%에 그친다. 전체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격차를 보면 공공기관 21.2%p, 지방공기업 20.7%p, 민간기업 15.1%p로 나타난다.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그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제공하는 정부와 입법부, 민간기업 영역을 총합한 OECD 국가의 여성 관리직 비율을 보면 코스타리카(46.0%), 리트비아(45.0%), 콜롬비아(43.5%), 폴란드(42.9%), 스웨덴(41.7%), 미국(41.0%), 에스토니아(40.2%) 등이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반면 한국은 14.6%로 OECD 평균인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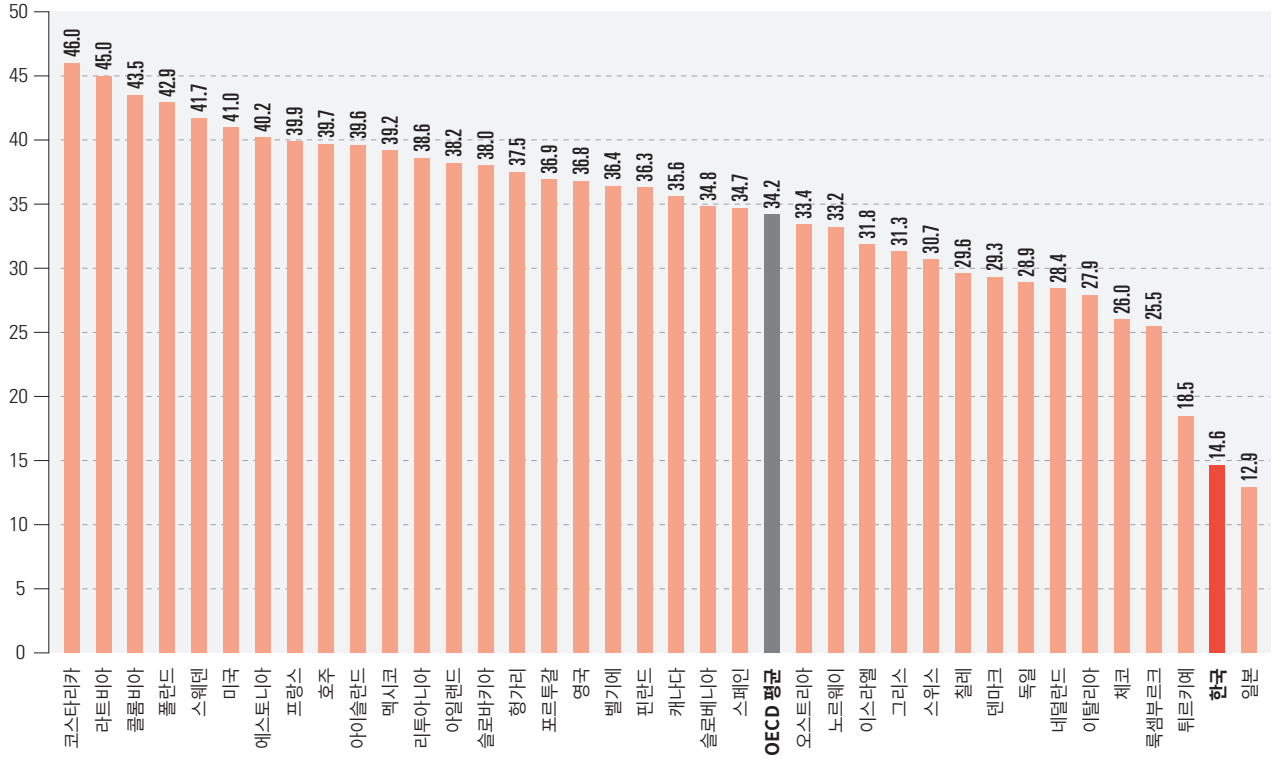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여성 및 여성관리자 비율, 2011~2022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판 고용노동백서
주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대상 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이며, 2018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으로 확대됨
주2 : 관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로 정의되며, 직급과는 무관하게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평)권, 결재권의 세 가지 권한 유무로 판단함

OECD 국가별 관리자급 여성 비율, 2022

(단위: %)



출처: OECD.Stat, Share of female managers(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6330#, 2023.12.30. 인출)

주1 : 국제 표준직업 분류(ISCO-08)의 4개의 관리자 그룹(최고경영자 · 상급공무원 · 입법부의원, 총무 · 영업 관리자, 생산 및 전문서비스 관리자, 접객업 · 소매업 · 기타 서비스업 관리자)에서 '접객업 · 소매업 · 기타 서비스업 관리자'는 제외함

주2 : 영국은 2019년, 호주와 캐나다는 2021년, 나머지 국가는 2022년 기준임

용어해설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2006년 도입)로서, 공공기관, 지방 공사 · 지방 공단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임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충청북도 제천 청풍호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DG 6번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서비스 보장'과 '지속가능한 물 관련 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지향한다. 안전한 물과 위생서비스, 담수자원의 수질과 물 관련 생태계의 보호는 환경보전과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기도 하다.

식수와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과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각각 99.4%에 이른다. 2021년 공공 하수도 보급률 또한 94.8%로 OECD 평균(8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OECD 평균을 밑도는 시군구가 전체의 28.8%에 달해 공공 하수도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물 이용 효율성은 54.4달러/㎥로 2010년 대비 32% 상승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중간 이상' 등급의 물 이용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공업 부문에서 21%, 서비스업 부문에서 44% 상승한 반면 전체 물 이용량의 59%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서는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서는 부문별 부가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물 이용 효율화 정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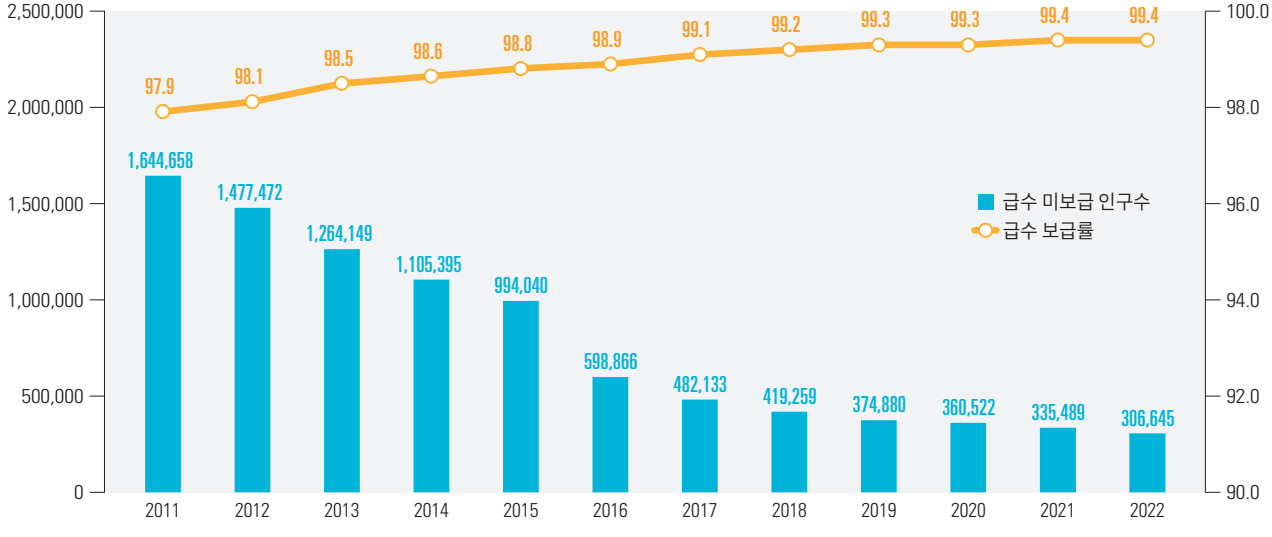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에 의해 물 관련 생태계의 규모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비해 호수와 하천의 영구수역 면적은 소폭 감소하고 저수지 등 인공수역의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의 수와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다. 물 관련 생태계를 외부 압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수와 위생서비스 보급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관련 지표 6.1.1 /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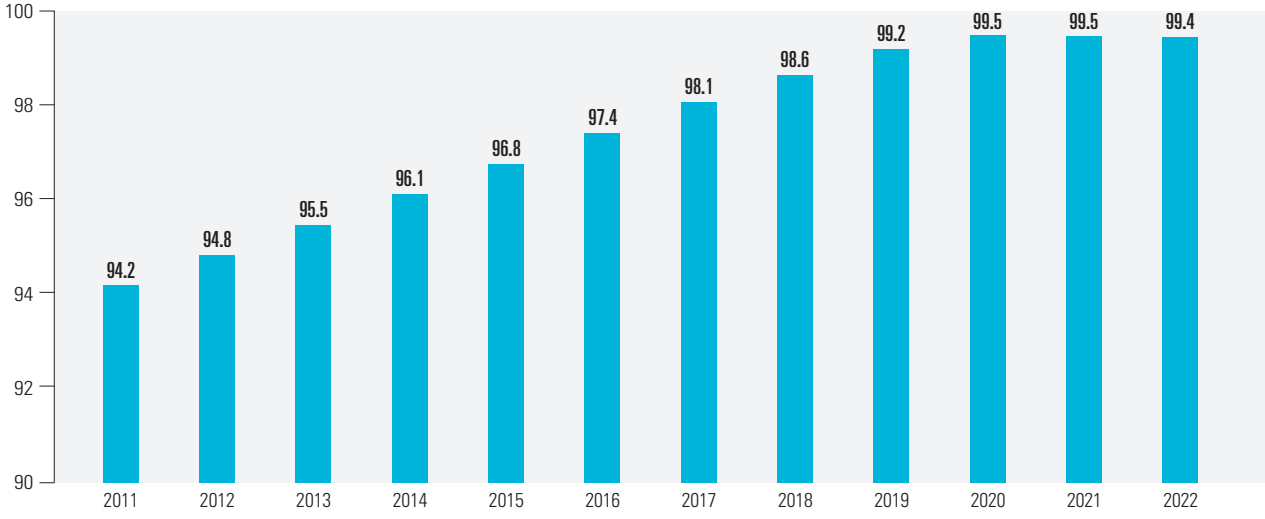
SDG 세부목표 6.1에서는 2030년까지 모두가 적절한 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표 6.1.1은 세부목표 6.1의 달성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의 급수 보급률(이하 안전 식수 보급률)'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등의 공공 급수시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 급수시설의 보급률은 2011년 97.9%에서 2022년 99.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공공 급수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공공 급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11년 약 164만 명에서 2022년 약 3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1년 미급수 인구 규모의 5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

급수 미보급 인구수 및 급수 보급률, 2011~2022 (단위: 명, %)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s://www.waternow.go.kr. 2024.01.16. 인출)

안전한 위생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 2011~2022 (단위: %)



출처: WHO · UNICEF JMP(https://washdata.org/data/household#!/dashboard/5655, 2023.11.01. 인출)

이다. OECD 국가의 안전 식수 보급률은 2022년 기준 평균 95.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헝가리는 이미 100%의 안전 식수 보급률을 달성하였고, 99% 이상을 달성한 나라도 한국을 포함하여 17개국에 이른다.

세부목표 6.2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위생시설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노상 배변을 근절하는 것이다. 6.2.1 지표인 '안전한 위생서비스 이용 인구 비율'은 다른 가정과 공유하지 않고 배설물을 현장에서 혹은 외부로 운송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1년 94.2%에서 2022년 99.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전 세계 인구의 비율은 아직 56.5%에 그친다.

공공 하수도 보급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관련 지표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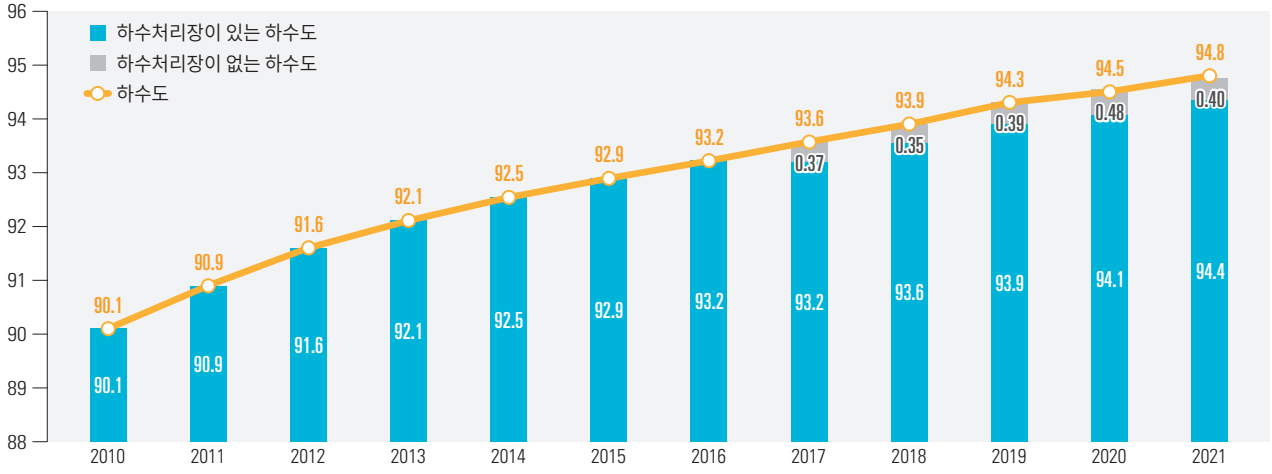
세부목표 6.3은 수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오염을 저감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투기를 근절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미처리 하·폐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표 6.3.1은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 및 산업 하·폐수 비율'로 측정되는 환경 지표이다.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오염된 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유량을 말하는 유입하수량은 2021년 기준 2120만 m^3/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을 말하는 폐수발생량은 같은 해 기준 500만 m^3/일로 집계된다. 유입하수량과 폐수량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공공 하수도의 지속적인 확대 보급으로 공공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90.1%에서 2021년 94.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공 하수도 보급에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난다. 2021년 기준 특 ·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의 공공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반면 대부분의 도 지역 공공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국내 226개 시군구 중 4분의 1이 넘는 65개 시군구의 공공 하수도 보급률이 80% 미만에 그쳐,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 간 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 안전한 하수도 보급률을 100% 달성한 국가에는 영국과 칠레가 있다. OECD 평균이 81.5%임을 감안하면 한국(94.4%)은 상위그룹에 속한다. 하수도 보급률 통계가 가용하지 않은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OECD 36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이렇듯 전국 단위로는 공공 하수도 보급률이 높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전체 시군구의 28.8%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 하수도 보급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수도 보급률,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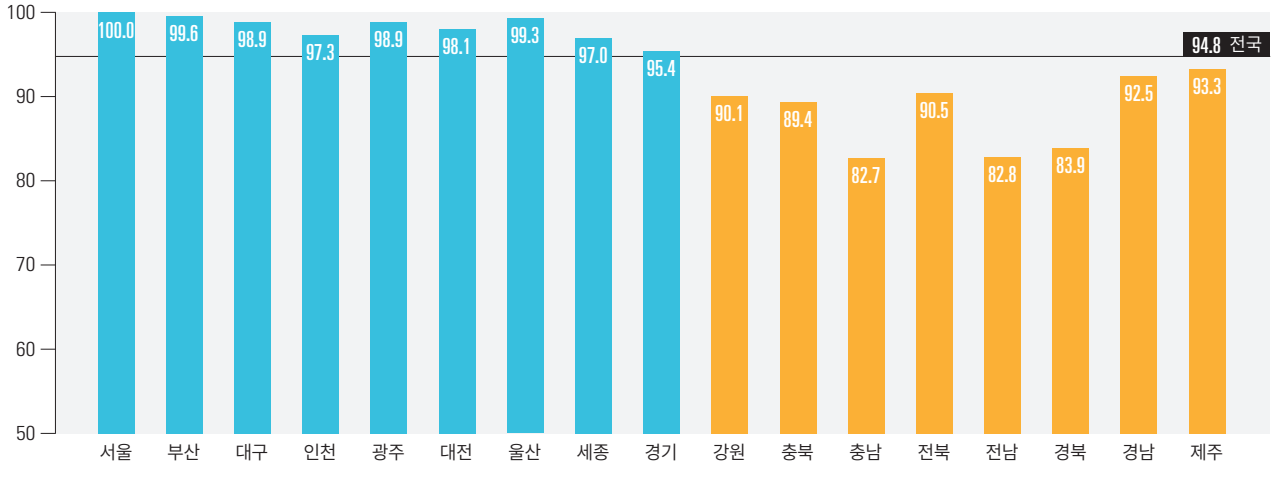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환경부, 하수도 통계 (하수도정보시스템, https://hasudoinfo.or.kr, 2023.10.25. 인출); OECD.Stat, Connection rates to wastewater treatment (https://stats.oecd.org, 2023.11.01. 인출)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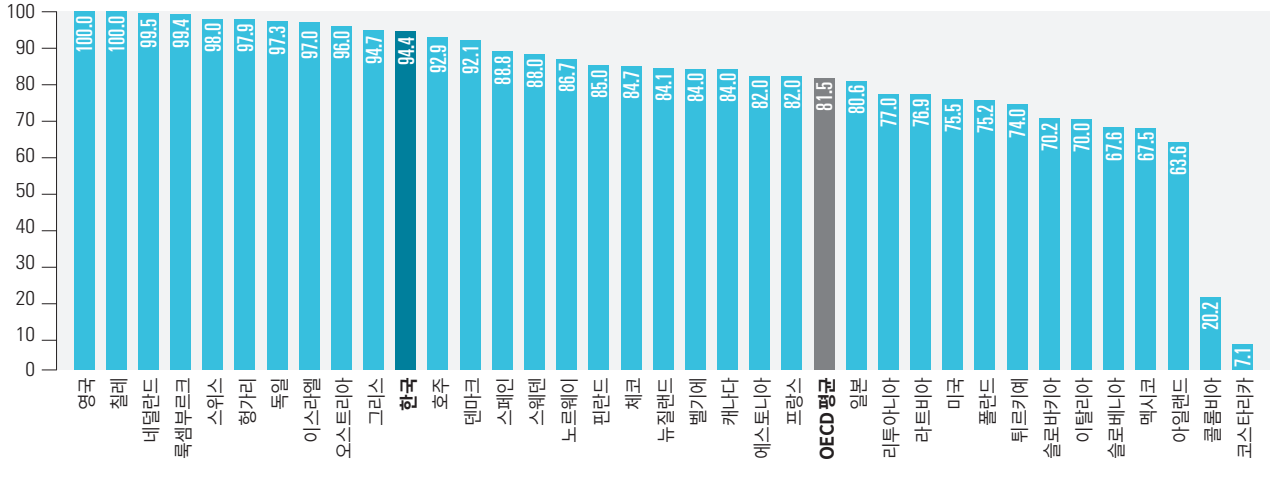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환경부, 하수도 통계(하수도정보시스템, https://hasudoinfo.or.kr, 2023.12.22. 인출)

OECD 국가별 하수처리장이 있는 하수도 보급률, 2021

(단위: %)



출처: OECD Stat(https://stats.oecd.org, 2023.11.01. 인출)
주1 :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처리장과 연결된 하수도 통계를 이용
주2 :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은 자료 부재로 평균에서 제외

물 이용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부문별 물 이용 효율화 정책 필요 (관련 지표 6.4.1)

SDG 세부목표 6.4에서는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고 모든 부문에서 물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지표 6.4.1은 담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에 관한 경제적 지표로서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를 평가한다. 물 이용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은 물 사용량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로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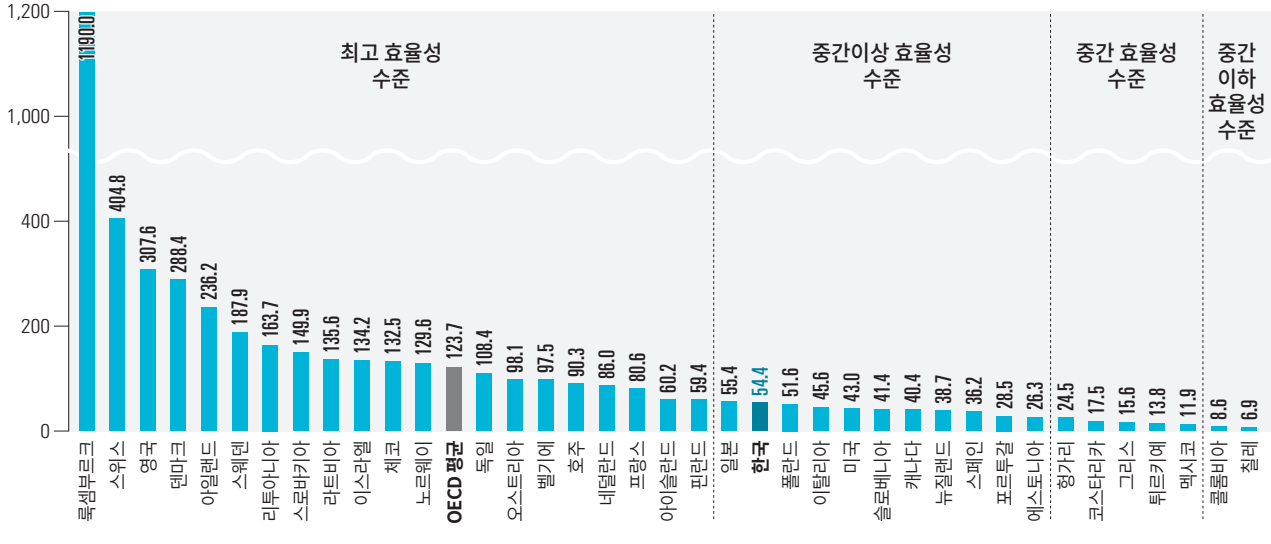
전체 산업의 물 이용 효율성은 2020년 한 차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매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물 이용 효율성은 2010년 41.2달러/㎥에서 2020년 54.4달러/㎥로 증가하여 2010년 대비 32.0% 상승하였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2020년 농업 부문 물 이용 효율성은 1.05달러/㎥, 공업 부문은 110.8달러/㎥, 서비스업 부문은 144.5달러/㎥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이 61.7%, 제조업 등 공업 부문이 28.0%를 차지하며 농업 부문(1.7%)의 비중은 작다. 서비스업과 공업 부문의 경우 물 이용 효율성 변화 추이와 유사하게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9년 또는 2020년 소폭의 하락을 보였고, 농업 부문에서는 상승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 2020년 농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성은 2010년의 1.09배에 그친 반면, 공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각각 1.21배와 1.44배로 높아져 전체 물 이용 효율성의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 및 2010년 대비 변화, 2010-2020 (단위: 달러/㎥, 2010년=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물이용 효율성	41.2	42.8	43.8	45.4	46.8	49.4	50.5	52.1	53.7	55.0	54.4
농업 부문	0.96	1.02	1.04	1.03	1.04	1.04	0.99	1.02	0.99	0.97	1.05
공업 부문	91.2	96.2	97.3	100.9	101.9	104.2	107.7	114.0	115.9	113.3	110.8
서비스 부문	100.2	102.7	105.5	108.8	113.1	130.0	131.0	133.1	138.2	145.2	144.5
2010년 대비 변화	1.00	1.04	1.06	1.10	1.14	1.20	1.23	1.26	1.30	1.33	1.32
농업 부문	1.00	1.06	1.08	1.07	1.08	1.08	1.03	1.06	1.03	1.01	1.09
공업 부문	1.00	1.05	1.07	1.11	1.12	1.14	1.18	1.25	1.27	1.24	1.21
서비스 부문	1.00	1.02	1.05	1.09	1.13	1.30	1.31	1.33	1.38	1.45	1.44

출처: FAO, FAOSTAT, SDG Indicators (https://www.fao.org/faostat/en/#data/SDGB, 2023.10.01. 인출)
주 : 물 이용 효율성 2010년 대비 변화 = 해당 연도 물 이용 효율성 ÷ 2010년 물 이용 효율성

OECD 국가별 물 이용 효율성, 2020 (단위: 달러/㎥)



출처: FAO, AQUASTAT (https://data.apps.fao.org/aquastat 2023.11.01. 인출)

업 부문별 부가가치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물 이용 효율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OECD 국가의 물 이용 효율성은 2020년 기준 평균 123.7달러/㎥이다.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은 OECD 평균에 미달하는 54.4달러/㎥로 38개 회원국 중 22번째에 그친다. FAO에서는 물 이용 효율성 수준을 최고, 중간 이상, 중간, 중간 이하, 최저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2020년에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최고, 11개국이 중간 이상, 5개국이 중간, 2개국이 중간 이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룩셈부르크(1190.0달러/㎥), 스위스(404.8달러/㎥), 영국(307.6달러/㎥) 등은 최고 수준의 물 이용 효율성을 보이는 국가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중간 이상 그룹에 속해 있다. 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물 이용량의 59%를 농업 부문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높은 물 스트레스 수준(85.2%)과 산업별 부가가치 및 물 이용량을 고려할 때, 전체 물 이용량의 59%를 이용하는 농업 부문에 대한 물 수요 관리와 물 이용 효율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물 관련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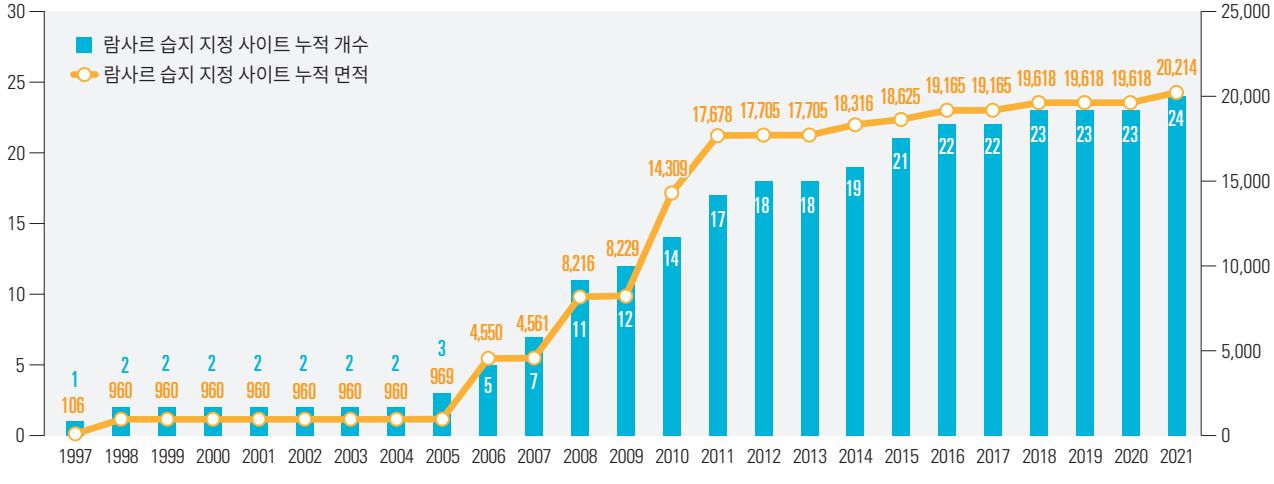
(관련 지표 6.6.1)

세부목표 6.6에서는 하천, 호수, 습지, 대수층, 인공수역의 5개 범주로 구성되는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표 6.6.1은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로, 이는 물 관련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구상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담수자원의 공간적 면적과 수질, 수량 변화를 측정하는 환경지표이다.

물 관련 생태계 중 호수와 하천의 수표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7~2021년 기준 호수 및 하천 등의 영구수역 면적은 2000~2004년 대비 1.9%(9.23㎢) 감소하였다. 반면 호수 및 하천의 계절변동 수역의 면적은 1.48%(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수지 등 인공수역의 수표면적은 2000~2004년 대비 2017~2021년에 최대면적 기준으로 2.36%(11.31㎢), 최소면적 기준으로 5.01%(16.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내에는 2021년 기준 총 24개(내륙습지 17개, 연안습지 7개)의 람사르 습지가 있다. 이들 람사르 습지의 총면적은 2만 214ha에 이른다. 19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고 대암산 용늪이 첫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이후 2021년 장항습지가 등록되기까지 습지 수와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물 관련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호와 복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물 관련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람사르 습지 수와 면적, 1997-2021 (단위: 개, ha)



출처: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https://www.ramsar.org, 2023.10.01. 인출)

용어해설
- **영구수역(permanent water area)** : 호소 및 하천에서 연중 12개월 내내 존재하는 수면적
- **계절변동수역(seasonal water area)** : 호소 및 하천에서 연중 12개월 미만으로 존재하는 수면적
- **람사르습지(Ramsar wetland)**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스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를 말함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 7번 목표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를 적정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에너지는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2018년 IPCC가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국가적 에너지 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큰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추세이나,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의 1/4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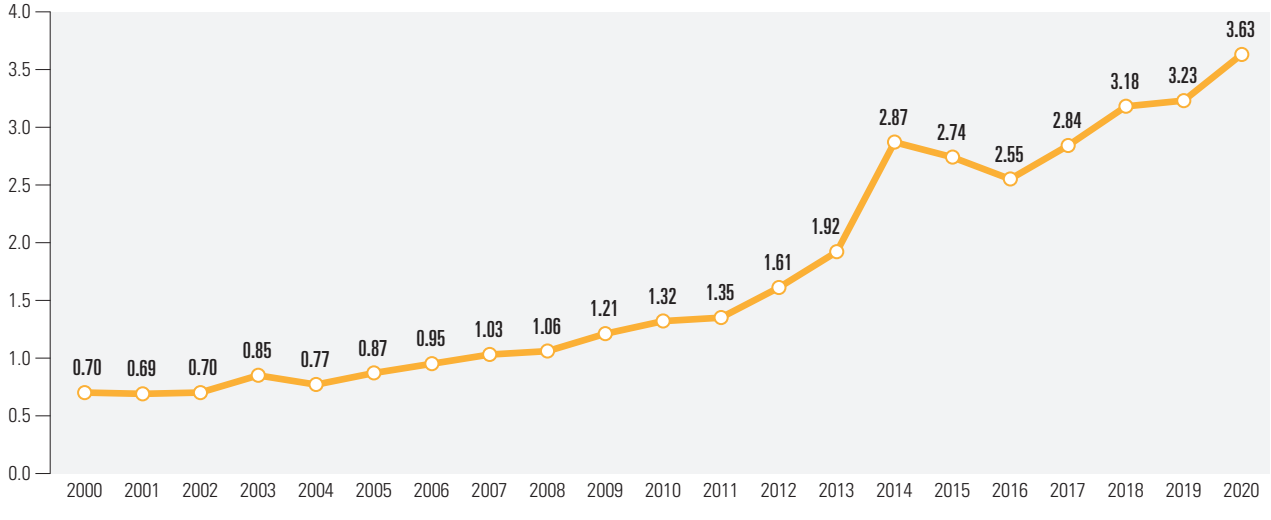
(관련 지표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재생에너지가 일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00년 0.70%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3.63%로 늘어났다. 2000~2010년 기간에 재생에너지 비율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지만 2010~2020년 기간에는 연평균 10.7% 증가하였다.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이후 더욱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은 14.9%에 이른다. 아이슬란드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무려 82.8%에 달한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능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00~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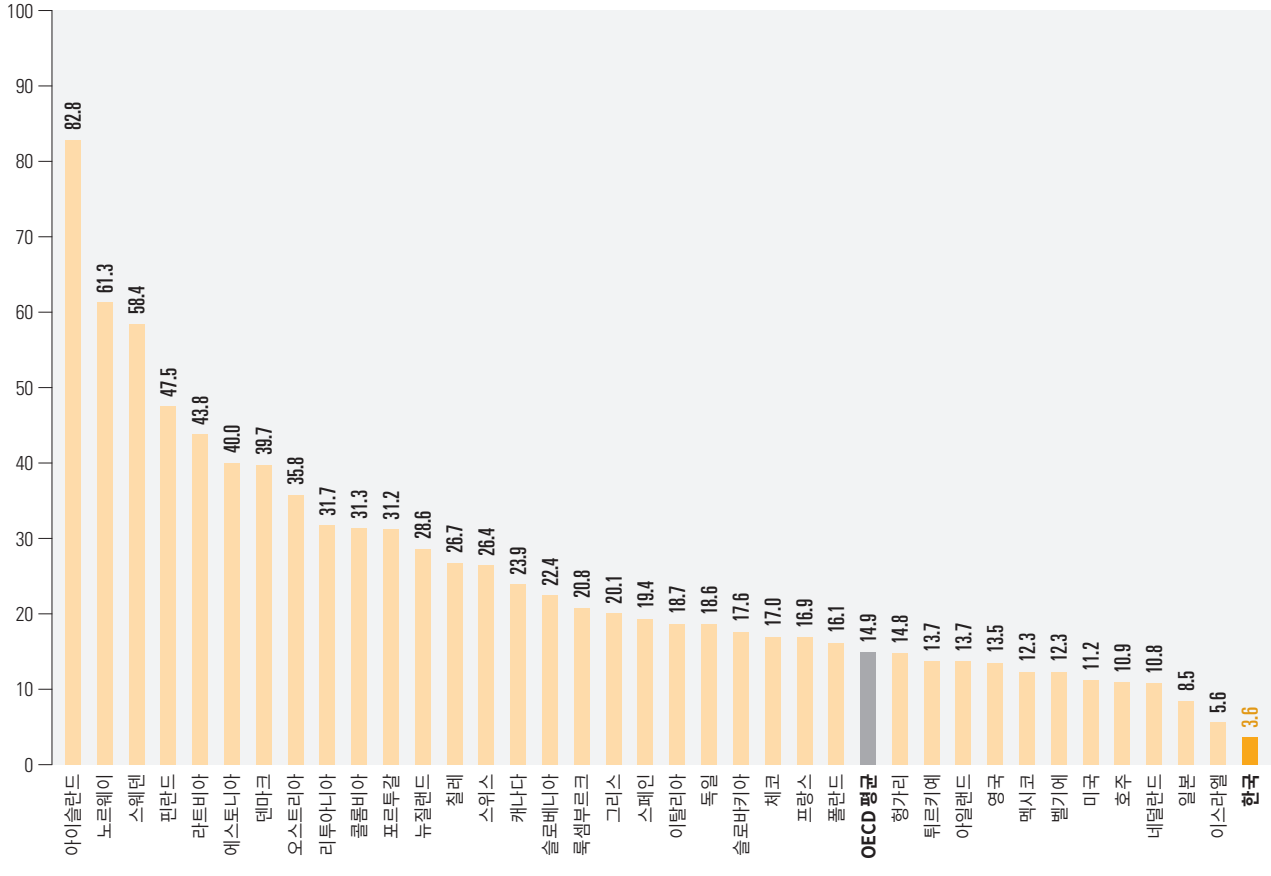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newable energy consumption(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3.7.25. 인출)

력 확충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의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비재생 폐기물(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2022년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생산량은 각각 1413만 4천 TOE와 1572천 TOE로 1차 에너지 공급의 5.2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이다.

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을 보면 2022년 기준 태양광과 바이오가 각각 42.1%와 27.8%를 생산한다. 이 둘을 합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 재생폐기물(8.0%),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 등이 각각 10% 미만을 생산한다.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2022년 생산량이 2017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2020년 이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중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의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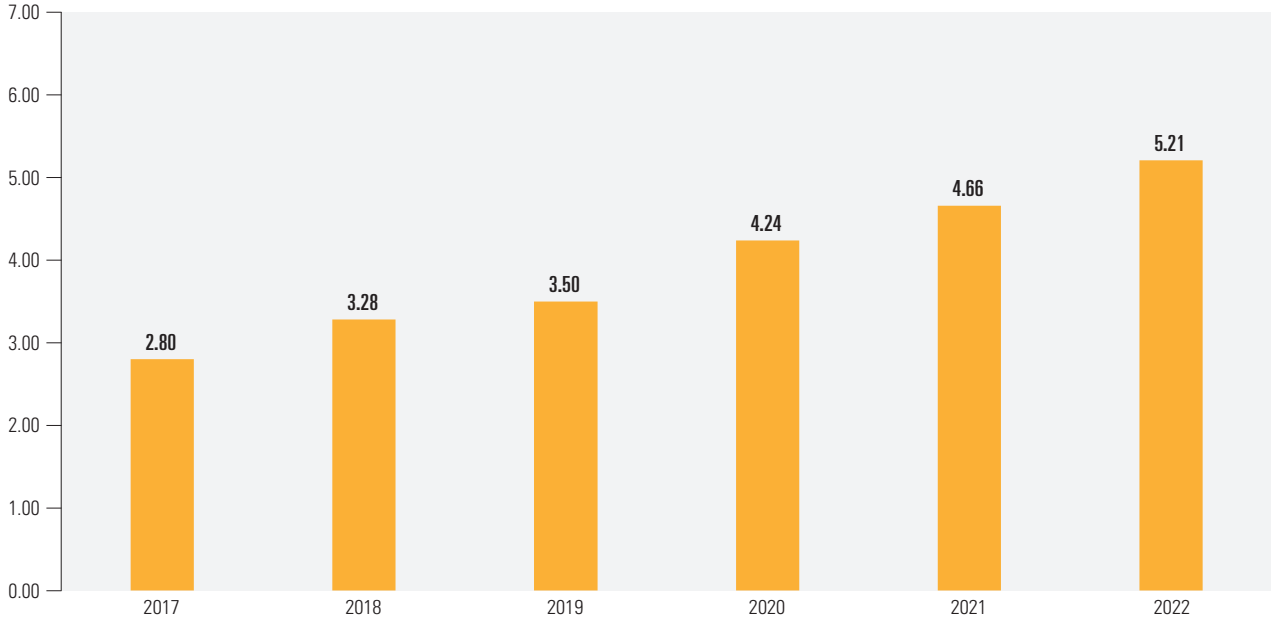
한국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상향,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 수립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21년에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및 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2030 NDC 수정안'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한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이상으로 높이고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비중도 2.3%로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다.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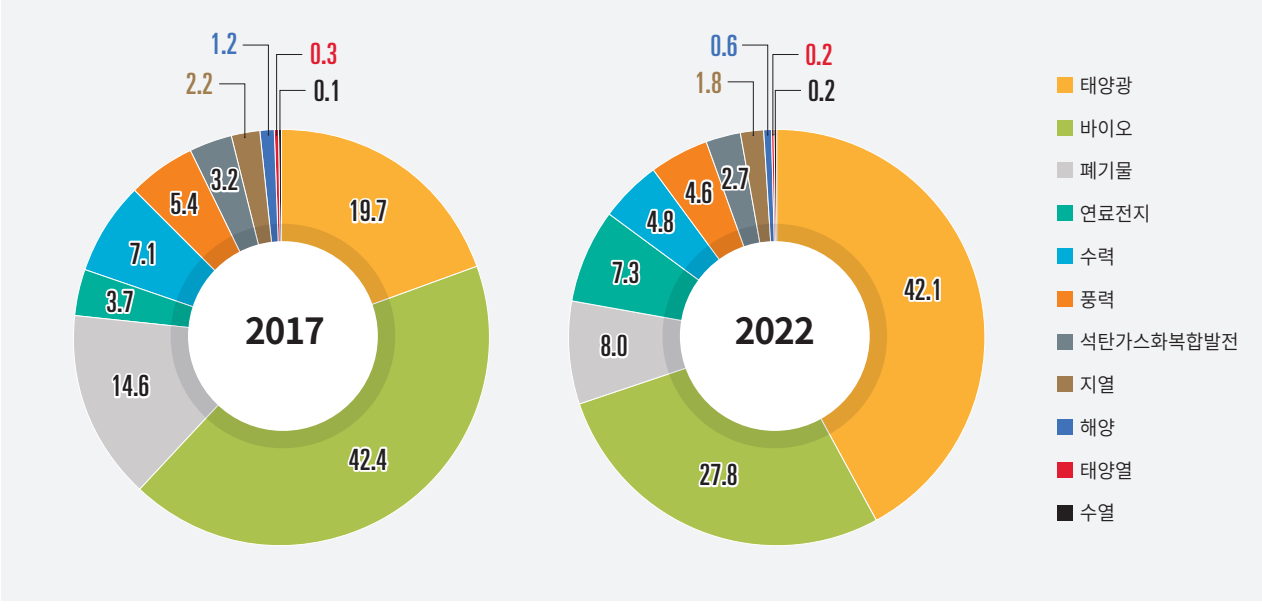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newable energy consumption(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3.7.25. 인출)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2017~2022 (단위: %)



출처: 산업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주1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019)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제외됨
주2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비재생폐기물 분리 산정 비중(2019년 기준) 일괄 적용
주3 : 2022년은 잠정치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생산량 비중, 2017, 2022 (단위: %)



출처: 산업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주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폐기물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신에너지임

에너지 원단위의 지속적 개선 추세

(관련 지표 7.3.1)

에너지 원단위는 에너지 효율 수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량을 말한다. 에너지 원단위가 감소하는 양상을 살펴 국가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TOE/100만 원)는 1990년 0.197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국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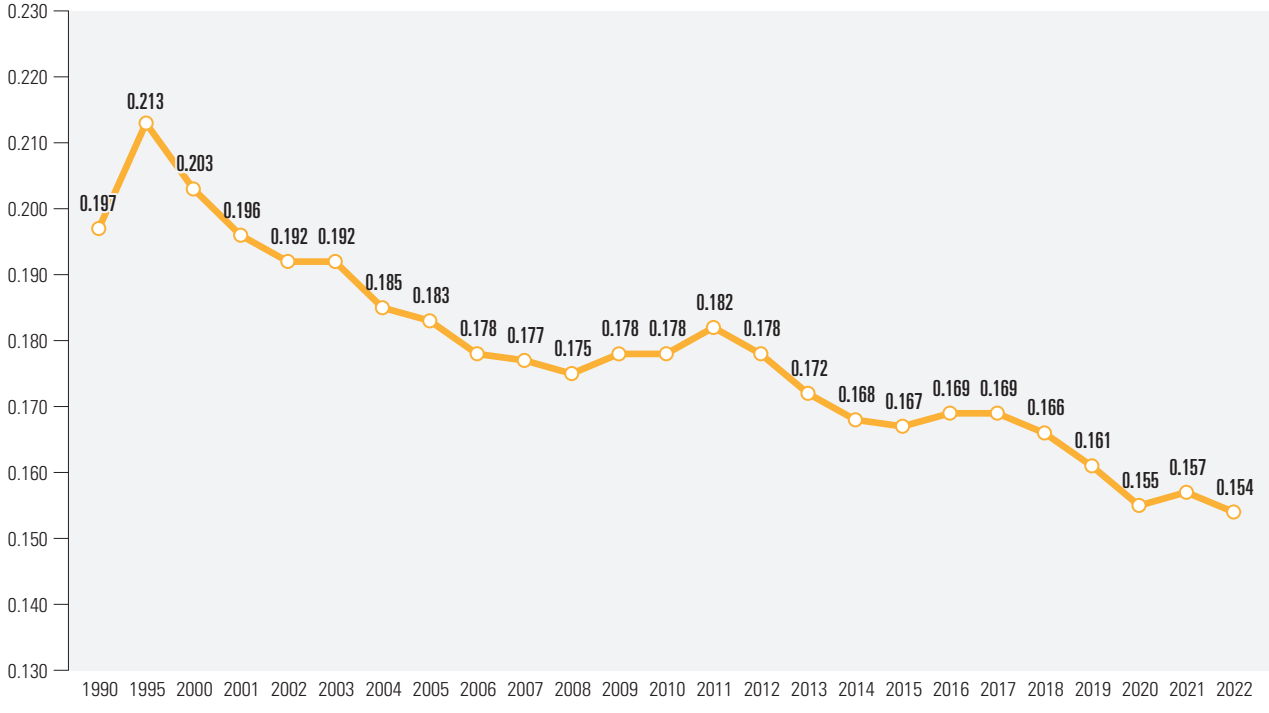
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1990년부터 2022년(잠정치)까지 연평균 0.75% 개선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연평균 1.15%를 나타내며 더욱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총에너지 소비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을 되찾으면서 두 해 연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원단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의 0.15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1년과 2022년(잠정치) 에너지 원단위는 각각 0.157과 0.154로 집계된다.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원단위(GJ/1000달러)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은 2.95, 일본은 3.25, 미국은 4.33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5.45로 이들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시기이다. 이 시기 한국과 독일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간의 원단위 상승이 발생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미국에서는 개선(4.43→4.33)된 반면 일본에서는 악화(3.16→3.25)되었다. 이와 같은 차별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각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하에서 경제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0.7%, 2021년 +4.1%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비교적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원단위를 이용해 국가 간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산업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꼽을 수 있다. 국가 총부가가치와 에너지 공급량으로 산정한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수준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 사이에도 산업구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가 총부가가치의 28.0%에 이르는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독일, 일본은 각각 10.7%, 18.9%, 20.5%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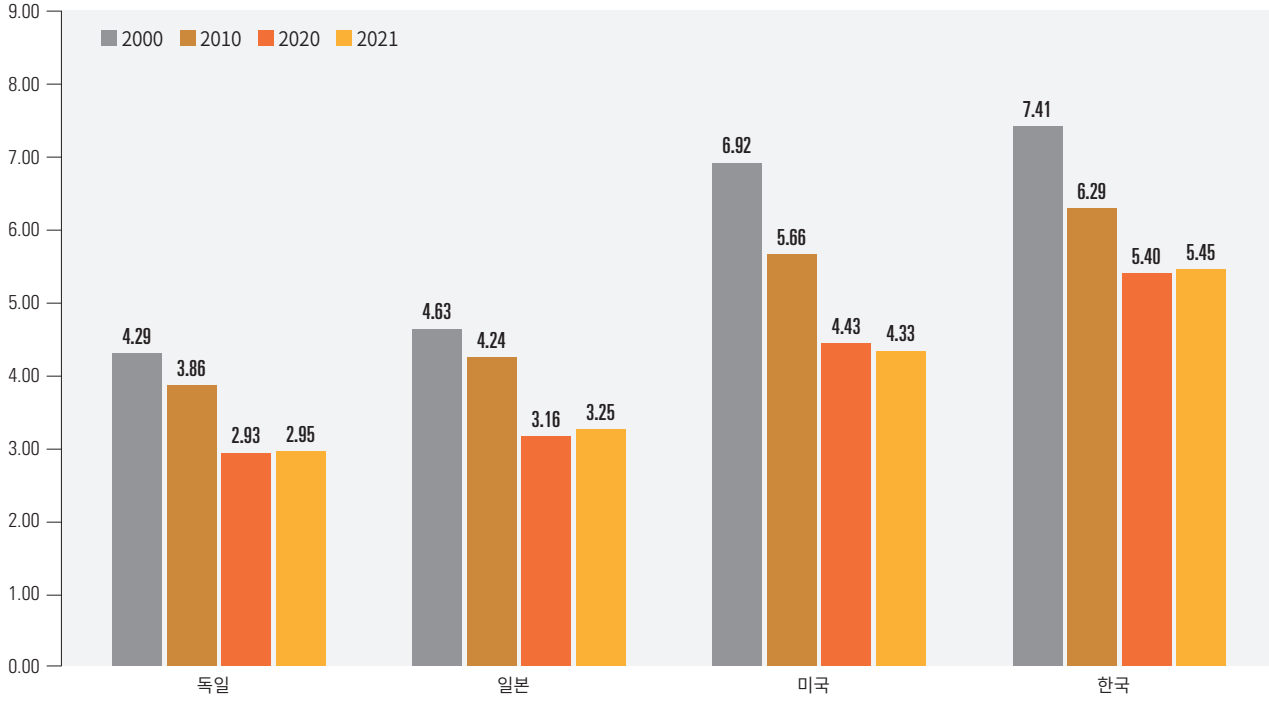
에너지 원단위, 1990~2022

(단위: TOE/100만 원, 2015년 기준)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3년 12월)
주1 : 에너지 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비율로 정의됨. 1차 에너지는 생산, 수출입 및 재고 증감에 의해 국내에 공급된 에너지이며, 타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용으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의 합으로 계산됨
주2 : 2022년은 잠정치

OECD 주요국별 에너지 원단위, 2000~2021 (단위: GJ/1000달러,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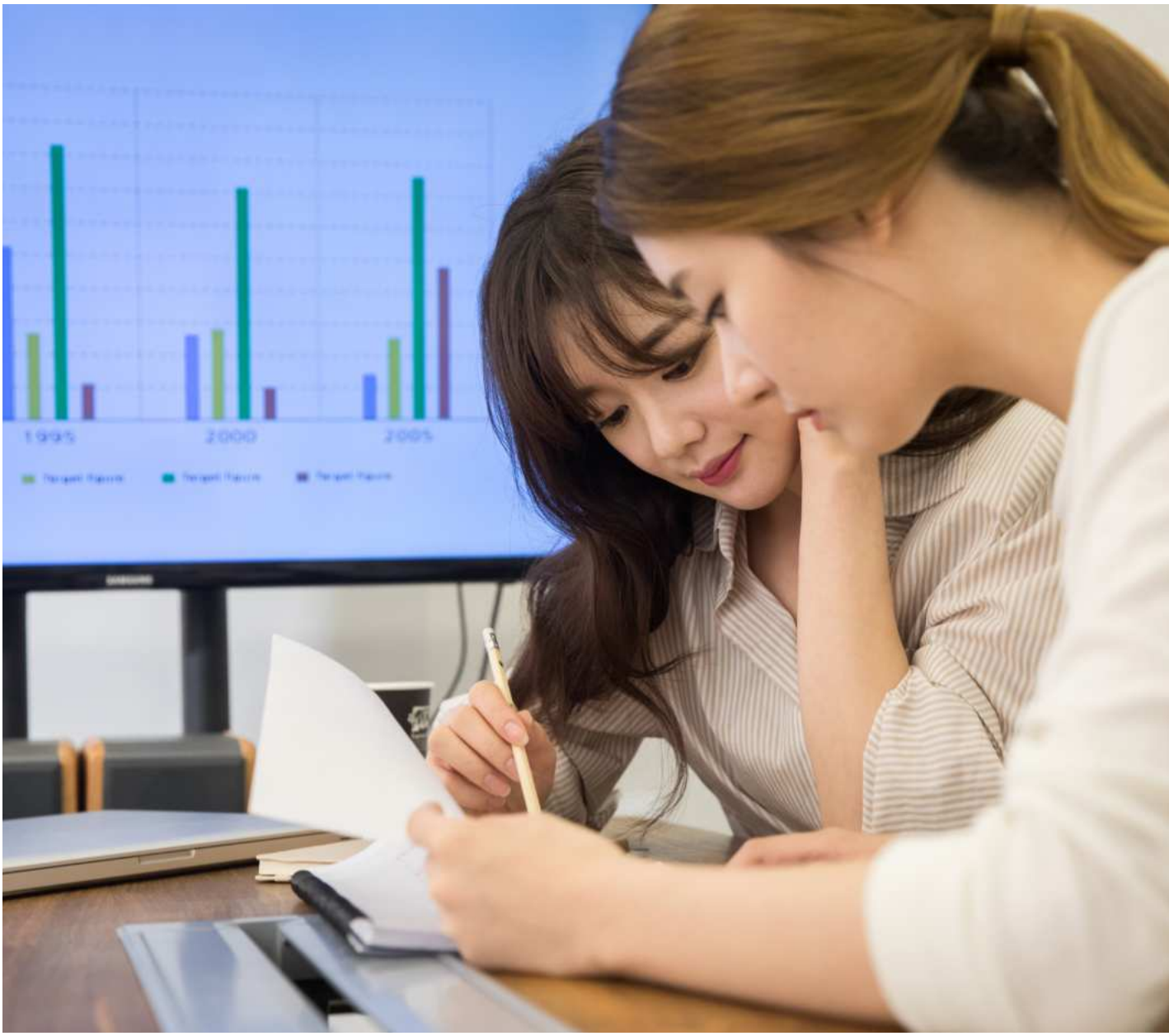


출처: IEA, Energy Statistics Data Browser(https//www.iea.org, 2023.7.25. 인출)

용어해설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PPA) 제도** : 기업과 같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맺고 전기소비자와 판매 계약을 맺는 제도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 8번 목표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목표에서 핵심 단어는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형태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양질의 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일자리, 다양한 불평등 요소를 근절한 평등하고 공정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한국은 2023년 낮은 경제성장률과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2년 2.9%에 이어 2023년 2.7%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특히 2023년에는 여성 고용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이 모두 감소한 반면, 2023년 실업률 하락의 요인은 여성 고용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여성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회복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 하락한 후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기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만 2651원이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아 2022년 기준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그친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와 사망자 수 모두 2021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19년 202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한 차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장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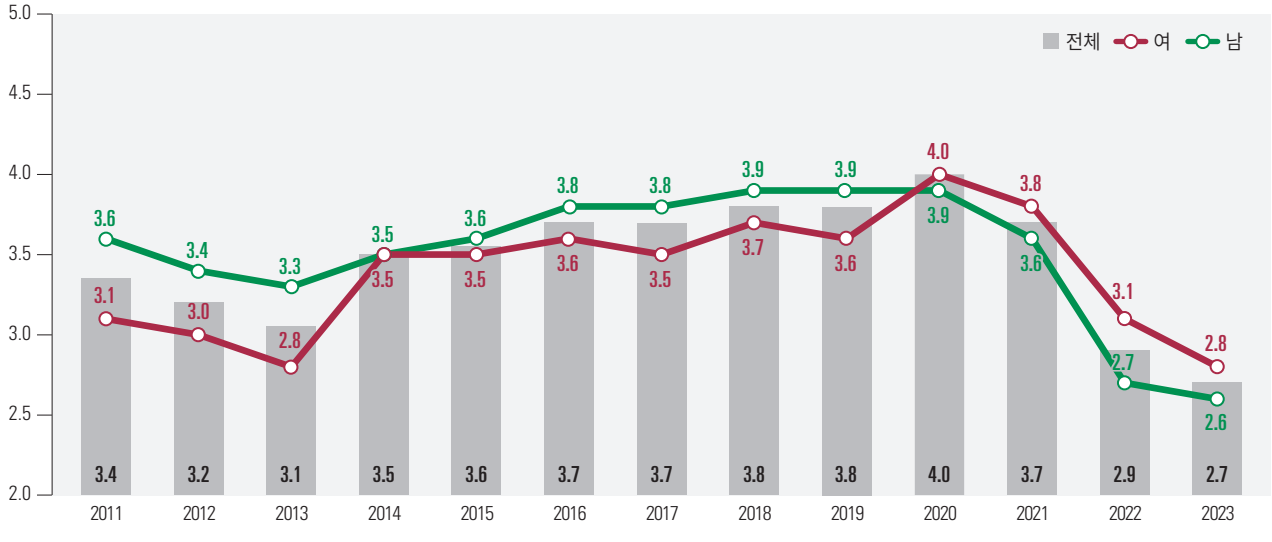
한국의 분기별 1인당 실질 GDP는 2020년 2분기에 4만 454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 같은 해 3분기에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9년 3분기 수준을 거의 회복하면서 주요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났다. 이후에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22년 4분기를 제외하고 2023년 3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2년 1분기부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 실업률은 2.7%로 2000년 이래 최저

(관련 지표 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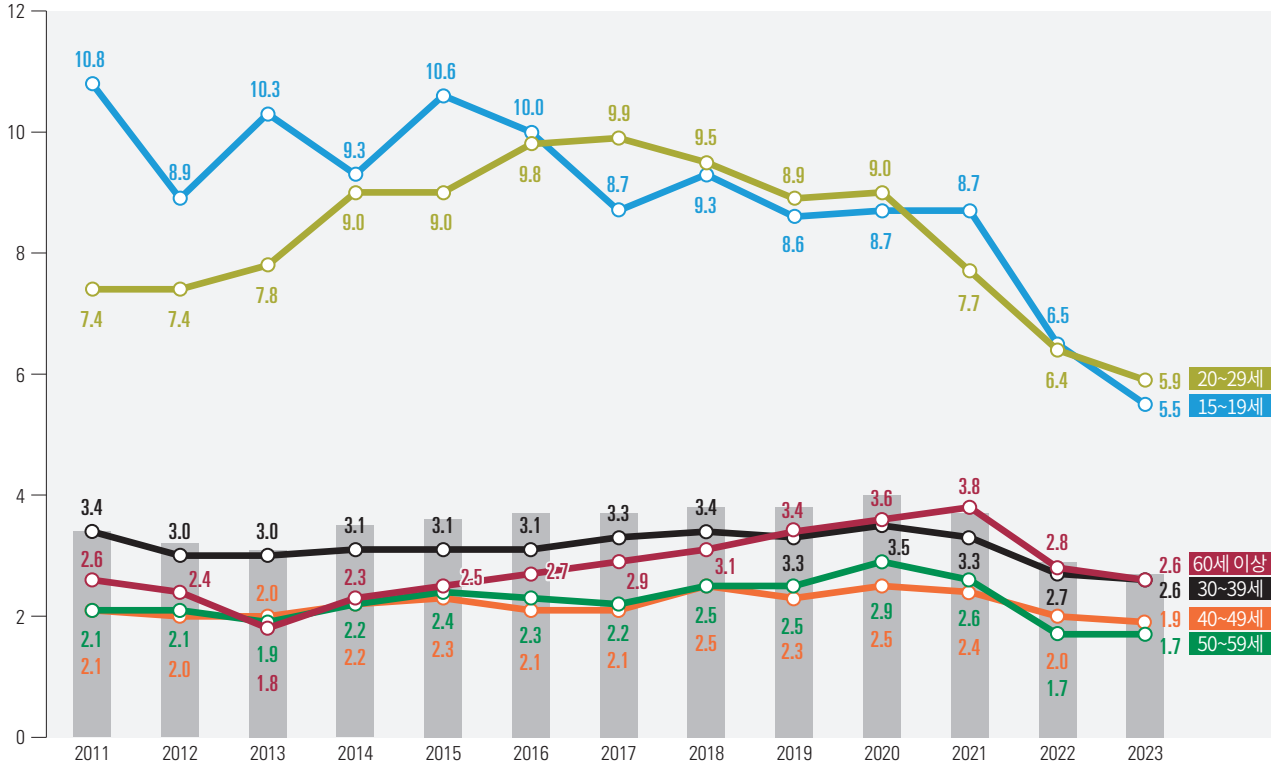
한국의 실업률은 2016년 이후 3.7~3.8%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4.0%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21년 3.7%로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2.9%와 2.7%로 크게 하락하였다. 2023년 분기별로는 1분기 3.2%로 시작해서 2분기 2.7%, 3분기 2.3%, 4분기 2.6%로 집계된다. 2% 후반대 실업률은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성별 실업률, 2011~2023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4.1.24. 인출)

연령대별 실업률, 2011~2023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4.1.24. 인출)

2023년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여성 고용의 증가와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회복세로 요약할 수 있다. 남성 실업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에 2.6%로 큰 변화가 없지만 여성 실업률은 같은 기간 3.1%에서 2.8%로 감소하였다. 2022년에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이 모두 감소했던 반면 2023년 실업률의 하락은 여성 고용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이 둔화된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여성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회복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급증한 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숙박·음식업이나 보건·복지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더해지면서 고용 수요가 확장된 측면도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8.9%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각각 2.3%와 2.5%로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은 3.4%로 30대의 3.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2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10대와 20대를 제외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20대의 실업률은 2020년 9.0%에서 2021년 7.7%, 2022년 6.4%, 2023년 5.9%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0세 이상의 실업률도 2020년 3.6%에서 2023년 2.6%로 감소하였다.

산업재해자와 산재사망자 증가 추세

(◎ 관련 지표 8.8.1)

산업재해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만 9242명에서 2020년 10만 837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과 2022년에 12만 2713명과 13만 34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는 201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에 일시 감소하였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 만 명당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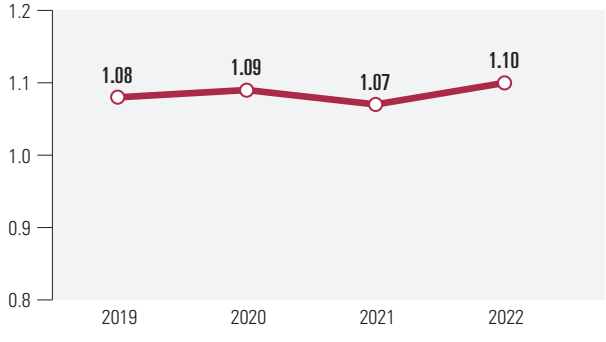
사망자수와 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전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후자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는 전년대비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광업, 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업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가장 많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2022년 전체 사망자의 61.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 준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2022년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증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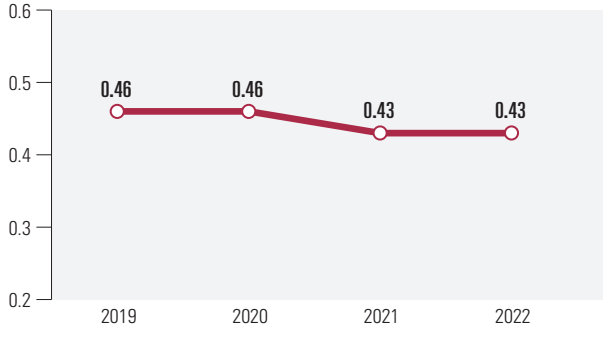
산업재해발생, 2019~2022 (단위: 명, 전년대비 증감률,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재해자수		소계	109,242	6.8	108,379	-0.8	122,713	13.2	130,348	6.2
		사고	94,047	3.5	92,383	-1.8	102,278	10.7	107,214	4.8
		질병	15,195	32.4	15,996	5.3	20,435	27.8	23,134	13.2
	사망자수	소계	2,020	-5.7	2,062	2.1	2,080	0.9	2,223	6.9
		사고	855	-11.9	882	3.2	828	-6.1	874	5.6
		질병	1,165	-0.5	1,180	1.3	1,252	6.1	1,349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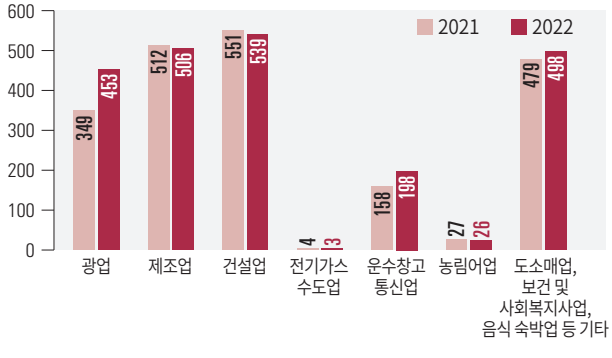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 2019~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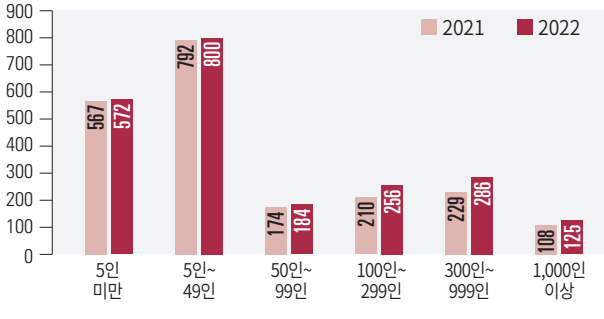
근로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 2019~2022 (단위: 명)



산업별 산재사망자 수, 2021~2022 (단위: 명)



사업장 규모별 산재사망자 수, 2021~2022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연도
주 :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 이환자를 합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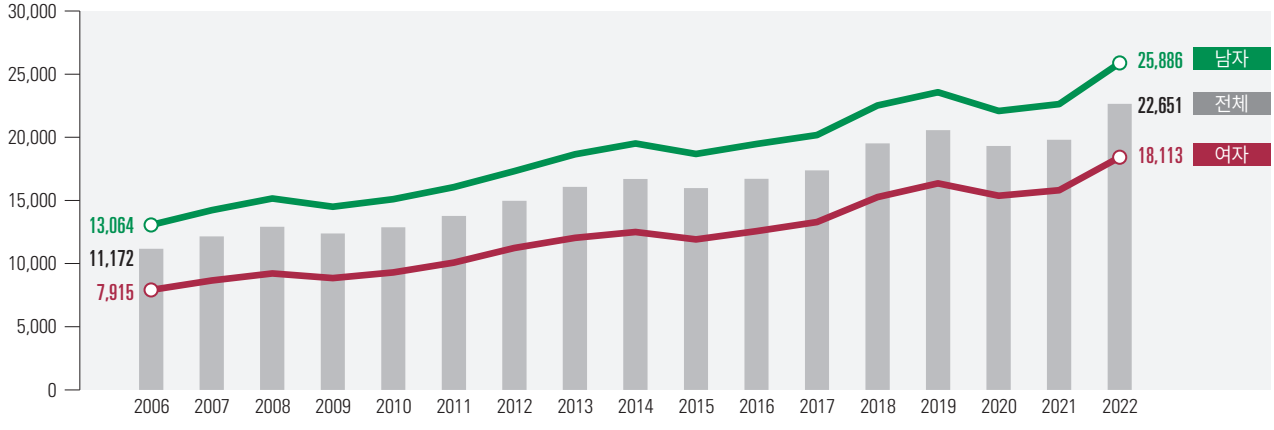
평균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를 넘어 상승 추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개선 필요

(관련 지표 8.5.1)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19년 2만 573원이었던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 전년 대비 6.1% 감소한 1만 9316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를 회복하여 2021년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2.5%, 14.4% 상승한 1만 9806원과 2만 2651원으로 늘어났다.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아 2022년 기준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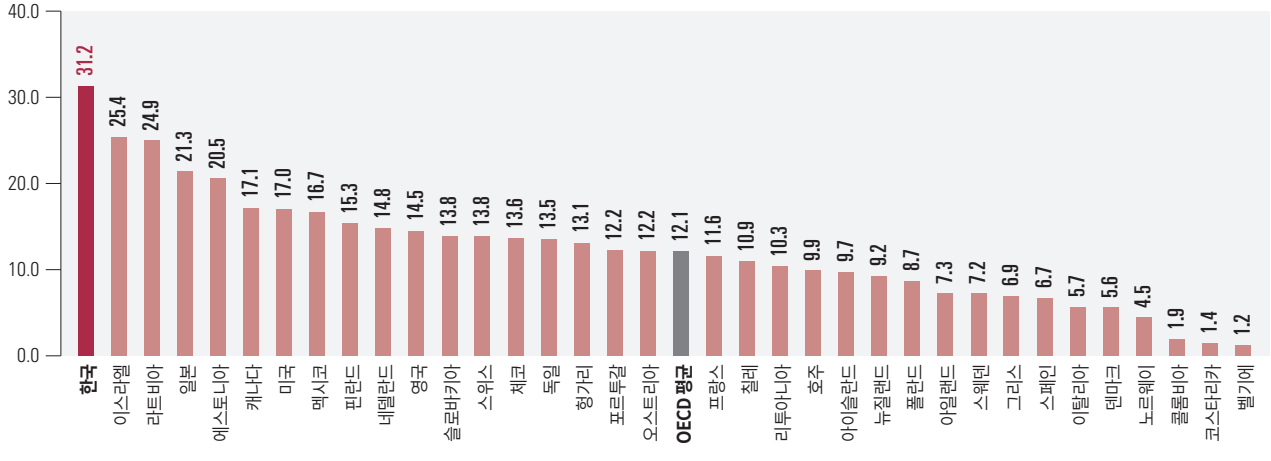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31.2%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1%와 비교할 때 2.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에스토니아 인데 이들 국가 모두 20%대로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관리직과 나머지 직종 간의 임금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기준 서비스직 종사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관리직 종사자의 18.3%와 19.9%에 해당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관리직의 37.4%에 해당한다.

성별 시간당 임금, 2006~2022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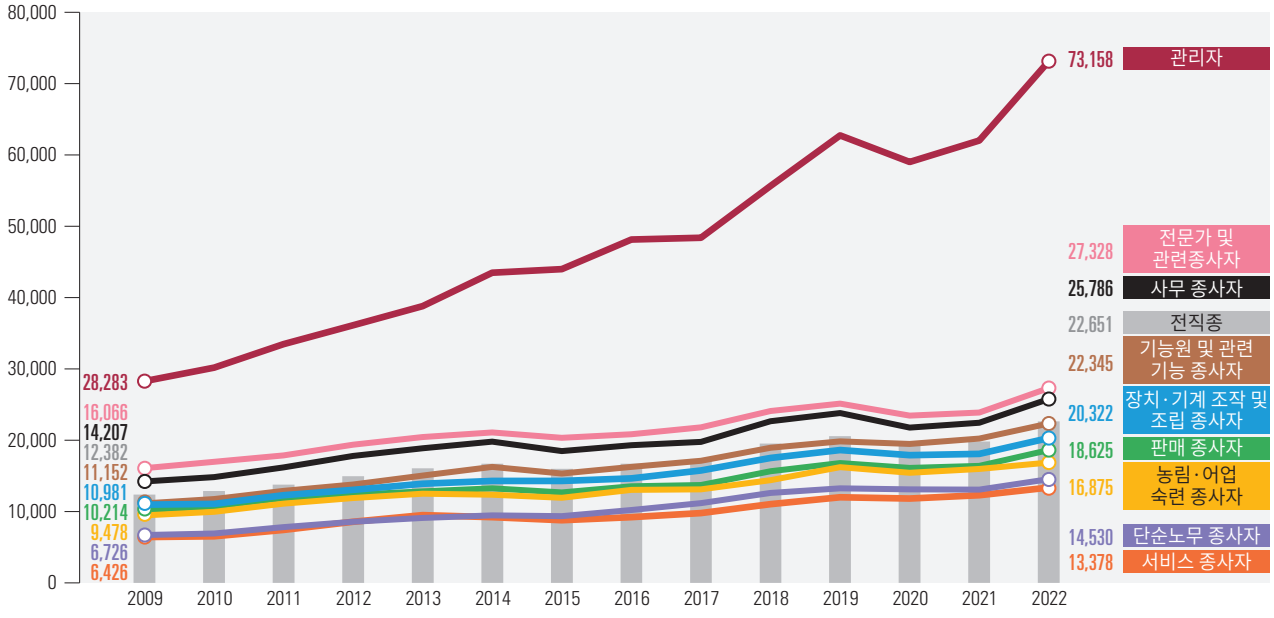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https://kosis.kr, 2023.10.30. 인출)
주1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주2 : 시간당 임금=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총근로시간
주3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으로 조사함

OECD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2022 (단위: %)



출처: OECD Data, Gender wage gap(https://data.oecd.org)
주 :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중위임금 대비 남성과 여성 중위임금 차이로 계산

직업별 시간당 임금, 2009~2022 (단위: 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https://kosis.kr, 2023.10.30. 인출)
주 : 2019년 이전은 표준직업분류 6차, 2020년 이후는 표준직업분류 7차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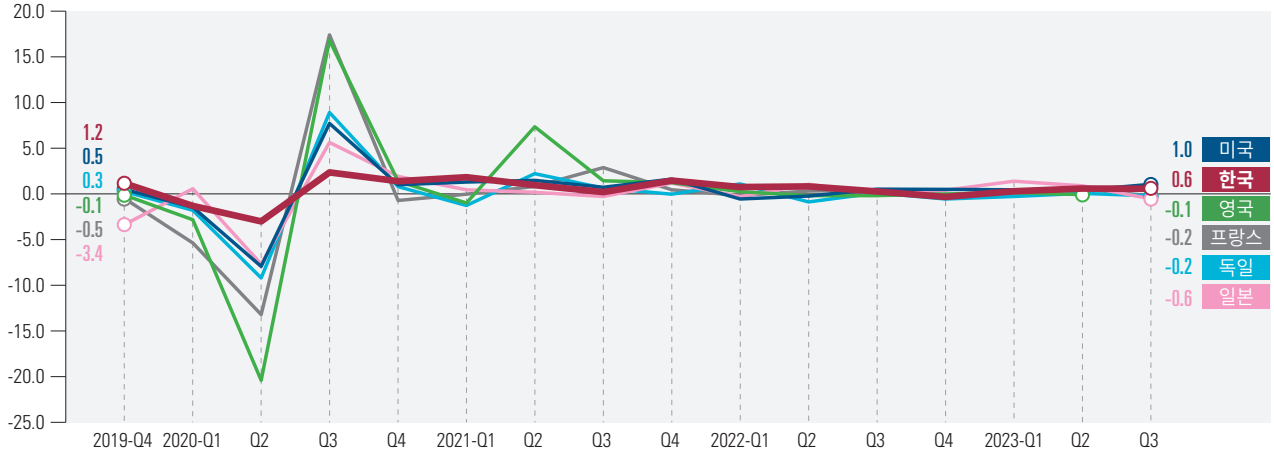
2022년부터 1% 이내로 분기별 성장률 둔화

(➲ 관련 지표 8.1.1)

OECD 주요국의 1인당 실질 GDP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후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같은 해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2020년 4분기 무렵 한국이 가장 먼저 2019년 3분기 수준을 넘어섰고, 2022년 3분기 무렵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도 2019년 3분기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 호조 기류 속에 2022년 2분기 이후 유럽 주요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분기별 1인당 실질 GDP는 2020년 2분기에 4만 454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 같은 해 3분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9년 3분기 수준을 회복하였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4분기 1.4%, 2021년 1분기 1.8%로 상승세를 이어 갔다. 이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22년 4분기를 제외하고 2023년 3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2년 1분기부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 이하로 둔화되었다.

OECD 주요국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19~2023 (단위: %)



출처: OECD.Stat, Quarterly National Accounts: GDP per capita (https://stats.oecd.org, 2024.01.09. 인출)
주 : 영국은 2023년 3분기 자료가 집계되지 않음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SDG 9번 목표는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 혁신에 관한 것으로, 이 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한 국가의 자립 성장을 추구한다. 이 목표에서 주목하는 제조업은 전 세계의 경제발전과 고용 및 사회 안정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동안 개도국의 제조업 생산과 고용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반면 선진국의 제조업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기지를 개도국에 옮기면서 점차 국가 경제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최근 제조업 성장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SDG 9번 목표에서 설정한 산업화, 인프라, 혁신의 국내 이행 상황 점검이 중요하다. UN의 SDG 이행 경과 분석(UN, 2023)에 따르면 SDG 9번 목표는 평균 수준의 이행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세부목표별로는 연구개발 관련 이행에 성과가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산업화의 이행에는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산업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독일, 일본, 한국 등 제조 강국에서 약한 감소세가 관측된다. 한국에서는 리쇼어링 등을 통한 제조업 국내 재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연구 자본과 인력 규모를 나타내는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는 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늘어났다.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비율과 연구원 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가 인프라 중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한국의 여객과 화물 인프라는 도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수송 수단이 도로, 철도, 해운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화물 수송 수단은 도로에 편중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운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도로 운송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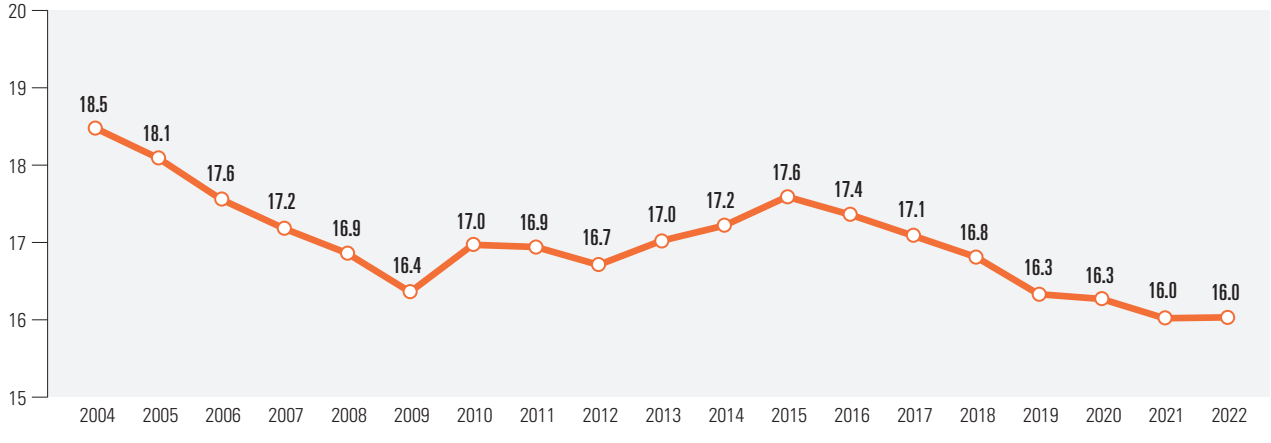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감소 추세

(관련 지표 9.2.2)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를 나타낸다. 이는 산업화 척도로서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성장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최근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의 근간으로서 제조업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도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04년 18.5%에서 2009년 16.4%까지 감소한 후 반등하여 2015년에 17.6%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16.0%로 낮아졌다. 선진국의 첨단산업 투자 유치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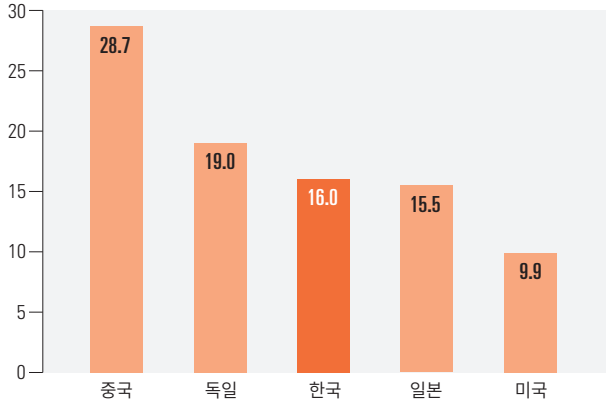
제조업 고용 비율, 2004~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3.09.17. 인출)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주요 제조 강국 중에서도 중국(2020년 28.7%)이 가장 높다. 중국 다음으로는 독일(2022년 19.0%), 한국(2022년 16.0%), 일본(2022년 15.5%) 등의 순이다.

주요국별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2022 (단위: %)



출처: ILO, ILOSTAT Explorer(https://www.ilo.org/shinyapps, 2024.01.18. 인출)
주 : 중국은 202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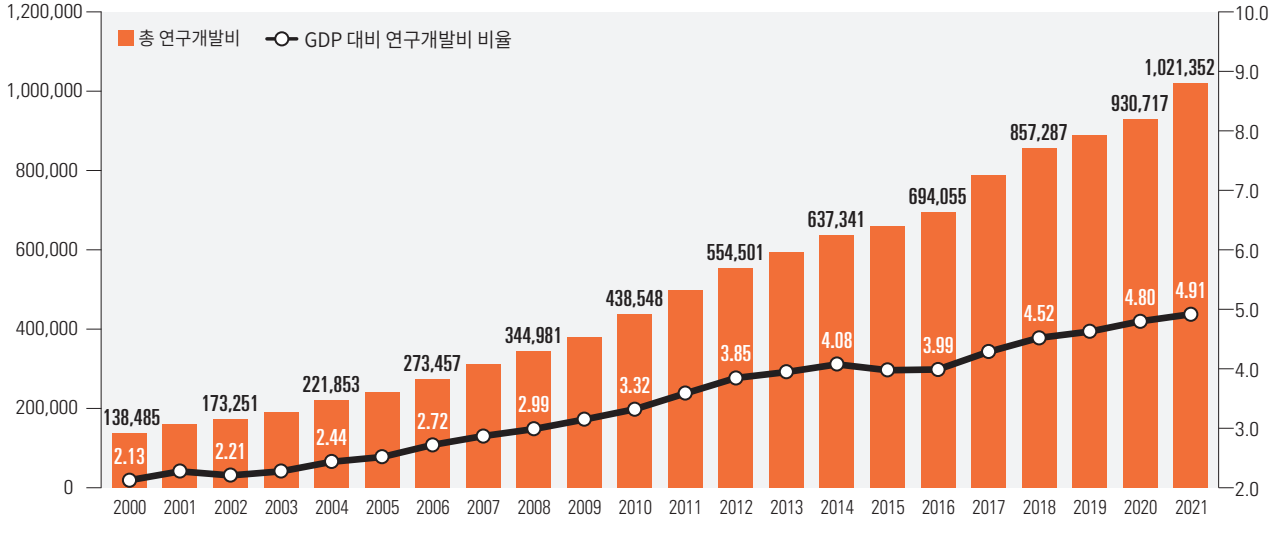
국가 혁신을 위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자본과 인력 투입

(관련 지표 9.5.1 / 9.5.2)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다양한 연구 기획과 실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규모는 국가의 연구개발 인프라 환경을 나타낸다. 한국의 2021년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이는 GDP 대비 4.91%를 차지한다.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 13조 8485억원, 2.13%에서 장기적인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한국(2.13%)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핀란드(3.24%), 일본(2.86%), 미국(2.62%), 독일(2.4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OECD 국가 중 이스라엘(5.56%) 다음으로 최상위 수준을 보여 준다. 다만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국가 혁신 지표의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 대비 연구원 수는 국가 혁신 관련 인력 규모를 나타낸다. 특히 상근상당(Full Time Equivalent, FTE) 연구원 수를 통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혁신 인력 규모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2021년 9.1명으로 2000년 2.3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국가 연구인력의 확충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북유럽 국가가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000년대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구원수는 OECD 국가 중 중간 그룹 정도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그에 따른 연구인력 규모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가 혁신 위축과 경쟁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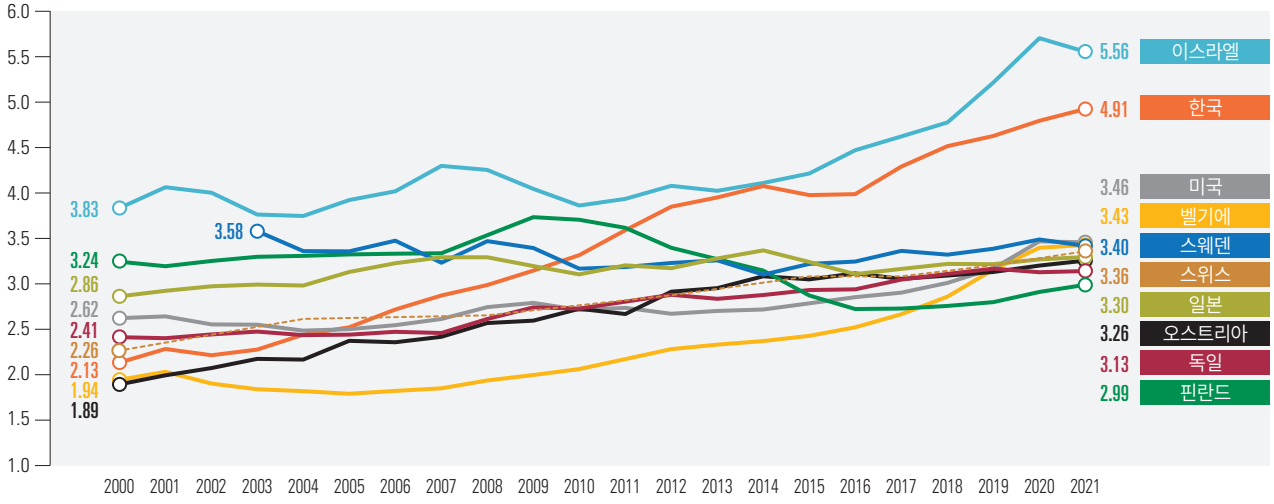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00~2021 (단위: 억원,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OECD 주요국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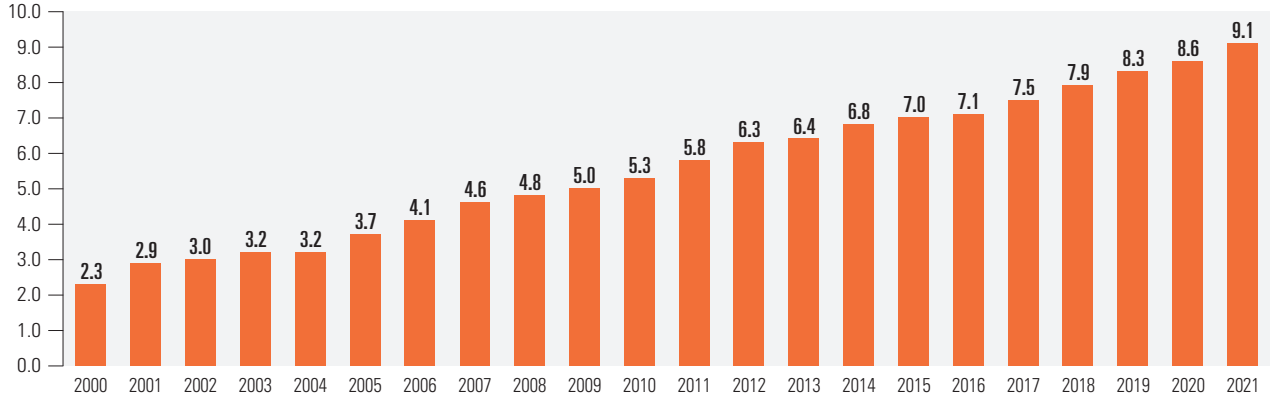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 2023.12.29. 인출), 2021년 한국자료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인용
주 : 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연구원수, 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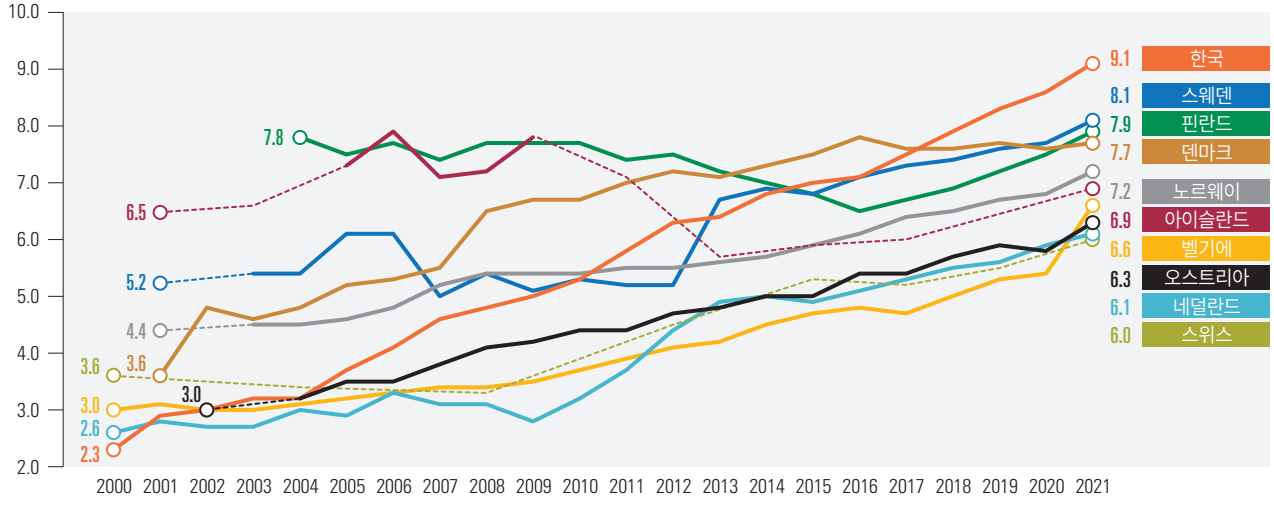
(단위: 천 명당 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 2023.12.29. 인출)
주 : 실질연구 참여 인력(FTE:Full Time Equivalent)기준

OECD 주요국별 연구원수, 2000~2021

(단위: 천 명당 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mdsts, 2023.12.29. 인출)
주1 : 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주2 : 실질연구 참여 인력(FTE:Full Time Equivalent)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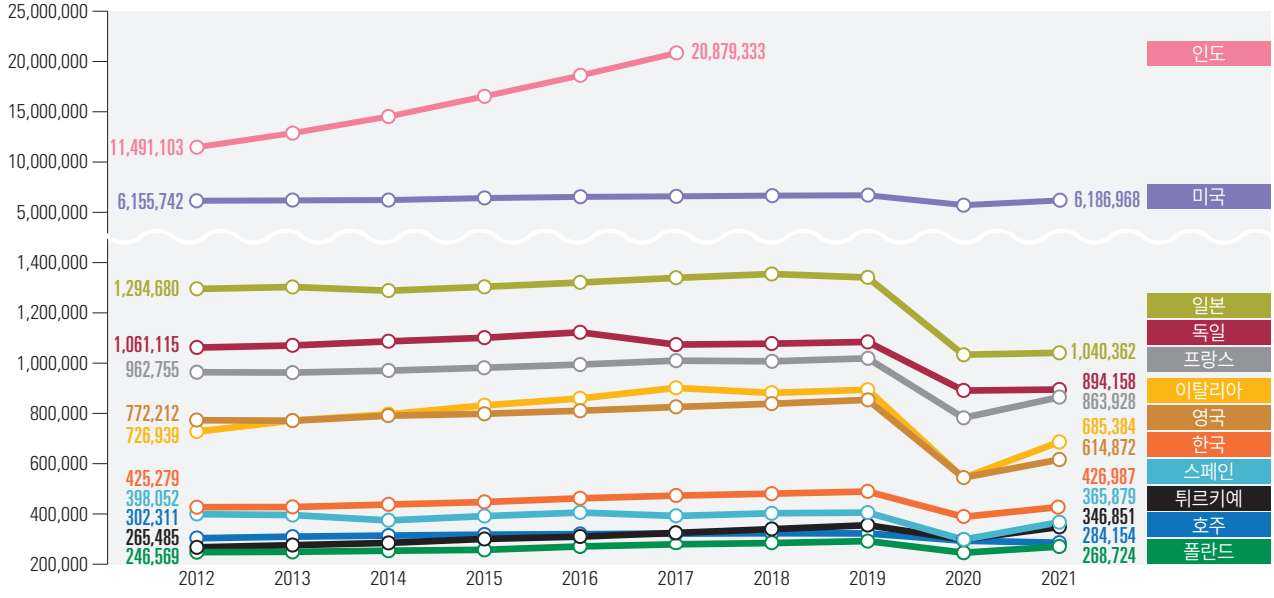
승객 및 화물 모두 도로 운송에 대한 높은 의존

(관련 지표 9.1.2)

운송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내륙 운송을 이용하는 승객 또는 화물의 총이동을 말한다. OECD의 승객 운송 데이터는 100만 승객-킬로미터 단위로 집계된다. 이는 여객 수에 수송거리를 곱한 총수송량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으로 구분된다. 승객 운송은 인도(2017년 21조 명-㎞)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인도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미국(2021년 6.2조 명-㎞)이다. 한국의 승객 운송량은 2021년 기준 4270억 명-㎞이다.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일본(1조 404억 명-㎞), 독일(8942억 명-㎞), 프랑스(8639억 명-㎞), 이탈리아(6854억 명-㎞), 영국(6149억 명-㎞),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철도에 비해 도로 승객 운송 비율이 높으며, 일본도 도로 운송 비율이 높으나 철도 운송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과 독일은 도로 승객 운

주요국별 승객 운송량, 2012~2021

(단위: 100만 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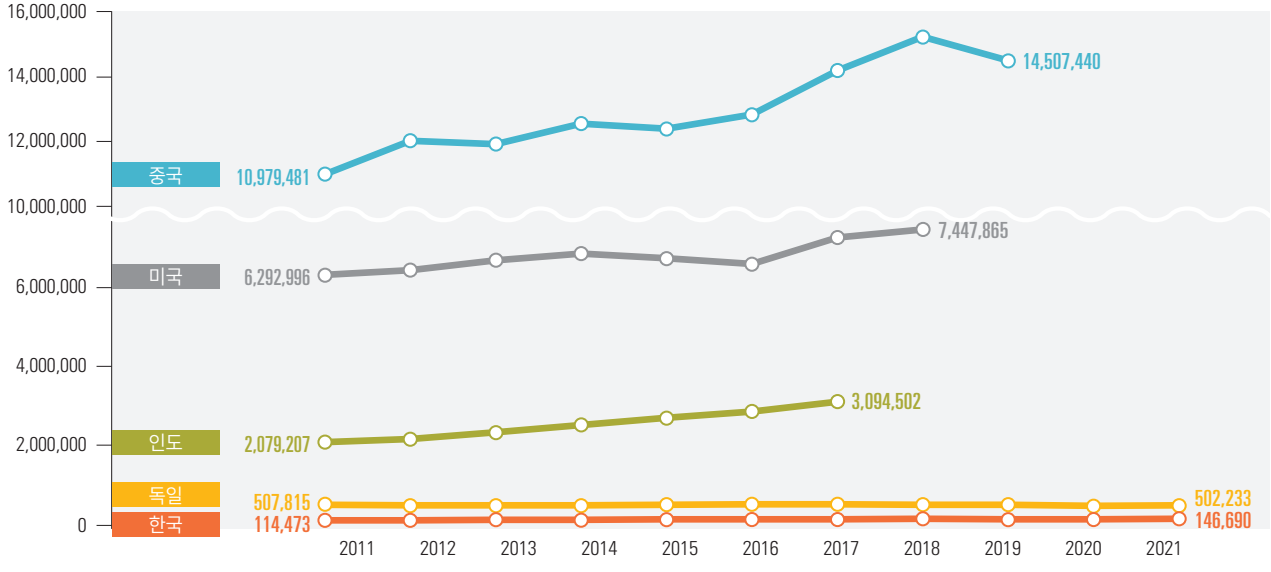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Passenger Transport(https://stats.oecd.org, 2024.01.25. 인출)

주 : 한국의 2020년, 2021년 철도승객 운송량 자료는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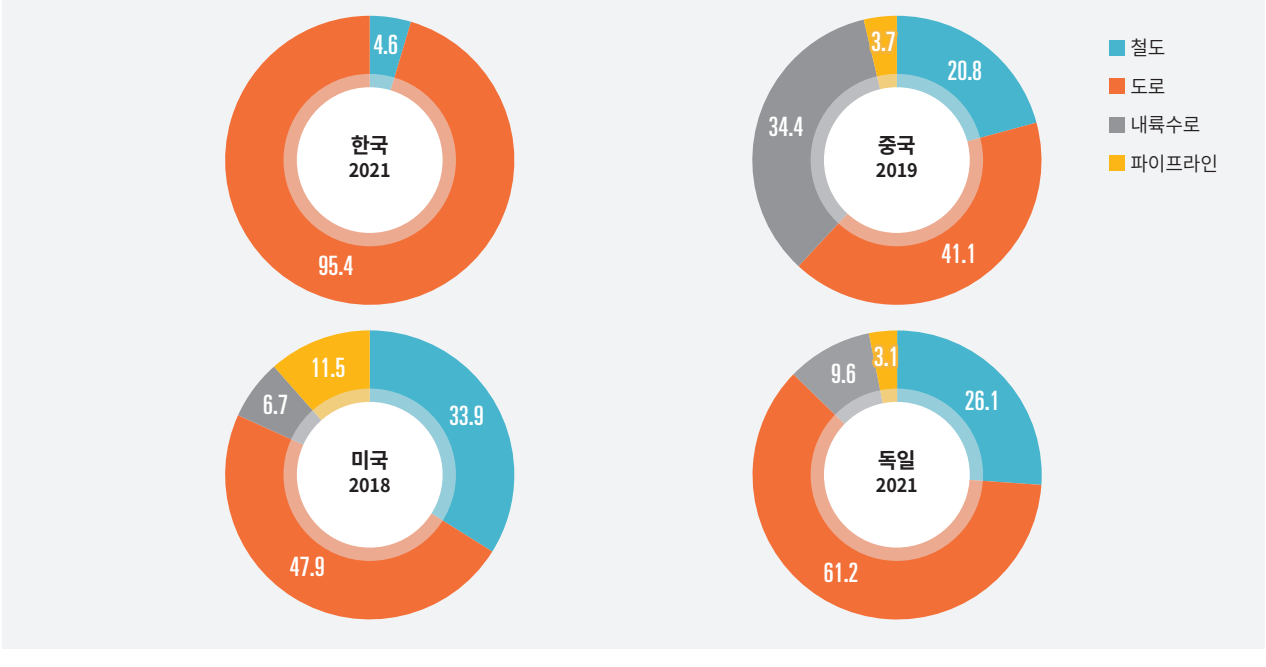
송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참고로 항공 승객 운송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약 45억 명에 달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18억 명으로 급감한 후 2022년에 38억 명으로 회복하였다.

OECD의 화물 수송 데이터는 100만 톤-킬로미터 단위로 집계된다. 화물 수송은 중국(2019년 14.5조 톤-㎞), 미국(2018년 7.4조 톤-㎞), 인도(2017년 3.1조 톤-㎞)의 순으로 많다. 한국의 화물 수송량은 2021년 기준 1467억 톤-㎞이다. 한국이 도로 수송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 이외에 내륙수로와 철도, 미국은 철도와 파이프라인의 수송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로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운수 노동자의 근로여건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주요국별 화물 운송량, 2011~2021 (단위: 100만 톤 - ㎞)



주요국별 화물 운송비율 (단위: %)



출처: OECD.Stat, Freight Transport(https://stats.oecd.org, 2024.01.18. 인출)

10 REDUCED INEQUALIT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 10번 목표에서는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지향한다. 국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 과정,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으로는 자유롭고 안전한 노동 이동과 국제 원조를 통해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확인한 정부의 분배정책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난다. 순자산 지니계수로 파악한 자산 불평등은 최근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그 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성장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 세계 난민의 수는 2022년 기준 3530만 명에 이른다. 한국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자 난민법을 제정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난민 신청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만 1539건에 이르렀고, 연간 난민 인정자 수도 1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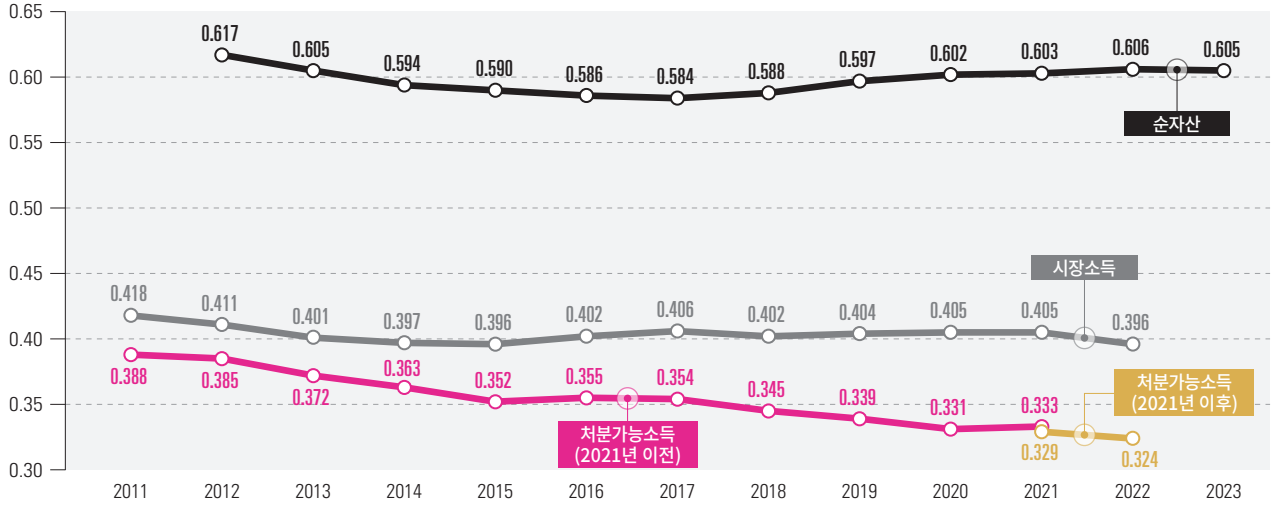
향후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를 위해서는 국내외적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추세와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기준 지니계수 감소 속 은퇴 연령층 소득불평등은 악화 (관련 지표 10.4.2)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소득이 계층 간 어느 정도로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알려 주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이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OECD의 권고 방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2011년 0.418에서 2022년 0.396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정부의 분배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두 지니계수의 차이로 나타내는 정부 분배정책의 효과는 2011년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2011~2023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3.12.28. 인출)
주1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주2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주3 :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으며 2021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2021~2022

	전체			근로연령층 (18~65세)			은퇴연령층 (66세 이상)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시장소득 지니계수	0.405	0.396	-0.009	0.365	0.355	-0.010	0.552	0.551	-0.001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329	0.324	-0.005	0.310	0.303	-0.007	0.378	0.383	0.005
개선 효과	0.076	0.072		0.055	0.052		0.174	0.168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3.12.28. 인출)
주1 :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주2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주3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주4 : 개선 효과 = 시장소득 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030에서 2022년 0.072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20년 0.074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8~65세(근로연령층) 인구와 66세 이상(은퇴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각각 0.303과 0.383으로, 근로연령층에서는 전년 대비 0.007 감소하였지만 은퇴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하였다. 은퇴연령층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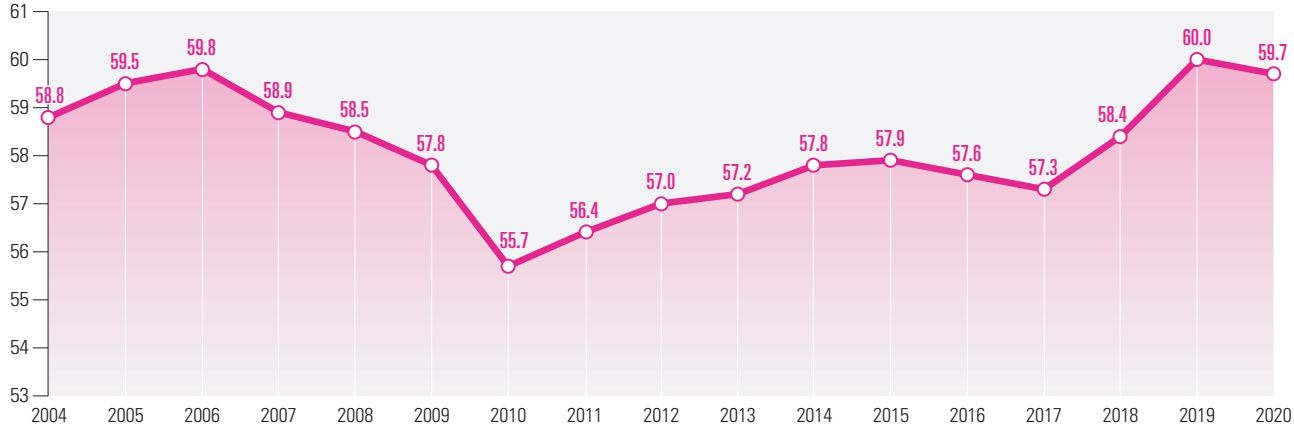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순자산에 적용한 지니계수를 통해 부의 상속 등에 따른 자산의 불평등 수준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점차 낮아졌으나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며 2022년에는 0.606으로 높아졌다. 2023년에는 큰 변화 없이 0.605로 나타난다. 최근 순자산 지니계수의 증가는 한국의 자산 불균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면 주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하다.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

(관련 지표 1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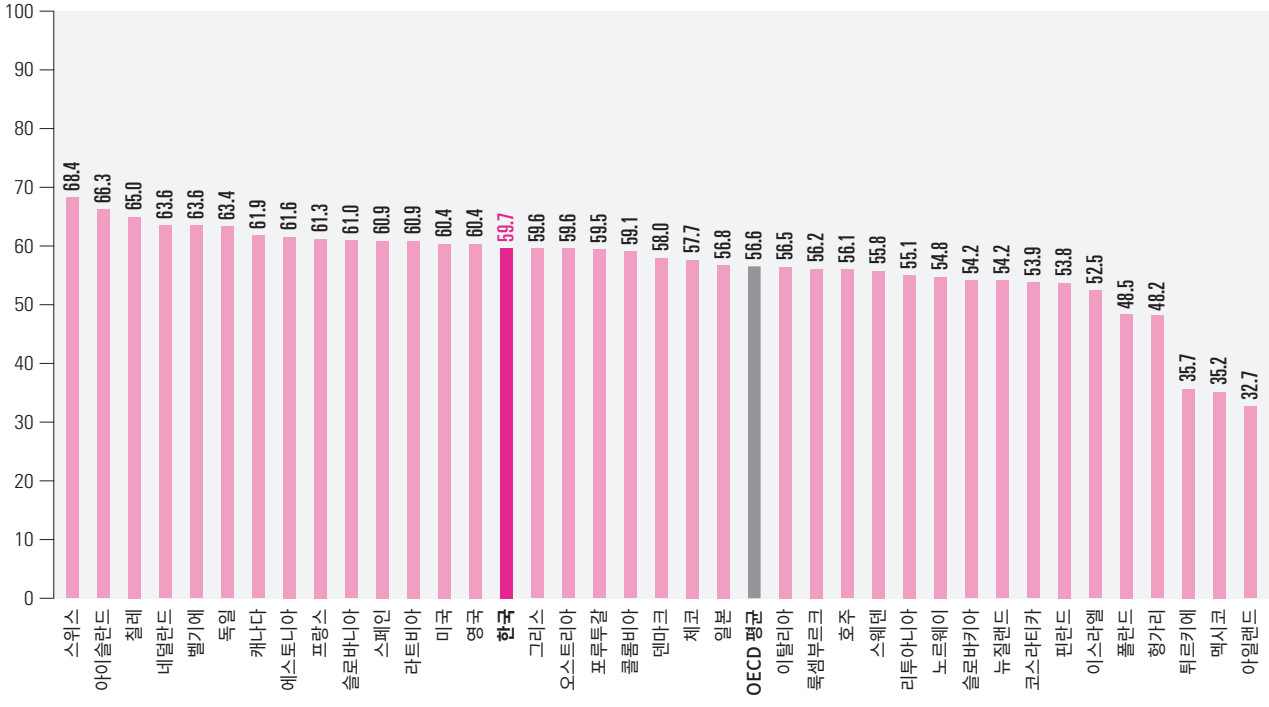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 산출이 자본이 아닌 노동에 배분되는 상대적인 몫을 뜻한다. 경제의 성장이 개인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 소득 분배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GDP에서 피고용자의 보수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을 통해 경제성장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2004~2020 (단위: %)



출처: ILO(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7.19.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2020 (단위: %)



출처: ILO(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7.19. 인출)
주 :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 (피고용자 보수 + 자영업자 노동소득) ÷ GDP x 100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2020년 기준 59.7%로 나타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7%대에 머무르다가 2019년 60.0%로 높아진 뒤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56.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 한국이 15번째로 높다. 스위스(68.4%), 아이슬란드(66.3%), 칠레(65.0%) 등은 노동소득 비율이 70%에 육박하지만 아일랜드(32.7%), 멕시코(35.2%), 튀르키예(35.7%), 헝가리(48.2%), 폴란드(48.5%)의 5개국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주 근로자의 구직 비용 측정을 위한 통계 개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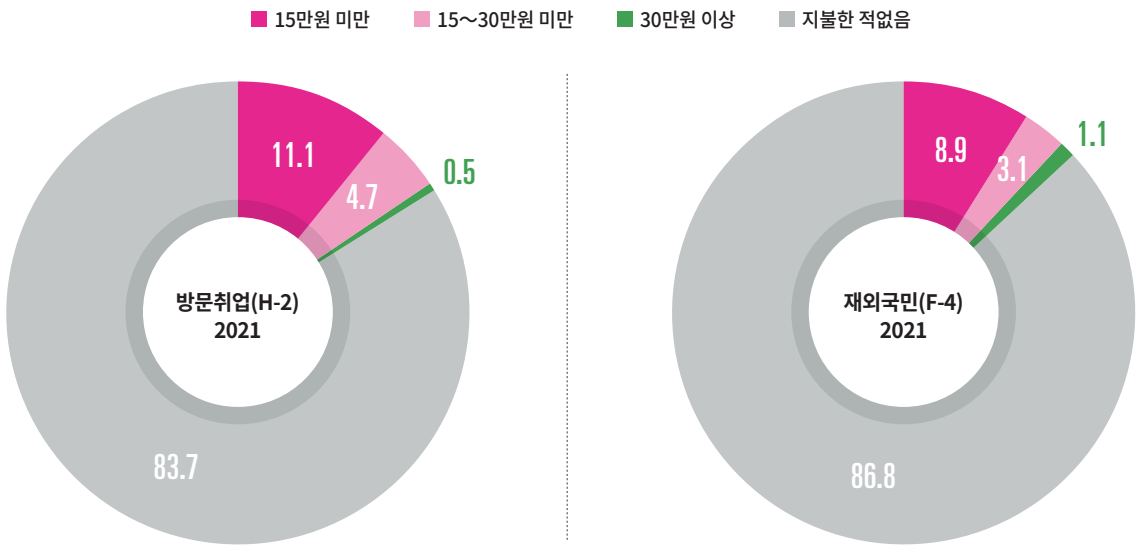
(관련 지표 10.7.1)

SDG 10번 목표에서는 이주 및 이동 과정에서 이주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목표에서는 이민 정책 등의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이민자의 구직 비용과 같은 개인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 비용은 취업 중개 수수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이동을 위한 교통비, 관련 보험료, 언어 교육비 등 다양한데, 이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직 비용이 이주 국가에서 버는 소득에 비해 크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143만 명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38.6만 명, 비전문취업(E-9) 26.9만 명, 유학생(D-2 등) 18.8만 명, 영주(F-5) 13.1만 명, 결혼이민(F-6) 12만 명, 방문취업(H-2) 8.7만 명 등이다. 이 중 취업자는 92만 3000명이며,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26.9만 명, 재외동포 25만 명, 영주 9.8만 명, 결혼이민 7만 명, 방문취업 6.3만 명 등의 순이다(통계청, 2023) 이주근로자 전체에 대한 취업비용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에 속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는 2021년까지 제한적으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를 대상으로 취업소개료 지불 여부와 수준을 조사하였다. 재외동포(F-4)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이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 국적 동포)을 의미한다. 또한 방문취업

체류자격별 취업 소개료 지불 규모, 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https://kosis.kr, 2023.07.11. 인출)

(H-2)이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가 정해진 기간 동안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국내에 입국 후 근무처를 구할 때 취업 소개료를 지불하는 등 취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조사에서 방문취업(H-2) 자격 조사 대상자 중 16.3%가 직장을 구할 때 취업 소개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3.7%의 방문취업자는 별도의 취업 소개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소개료를 지불한 방문취업자가 실제 지불한 소개료는 15만 원 미만이 11.1%로 가장 많고 15~30만 원 미만 4.7%, 30만 원 이상 0.5%이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취업 소개료를 지불한 경험은 3.2%p 증가하였다. 15만 원 미만을 지불한 방문취업자는 3.3%p 증가한 반면 30만 원 이상을 지불한 방문취업자는 1.3%p 감소하였다.

재외동포(F-4)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 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재외동포(F-4) 자격 조사 대상자 중 13.2%가 직장을 구할 때 취업 소개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지불한 소개료는 15만 원 미만 8.9%, 15~30만 원 미만 3.1%, 30만 원 이상 1.1%로 나타난다.

그러나,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비용 항목만으로 이주 근로자의 취업비용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통계청은 2023년 조사부터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을 대상으로 ILO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직비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됨에 따라 공표할 예정에 있다.

2022년 난민신청건은 1만 1539건, 이 중 인정자는 175명으로 나타나 (관련 지표 1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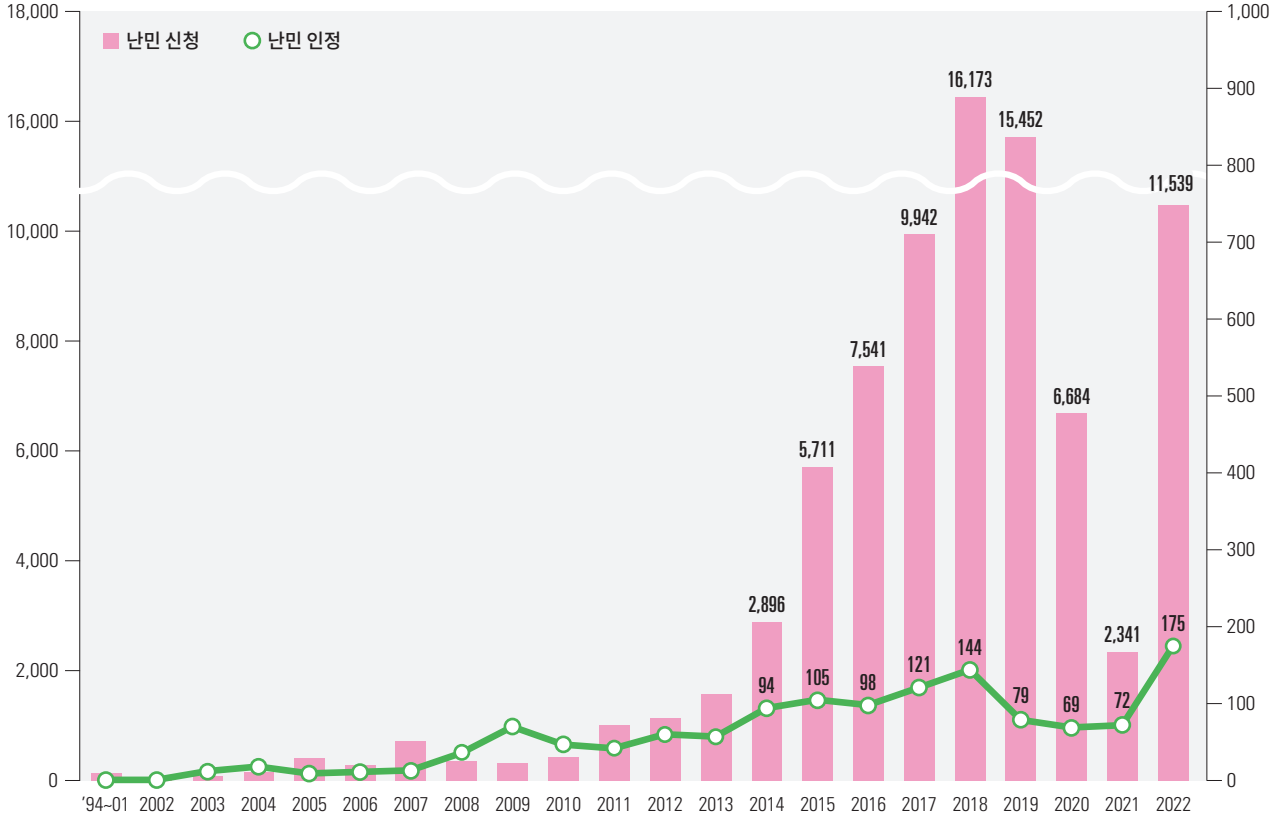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1993년), 난민법 제정(2012년) 등을 통해 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최초의 난민 인정 이후 난민 신청건수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고, 특히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난민 신청건수는 2018년 연간 1만 61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각각 6684건과 234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가 2022년에 다시 1만 1539건으로 늘어났다. 2018년은 예멘인 500여 명이 내전을 피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회

적 이슈가 된 해이기도 하다. 난민 인정자 또한 2018년 연간 144명까지 증가한 후 3년간 약 7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에 175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중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처벌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인정된다면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난민 심사가 완료된 건수 중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비율을 난민 보호율이라 하는데, 제도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만 6506건의 심사 완료 건수 중 1338건의 난민 인정과 2485건의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되어 한국의 누적 난민 보호율은 8.2%로 집계된다. 2022년 한 해의 난민 보호율은 4.5%이다.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 중이나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한편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법 개정과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이다.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1994~2022 (단위: 건)



출처: 지표누리, 난민통계현황, (https://www.index.go.kr, 2023.12.28 인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각 연도)

난민 보호율, 2022 (단위: 건, %)

	심사 완료	난민 보호				불인정
		소계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보호율	
전체 누적 (1994-2022)	46,506	3,823	1,338	2,485	8.2	42,683
2022년	5,363	242	175	67	4.5	5,121

출처: 법무부,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 : 난민 보호율 = (난민 인정 건수 + 인도적 체류 허가 건수) ÷ 심사 완료 건수 × 100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도시화의 속도가 늦추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규모도 더욱 확장되고 있다. UN 세계 도시화 전망 (2018) 보고서에서는 2030년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가 43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도시화는 도시 삶의 양극화, 홍수·가뭄·지진·태풍 등의 자연재해, 열섬, 도시 침수, 감염병, 난민 유입, 도시 시스템의 불안정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수반한다. 이처럼 인구가 밀집된 정주환경으로 인해 사회, 문화, 환경, 경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SDG 11번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는 데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특성상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은 범분야적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의 도시환경에는 희망적인 조짐과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공존한다.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 한편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수도권에서 18.3%(2022년 기준)에 달한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공공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소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_{2.5}$)에 의한 건강 위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나 연평균 오염도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편 주택가와 그 인접 도로 등에서 많은 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열린 장소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생활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해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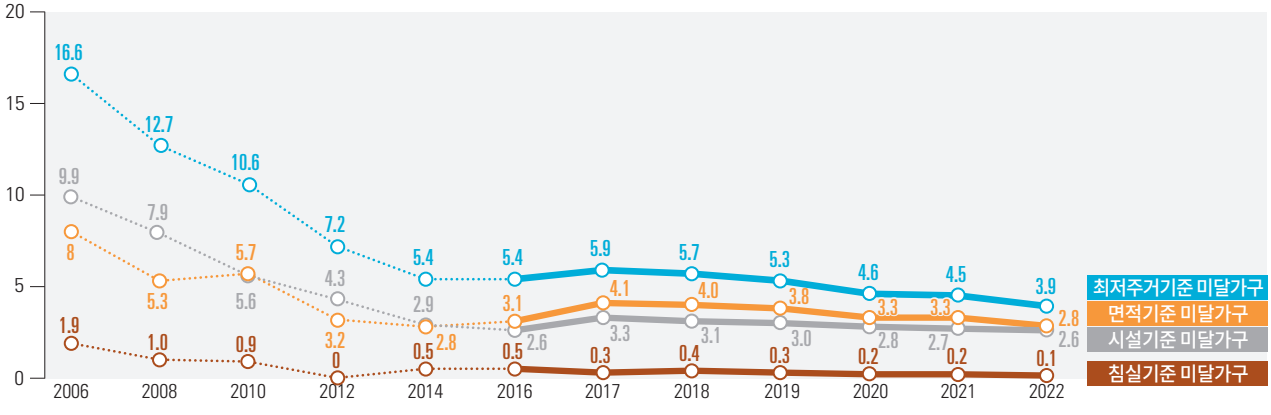
도시 삶의 양극화 완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대기환경 개선, 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 도시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 (관련 지표 11.1.1)

주택법에 따라 운영되는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과 침실기준 그리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유무에 관한 시설기준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6년 16.6%에서 2022년 3.9%로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최근까지도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주거환경 만족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정도(1~4점 평균)을 나타내며, 2020년부터 3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환경 만족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 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대도시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역시 지역은 2017년 이래 수도권과 도지역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6~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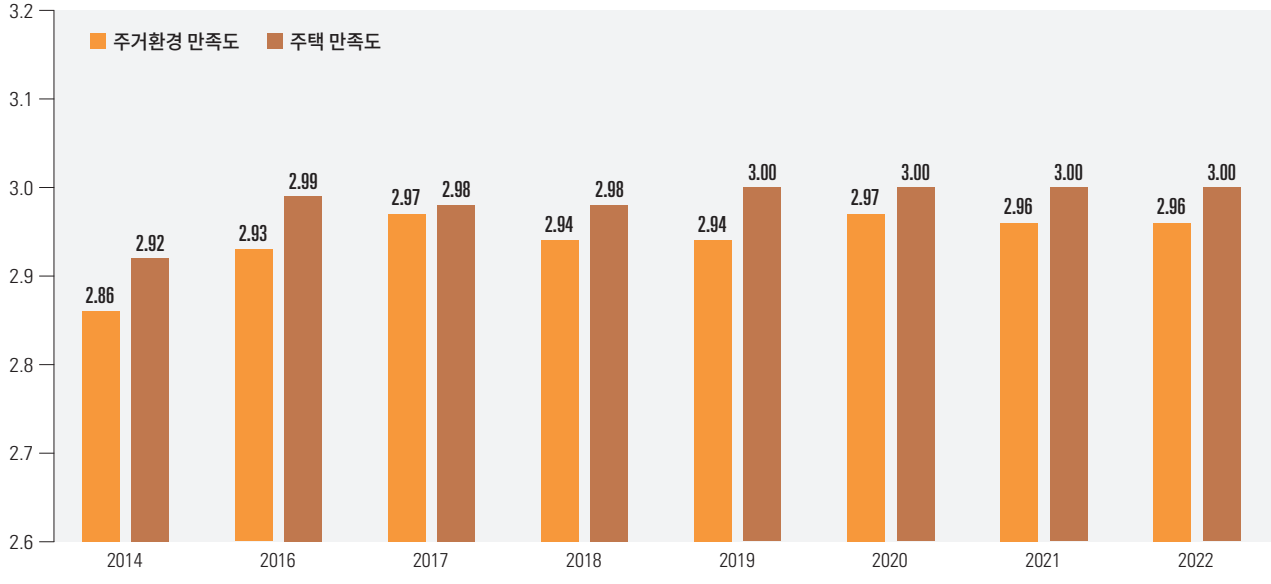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지표누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91, 2023.12.30 인출)
주 : 최저주거기준이란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공고(제2011-490호, '11.5.27)에 따른 기준임. 2006년부터 격년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꾸준히 만족도가 높으나, 점차적으로 지역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다. 소득 상위계층뿐 아니라 하위계층에서도 지난 십여 년간 나타난 주택 만족도의 상승세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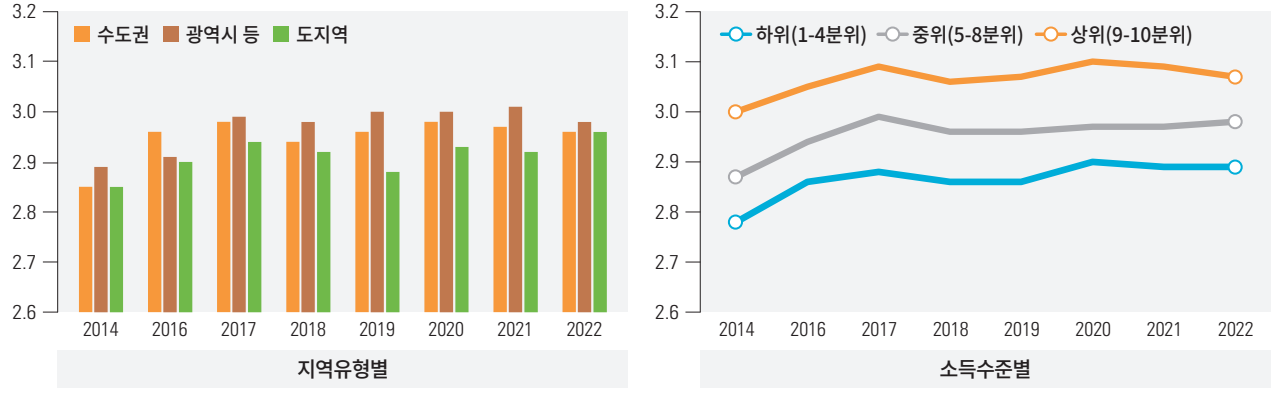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만족하는 정도, 즉 주택 만족도(1~4점 평균)는 아파트 거주 가구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택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주택 만족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의 비율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2022년 기준 주택임대료 비율은 16.0%로 조사된다. 이는 최고 수준에 달했던 2014년에 비해 4%p가량 낮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8.3%로 가장 높다.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에서는 각각 15.0%와 13.0%에 그친다. 최근 10년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이 지표는 무주택자의 임대료 부담 수준을 나타낼 뿐 전체 국민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주택 소유자의 대출 이자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 및 주택 만족도, 2014~2022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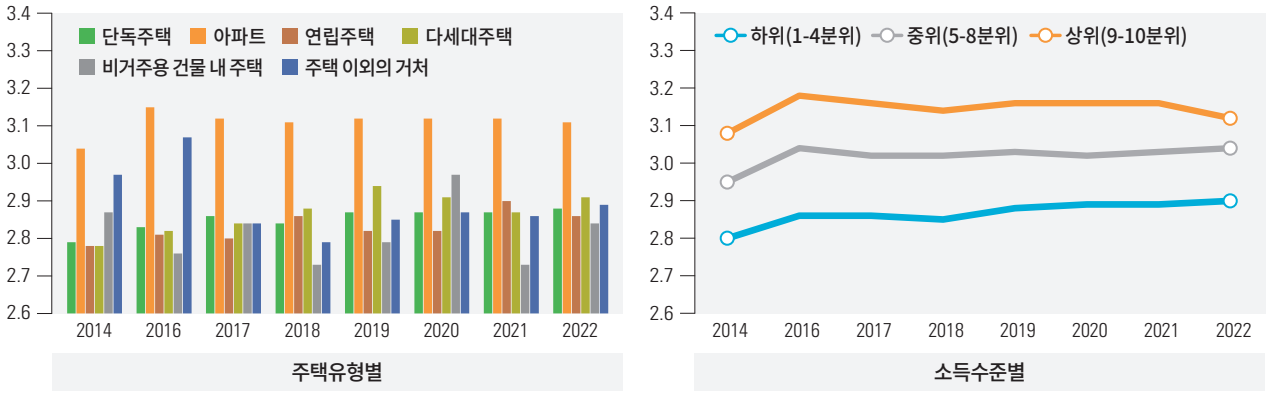


지역 및 소득수준별 주거환경 만족도, 2014~2022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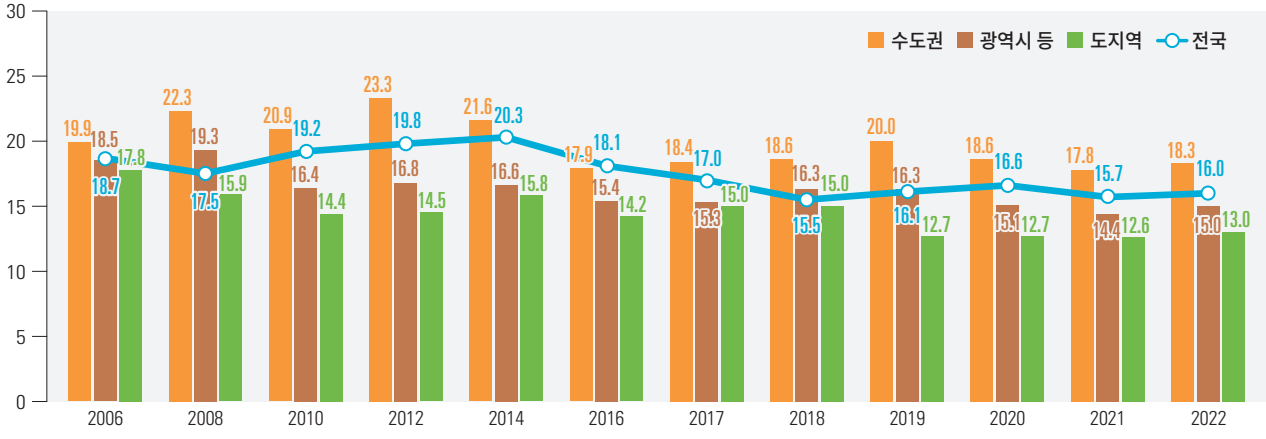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지표누리, 주거환경만족도, https://www.index.go.kr, 2023.12.30 인출)
주1 :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을 4점으로 한 4점 척도 평균 점수임
주2 : 2006년부터 격년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주3 : 세종은 2018년부터 광역시에 포함됨

주택유형 및 소득수준별 주택 만족도, 2014~2022 (단위: 점)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주택 만족도, https://www.index.go.kr, 2023.12.30 인출)
주1 :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을 4점으로 한 4점 척도 평균 점수임
주2 : 2012년부터 격년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지역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22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표누리,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https://www.index.go.kr, 2023.12.30. 인출)
주1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 월임대료 ÷ 중위 월가구소득) × 100
주2 : 2006년부터 격년 조사, 2017년 이후 매년 조사함
주3 : 세종은 2018년부터 광역시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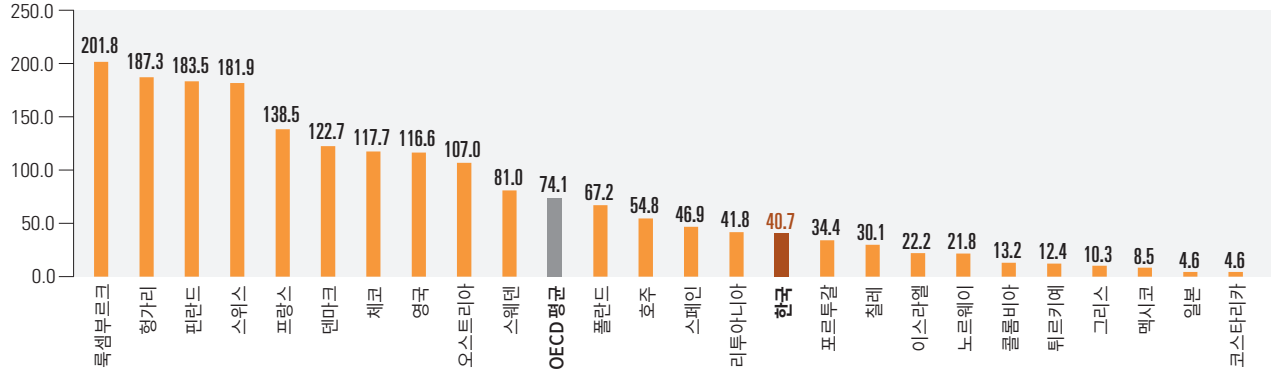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공공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관련 지표 11.4.1)

SDG 세부목표 11.4에서는 세계의 모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각국의 공공 및 민간 지출액을 지표(SDG 11.4.1)로 삼고 있다. 민간지출은 집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별 공공지출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한 공공지출액은 2020년 기준 1인당 40.7달러로 집계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020년에 공공지출액이 집계된 25개국을 보면 룩셈부르크가 201.8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4.6달러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5개국의 평균 지출액은 74.1달러이다. 한국의 지출액은 2019년 65.9달러에서 2020년 40.7달러로 떨어져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19~2020년 사이 지출 감소 폭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공공지출액 40.7달러는 중앙정부 지출액 27.0달러와 광역지자체 지출액 13.7달러로 이루어지는데, 2019~2020년 사이 중앙정부 지출은 거의 그대로였던 반면 지자체 지출은 39.7달러에서 13.7달러로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1인당 지출액은 국가의 유산 보호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이다. 유산 보호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지출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할 것이다.

OECD 국가별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한 1인당 공공지출액, 2020 (단위: 달러, PPP, 2017년 불변가격)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12.19 인출)
주1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합계임
주2 : OECD 38개 회원국 중 2020년 자료가 집계된 25개국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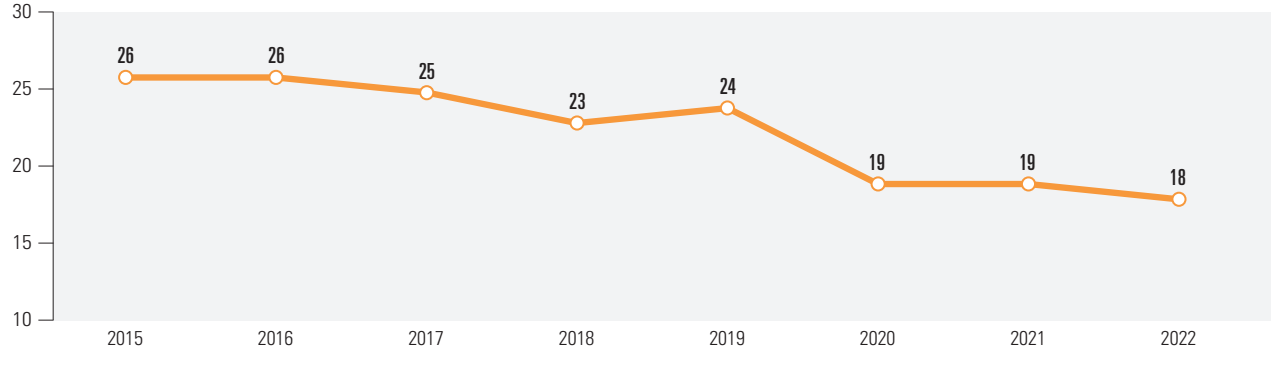
초미세먼지(PM2.5) 오염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아직 기준 미달 (관련 지표 11.6.2)

미세먼지, 특히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는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고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환경유해인자이다. 한국에서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전국 평균 오염도의 공식 통계를 생산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아졌고,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2017년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와 같은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평균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2015년 26㎍/㎥였던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는 이후 수년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더욱 줄어들어 2022년에는 18㎍/㎥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직 국내 대기환경기준(15㎍/㎥)에 미달하며, WHO 권고기준(AQG level)인 5㎍/㎥에는 더욱 못 미친다. 한편 OECD의 추정치를 활용하면 OECD 회원국 전체와 비교할 수 있다. 이 추정치는 위성 관측, 화학수송 모형, 지상 측정치와 인구수에 따른 가중치를 종합하여 산정된다. OECD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초미세먼지(PM2.5) 노출(인구수 가중)은 25.9㎍/㎥로 OECD 평균치인 11.8㎍/㎥의 두 배가 넘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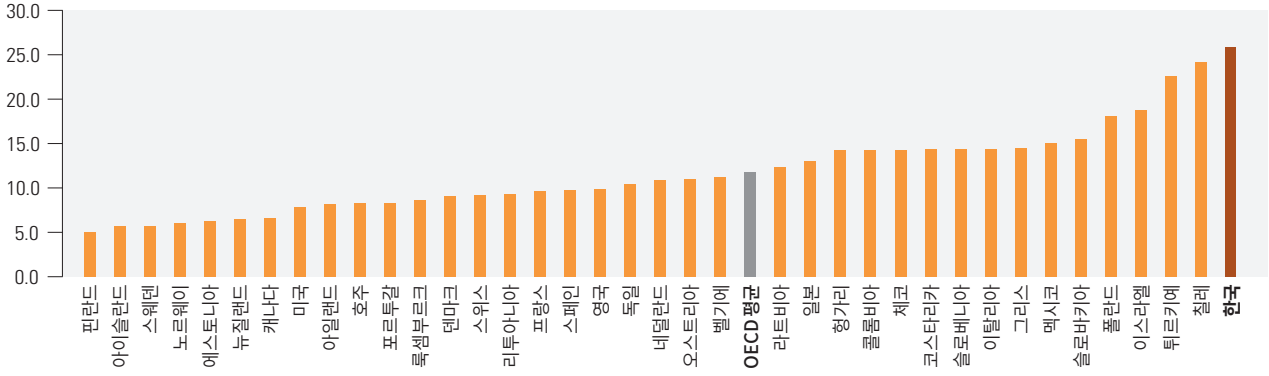
한국 정부에서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을 통해,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오염도를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장, 이동오염원 등 주요 배출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한 국민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동아시아 국제 협력을 통한 장거리 이동오염 대응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오염도, 2015~2022 (단위: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2022 대기환경연보, 2023
주 : 17개 시도 연평균 미세먼지(PM2.5)농도의 인구 가중 평균임

OECD 국가별 초미세먼지(PM2.5) 노출, 2020 (단위: μg/m³, 인구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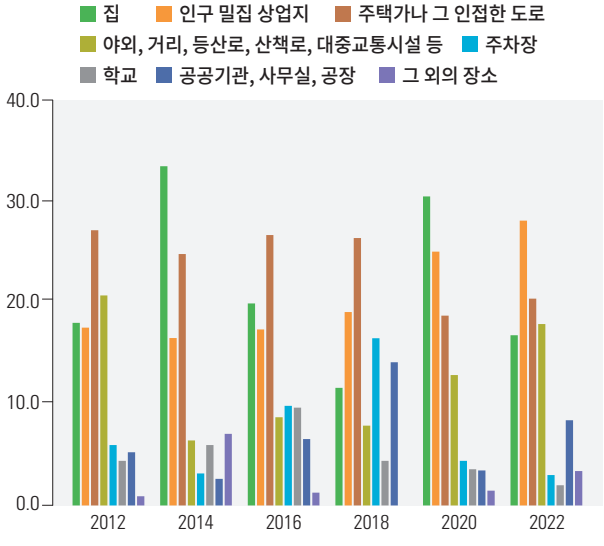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xposure to PM2.5 in countries and region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2023.10.0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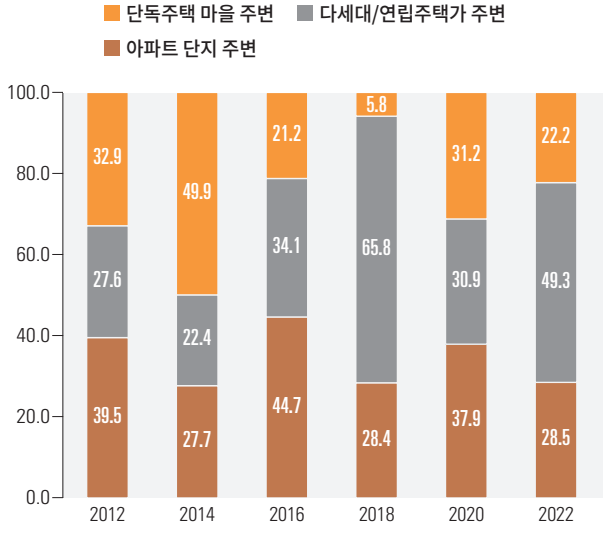
주거지와 그 인근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예방 노력 필요 (관련 지표 11.7.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는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을 포함하는 폭력범죄 피해율을 2년마다 집계하고 있다. 한국의 폭력범죄 피해율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 0.48%로 2020년(0.37%)에 비해 늘어났다. 폭력범죄 피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집(30.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6년과 2018년에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팬데믹 이후인 2022년에는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를 주택유형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49.3%), 아파트 단지 주변(28.5%), 단독주택 마을 주변(22.2%)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8년에는 다세대/연립주택 주변(65.8%)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상업지, 주택가 등 열린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폭력범죄 피해 발생장소별 비율, 2012~2022 (단위: %)



주거지역 폭력범죄 피해 발생장소별 비율, 2012~2022 (단위: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victimEasyStatPage.do, 2023.12.30. 인출)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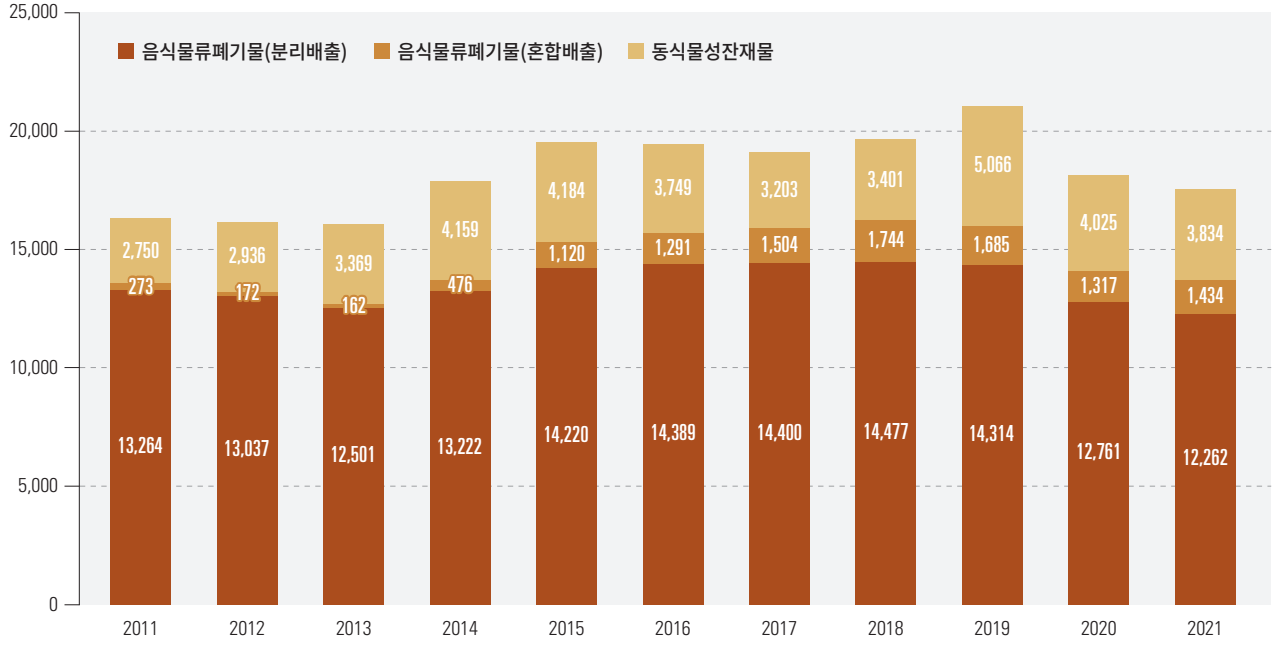
SDG 12번 목표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경제구조를 순환적인 체계로 바꾸는 노력을 강조한다. 세계은행에서는 2050년이면 전 세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34억 톤에 달해 2016년 대비 약 6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같은 해 한국의 1일 폐기물 발생량도 2018년 대비 약 66% 증가한 71만 톤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량폐기물을 2분의 1로 줄이고자 하는 목표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이후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식품 소비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일어나는 손실까지 관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해(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는 한편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도시와 농촌의 재활용 여건 차이에 따라 지역 간에 재활용률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은 2년 전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해(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 주요 지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과 함께 기업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자원순환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이 다소 줄어든 한편 식품 생산 단계까지 관리 확대 필요 (관련 지표 12.3.1)

식품 손실과 폐기(Food Losses and Waste, FLW)는 수확부터 소비까지 식품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폐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2011년 보고서에서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 중 생산·수확·저장·가공 단계에서 버려지는 것을 '식품 손실', 유통·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것을 '식품 폐기'로 지칭한다. 저장·가공·수송을 위한 인프라가 불충분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식품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판매·소비 단계에서 식품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식품폐기물 하루 발생량, 2011~2021 (단위: 톤/일)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https://www.recycling-info.or.kr, 2023.09.10. 인출)
주1 : 분리배출 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혼합배출 된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을 나타냄
주2 : 2020년부터 폐기물 발생량이 톤/년의 단위로 공개되어 2020년과 2021년 자료는 톤/년 단위의 자료를 365(2020년은 366)로 나누어 톤/일 단위로 환산함

한국에서는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관련 통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식품 손실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국내 폐기물 통계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은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지칭하는데, 이 수치로 대략적인 식품 손실량을 가늠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동식물성 잔재물 발생량은 연간 총 139만 9234톤(3834톤/일)에 이른다. 이 중 129만 1064톤(92.3%)이 재활용, 4만 9810톤(3.6%)이 소각, 4876톤(0.3%)이 매립되었다. 한편 폐기물 통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은 분리배출 된 것과 종량제 방식으로 혼합배출 된 것으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 연간 분리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은 447만 5558톤(1만2262톤/일), 혼합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은 52만 3536톤(1434톤/일)으로 집계된다. 식품의 손실과 폐기에 각각 해당하는 동식물성 잔재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합쳐 식품 총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이 둘의 총발생량은 2010년대를 거치며 2019년까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UN SDG DB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은 109.8kg으로 OECD 평균인 113.4kg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슬로베니아(61.0kg), 오스트리아(76.0kg), 벨기에(79.3kg)의 발생량은 한국의 56~72% 수준에 불과한 반면 그리스(174.7kg)와 이스라엘(178.4kg)의 발생량은 한국의 160% 안팎 수준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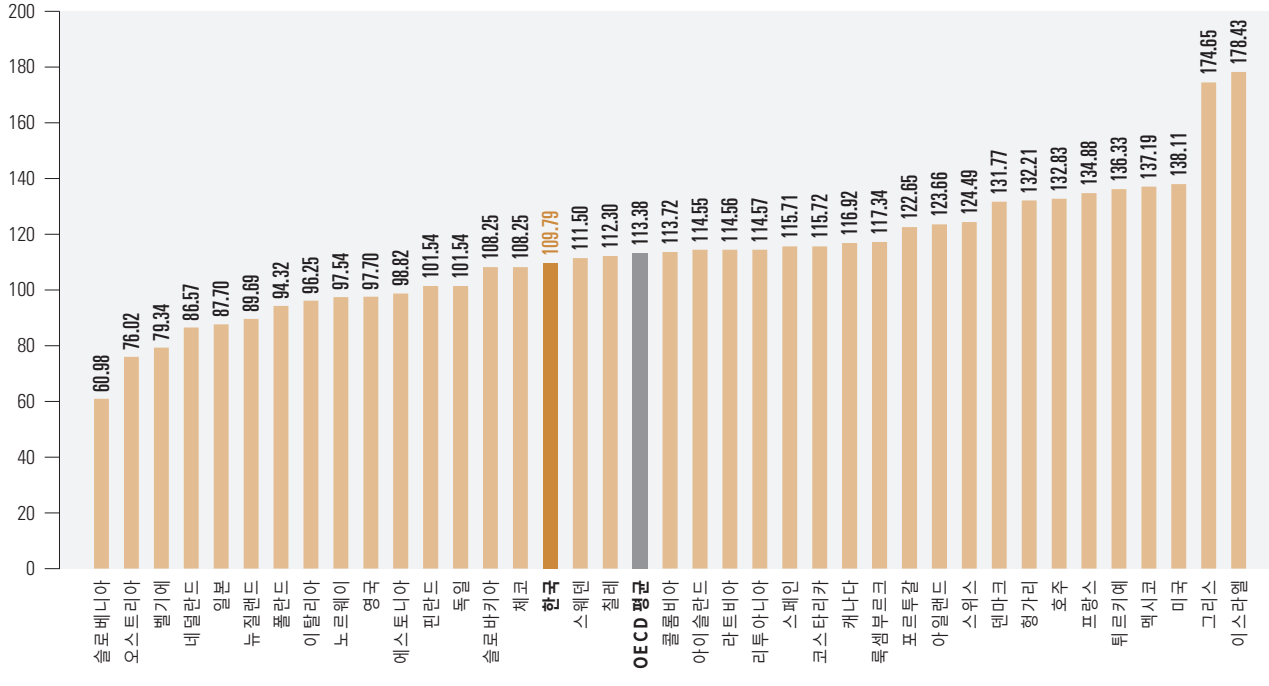
전통적인 폐기물 정책에서는 식품 소비 단계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제는 식품 공급망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폐기로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식품 생산 단계로 정책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맥주박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가공식품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도록 한 것이다. 식품 손실과 폐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량을 측정하고 이후의 흐름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공급망에 걸쳐 있는 여러 관계부처와 산업계,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업이 필요하다.

유해폐기물 발생 증가와 함께 재활용률도 증가

(◎ 관련 지표 12.4.2)

유해폐기물은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감염성, 생태독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국내에서는 이를 지정폐기물이

OECD 국가별 1인당 식품폐기물 발생량, 2019 (단위: kg/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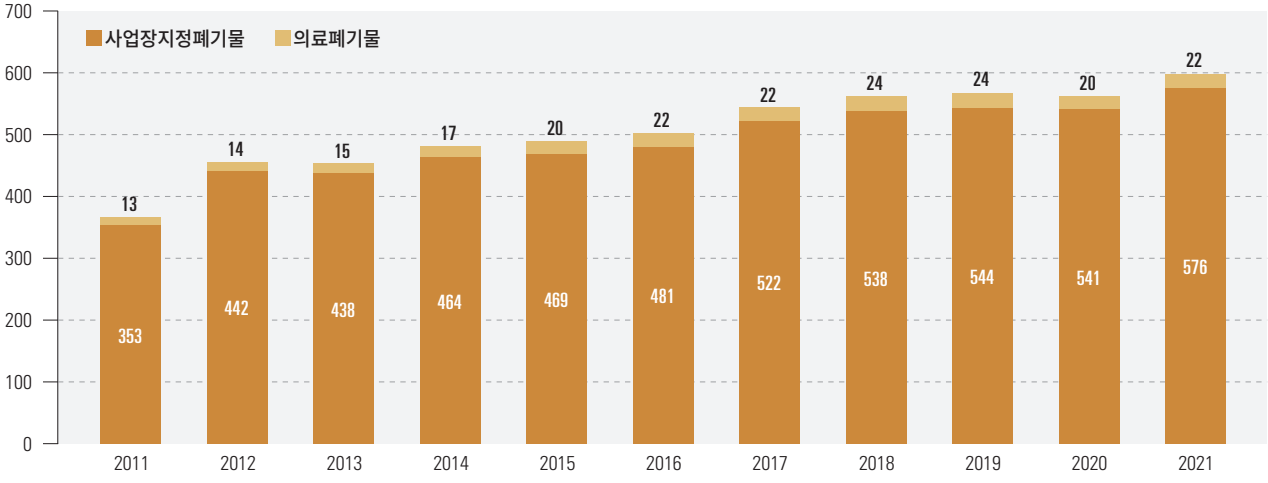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9.10. 인출)

라고 지칭한다. 이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한국의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처음으로 500만 톤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598만 톤에 달하였다. 전체 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3.0%로 전년 대비 0.1%p 늘어났다. 같은 해 지정폐기물 중에서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이 96.3%, 의료폐기물이 3.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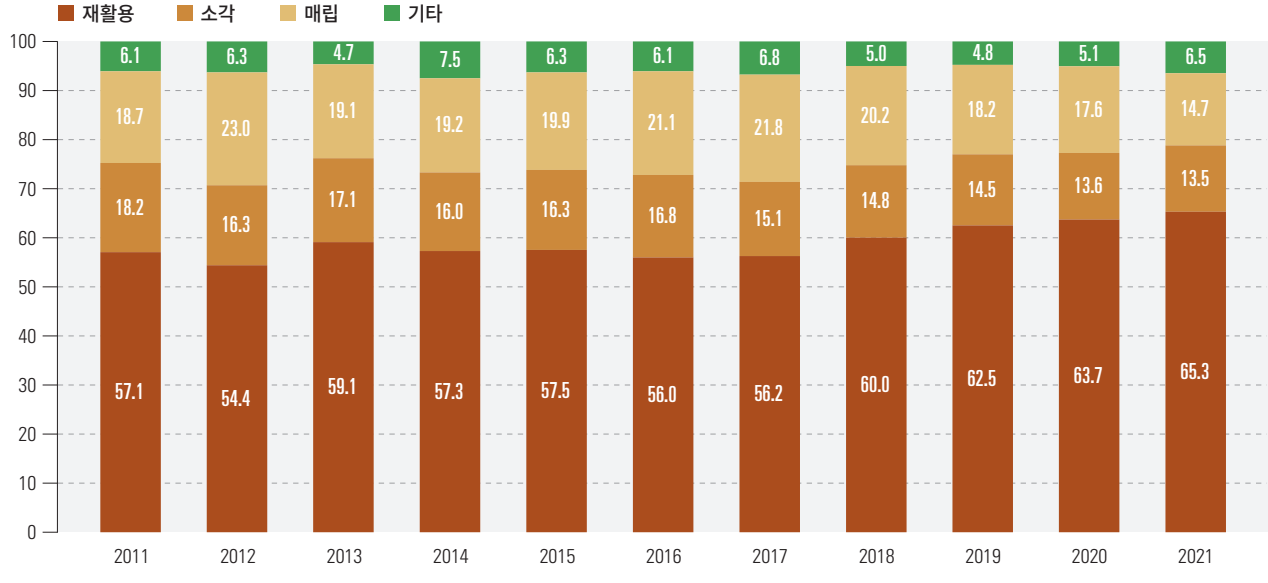
지정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재활용된다. 2021년 기준 재활용 비율은 65.3%에 이르며 매립과 소각 비율은 각각 14.7%와 13.5%이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재활용률은 57.1%에서 8.2%p 늘어났으며, 특히 2017년 이래 매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매립률은 18.7%에서 4.0%p 줄었고 소각률도 18.2%에서 4.7%p 감소하였다.

지정폐기물 발생량, 2011~2021 (단위: 만톤)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rrs/stat, 2023.09.10. 인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율, 2011~2021 (단위: %)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https://www.recycling-info.or.kr/rrs/stat/, 2023.09.10. 인출)
주 : '18년까지는 기타 = (기타 처리량 + 최종보관량) - 전년도 이월량을 나타냈으나, '19년부터 '기타'는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높은 편이며, 지역별 재활용 수준에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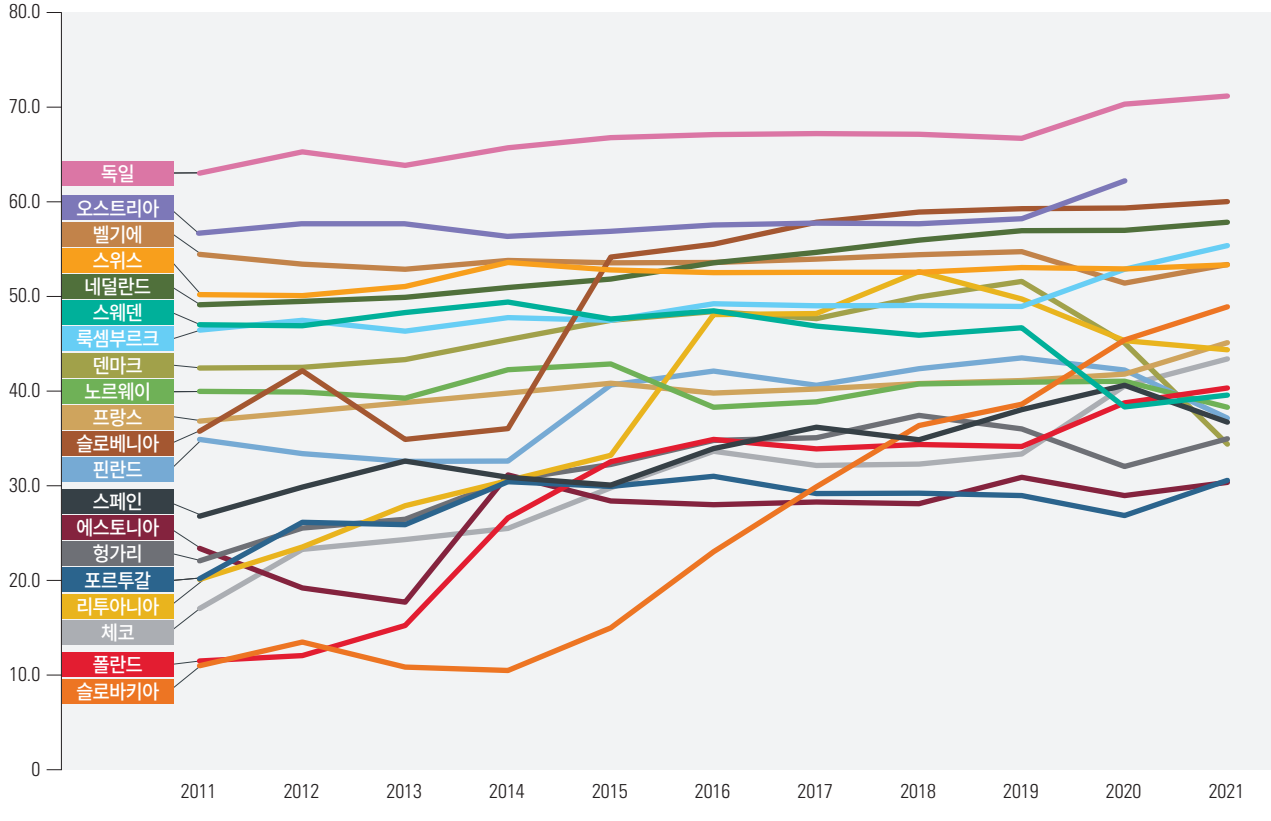
(➲ 관련 지표 12.5.1)

재활용률을 산정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재활용률을 비교하기보다는 각국의 재활용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OECD 국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독일은 2011년 63.0%에서 2021년 71.1%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재활용률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도 2011~2021년 동안 꾸준히 50% 이상의 재활용률을 기록하였다.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의 경우 2011년 당시 10%대였던 재활용률을 10년 만에 40%대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한편 스웨덴과 덴마크는 2019년까지 40%대 이상의 재활용률을 보이다가 2020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는 EU에서 2020년부터 새로운 재활용률 계산법을 도입한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1년 이후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59.5%로 높아진 뒤 감소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54.7%로 나타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독일(71.1%), 오스트리아(2020년 기준 62.3%), 슬로베니아(60.0%) 등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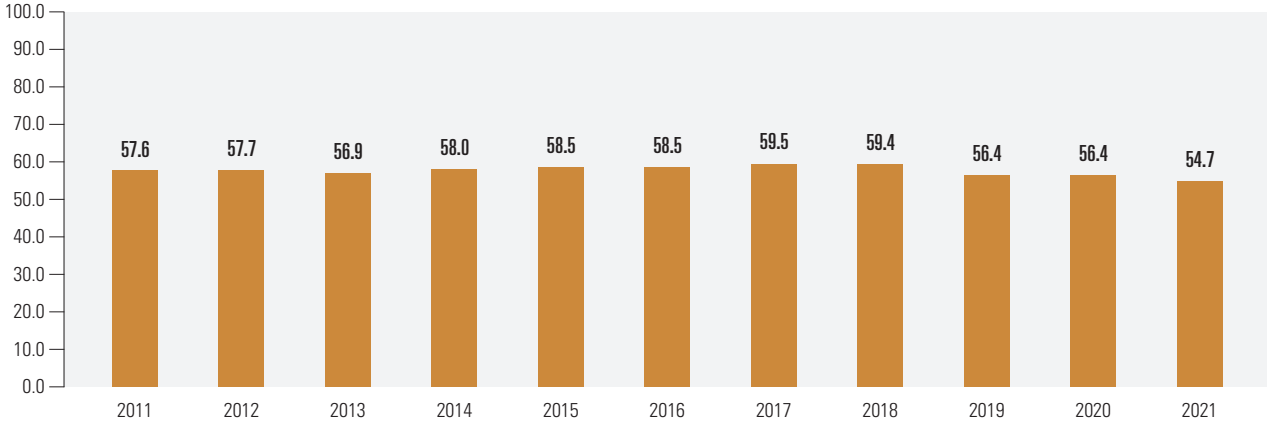
국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30%대에서 60%대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69.8%), 대전(68.3%), 제주(65.1%) 지역이 60% 후반대로 가장 높고 인천(61.1%), 서울(61.1%), 대구(60.8%), 광주(60.6%) 지역도 60% 이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충남(37.6%), 경북(41.7%), 충북(41.8%) 지역의 재활용률은 40% 안팎에 그친다. 이들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과 어촌, 산촌이 많아 수거 시스템이나 재활용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활용률이 높은 7개 지역 중 제주를 제외한 6개 지역이 특·광역시로 분류되는 대도시 지역이라는 점도 농촌지역보다 도시에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재활용률이 높은 현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주요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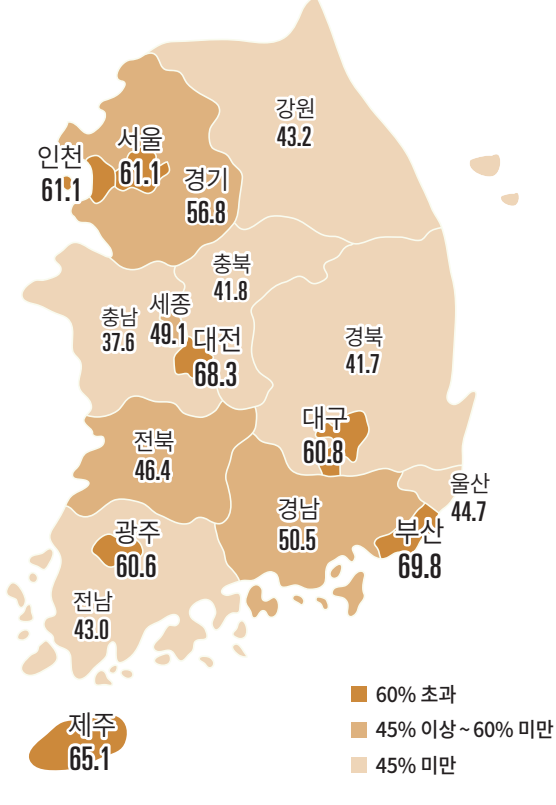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9.10. 인출)
주 : OECD 38개 회원국 중 2011~2021년 시계열이 모두 확보된 20개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2021년 데이터 없음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1~2021 (단위: %)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https://www.recycling-info.or.kr, 2023.09.10. 인출)

시도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21 (단위: %)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https://www.recycling-info.or.kr, 2023.09.10. 인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크게 늘고 있어

(◎ 관련 지표 12.6.1)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기업과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SDG 세부목표 12.6에서는 기업,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정기적인 보고 체계에 포함하도록 장려한다. SDG 지표 12.6.1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는 12번 목표 중 유일하게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 행동을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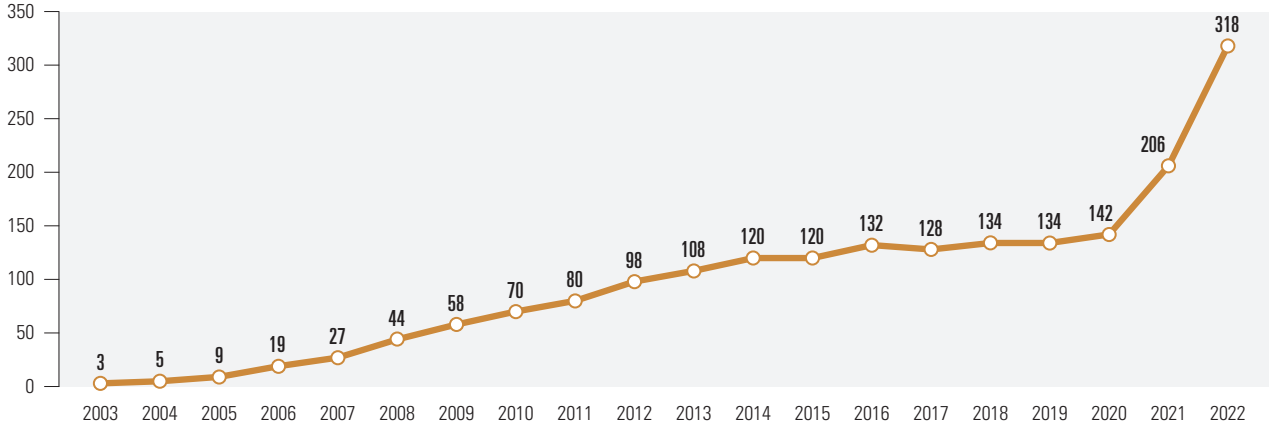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국제 기준을 개발·보급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의 3개 영역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2000년에 1세대 GRI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이후 4세대를 거쳐 2016년에는 GRI 기준(standard)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GRI에서는 보편적 기준, 부문별 기준, 주제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GRI의 보고 체계는 국내외의 많은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표준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 기업의 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 2021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한 자릿수에 그쳤으나 2009년에 50개가 넘는 기업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00개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06개 기업과 318개 기업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수출 중심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GRI의 보고 체계

출처: GRI (2023) 「Consolo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003~2022 (단위: 개)



출처: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추진단 (https://ksaesg.or.kr/p_base.php?action=h_report_01, 2023.12.21. 인출)

또는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이 필수로 인식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기업의 ESG 정보를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을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과 이행 정도는 중-상으로 평가

(➲ 관련 지표 12.7.1)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는 국가별 공공조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A)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계획/규제 유무 (B) 공공조달 규제 프레임워크 (C) 공공조달 실무자를 위한 지원 체계 (D) 구매 기준/요건 (E) 이행 점검 체계의 유무 (F)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구매 비율(성과) 등 6개 부문에 걸쳐 평가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4개 등급으로 제시된다.

2022년에 실시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이행 평가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상 등급을 받았다.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는 중-상 등급, 13개 국가는 중-하 등급, 체코와 스페인 2개국은 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7개 국가는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2020년 중-하 등급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중-상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OECD 국가별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이행등급, 2022

이행등급	국가 수	국가명
상 등급	1	미국
중-상 등급	15	오스트리아, 벨기에, 코스타리카,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중-하 등급	13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하 등급	2	체코, 스페인
자료불충분 또는 관련 정책이나 법적 수단 없음	7	룩셈부르크,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헝가리, 호주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9.10. 인출)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6차 평가 주기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난화 수준은 약 1.09°C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 주요 기후변화 지표가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그 결과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인간을 비롯한 육지와 담수,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 수준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아직 긍정적인 미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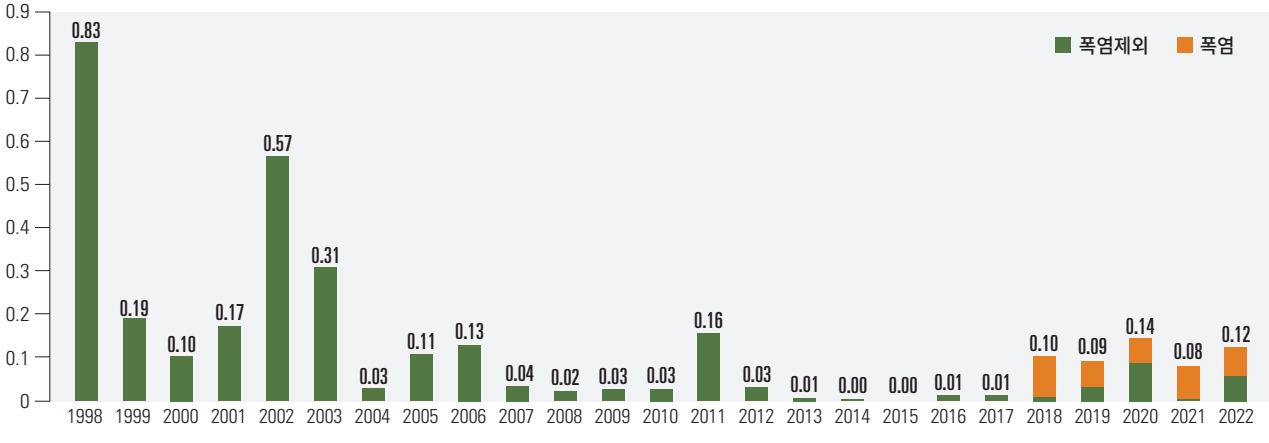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이행 중에 있으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하였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보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023년 6월에 마련하여 이행 중에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2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자연재난의 절반을 차지 (관련 지표 13.1.1)

SDG 세부목표 13.1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자연재난으로부터 적응 및 회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실종·사망자 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크지만 지난 20여 년간 경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10만 명당 실종·사망자 수는 1998년 0.83명, 2002년 0.57명 등 2000년을 전후하여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로는 대폭 줄어들었고 2012년 이후 0.15명을 넘기지 않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0.12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인명피해 수치가 늘어난 것이다. 폭염에 의한 사망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10만 명당 0.09명을 넘기지 않고 있다. 폭염에 대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폭염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는 2018년 48명으로 집계된 후 2019년 30명, 2020년 2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 39명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34명으로 나타난다. 2022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재해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이다. 실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2018년 8월 서울, 홍천, 의성에서 각각 39.6°C, 41.0°C, 40.4°C의 최고기온이 관측되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강도와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적응 능력을 향상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 · 사망자 수, 1998~2022 (단위: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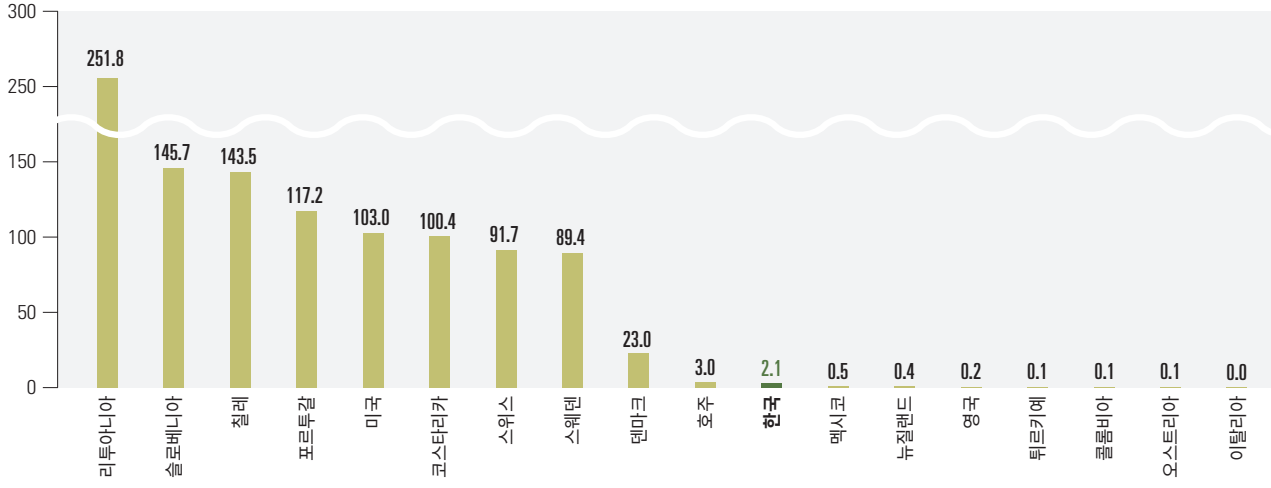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연재난상황통계(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tot/toteaiList.jsp?emgPage=Y&menuSeq=111, 2024.01.10. 인출)
주1 : 연도별 자연재해 사망 및 실종수를 추계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주2 :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추가됨

자연재난 유형별 실종 · 사망자 수, 2013~2022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호우	4	2	-	1	7	2	-	44	3	19	8.2
태풍	-	-	-	6	-	2	18	2	-	11	3.9
태풍·호우	-	-	-	-	-	1	-	-	-	-	0.1
대설	-	-	-	-	-	-	-	-	-	-	0
폭염	미산정					48	30	29	39	34	36.0
합계	4	2	0	7	7	53	48	75	42	64	30.2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연재난상황통계(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tot/toteaiList.jsp?emgPage=Y&menuSeq=111, 2024.1.10. 인출)
주 :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48명)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제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2019 ~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근거로 하여 작성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2021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database, 2024.01.11. 인출)
주1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함함
주2 : 사망, 실종 외에 부상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포함됨
주3 : 미국,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2020년 자료임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실종, 사망 및 직접피해)는 2021년(일부 국가 2020년) 기준 리투아니아(251.84명), 슬로베니아(154.70명), 칠레(143.52명), 포르투갈(117.16명), 미국(102.98명), 코스타리카(100.41명), 스위스(91.72명), 스웨덴(89.35명), 덴마크(22.95명), 호주(3.04명) 등의 순으로 많다. 한국은 2020년 기준 2.09명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자료가 가용한 18개국 중 11위로 집계된다. 그 외 국가들은 1.0명 이하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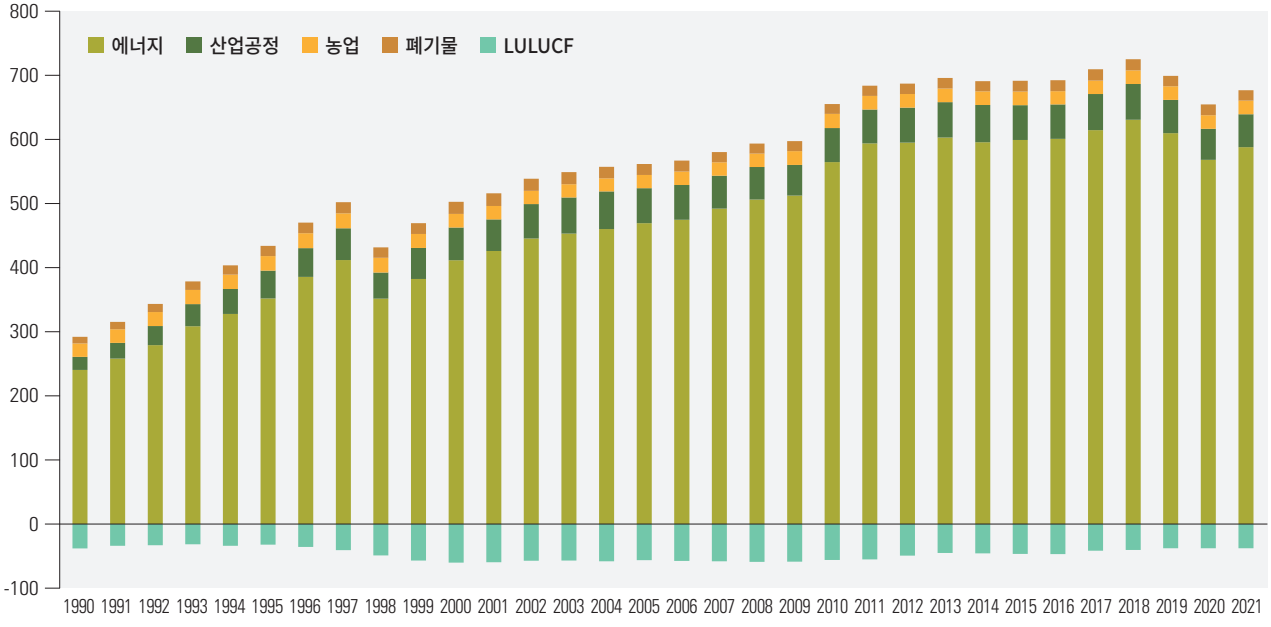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다시 증가

(관련 지표 13.2.2)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7665만 톤 CO_2eq.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2018년 배출 정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의 7억 2503만 톤 CO_2eq.보다는 6.7% 감소하였지만 1990년의 2억 9211만 톤CO_2eq.과 비교하면 131.6% 증가한 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대비 산업생산지수가 7.6% 증가하고 고속도로 교통량이 7.0% 늘어나는 등 산업계의 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86.9%(5억 8773만 톤CO_2eq.)를 차지하며, 그 외 산업공정 분야 7.6%(5140만 톤CO_2eq.), 농업 분야 3.2%(2141만 톤CO_2eq.), 폐기물 분야 2.4%(1610만 톤CO_2eq.)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전년 대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분야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21 (단위: 100만 톤CO_2eq.)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https://www.gir.go.kr/home/index.do?menuId=36, 2024.01.10. 인출)

에서 각각 3.5%, 5.9%, 1.1% 증가하였고, 폐기물 분야에서는 3.5% 감소를 기록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조업·발전·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5% 증가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726만 톤 CO_2eq.과 철강 381만 톤CO_2eq. 등 전체 배출량이 1264만 톤(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발전 부문에서는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237만 톤CO_2eq.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량이 4.5% 증가하였으나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5%와 2%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274만 톤CO_2eq.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업 · 공공 · 가정 부문에서는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37만 톤CO_2eq.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5140만 톤CO_2eq.으로 추정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2141만 톤 CO_2eq.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폐기물 분야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1610만 톤CO_2eq.을 배출하였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의 2021년 총흡수량은 4110만 톤이다. 이 중 산림지 부문의 흡수량은 403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만 톤(0.3%)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산림지 면적 감소 둔화, 산불 피해 면적 감소 등에 따라 흡수량이 증가하였지만 임목축적 변화량의 감소로 전체 흡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 비중이 높다. 정부에서는 산림 흡수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조림 면적 확대, 숲가꾸기 면적 확대, 생활권 도시숲 조성,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바다숲 조성, 갯벌 식생 조성, 해양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한 블루카본 확대도 꾀하고 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1인당 13.1톤CO_2eq.을 배출하였다. 이는 전년도 12.6톤 CO_2eq.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인구는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총배출량은 3.4%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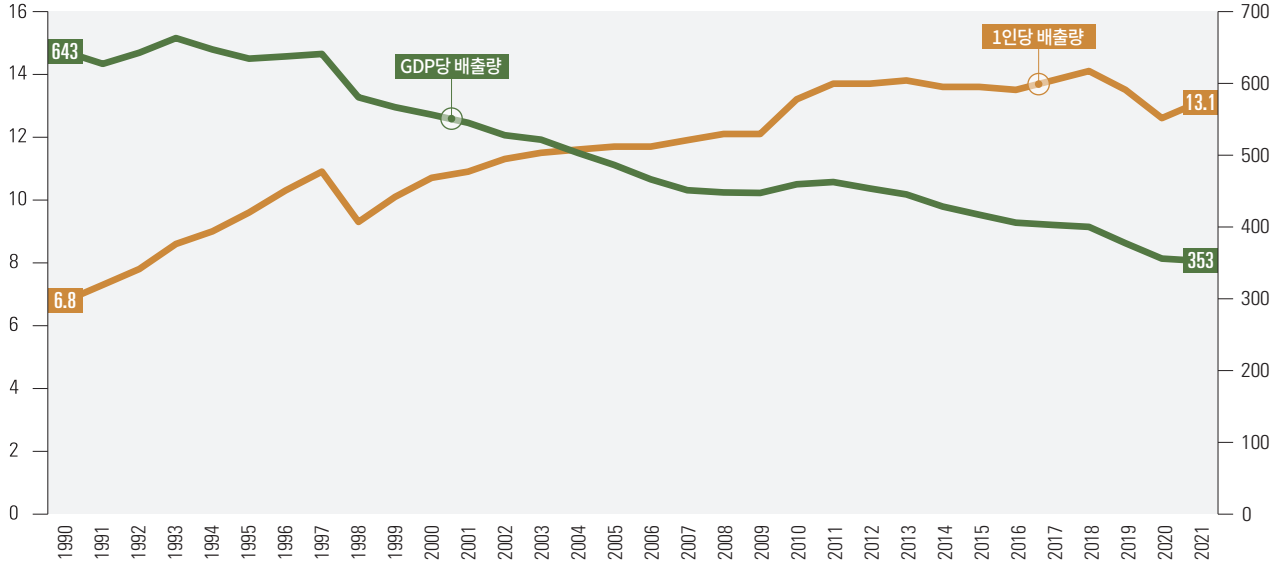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배출량과 마찬가지로 2018년 정점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총배출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0억 원당 352.7톤 CO_2eq.으로 집계되면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감소세를 한 차례 더 이어 갔다. 2021년 국내총생산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보다 4.3% 증가하였지만 배출량은 3.4% 증가하는 데 그쳐 원단위가 개선되었다.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60억 2597만 톤CO_2eq.), 일본(11억 4493만 톤CO_2eq.), 독일(7억 3092만 톤CO_2eq.), 캐나다(6억 5879만 톤CO_2eq.)에 이어 한국(6억 5622만 톤 CO_2eq.)이 다섯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나타난다. 2019년과 비교하면 6위에서 5위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4위 배출국이었던 멕시코의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및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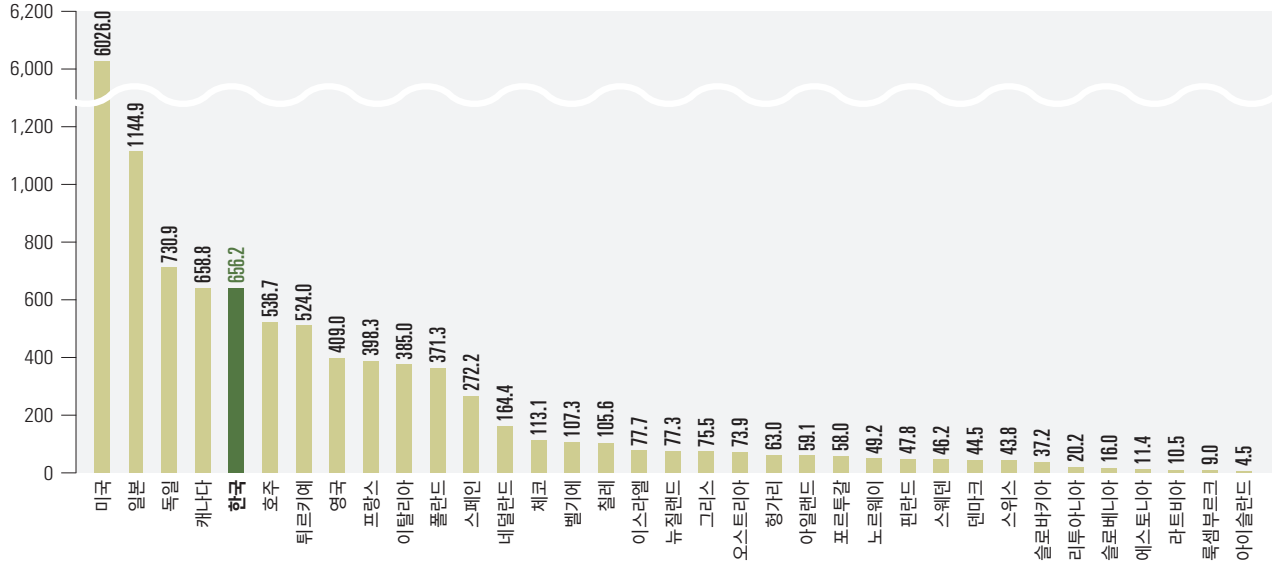
(단위: 톤CO_2eq./인, 톤CO_2eq./10억 원)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https://www.gir.go.kr/home/index.do?menuId=36, 2024.01.10. 인출)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0

(단위: 100만 톤CO_2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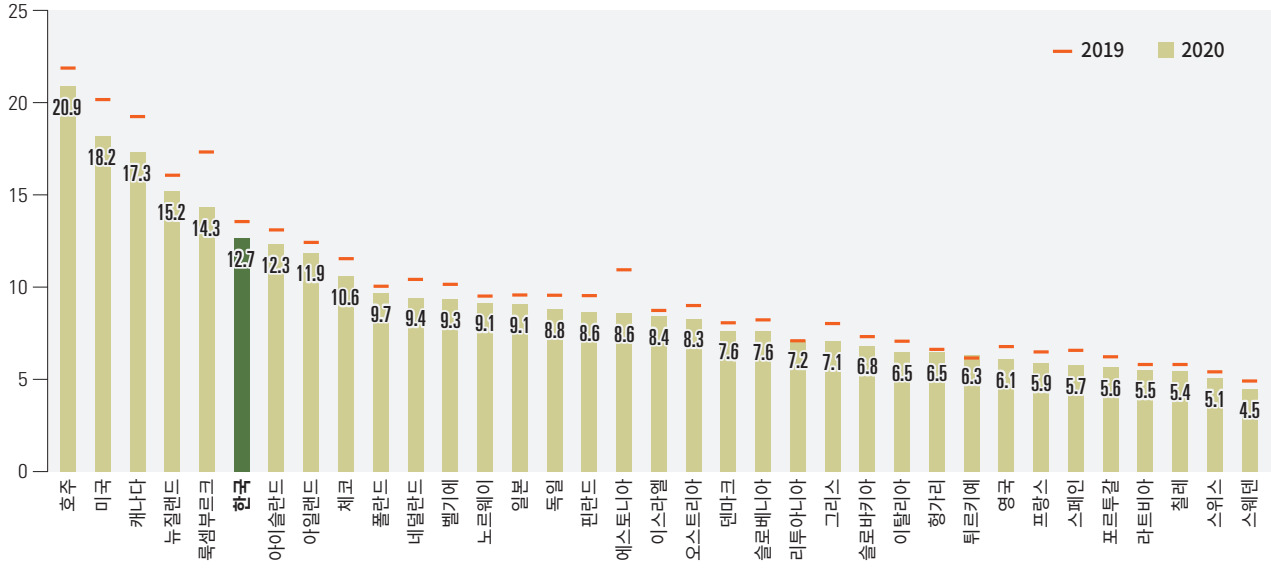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Greenhouse gas emissions: Total emissions excluding LULUCF(https://stats.oecd.org/, 2024.01.24. 인출)

같은 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한국(12.66톤CO_2eq.)이 호주(20.89톤CO_2eq.), 미국(18.18톤CO_2eq.), 캐나다(17.32톤CO_2eq.), 뉴질랜드(15.19톤CO_2eq.), 룩셈부르크(14.32톤CO_2eq.)에 이은 6위로 전년도와 같은 순위를 유지하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튀르키예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인당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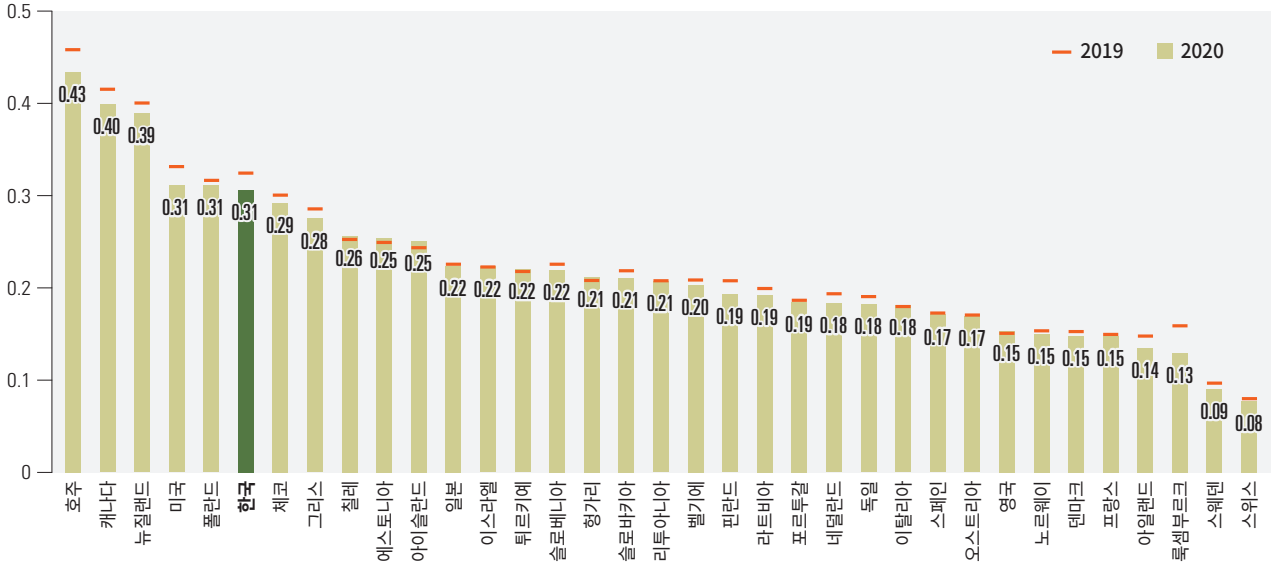
GDP 1000달러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호주(0.434톤CO_2eq.), 캐나다(0.399톤CO_2eq.), 뉴질랜드(0.389톤CO_2eq.), 폴란드와 미국(각각 0.311톤CO_2eq.)에 이어 한국(0.306톤CO_2eq.)이 여섯 번째로 많다. 2019년과 비교하면 아이슬란드, 헝가리, 칠레, 튀르키예, 이탈리아,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당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전년도 6위였던 폴란드가 4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의 GDP당 배출량 순위는 전년도 5위에서 6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0 (단위: 톤CO_2eq./인)



출처: OECD.Stat, Greenhouse gas emissions: Total GHG excl. LULUCF per capita(https://stats.oecd.org/, 2024.01.24. 인출)

OECD 국가별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0 (단위: 톤CO_2eq./1,000달러)



출처: OECD.Stat, Greenhouse gas emissions: Total GHG excl. LULUCF per unit of GDP(https://stats.oecd.org/, 2024.01.24. 인출)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플라스틱은 산업과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자연에 오래 남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80%는 육지에서 유래하며(Meijer et al., 2021), 바다에서는 그물(어구) 등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한다. 해양 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제 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2023년 9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플라스틱 협약에는 플라스틱 생산에서부터 사용과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율은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2021년 7월 신안 갯벌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이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보호지역의 면적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관할 해역 기준 1.81%에 그친다. 국제적 목표인 3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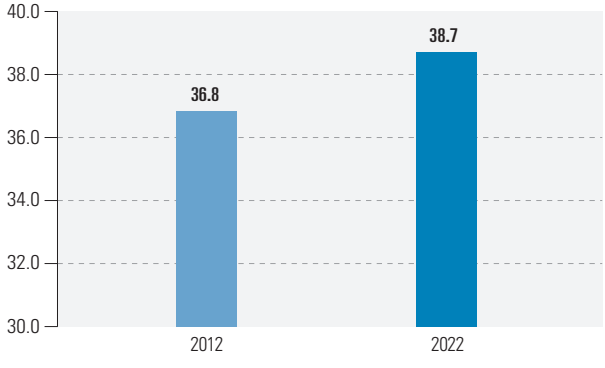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업활동과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IUU) 발생 건수는 최근 연간 3건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어업활동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세는 미약

(관련 지표 14.5.1)

해양보호지역은 해양에 지정한 보호지역을 말한다. 다양한 종류의 보호지역 중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보호지역의 면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SDG 14.5.1 지표는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의 비율인데, 실제로는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평균 비율로 측정된다. 핵심생물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 KBA)은 중요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말하며, 그 기준은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서 정한다. 한국에서는 주요 강 하구, 무안 갯벌, 천수만 등 주로 철새 활동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은 2012년 36.8%에서 2022년 38.7%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OECD 32개 연안국 평균 6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해양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32개국 중 26번째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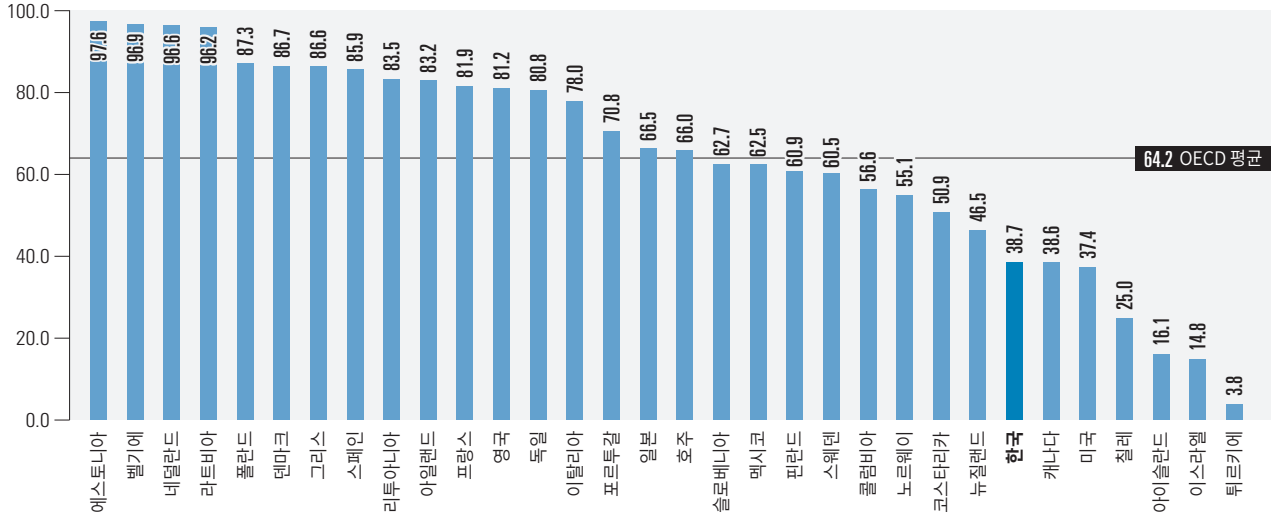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적용 비율, 2012,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9.1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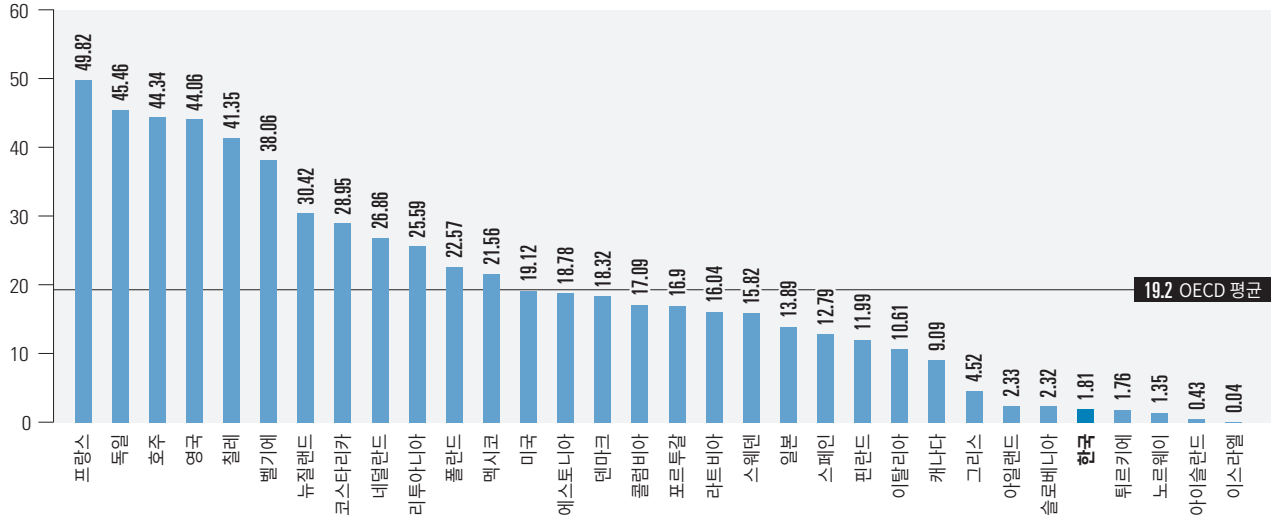
국내 해양(관할 해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해양보호지역 비율을 계산하면 1.81%로 매우 낮아진다. OECD 국가 평균은 19.2%이며, 한국은 32개국 중 28번째이다. 한국의 해양보호지역 면적은 7952㎢로 집계된다. 이 자료는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KDPA)에서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로 제공된다. 이때 '해양보호지역'은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 외에도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상 · 해안 국립공원, 도립공원, 천연기념물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해양보호구역을 뜻한다. 국제적으로 2030년까지 해양보호지역 비율을 30%로 확장하기로 결의하였고, 한국에서 이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재 지정 비율은 30%에 크게 미달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규 해양보호지역 지정과 기타 효과적인 면적 기반 보전 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를 통해 해양보호지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별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적용 비율,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09.12. 인출)
주 : IUCN에서 정의하는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면적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임

OECD 국가별 해양보호지역 비율, 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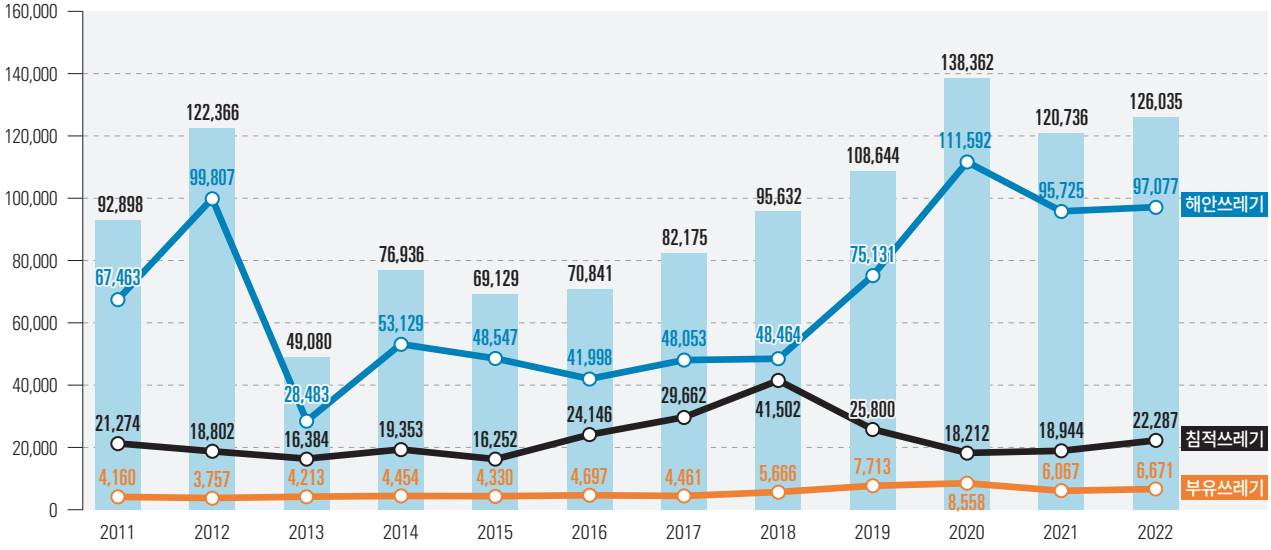
출처: UNEP-WCMC (2023), Protected Area Profile for each country from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October 2023(www.protectedplanet.net, 2023.10.31. 인출)
주 : 국내 해양(관할해역) 면적중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로, 한국 지표는 KDPA 기준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 지속 증가세 (관련 지표 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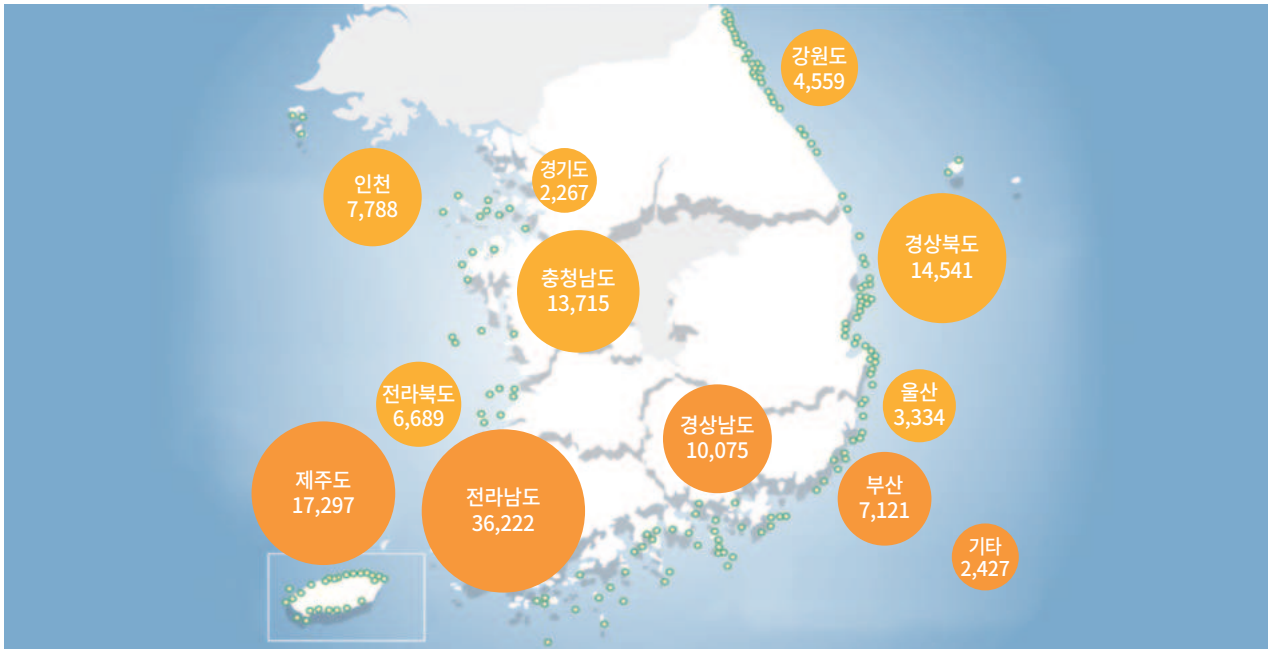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1년에 한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총수거량은 12만 6035톤이며, 이 중 바닷가의 해안쓰레기는 9만 7077톤, 바닷속에 쌓여있는 침적쓰레기는 2만 2287톤, 바다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는 6671톤이다. 지역별 수거량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3만 6222톤, 제주도 1만 7297톤, 경상북도 1만 4541톤, 충청남도 1만 3715톤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해당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는 해안선이 상대적으로 긴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수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개수 기준)는 2018년부터 80% 이상을 차지해 왔는데 2022년에는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이란, 두 달에 한 번씩 전국 해안 60곳을 정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의 종류를 플라스틱, 종이, 목재, 금속 등으로 분류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량, 2011~2022 (단위: 톤)



해양쓰레기 지역별 수거량, 2022 (단위: 톤)



출처: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meis.go.kr/mli/business/collectStat.do, 2023.09.12. 인출)

국가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2018~2022 (단위: 개,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플라스틱 수(개)	25,971	24,639	26,867	110,107	165,876
전체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수 비율(%)	81.6	80.2	83.4	88.5	91.0
플라스틱 무게(kg)	2,585.1	1,698.6	1,014.9	2,899.4	2,136.7
전체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 무게 비율(%)	58.8	62.9	46.0	51.3	49.2

출처: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meis.go.kr/mli/monitoringInfo/stat.do, 2023.09.12. 인출)
주 : 조사방법 일관성이 확보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를 2018~2022로 제한함. 2018~2020년에는 전국 40개소, 2021~2022년에는 전국 60개소를 대상으로 함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및 이행 국가

(➲ 관련 지표 14.c.1)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자원 이용에 따른 권리와 책임, 해양기술, 분쟁조정 절차 등 해양 전반에 관한 법이다. 1982년에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되었고, 현재(2023년 10월 기준) 169개 당사국이 비준하였다. 한국의 경우 1983년 정부에서 서명하고 1996년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SDG 14.c.1 지표의 관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여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된다. 지표 14.c.1은 법적, 정책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중 두 가지 이행협정을 비준, 가입, 이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두 가지 이행협정은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Part XI)의 이행에 관한 협정(152개 당사국 비준, 한국은 UNCLOS와 함께 비준, 이하 제11장 이행협정)'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1995년 채택, 2001년 발효, 93개 당사국 비준, 한국은 2008년 비준, 이하 공해어업 협정)'이다. 제11장 이행협정에서는 심해저 영역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해어업 협정은 공해어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양어업의 국제 기준 준수

(➲ 관련 지표 14.6.1)

해양자원 특히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류가 서식하는 생태계가 건강해야 하고, 어류를 잡는 인간의 활동이 자원량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어류는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함으로써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생산되는 양만큼만 어획한다면 지속가능하게 어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어획활동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어획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잡는 양을 최대로 한다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어업자원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SDG 세부목표 14.6에서는 과도한 어획용량 및 남획(overcapacity and overfishing)과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을 초래하는 방식의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이와 유사한 보조금의 신규 도입을 삼가도록 하였다. 이에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이행 정도를 지표로 정하였다. 다양한 국제 규범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원양어선의 IUU 어업 발생 건수를 분석하였다. 원양어업은 공해상 혹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내에서 어획활동을 하므로 관련 국제 규범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국 원양어선의 IUU 어업은 2011년, 201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여러 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매년 3건 이하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3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연간 1건씩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게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 규범 이행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 (➲ 관련 지표 14.4.1)

SDG 14.4.1 지표는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업자원 규모를 나타낸다. 즉 전체 어업자원 중 지속가능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IUU) 어업 발생 건수, 2010~2021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 건수	2	17	1	27	3	15	없음	2	없음	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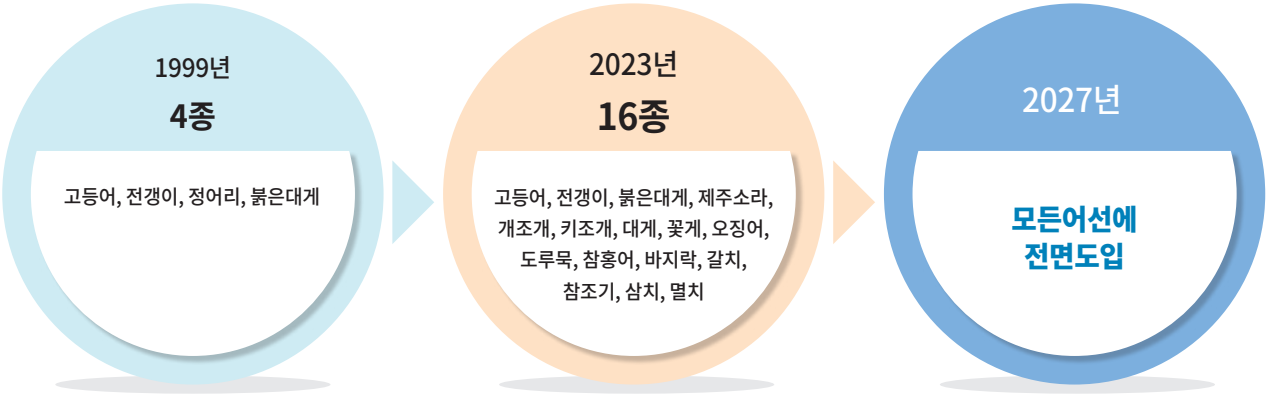
출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 실태조사, p.142,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한 수준 안에 있는 어업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정한 양의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업자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업자원 관리는 어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투입 요소를 규제하는 투입량 규제, 잡는 어획량을 규제하는 산출량 규제, 어획 시기와 어류 크기 등을 규제하는 기술 규제로 구분된다.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는 국내의 대표적인 산출량 규제 수단이다. 어종별로 연간 허용가능한 어획량(TAC)을 설정함으로써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TAC 제도는 1999년 도입 당시 4개 어종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16개 어종으로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이 어종을 어획하는 17개 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관리 물량 측면에서는 아직 전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23년 9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TAC 대상 어종의 양적 확대를 넘어 모든 어선에 어획되는 어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현황, 1999, 2023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TAC 소개(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 2023.10.06. 인출)

용어해설

- **경계왕래 어류** : 공해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왕래하며 서식하는 어류로 명태, 대구, 오징어 등이 해당
- **고도 회유성 어류** : 활동 범위가 광범하여 공해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넓게 회유하는 어류로 참치, 꽁치, 상어류를 포함
- **기타 효과적인 면적 기반 보전 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 :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2022)에서는 보호지역과 OECM 면적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함

15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SDG 15번 목표는 생물종 및 유전자 다양성의 보전·증진과 지속가능한 이용 · 관리에 관한 것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관련 협약의 평가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추세로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GBO-5, 2020; IPBES, 2019). 제5차 지구 생물다양성 전망(GBO-5),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지구평가보고서(IPBES, 2019)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평가보고서(IPCC, 2023)에서는 모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황폐화를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의 주요 동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인간 활동에 의한 토지전용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IPBES-IPCC 공동워크숍 보고서(Pörtner et al., 2021)에서는 육상의 77%가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변형되었고 서식지 손실로 야생 포유류의 83%(바이오매스 기준)가 손실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멸종위기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들에서는 현재의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일제히 강조하였다.

UNEP 산하 관련 협약에서는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2022년 '2021-2030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2020년 이후 새로운 10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국제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전 국토 대비 30%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30% 복원하며, 모든 국토계획에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시행한다는 등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채택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2021년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 2022)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 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을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21년 EU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2023년 EU 자연복원법 제정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국가적색목록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지역도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육상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 추세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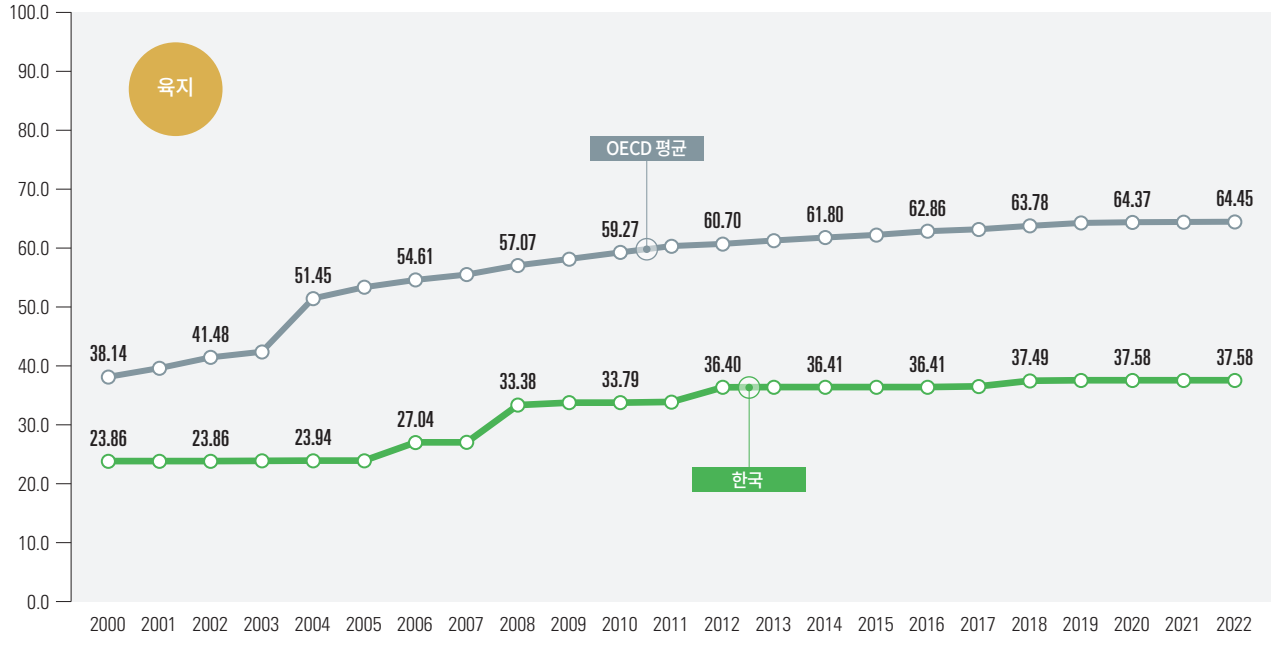
(➲ 관련 지표 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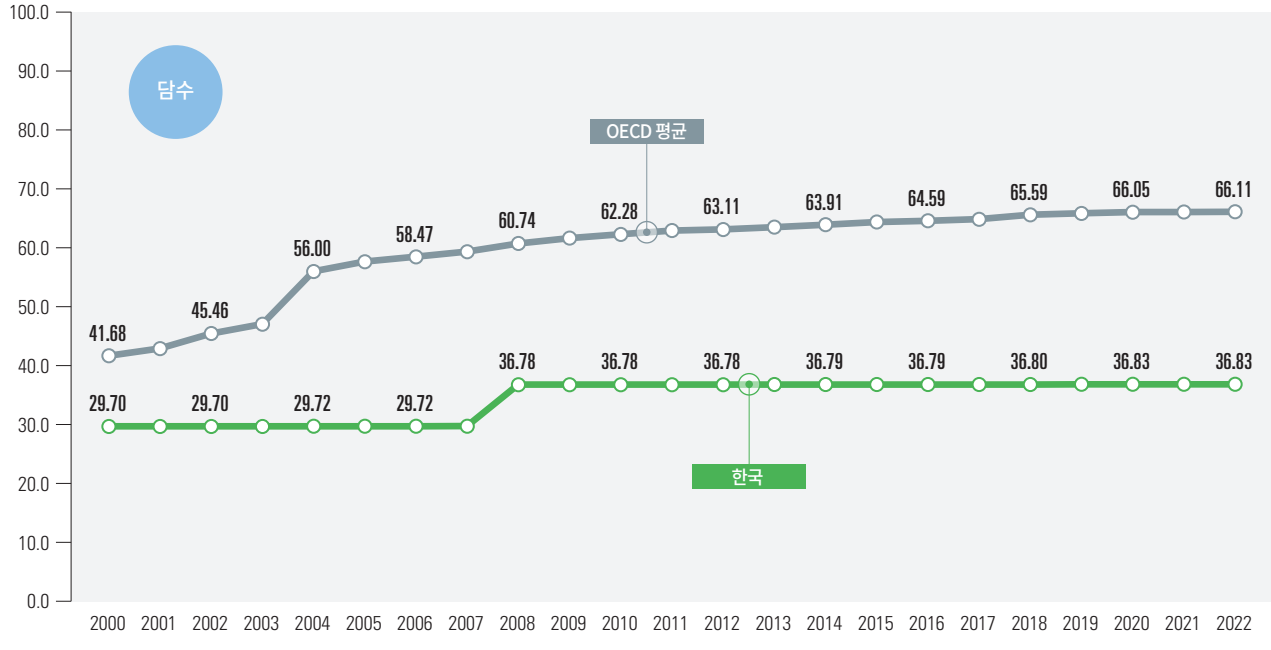
2022년 12월 새롭게 수립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는 2030년까지 전 국토 대비 육상(담수 포함)과 해양의 보호지역(Protected Area, PA)과,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그 외 효과적인 면적 기반의 보전 조치(OECM)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관련 법률에 따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17.45%로, 30%까지 상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SDG에서 다루는 육지 및 담수 핵심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지표 수치는 이보다 높다. 각각 육지와 담수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대비 보호지역의 비율로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실천목표로 채택된 지표, 즉 전 국토 대비로 산출되는 보호지역 면적 및 OECM 지역 면적 비율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핵심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은 육지와 담수 모두 2010년대 이후 증가세가 미약하다. 특히, 담수 생태계 보호지역 비율은 거의 정체 상태(2008년 대비 2022년 0.05%p 증가)에 있다. 2022년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은 육지와 담수 각각 37.58%와 36.83%로 집

계된다. 2000년과 2022년 사이 육지와 담수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은 각각 13.72%p와 7.13%p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보호지역 비율은 육지와 담수 각각에서 26.31%p와 24.43%p 늘어났고, 2022년 현재 보호지역 비율은 육지와 담수 각 생태계의 64.45%와 66.11%에 달한다. 한국의 보호지역 지정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보호지역 확대가 어려운 데는 보호지역과 그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미흡, 보호지역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부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 미흡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핵심생물다양성 지역(KBA) 중 보호지역 적용 비율, 2000~2022 (단위: %)





출처: UN,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3.10.03. 인출)
주1 : 생태계 총면적 대비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율임
주2 : IUCN에서 정의하는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면적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 증가 추세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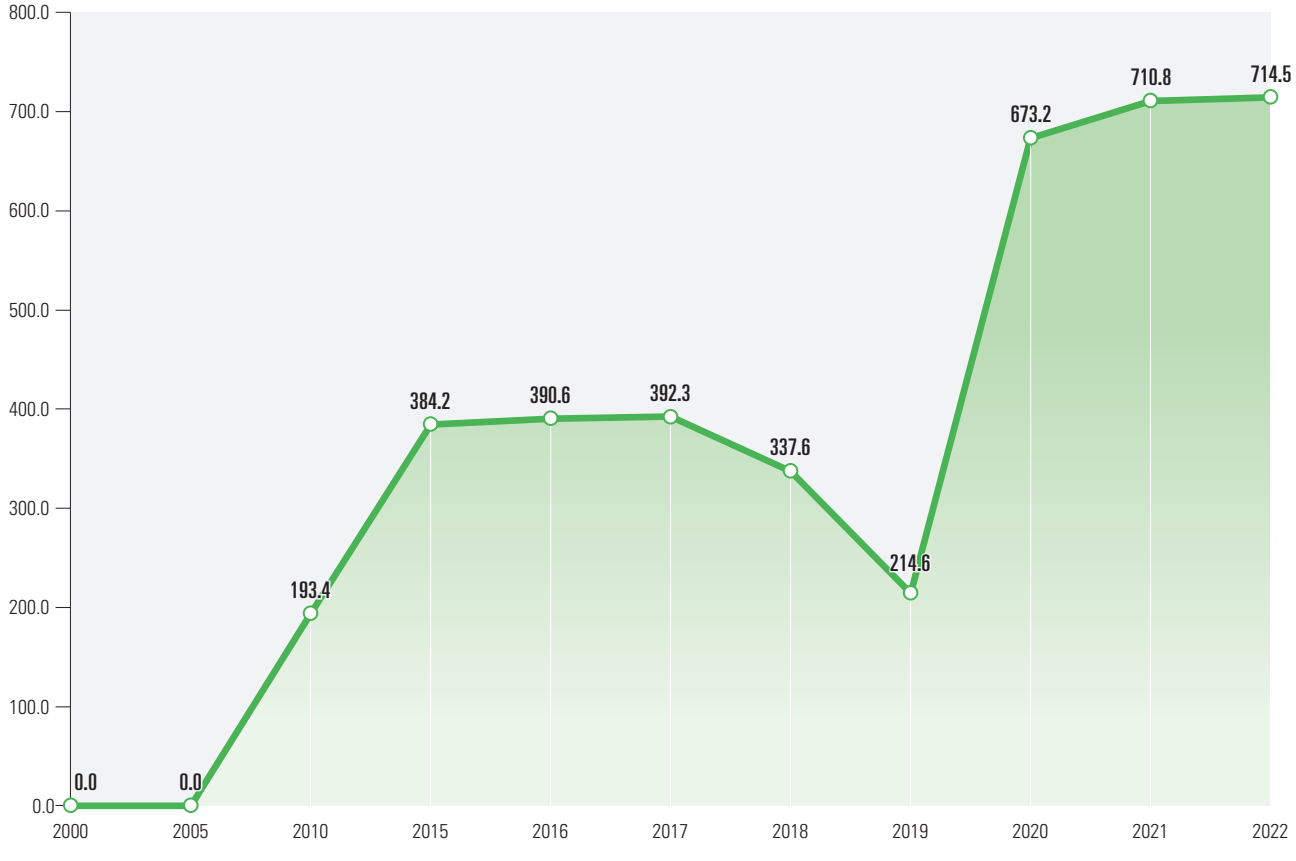
(관련 지표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보전·강화하는 것으로, 산림면적 연간 순변화율, 산림 내 지상 바이오매스 총량, 보호림 비율,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비율,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면적 등 5개 지표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 중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면적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천목표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행 평가를 위한 관리지표로도 산림관리 인증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 북미 중심의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와 유럽 중심의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체 개발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KFCC)가 2018년에 PEFC와 상호인정을 획득하였다. 주로 FSC 인증을 취득하던 국내 기관들은 2016년 이후 KFCC에 등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FSC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면서 KFCC 인증으로 급격히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통계에도 영향을 미쳐 2019년과 2020년 사이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산림관리 인증제도의 확대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산림관리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된 한국의 산림면적은 2022년 71만 4500ha로 그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인증제도 전환 과정에서 한 차례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로는 증가세가 미약하다. 국토면적 대비 높은 산림면적 비율(2020년 기준 62.7%)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학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적 이행이 필요하다.

산림관리 인증 면적, 2000~2022 (단위: 1000ha)



출처: UN,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3.10.03. 인출)
주 : 독립적으로 증명된 산림관리 인증제도로 인증된 산림면적을 뜻하며, 현재 FSC와 PEFC(상호인정 포함)의 인증면적이 집계됨

국가 적색목록지수 악화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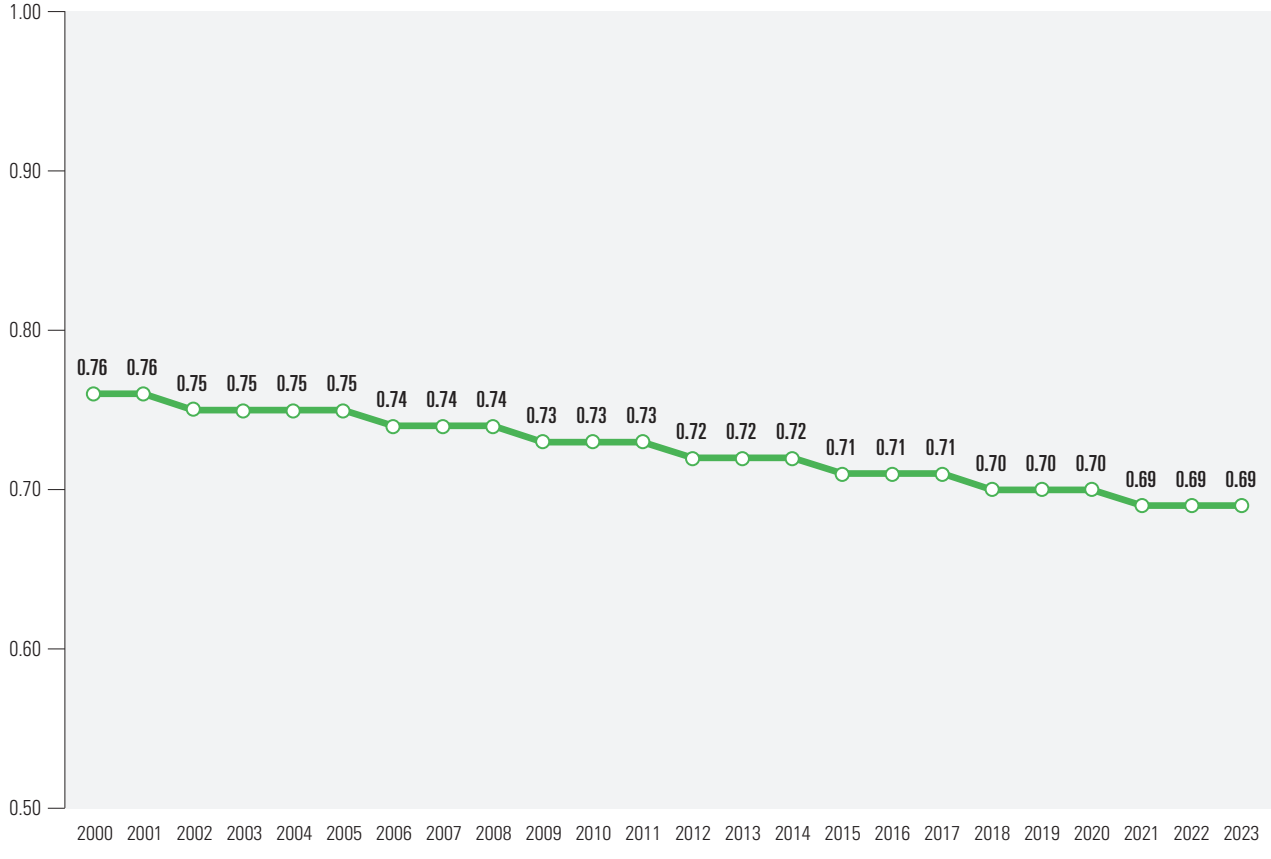
(관련 지표 15.5.1)

국제 사회에서는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IUCN에서 개발한 야생생물의 현황과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모니터링하는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색목록지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보호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평가지표로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작성된 적색목록은 IUCN과 OECD에 보고된다. 이를 바탕으로 OECD에서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적색목록지수는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을 기반으로 생물종 수의 변동 추세를 계량화하여 산출된다. 이 지수에 따라 생물종의 멸종 단계가 제시되는데, 여기에는 절멸(Extinct),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위급(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dangered), 취약(Vulnerable), 준위협(Near Threatened), 최소관심(Least Concern) 등 7개 범주가 포함된다. 멸종 단계는 0(모든 종이 절멸)과 1(모든 종이 최소관심)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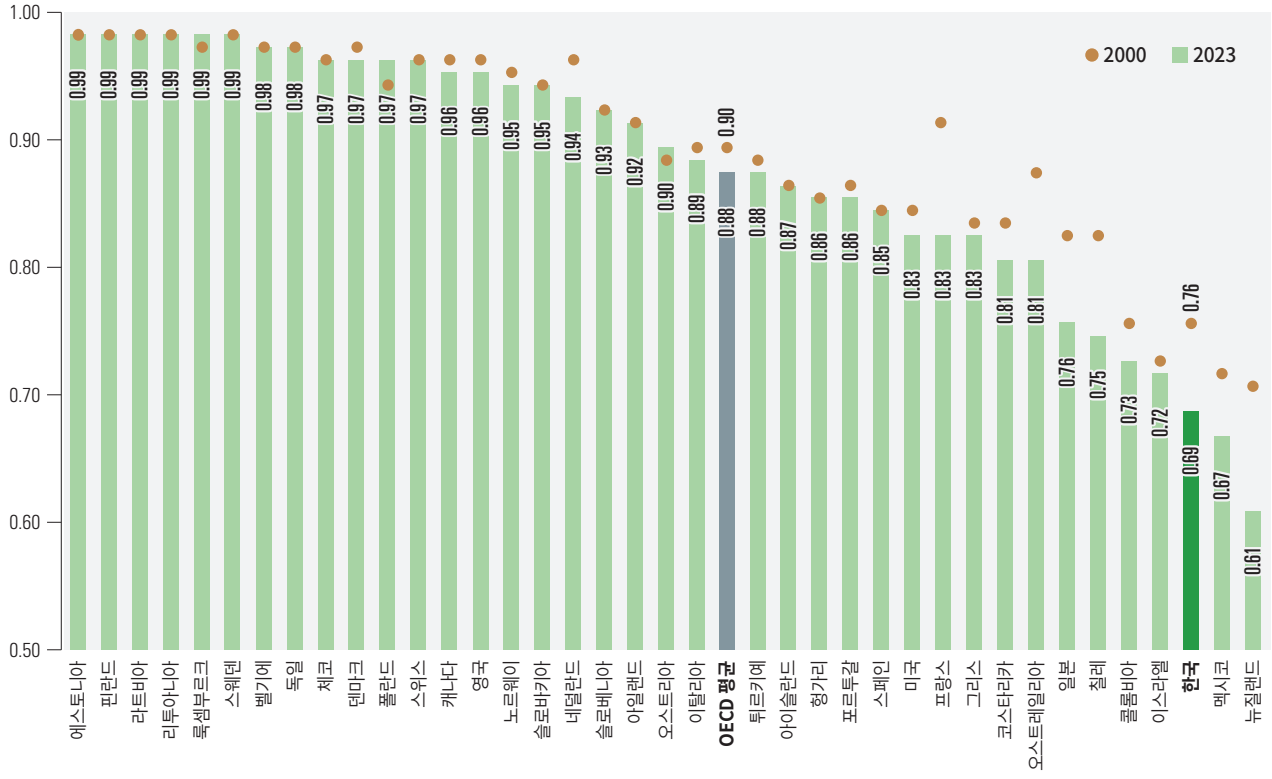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2000~2023년 기간동안 적색목록지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하였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는 0.90에서 0.88로 0.02 감소하였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0.10)이며 다음으로 프랑스(-0.09)이다. 한국은 일본, 칠레,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0.07이 감소하였다. 한편,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색목록지수가 0.9 이상에 이르며, 폴란드(0.02), 룩셈부르크(0.01), 오스트리아(0.01) 세 국가는 상승하였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 2000~2023



출처: UN,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3.10.03. 인출)
주 : 0~1 사이의 지수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OECD 국가별 적색목록지수, 2000, 2023



출처: UN,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UNS0116&conn_path=I2, 2023.12.13. 인출)
주 : 0~1 사이의 지수이며,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 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용어해설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국제 사회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4개 목적과 23개 실천목표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 : 기후변화, 식량, 물, 재난, 건강, 생물다양성 등 자연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태계를 보호,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16 PEACE AND JUSTIC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 정의와 효과적인 제도에 관한 SDG 16번 목표는 폭력과 범죄의 퇴치, 공정성과 포용성 증진, 그리고 공공정책과 민간경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지향한다. 지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유혈 충돌이 벌어지면서 분쟁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하고, 그 외에도 살인범죄의 증가, 인신매매 등 16번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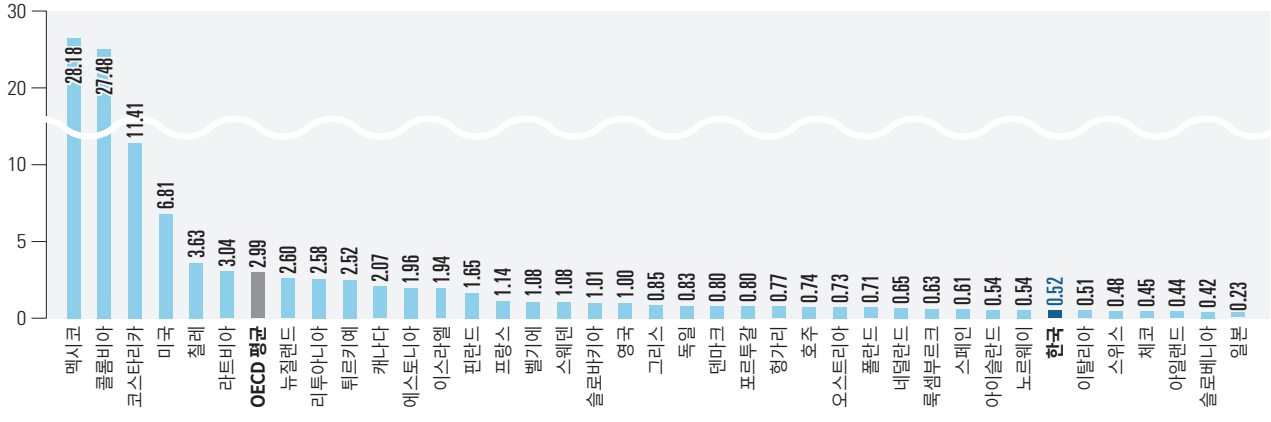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살인 범죄는 2010년대 이래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과 폭언도 오랜 노력을 통한 제도와 인식 개선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교사의 체벌과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뚜렷히 감소하였는데, 반면 여전히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또래폭력이 교실에서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SDG에서는 미결수의 인권 보장과 사법 접근권 증진 등을 위해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고자 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결수용자 수용비율은 2022년 34.7%로 지난 15년간 30%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사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2022년 기준 14.3%로 조사되었으며, 여성과 젊은 층은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사유의 차별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살인 발생은 지난 10년간 감소추세 (관련 지표 16.1.1)

한국의 살인범죄는 2010년대 이래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2022년 한국의 살인범죄(기수)는 275건, 인구 10만 명당 0.54명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근소하게 늘었으나 장기적인 감소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로 정의하는 살인범죄 발생비는 2011년 0.85명과 비교하면 11년간 37.0% 줄어든 수치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OECD 국가들의 살인범죄 발생비 평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99명이며, 한국은 38개국 중 7번째로 낮다. 살인 발생이 월등히 높은 멕시코(28.18명), 콜롬비아(27.48명), 코스타리카(11.41명)의 3개국을 제외한 평균(1.32명)과 비교해도 여전히 한국의 살인 발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OECD 중 살인 발생비가 가장 낮은 일본의 경우는 10만 명당 0.23명 수준으로 한국의 절반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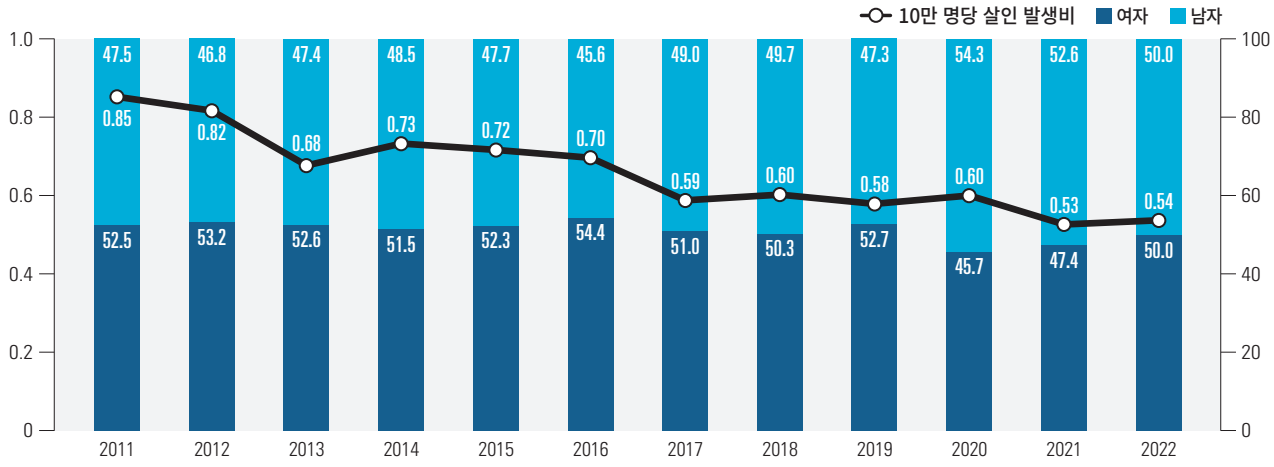
살인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2019년까지 남성대비 여성 피해자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2년 연속 그 비율이 역전되고 있었는데, 2022년도의 성비는 남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살인범죄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2022년 기준 60세 초과 피해자가 전체의 28.1%를 차지하는데, 한국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1년 20.0%에 비해 뚜렷이 늘어난 수치이다. 20세 이하의 미성년 피해자는 전체의 10.9%를 차지하며, 이 중 6세 이하(6.6%)의 영유아 피해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와 같은 취약한 피해자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별 살인범죄 발생비, 2021 (단위: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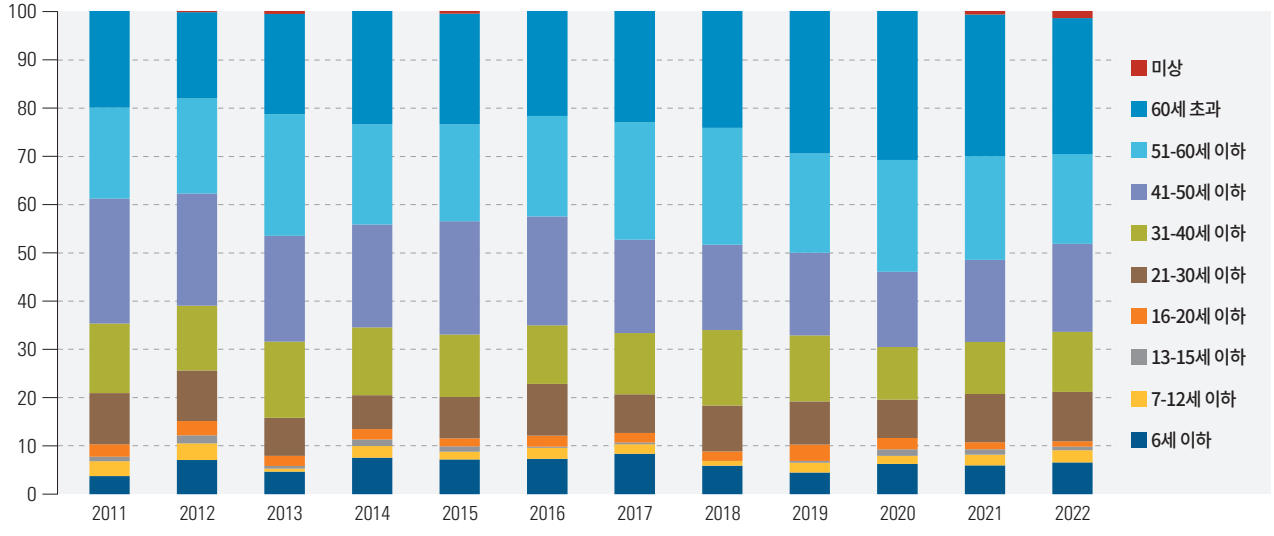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3.11.4 인출)
주 : 국가별 가장 최근 수치로, 영국(2020), 핀란드(2020), 뉴질랜드(2019) 외에는 2021년 수치임

살인범죄 발생비 및 피해자 성비, 2011~2022 (단위: 10만 명당 명, %)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https://kosis.kr, 2023.10.4 인출)
주 :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기수) 피해자수로 산정하며, 각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적용함. 피해자 성비에서 성별 불상 사건은 제외함

살인 피해자 연령대별 비율, 2011~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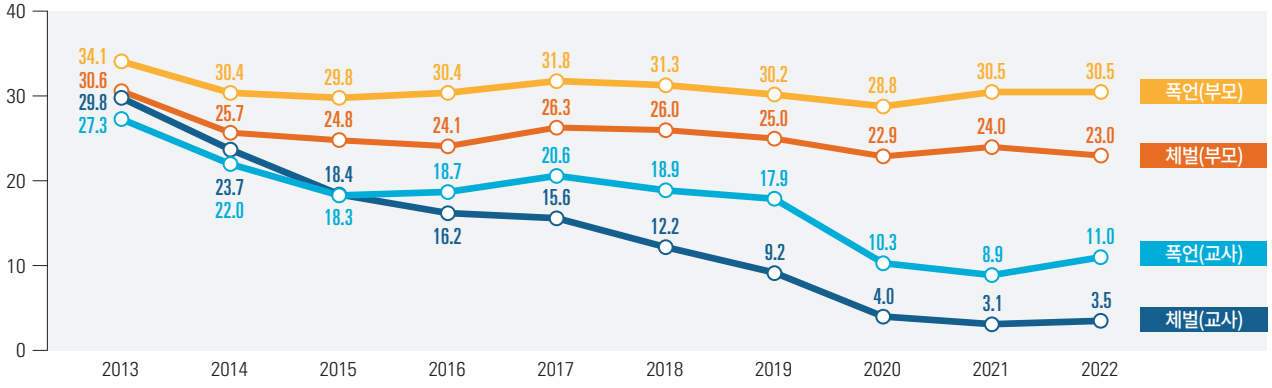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https://kosis.kr, 2023.11.4 인출)

교사의 체벌 · 폭언은 큰폭으로 감소한 한편, 또래폭력은 여전한 위협 (관련 지표 16.2.1)

SDG 16번 목표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체벌을 교육과 훈계의 수단으로 여겼으나, 오랜 노력을 통해 인식과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2011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체벌·폭언을 금지하고, 2021년 자녀에 대한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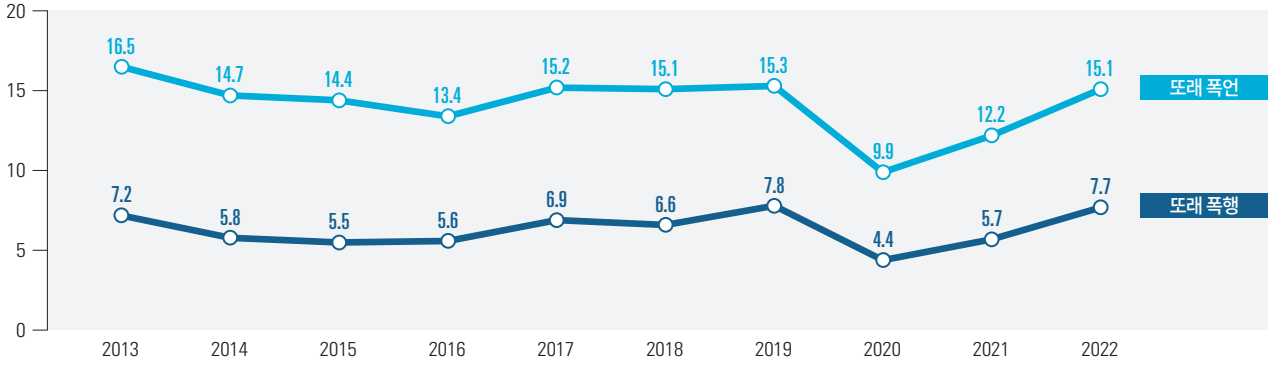
지난 10여 년간 아동에 대한 체벌·폭언은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의 아동 중 학교에서 체벌을 겪는 비율은 2013년 29.8%로부터 2022년 3.5%로, 9년 만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하는 비율도 2013년 27.3%로부터 2022년 11.0%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부모(보호자 포함)로부터의 체벌 또는 폭언도 2013년 각각 30.6% 및 34.1%였던 데 비해 2022년에는 23.0%

아동청소년의 체벌·폭언 경험률, 2013~2022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체벌폭력피해 경험, 각년도(https://kosis.kr, 2023.9.14 인출)
주1 : 초4 ~ 고3 재학생 대상
주2 : 최근 1년동안 신체적 벌(체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폭언)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비율

아동청소년의 또래폭력 경험률, 2013~2022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피해 경험, 각년도(https://kosis.kr, 2023.9.22 인출)
주1 : 초4 ~ 고3 재학생 대상
주2 : 최근 1년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폭언), 맞아본 경험(폭행)이 한번이라도 있는 비율

및 30.5%로 줄어든 수치인데, 2014년에 한 차례 각각 전년 대비 4.9%p 및 3.7%p 줄어든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교사의 체벌·폭언 감소세는 2020년 한 차례 크게 줄어든 이래 정체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코로나19 대면교육 축소에 따른 일시적 급감 이후의 기저효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폭언이 감소한 반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또래폭력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고 아동의 학교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래폭력 경험률은 코로나19 시기 잠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2년 기준 또래로부터의 폭행이나 구타를 경험한 비율은 7.7%,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한 비율은 15.1%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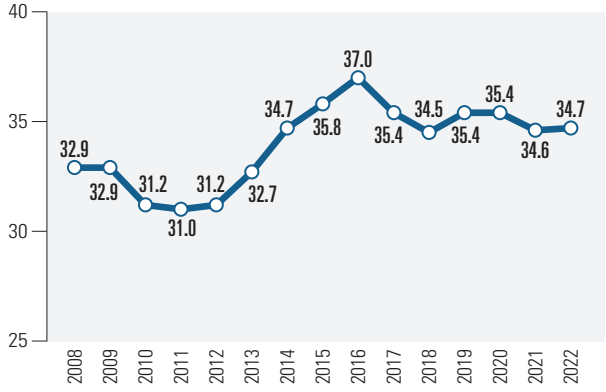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비율 34%대에서 정체

(➲ 관련 지표 16.3.2)

SDG 16.3 세부목표는 법치와 사법 접근권을 증진하고자 하며, 지표 16.3.2는 아직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교정시설 구금을 최소화하여 미결수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한국의 형사제도는 피고인의 무죄추정과 방어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미결구금은 용의자의 신병 및 수사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비율은 34.7%에 달하며, 지난 15년간 30%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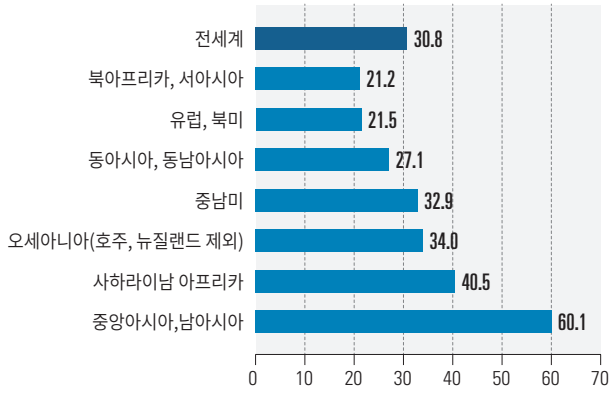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 미결수 비율 지표는 SDG가 수립된 2015년 이래 뚜렷한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으며, 유럽·북미 지역은 미결수 비율이 5분의 1 수준인 데 반해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비율, 2008~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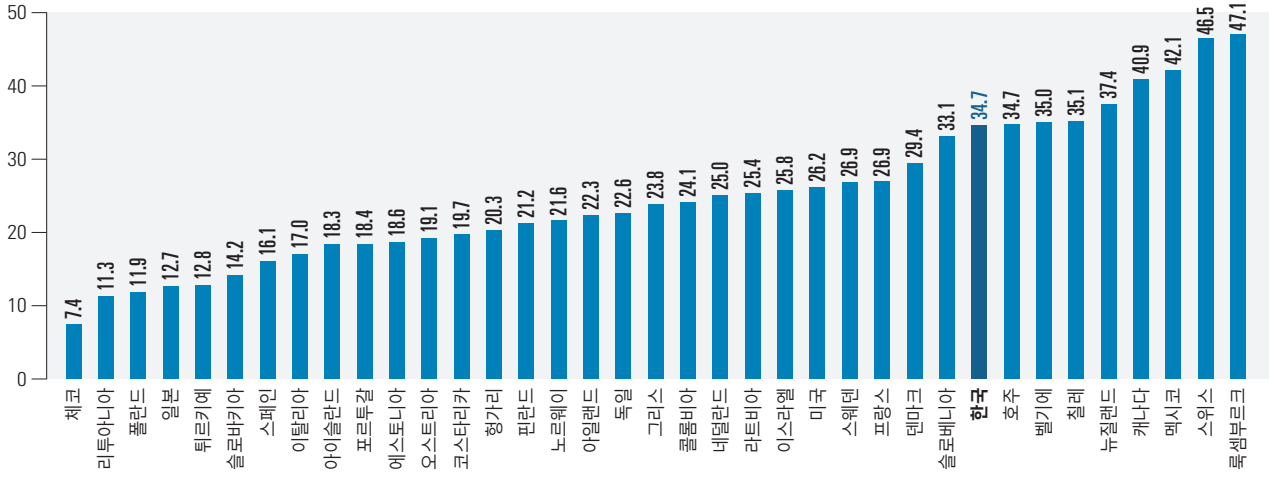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교정시설 수용자 중 미결수 비율, 각 연도

전세계 지역별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비율, 2021 (단위: %)



출처: U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3: Special Edition, p.45

OECD 국가별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비율, 2021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3.08.18. 인출)
주 : OECD 38개국 중 영국(데이터 없음)을 제외한 37개국이며, 국가별 가장 최근 수치로 한국(2022), 콜롬비아(2020), 캐나다(2020), 벨기에(2018), 이스라엘(2016) 외 국가는 2021년 수치임

중앙아시아 · 남아시아 지역은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OECD 국가들도 7.4%(체코)부터 47.1%(룩셈부르크)까지 넓게 분포하는데, 한국은 37개국 중 9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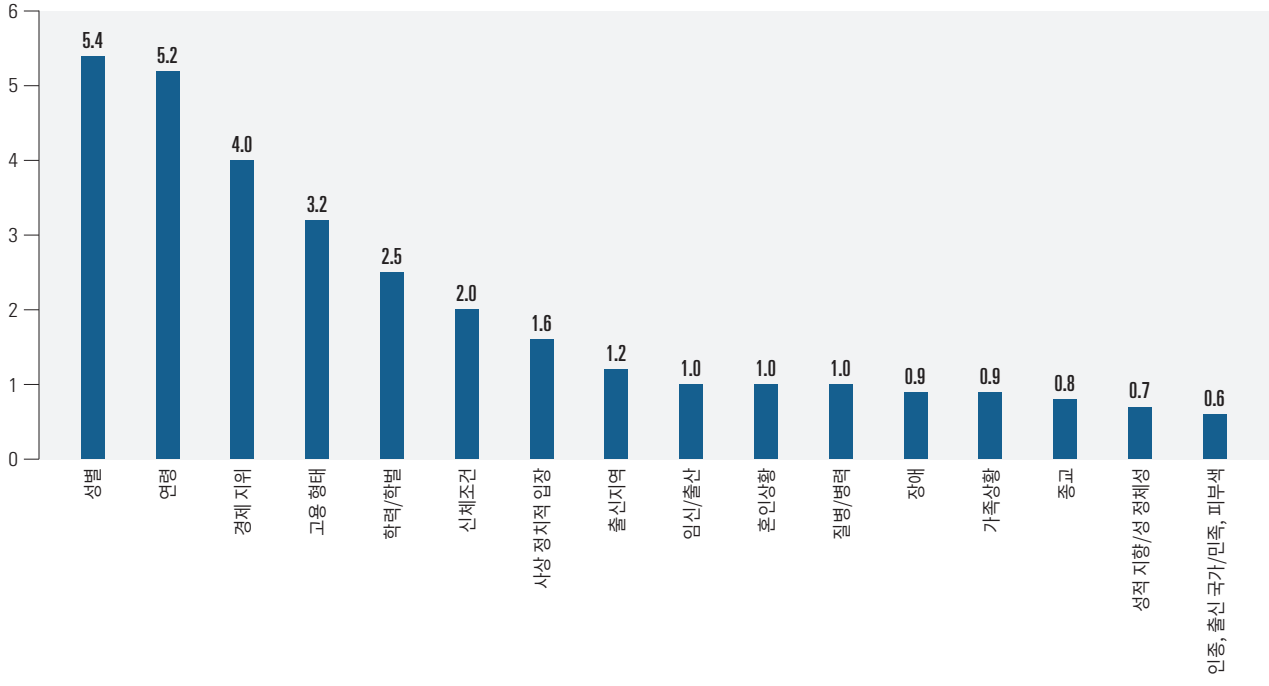
(➲ 관련 지표 16.b.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응답자의 14.3%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 사유별로 보면, 성별 또는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률이 각각 5.4%와 5.2%로 가장 높고,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학력·학벌, 신체조건에 따라서도 각각 4.0%, 3.2%, 2.5%, 2.0%의 응답자가 차별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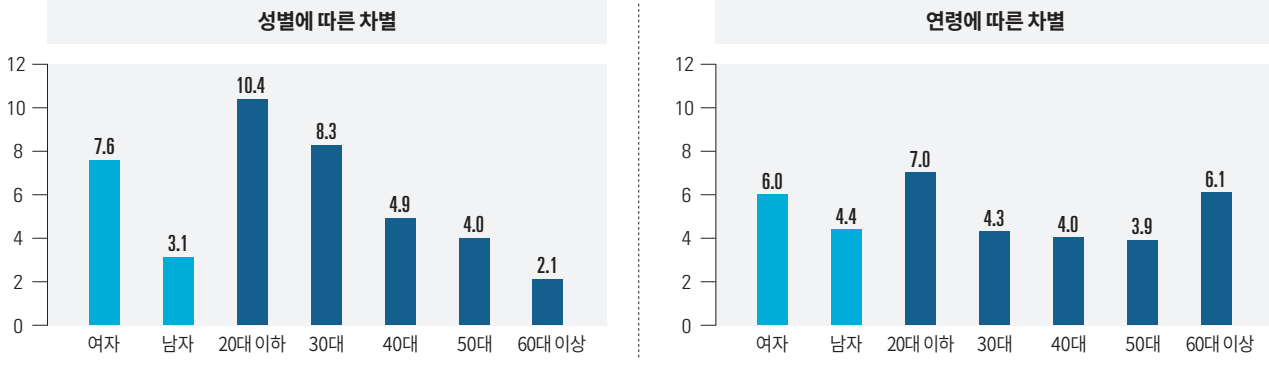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을 응답자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7.6%)의 경험률이 남성(3.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연령대가 젊을수록 높아 20대 이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4%에 이른다. 연령에 따른 차별의 경우 20대 이하(7.0%)와 60대 이상(6.1%)의 경험률이 높으며, 여성(6.0%)이 남성(4.4%)보다 연령에 따른 차별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과 젊은 층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률이 높을 뿐 아니라 더 다양한 사유의 차별을 경험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직업군별로 나누어 보면, 단순노무직(경제적 지위 8.7%, 고용형태 8.6%)이 가장 높은 차별 경험률을 보인다.

차별사유별 차별 경험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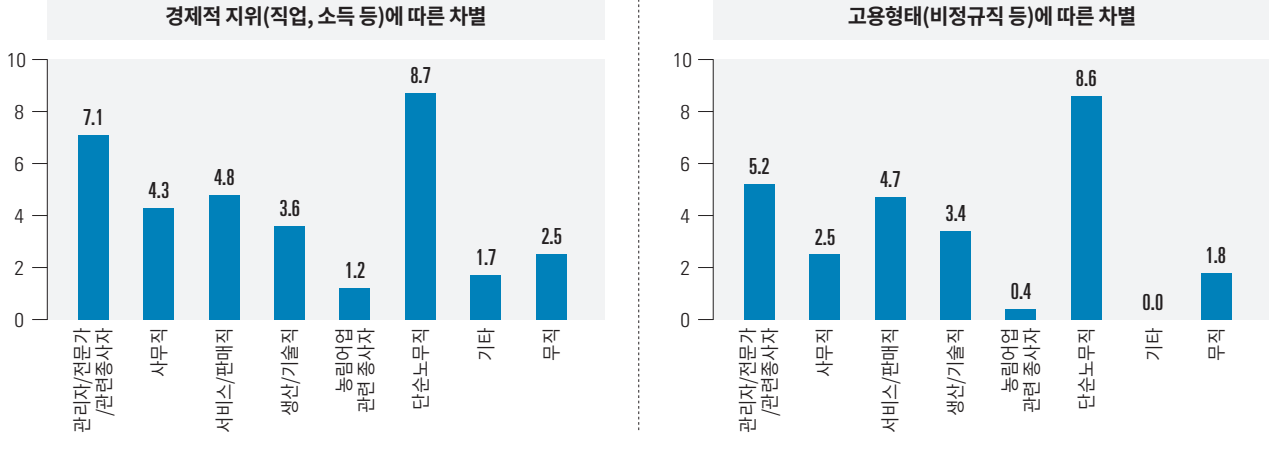
(단위: %)



성 및 연령대별 차별 경험률, 2022



직업별 차별 경험률, 2022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2, 지난 1년동안 차별 경험, (https://kosis.kr, 2023.9.30 인출)

주 :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며, '없다'는 응답에는 '해당없음'도 포함됨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 17번 목표에서는 SDG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대상국 정부, 개발협력기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을 추구하고 있다. SDG 17번 목표는 개발을 위한 재원, 기술, 능력배양, 무역뿐 아니라 시스템 이슈로서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다자간 파트너십, 데이터 모니터링과 책무성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최근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회복(recovery)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요 공여국의 경우 난민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인도적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2022년 국제 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040억 달러(잠정치)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ODA 규모는 2022년에 전년 대비 3.0% 감소한 27.9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환율 상승의 영향과 전년도 원조실적의 대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0.9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증가한 0.17%를 기록하였다. 통계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간 데이터 격차 해소 필요에 따라 통계부문의 ODA는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와 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됨에 따라 개도국의 성장 기반과 사회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은 낮은 소득과 국내 저축, 비효과적인 국내 재원 동원으로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가 위축되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해외송금이 급감하면서 ODA 지원 확대는 물론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협력 기반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나 국제적 긴장과 불충분한 협력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사회는 인플레이션, 국가 간 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국제 개발 및 협력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체제 재편에 대응하여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SDG 이행 역량 지원과 함께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2022년 GNI 대비 ODA 비율 0.17%로 전년대비 증가

(관련 지표 17.2.1)

한국의 ODA 규모는 2022년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27.9억 달러(잠정치)에 그치며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표시 원조예산의 감소와 2021년 원조실적의 대폭 증가(27.7%)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0.9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ODA 사업비 미집행분 이월 및 코로나19 긴급 대응 수요로 실적이 대폭 증가(6.2억 달러)함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래 ODA 규모가 최대 폭으로 증가했었다.

ODA 실적을 원조유형별로 보면 양자원조에 21.9억 달러, 다자원조에 6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양자원조를 다시 나누어보면 무상원조(15억 달러)는 2022년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종식됨에 따라 ODA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전년 대비 8.2% 증가한 반면, 유상원조(6.9억 달러)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실적이 줄며 전년 대비 11.9% 감소하였다. 다자원조(6억 달러)의 경우 환율 상승의 영향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확대되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년 대비 15.3% 감소하였다.

2022년 한국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3% 감소하

였지만, 경제 규모 대비 원조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늘어난 0.1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DAC 30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치며, 아직 OECD DAC 회원국 평균(0.3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에도 ODA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1년에 채택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SDG 이행을 위한 ODA의 양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OECD의 2022년 ODA 잠정 통계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실질 기준 13.6% 상승한 2040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의 난민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인도적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공여국 내 난민 처리 및 수용에 대한 지출은 2021년 128억 달러에서 2022년 293억 달러로 ODA 총액의 14.4%를 차지하며 급증하였다. 공여국 내 난민 비용을 제외하면 2022년 ODA 규모는 실질 기준으로 2021년 대비 4.6%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ODA 규모는 인도적 지원 18억 달러를

한국의 ODA 실적, 202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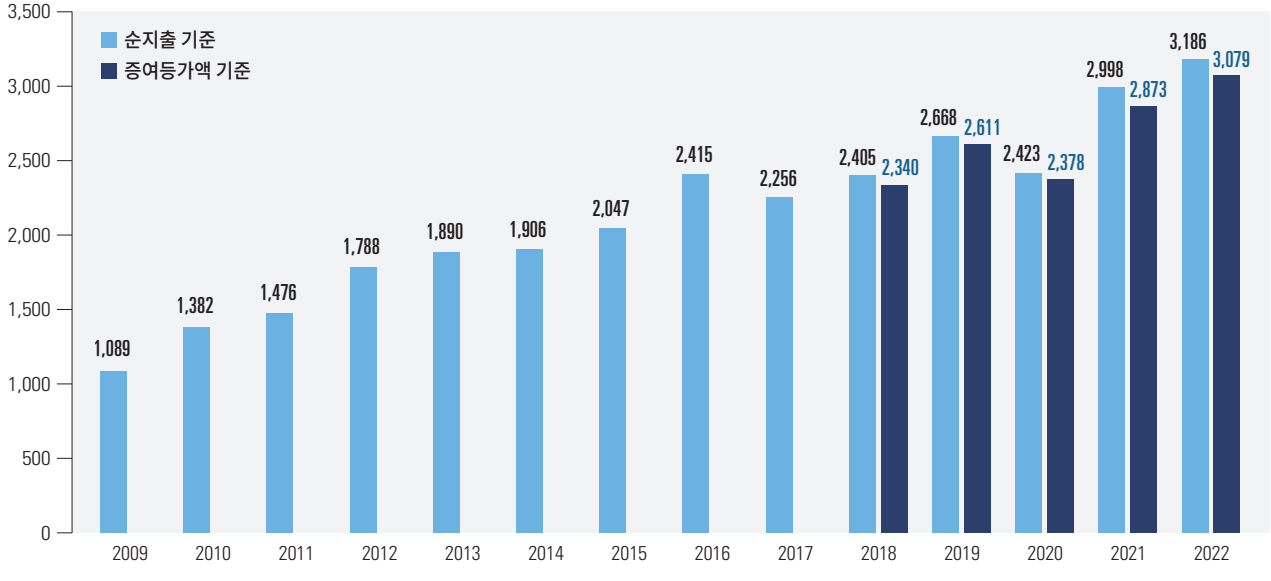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 %p)

구 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비중(%)
▪ 총량 (A+B)	2,873	2,786	86	△3.0%	100.0
- 양자 ODA (A)	2,168	2,189	21	1.0%	78.6
무상원조	1,384	1,498	114	8.2%	(68.4)
유상원조	784	691	93	△11.9%	(31.6)
- 다자 ODA (B)	704	597	107	△15.3%	21.4
▪ ODA/GNI	0.16	0.17	0.01	-	-

출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부처합동 보도자료(2023.4.13.)
주1 :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기준
주2 : 2022년은 잠정치

한국의 ODA 규모, 200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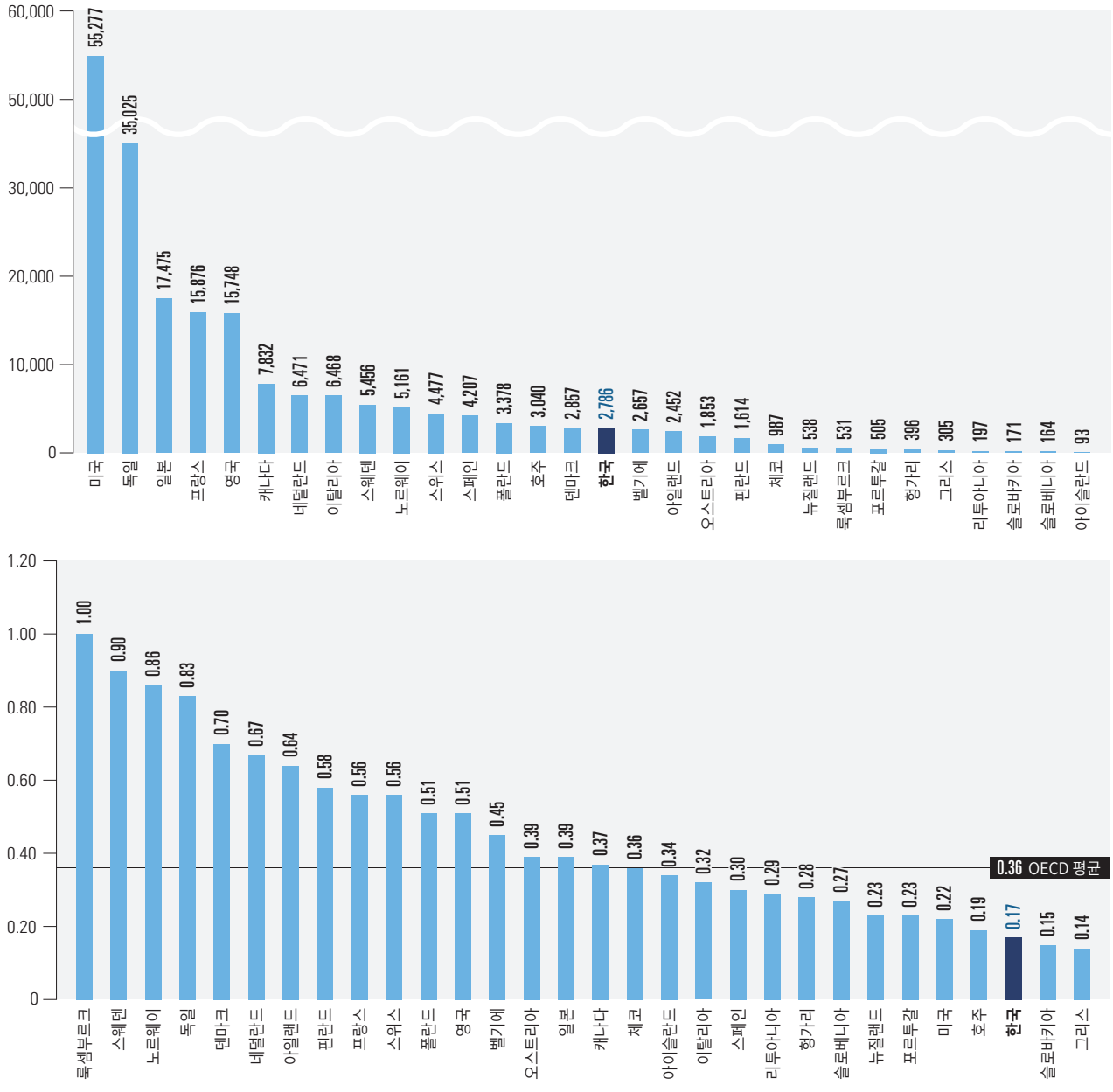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출처: OECD.Stat (https://stats.oecd.org/), OECD(2023) "Korea"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https://www.oecd-ilibrary.org)
주1 : 2021년 기준 불변가격
주2 : 2022년은 잠정치

OECD DAC 회원국별 ODA 규모와 GNI 대비 비율, 2022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OECD DAC(2023), "ODA Levels in 2022-Preliminary data", p. 8 참조
주1 :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기준
주2 : 2022년은 잠정치(updated 12 April 2023)

포함해 2021년 9억 1800만 달러에서 2022년 총 161억 달러로 늘어났다. 2022년 DAC 26개 회원국에서 ODA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여국 내 난민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증가 폭이 큰 나라는 폴란드(+255.6%), 체코(+167.1%), 아일랜드(+125.1%), 리투아니아(+121.6%), 슬로베니아(+48.7%), 오스트리아(+36.2%) 등이다.

DAC 주요 회원국의 ODA 규모는 2022년 기준 미국 553억 달러(전년 대비 +15.6%), 독일 350억 달러(+5.3%), 일본 175억 달러(-0.9%), 프랑스 159억 달러(+2.4%), 영국 157억 달러(+0.2%) 등이다. 이들 국가 외에 네덜란드가 65억 달러(+22.4%), 스위스가 45억 달러(+14.4%), 폴란드가 34억 달러(+243.3%), 아일랜드가 25억 달러(+112.3%)를 지원하였다. OECD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21년 0.33%에서 2022년 0.36%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UN 권고치인 0.7%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덴

마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ODA의 양적 규모를 늘려 왔고, 여러 측면에서 DAC의 권고 수준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GNI 대비 ODA 비율은 아직 0.17% 수준으로 DAC 권고수준인 0.7%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또한 전체 ODA 증여율(grant element) 수준이 2020년 90.5%에서 2021년 85.2%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ODA의 양적 규모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에 따라 원조사업 조달에 제한을 두지 않는 언타이드(untied) ODA 비율이 2019년 62.7%에서 2021년 70.5%로 개선되었다. GNI 대비 최저개발국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15~0.20%가 권고 수준인데, 한국의 경우 2020년 0.05%에서 2022년 0.06%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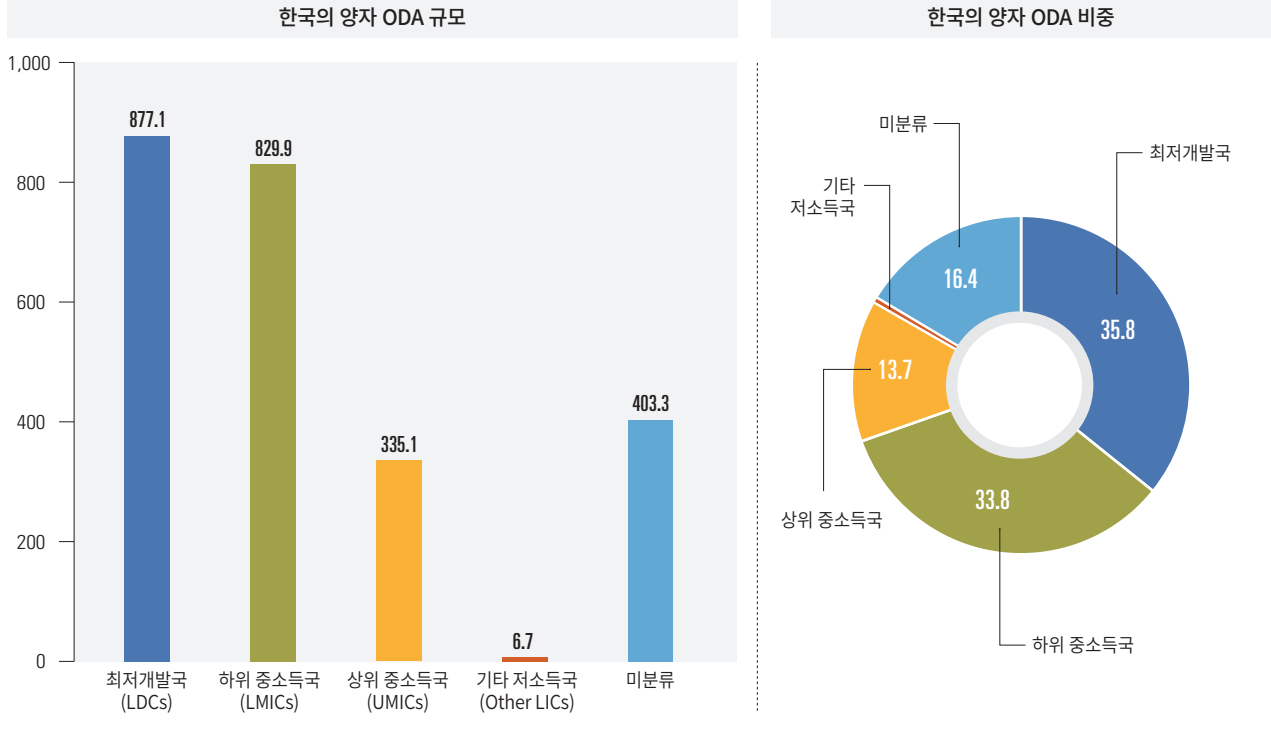
양자 ODA 중 최저개발국 지원비중 가장 높아

(➲ 관련 지표 17.2.1)

한국의 최저개발국 ODA 규모는 2021년 8억 7710만 달러로 전체 양자 ODA의 35.8%를 차지한다. 이는 DAC 평균인 22.9%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양자 ODA에서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크다. 하위 중소득국(LMICs) 지원은 8억 2989만 달러(33.8%), 상위 중소득국(UMICs) 지원은 3억 3509만 달러(13.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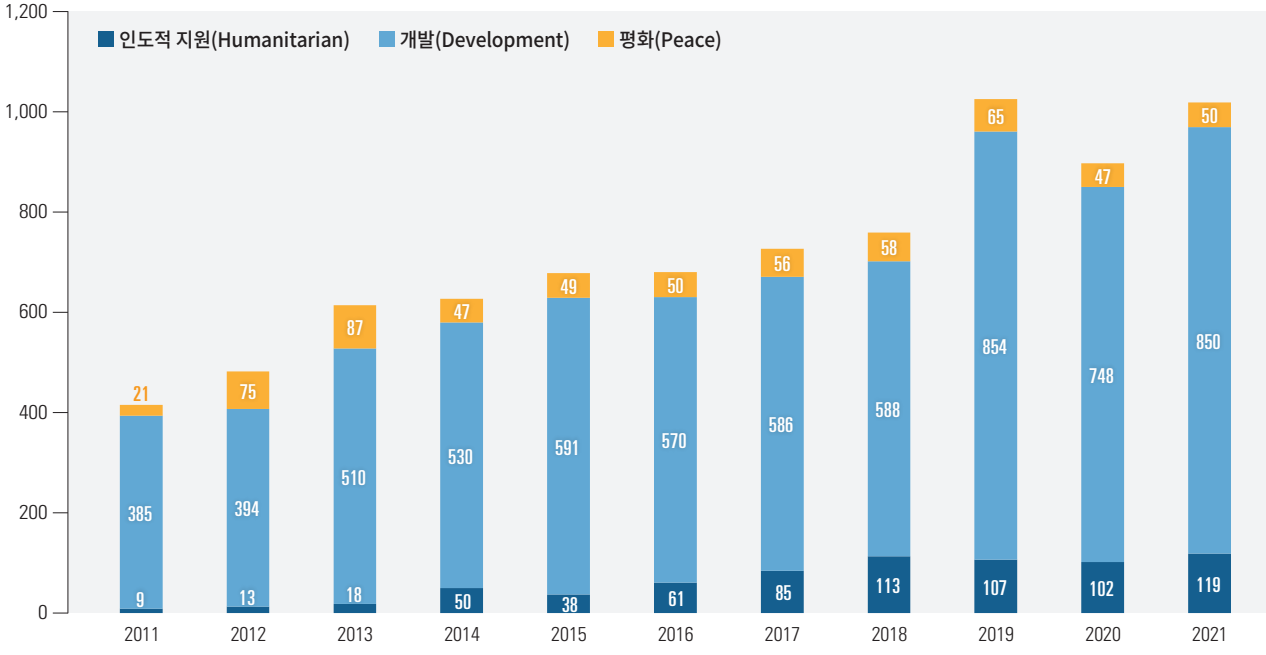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최저개발국은 소득과 국내 저축 수준이 낮고 효과적인 국내 재원 동원이 어려워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위축, FDI 둔화, 해외송금 급감, 채무 상태 악화 등이 겹쳐 양자 ODA가 매우 중요해졌다. 보건 역량, 상하수 설비 부족 등 방역시스템이 취약한 가운데 최저개발국 정부에서는 소득 · 식량 지원, 대출 · 보증, 세금 감면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확대가 시급하다. 한국에서는 내륙에 위치하여 경제개발에 제약이 큰 내륙개발도상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에 2021년 양자 ODA의 17.2%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라오스, 네팔 등과 같은 내륙국에 총 4억 212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소득그룹별 양자 ODA 규모 및 비중, 2021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OECD,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참조
주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한국의 취약국가 지원 추이와 HDP 넥서스, 2011~2021 (단위: 100만 달러)



출처: OECD,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참조
주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또한 국제 사회에서 최저개발국 중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에도 양자 ODA의 3.7%인 913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서울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은 태평양도서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해 관련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고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이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평양도서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을 3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사회의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 대한 지원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1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한국 전체 양자 ODA의 41.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021년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액 중에서 개발 분야의 비중이 83.4%로 가장 크고, 인도적 분야에 11.7%, 평화 분야에 4.9%가 지원되었다. 국제 사회의 취약국 개발원조는 분쟁 및 재난 직후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 구호와 복구의 성격이 강하였다. 최근에는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UN에서는 '인도주의 - 개발 - 평화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HDP) Nexus)'를 발표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는 성과의 연결고리를 확정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17년 6월에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취약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분쟁 예방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HDP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사업 및 평화 구축 활동이 서로 연계, 보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및 평화 연계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인 취약성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현재 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비중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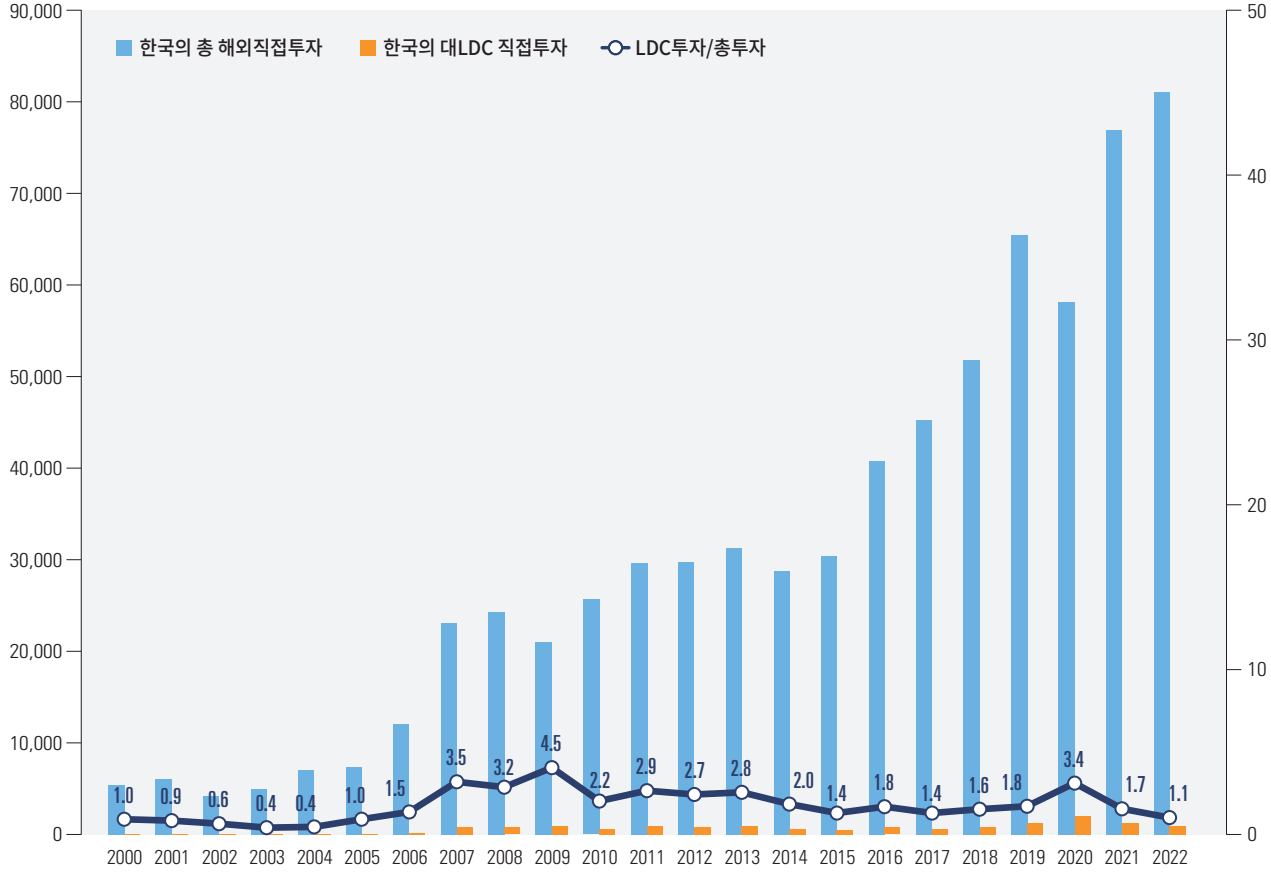
(관련 지표 17.3.1 / 17.5.1)

SDG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재원이 유입되려면 외국인직접투자(FDI), 포트폴리오 투자, 송금, 민간 차입 등 추가적인 재원 동원이 중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연간 312.1억 달러를 기록하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9년 654.9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와 교역 감소로 인해 2020년에 58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지만,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다시 증가하여 2021년 768.8억 달러, 2022년에는 8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SDG 이행에 필요한 재원 중 민간투자는 대부분 중소득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저개발국을 위한 투자 촉진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국에 대한 민간기업의 활동 및 투자와 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포용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면에서 SDG 달성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저개발국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저개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4.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2.1억 달러와 2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의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12.8억 달러로 낮아지고 2022년에는 8.6억 달러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최저개발국에 대한 비중도 2009년 4.5%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3년 2.8%, 2019년 1.8%까지 낮아졌다. 2020년에 3.4%로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22년에는 1.1%로 급감하였다.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비중, 2000~2022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 2023.9.20 인출)

한국 통계역량은 상위권으로, 통계 ODA 확대 계획

(관련 지표 17.18.1 / 17.18.2 / 17.18.3)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수요소로 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SDG는 통계역량강화 지원을 세부목표(17.18)로 두고 있다. 이 세부목표에서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할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데이터 세분화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실천하기 위한 통계 전략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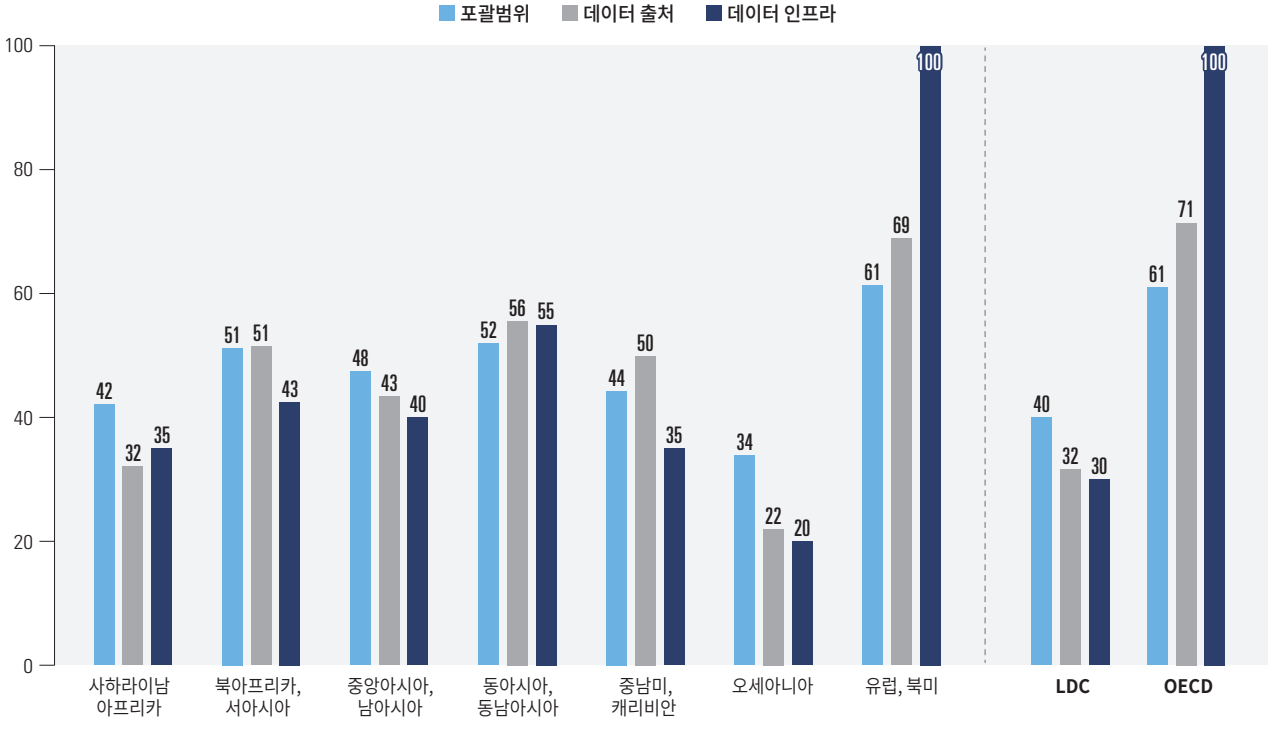
이 세부목표의 이행을 점검하는 지표인 국가통계역량(SDG 17.18.1)은 세 차원, 즉 포괄범위(coverage), 데이터 출처(data source), 데이터 인프라(data infra)로 측정된다. 포괄범위는 사회 · 경제 · 환경 22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통계 지표가 시계열 그리고 세분화 수준에서 얼마나 제공되는지, 데이터 출처는 센서스 및 서베이, 행정자료, 공간정보 등 얼마나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하는지, 데이터 인프라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와 개념을 준수한 데이터가 생산되는지로 정의된다. 각 차원은 1~100점까지의 지수 형태로 평가된다.

한국은 포괄범위(차원 1)에서 61점(195개국 중 36번째), 데이터 출처(차원 2)에서 82점(174개국 중 3번째), 데이터 인프라(차원 3)에서 90점(190개국 중 34번째)을 받아 세 차원 모두 통계역량 상위그룹인 5분위에 속한다.

지역별 통계역량을 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통계역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더 낮다. 이중 격차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데이터 인프라 영역으로 OECD 국가는 100점인데 반해, 최저개발국은 30점이었다.

데이터 인프라는 국제표준과 함께 통계제도 및 예산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식통계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을 준수하는 통계법령을 구비하고 있는지(SDG17.18.2),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국가통계발전계획(national statistical plan)이 시행되고 있는지(SDG17.18.3)도 세부목표 이행을 점검

세계지역 및 주요 그룹별 통계역량 수준(중위값) (단위: 점(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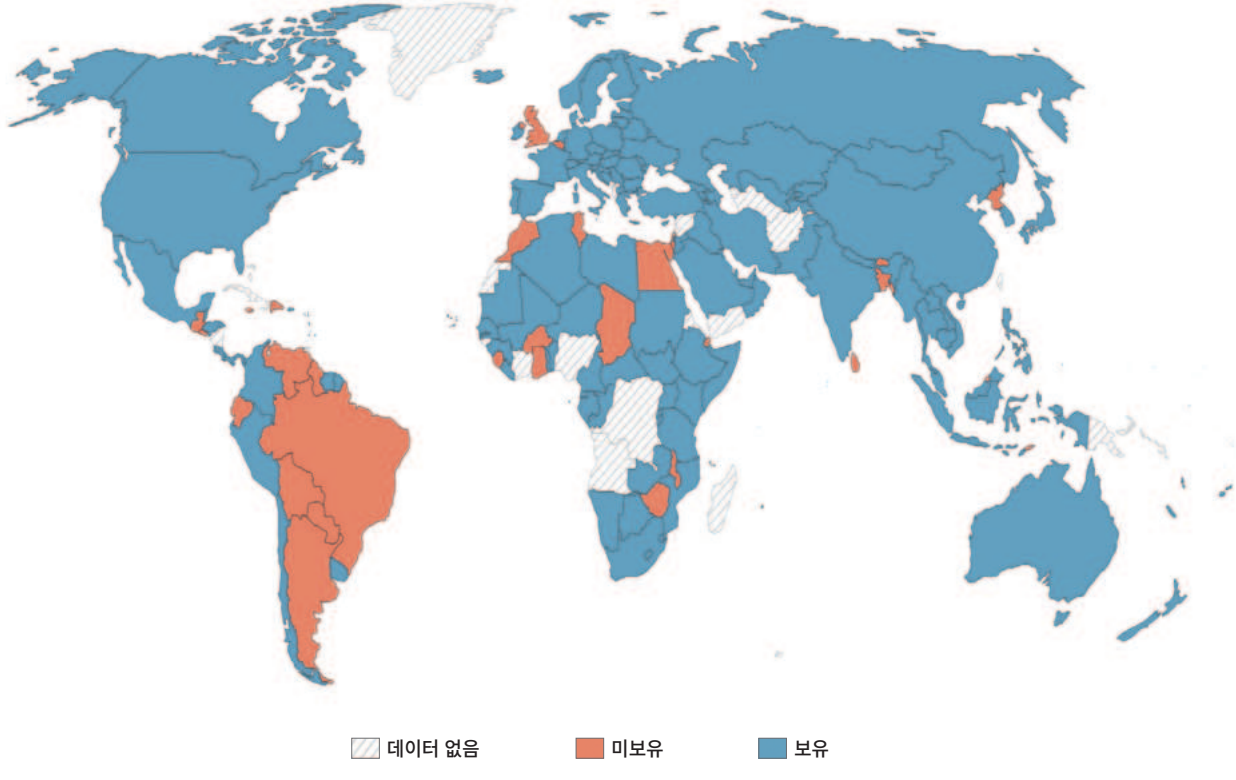
출처: UN SDG 글로벌 데이터베이스(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12.29. 인출)
주1 : 포괄범위는 오픈데이터워치의 2022년 자료, 데이터 출처와 데이터 인프라는 세계은행의 2019년 자료임
주2 : 지역구분은 유엔통계처의 분류체계에 따른 것임. 단, 오세아니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포함

하는 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은 통계법 및 재원이 확보된 국가통계발전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통계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147개국으로 나타난다.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156개국이었으며, 이 중 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이 완전히 확보된 국가는 100개국이다. 한편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실행 중인 국가는 2019년 143개국에서 2020년 133개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15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이 확보된 경우는 2019년 91개국에서 2020년과 2021년 83개국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00개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의 이러한 감소 현상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UN, 202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국가통계발전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통계역량과 마찬가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통계재정이 확보된 국가의 비율은 34.3%와 27.3%로 낮다. 그룹별로 보면 최저개발국은 15.2%로 OECD 국가의 94.4%와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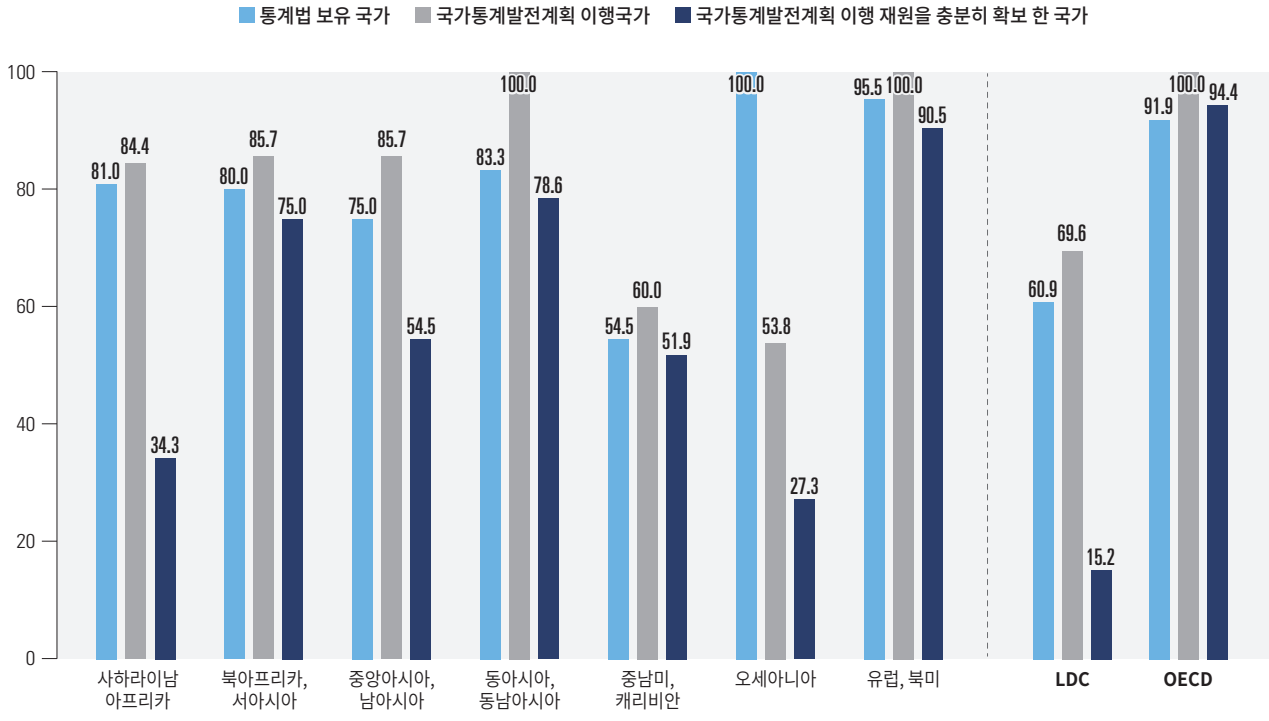
통계역량 및 통계제도 구비현황을 볼 때 한국은 높은 수준의 통계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향후 최저개발국의 통계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통계청은 2012년 이후 총 9개국(아시아 5개국, 중남미 3개국, 아프리카 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통계발전전략 수립 및 컨설팅, 각종 통계시스템 구축, 현지 및 초청연수 등 인적역량강화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에서 SDG는 주요 분야 중의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 ODA 예산은 2012년 약 5억원에서 2022년 33억원으로 6.6배 증가하는 양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ODA 예산(2022년 기준 27억 8600만 달러) 중 통계청 ODA의 비중은 0.09%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지원 국가의 다변화, 지원 규모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통계청, 2023).

공식통계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통계법 보유 국가 현황, 2022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sdgs/global-partnerships, 2023.12.29.인출)

세계지역 및 주요 그룹별 통계법 및 국가통계발전계획 보유국 비율 (단위: %)



출처: UN SDG 글로벌 데이터베이스(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3.12.29. 인출)
주1 : 정보가 제공된 국가를 대상으로 비율을 계산
주2 : 지역구분은 유엔통계처의 분류체계에 따른 것임. 단, 오세아니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포함

용어 해설

- **언타이드 원조(Untied ODA)** :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 물자와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 국가로 한정하지 않는 원조 방식.
- **증여율(Grant Element)** : ODA의 재무적 조건으로서 공여 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양허성 차관액과 차관원리금의 현재 가치 차이로 측정됨. 기존에는 소득그룹과 무관하게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 25% 이상이 ODA의 재무적 조건이었으나 2014년 12월 OECD DAC 각료급회의(HLM)에서 양허성 차관의 ODA 적격 기준을 변경하여 2018년부터 증여등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2018년 ODA로 인정하는 증여율(Grant Element)을 소득그룹별로 차등화하고, 측정 방식을 순지출(총지출액-총상환액) 방식에서 증여등가액(총지출×증여율) 방식으로 변경함. 소득그룹별 증여율 기준은 최저개발국을 포함한 저소득국 45% 이상, 하위 중소득국(LMICs) 15% 이상, 상위 중소득국(HLMICs) 10% 이상임.

목적 및 활용

SDG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이다. SDG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가 통합적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NOB, 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원칙으로 한다.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완수하기 위해, 매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4년 주기로는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의 자발적 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SDG 채택문인 2030의제에서는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현황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당연직 부처로 통계청을 포함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 또한 정비 하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SDG 한국 데이터 책임연락기관(data focal point)으로서, SDG 국내 데이터 수집 및 국제기구 자료제공, 한국의 SDG 이행현황 보고서 발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글로벌 렌즈를 통해 본 한국의 SDG 데이터와 이행현황』이라는 기초보고서를 발간한 이래로, 2021년부터 매년 3월말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국문과 영문 보고서를 동시에 발간하고 있다. 지표별 이행현황에 대한 유의미하고 풍부한 분석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계열 분석, 국내 인구집단 또는 지역 등에 따른 세분화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현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래프 등 시각적인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 정보의 활용도와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일반인, 학생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되, 전문용어 등은 풀어쓰고자 노력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책담당자와 각 분야 연구자를 위한 정책자료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언론 · 미디어, 시민사회 등 대국민 정책홍보 · 교육 · 소통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고서의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됨으로써 해외 관련기관 및 연구자 등에게도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출처

지표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https://kostat.go.kr/sdg)과 지표누리(https://index.go.kr)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승인통계, 정책자료 등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국제데이터의 경우, UN SDG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신 및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각 지표를 소관하고 있는 국제기구 데이터도 함께 사용하였다.

연혁

* 보고서 표지 색은 목표별 색상을 적용함

2024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국영문)

2023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국영문)

2022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
(국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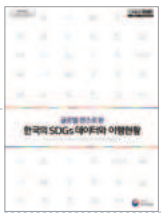
2021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1
(국영문)

2020

글로벌 렌즈를 통해 본
한국의 SDG 데이터와 이행현황
(영문)

2019



글로벌 렌즈를 통해 본
한국의 SDG 데이터와 이행현황
(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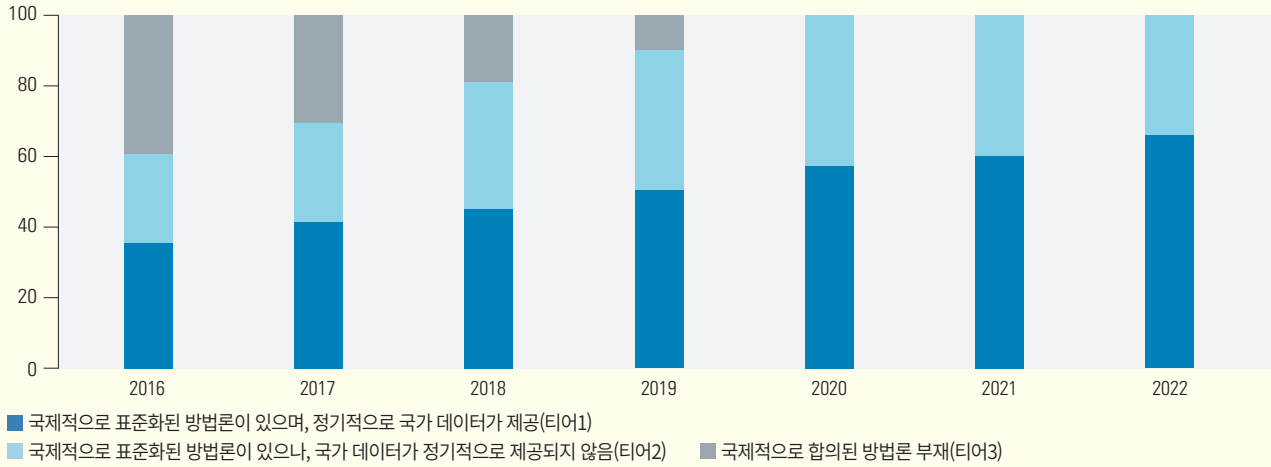
보고서 게재 사이트:
index.go.kr/sdg 혹은 kostat.go.kr/sdg

SDG 진전을 가속화하고 분명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 제공에서 통계데이터의 역할이 크다. 신뢰할만하고 시의적이며 세분화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은 SDG 지표 통계데이터 역량강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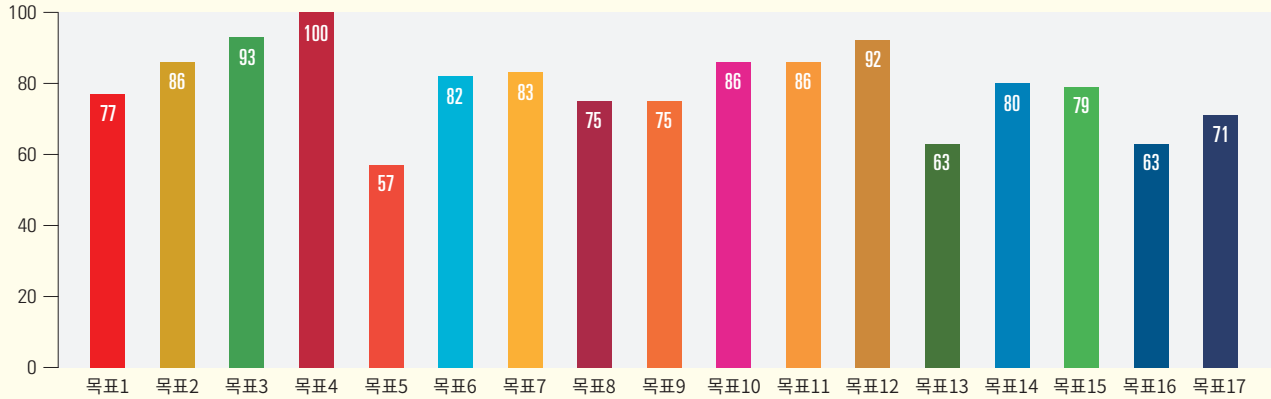
2016년 글로벌 SDG 지표 프레임워크 초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39%의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론을 갖추지 못하였으나(티어3), 4년 만인 2020년, 마침내 모든 지표가 표준화된 방법론을 구비하게 되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지표도 2016년 36%에서 2022년 66%로 증가하였다(티어1). 이를 통해 글로벌 SDG 지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34% 지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 제공되지 않는 상황(티어2)이어서 통계역량이 부족한 국가 대상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SDG 지표에 대응하는 한국 데이터 가용률은 2023년 기준으로 79%이다. 한국 통계청은 글로벌 SDG 지표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국내외 통계를 파악하여 관련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플랫폼에 기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목표별 데이터 가용률을 보면, 전체 평균 가용률에 비해 낮은 가용률을 보이는 목표는 6개이며, 이 중에서도 성평등(목표5) 및 기후변화(목표13), 평화 및 정의(목표16)에서 데이터가 취약하였다.

글로벌 SDG 지표 티어 현황 (단위: %)



목표별 한국 데이터 가용률(2023년 12월 기준) (단위: %)



SDG 지표 총괄표

2023년부터 목표별 대표지표 및 순환지표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현황 점검 체계를 운영. 대표지표는 매년, 순환지표는 3~5년주기로 현황 점검에 활용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	○	○	○	●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	○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해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 여부별)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	○			●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 소득(성 및 원주민 여부별)	○	○	○	○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			○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
		2.a.2	농업 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해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 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		○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모성 사망비	○				●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로 감소	3.2.1	5세 미만 사망률	○				
		3.2.2	신생아 사망률			○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			
		3.4.2	자살률	○		○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3.8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3.b.3	적정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의료 인력 밀도 및 분포	○	○	○	○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수 보장	4.1.1	(a)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초등학교 말 (c)중학교 말에 (i)읽기와 (ii)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	○	○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			○	●
4.4	2030년까지 전문. 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 실질적으로 증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		●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	○	○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	4.6.1	특정 연령집단에서 기능적 (a)언어역량과 (b)수리역량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4.7.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유형별)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b.1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 부문 및 연구유형별)					●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	○	○	●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호 정책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촉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	○	○		
5.5	정치, 경제, 공공 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1	(a)여성 국회의원 비율 (b)여성 지방의원 비율	○	○	○	○	●
		5.5.2	여성 관리자 비율	○	○	○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	
		5.a.2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 사용 강화(특히 ICT)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6.2.1	(a)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	●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	○	○	●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2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	○	○	○	●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	○	○	●
8.2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			●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	○	○	○	●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 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	○	○	○	●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 인구 비율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 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9.1	경제 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	○		●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	○	○	●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	●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상당)연구원 수	○	○	○	○	●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해 개도국가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	○	●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	○	○	○	●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 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	○		●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 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재원지원, 직접투자권장	10.b.1	개발재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	○	○	○	●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 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		○	○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있는 도시의 비율				○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 감소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	○	○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인구수 가중)	○	○			●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	○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해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 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2분의 1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				●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2	(a)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		○	○	●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	○	○	○	●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툴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해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3.1	기후 관련 위험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	●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	○	○	●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달러 동원 즉각 이행	13.a.1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	○	○	○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	○	○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		○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 보장	15.1.1	총 국토면적중 산림면적의 비율	○		○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유형별)		○	○	○	●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	○	○	●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해,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		○	○	●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식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 · 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b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및 연령별)	○		○	○	●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신체적, (b)정서적, (c)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				●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6.10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 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

목표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 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 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순ODA의 비율 2)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	○	○	○	●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	●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해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 증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 지원금액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	○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해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연도별 데이터 수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sdg)

또는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https://kostat.go.kr/sdg)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관계부처합동, 202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2,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2.01.19)

교육부, 2023,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2023, 22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27.9억불 지원, 보도자료(2023.4.13)

권수진 외, 2020,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정책연구원

권율 외, 2012,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KIEP 연구보고서 1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외, 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KIEP 연구보고서 19-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2019,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추진과제: K-SDGs 수립과정과 추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수경, 2023, 한국의 난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탐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 이슈 브리프, 9:53-64

김호석, 2021, ESG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연구원

매일경제, 2021, 대기업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보도자료(2021.01.14)

문준혁 외, 2023,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NARS 입법·정책 제128호, 국회입법조사처

박성쾌, 1994,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와 원양어업 대책, 해양정책연구 9(2):231-269

박형민 외, 2021,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분석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 2013,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히 시행, 보도자료(2013.06.17)

법제처, 20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연구원, 2023, 주요산업동향지표 2023년 6월 통권 제43호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외교부, 2021,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LDC) 총회」아태지역 고위급 준비회의 참석, 보도자료(2021.08.31)

외교부 주OECD대표부, 2021, 최저개발국(LDC)에 대한 혼합금융

윤정숙 외, 202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법무정책연구원

이소라 외, 2020,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이종옥, 2015, 세계의 식량 손실·폐기 현황과 해결을 위한 대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소영·김인철·정선인, 2018,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산업-산업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의 이해와 촉진, 한국법제연구원

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주문솔·조지혜, 2020,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전망과 대응 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질병관리청, 2023,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보도자료(2023.6.15)

최지선, 2020, 산림인증제도: FSC를 중심으로, 세계농업, 236:23-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1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

통계개발원, 2023,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통계청, 2023,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통계청, 2023,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통계청, 2023,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도자료(2023.11.14)

한겨레, 2023, ESG 공시 의무화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요청 고려”, 보도자료(2023.10.16)

한국노동연구원, 2023, 2023년 하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2024년 노동시장 전망, 월간 노동리뷰, 2023년 12월호

한국환경연구원, 2021,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23, 과감한 어업규제 철폐 및 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 보도자료(2023.09.21)

참고문헌

홍연아, 2019, 식품손실 및 폐기물 감소를 위한 국내외 노력 및 시사점, 세계 식품과 농수산, FAO 한국협회

환경부, 2022,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 보도자료(2022.06.28)

환경부, 2022,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환경부, 20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23, 환경백서 2022

황지태, 2017, 주요 지표범죄의 10년간 추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슈통계

CBD, 2020, Global Biodiversity Outlook 5 (GBO-5)

FAO, 2021, UN Report: Global hunger numbers rose to as many as 828 million in 2021

FAO, 2022,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GRI, 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ILO, 2018, Descent Work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Guidebook on SDG Labour Market Indicators

Internal IDEA(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22, SDG 16 Data Initiative Report 2022: Are we on track to meeting the 2030 agenda?

IPBES, 2019,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CC, 2023, AR6 Synthesis Report: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AR6)

Kaza et al., 2018, What A Waste 2.0: A Global Snapshot of Solid Waste Management to 2050, Urban Development Serie, World Bank

KDI, 2023, KDI 경제전망(2023 하반기), 40(4)

Meijer et al., 2021, More than 1000 rivers account for 80% of global riverine plastic emissions into the ocean, Science Advances, 7(18), eaaz5803. DOI:10.1126/sciadv.aaz5803

OECD DAC, 2023, ODA Levels in 2022-Preliminary data: Detailed summary note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2020, Beyond Containment: Health systems responses to COVID-19 in the OECD

OECD, 2020, Blended Finance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20: Supporting a Resilient COVID-19 Recovery

OECD, 202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

Pörtner et al, 2021, IPBES-IPCC co-sponsored workshop report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IPBES and IPCC, DOI:10.5281/zenodo.4782538

Sachs, J. et al, 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2019,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 key facts

UN, 2023,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3: Special Edition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EA, 2022, Nature-based solutions for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EP, 2022, SDG Indicator 12.7.1: SPP index Calculation Methodology & Guidelines (version 6-July 2022)

UNESCO, 2022, Shaping investments to safeguar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cross the world: Results of the UIS Survey of Expenditure on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DG Indicator 11.4.1)

UNFCCC, 2021, Glasgow Climate Pact

UNHCR, 2023,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22

WHO, 2021, WHO global air quality guidelines

WMO, 2022,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21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labourstat.moel.go.kr/hmp.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대한민국 ODA 통합누리집(http://odakorea.go.kr/kor/Main)

법무부, 통계정보/교정통계/출입국통계(https://www.moj.go.kr/moj/index.do)

산림청, 산림임업통계플랫폼(http://kfss.forest.go.kr/ptl/main/main.d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

한국무역협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https://stat.kita.net)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KDPA(http://kdpa.kr/)

한국산림인증제도(https://kfcc.kofpi.or.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비교(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

European Commission,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https://environment.ec.europa.eu/strategy/biodiversity-strategy-2030_en)

FAO,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for government expenditures dataset,
(https://sfcs.fao.org/docs/sdgindicatorslibraries/default-document-library/sdg-may_2023/2-a-1_ag_prd_ortind_2023_0509.xlsx?sfvrsn=cf570e31_1)

FSC(https://kr.fsc.org/kr-ko)

GRI(https://www.globalreporting.org/)

ILO, Labour statistics for the SDGs(http://ilostat.ilo.org/topics/sdg)

IUCN,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ttps://www.iucn.org/resources/conservation-tool/iucn-red-list-threatened-species)

IUCN, Nature-based Solutions(https://www.iucn.org/our-work/nature-based-solutions)

OECD Environment Data(https://data.oecd.org/environment.htm)

OECD Fragility Framework (http://www3.compareyourcountry.org/states-of-fragility/countries/AFG/)

OECD,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https://doi.org/10.1787/2dcf1367-en)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Stat(https://stats.oecd.org)

PEFC(https://www.pefc.org/what-we-do/our-approach)

SDG 12 Hub, Progress on SDG 12 by Target
(https://sdg12hub.org/sdg-12-hub/see-progress-on-sdg-12-by-target)

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Chronological lists of ratifications of, accessions and successions to the Convention and the related Agreements
(https://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chronological_lists_of_ratifications.htm)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UNEP, Freshwater Ecosystems Explorer(https://map.sdg661.app/)

UNEP, SDG - 12.7 target and indicator on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implementation
(https://www.unep.org/explore-topics/resource-efficiency/what-we-do/sustainable-public-procurement/sdg-127-target-and)

UNEP-WCMC, WDPA(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https://www.protectedplanet.net/)

WHO,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https://www.who.int/data/gho/data/themes/sustainable-development-goals)

용어 약어

AOI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농업지향지수)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유엔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국제자연보전연맹)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JMP Joint Monitoring Program f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물공급과 위생을 위한 WHO/UNICEF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KBA Key Biodiversity Area(핵심생물다양성지역)

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한국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최저개발국, 최빈개도국)

LICs Low Income Countries(저소득국)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각 참가국이 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AC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 사회복지 지출통계)

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교수·학습 국제조사)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유엔해양법협약)

UNEA United National Environmental Assembly(유엔환경총회)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세계기상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우리는 2030 의제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 우리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집필진

연구책임 **정우현**(한국환경연구원, 목표16)

공동연구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1)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표2)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3)
한효정(한국교육개발원, 목표4)
김도균(한국환경연구원, 목표5)
현윤정(한국환경연구원, 목표6)
이상엽(한국환경연구원, 목표7)
안소은(한국환경연구원, 목표8)
임소영(산업연구원, 목표9)
신동원(한국환경연구원, 목표10)
이지영(한국환경연구원, 목표11)
박주영(한국환경연구원, 목표12)
박진한(한국환경연구원, 목표13)
김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해양))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수산))
구경아(한국환경연구원, 목표15)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표17(ODA))
박영실(통계청 통계개발원, 목표17(통계))

연구보조 **송민나**(한국환경연구원)

편집진

박영실(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정지은(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안진숙(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발행 2024년 3월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 2765-3803

디자인 나래기획

인쇄처 나래기획

45
9 772765 380000
ISSN 2765-3803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71-1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SDG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24